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간에 부치며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우리 사회변화와 시민의 삶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여주는 종합사회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간하였습니다.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해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신중히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기반 사회정책」을 행간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14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의 사회동향 2020」과 더불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대변혁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기적응 일상의 모습을 그린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시대 대전환 사회보고서」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정책」과 연관된 통찰력을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지난 2년에 걸친 글로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식과 일상의 변화를 보여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은 그 체계에 있어서는 금년에 추가된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일관성 있게 다룬 인구, 건강, 사회통합 등 주요 영역들이 있고, 금년에는 교육·훈련, 소득·소비·자산, 여가 및 범죄·안전 분야에서 좀 더 다듬은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 국내 최고전문가들의 통찰력을 집대성하여 이야기 방식(storytelling)으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저변에 담겨있는 '사회변화'와 위기적응의 삶을 보통사람의 언어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은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 우리사회 현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통해서 나누는 '집현(集賢)'이 포스트코로나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사회정책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로서 통찰력의 구슬들을 꿰어서 보배를 만든 이재열 교수님과 12개 각 영역별 옥고의 작성을 맡은 집필진 및 편집위원 모든 분들의 헌신에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집필진과 기획 및 편집을 위해 최선을 다한 통계개발원의 황문선 사무관과 최성은 주무관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을 접하며 가까이 두고 읽을 독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해 드립니다.

2021년 12월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머 리 말

코로나19로 2년 넘게 멈췄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로 복원되기 시작됐다. 멈춘 일상은 곳곳에 흔적을 남겼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이를 확인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올해는 사정이 좀 낫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된 연유다. 그래서 이 책을 '코로나 시대 환난 보고서'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팬데믹이 가져온 깊은 상처가 영역별로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환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시민의식, 재난적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느낀 피로감과 우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려도 생생하게 묻어난다. 만일 한 세대 전이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재난에도 큰 흔들림 없는 사회'는 끊어진 사회관계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준 디지털 플랫폼 덕분이다. 온라인 교육이나 스트리밍을 통한 여가 활용, 배달앱 증가 등 '플랫폼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 곳곳에서 읽힌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이나 세대를 가른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위험의 징후들도 드러난다.

코로나 시대 강제된 물리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피해를 낳았다. 결혼이 미루어져 출산아가 줄고, 유아원과 학교가 문을 닫자 돌봄 공백이 발생했으며, 준비 안 된 온라인 수업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었다.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였고, 청년층의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증가했다. 재난 상황과 중첩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고통이 심화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의 기능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학교는 입시 준비 학원이 아니라 부모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을 '위탁수용'하는 곳임을, 여행의 가치는 해외 유명 관광지 방문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로컬의 맛과 멋에 있다는 것을, 부담스런 회식과 과도한 인간관계에 찌든 직장생활 대신 가족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동향을 쉽게 서술하는 「한국의 사회동향」의 전통은 열 네 해째 발간되는 이 책에서도 이어졌다. 장의 제목과 구성은 조금 바뀌었다. 인구, 건강, 노동, 사회통합 등은 예년과 같은 명칭이다. 반면에 교육은 '교육·훈련'으로, 소득과 소비는 '소득·소비·자산'으로, 여가와 문화는 '여가'로, 주거와 교통은 '주거'로,

환경은 '생활환경'으로, 안전은 '범죄·안전'으로 다듬었다. 여기에 점점 중요해진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장으로 '주관적 웰빙'을 보태 모두 12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통계청이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됐다.

각 장을 주요 동향 개관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에 집중하는 두 편의 주제 논문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예년과 같다. 다만, 생활환경과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주제 논문을 한 편으로 하였다. 주요 동향 논문에서는 해당 영역의 주요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주제 논문은 선정된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은 새로운 독자에게는 독립된 한 권의 보고서로 읽힌다. 이를 위해 주요 동향 논문의 내용은 틀을 바꾸지 않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올해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를 가능한 많이 담고자 했다. 주제 발굴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이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후보 주제를 발굴한 후, 영역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제의 시의성, 타당성,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 주제를 다룰 최고의 집필진을 선정하고 섭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모두 16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인구 영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을 주제로 선정했다. 가구·가족 영역에서는 '코로나19와 아동 돌봄'과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를 다루었다. 건강 영역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이용의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신건강 영향'을 다루었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 및 교육격차 실태'를, 노동 영역에서는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과 '코로나19와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를 다루었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비 동향'을, 여가 영역에서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와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변화'를, 주거 영역에서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범죄·안전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범죄 발생의 변화'와 '코로나19와 교통사고'를 다루었다. 사회통합영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 외에도 올해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변화와 생활'(인구영역),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교육·훈련 영역), '가구주 연령대별, 세대별 가계부채의 변화: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주거 영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 규정과 분쟁 양상'(생활환경 영역),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사회통합 영역)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주관적 웰빙 영역) 등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객관적 통계 숫자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에 담긴 '사회 동향'을 포착하여 스토리로 풀어내는 서술형 보고서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평소 데이터를 가지고 깊이 있는 경험적 분석을 해 온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을 담당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논평자와 연구진이 요구한 까다로운 비판과 주문을 적극 수용하여 훌륭한 원고를 만들어주신 집필진에 깊이 감사드린다. '중요한 내용을 쉽게 쓰는 일'이 학술연구자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여 헌신해 주신 덕이다.

이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특임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진미정 교수(가구·가족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명예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훈련 영역 담당),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소비·자산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여가 영역 담당), 서울대의 이영성 교수(주거 영역 담당), 한국환경연구원의 김종호 선임연구위원(생활환경 영역 담당), 한국형사·법무연구원의 강은영 선임연구위원(범죄·안전 영역 담당), 서울대의 박원호 교수 (사회통합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주관적 웰빙 영역 담당)이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황문선 사무관과 최성은 주무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정병은 객원교수,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최문희 교육연구실장과 이상운 자료개발실장, 박현주 전임연구원이 하였고, 통계 검증 및 원고 교정은 동 자료원의 허혜옥, 한아름, 고지영, 반미희 연구원이 하였으며, 동 자료원의 김혜진 연구원은 연구간사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류근관 통계청장과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 재 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목 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6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41
김두섭 | 한양대학교,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변화와 생활 김주현 | 충남대학교 52

Ⅱ 가구·가족 Household & Family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 서울대학교 62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72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계봉오 | 국민대학교 82

Ⅲ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4

코로나19와 의료이용 변화 변진옥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병희 | 서울대학교 105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신건강 영향 유명순 | 서울대학교 113

Ⅳ 교육·훈련 Education & Training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24

코로나19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 및 교육격차 실태 김경근 | 고려대학교 138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채창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9

Ⅴ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60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 권현지 | 서울대학교, 함선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2

코로나19와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182

Ⅵ 소득·소비·자산 Income, Consumption & Wealth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94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유경원 | 상명대학교 205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비 동향 이윤수 | 서강대학교 216

Ⅶ 여가 Leisure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28

코로나19와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37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변화 김은희 | 한국관광공사 246

Ⅷ 주거 Housing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이영성 | 서울대학교, 김혜수 | 서울대학교, 오예성 | 서울대학교 258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268

이영성 | 서울대학교, 안승연 | 서울대학교, 이현무 | 서울대학교

가구주 연령대별 · 세대별 가계부채의 변화: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277

하준경 | 한양대학교

Ⅸ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연구원 28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 규정과 분쟁 양상 박영민 | 한국환경연구원 298

Ⅹ 범죄 · 안전 Crime & Safety

범죄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310

코로나19 이후 범죄발생의 변화 박형민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321

코로나19와 교통사고 한상진 | 서울대학교 331

Ⅺ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박원호 | 서울대학교 340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하상응 | 서강대학교 349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박선경 | 인천대학교 359

Ⅻ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72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김주연 | 서울시립대학교 387

부록 용어해설 397

표 목차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20 28
표 Ⅰ-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33
표 Ⅰ-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34
표 Ⅰ-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20 37
표 Ⅰ-5 한국과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 1995–2015 54
표 Ⅰ-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주수발자, 2010, 2015 56
표 Ⅰ-7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시간활용, 2005–2015 58
표 Ⅰ-8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건강상태(ADL), 2010, 2015 59
표 Ⅰ-9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별 건강상태(ADL), 2010, 2015 59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20 63
표 Ⅱ-2 혼인건수 및 혼인율, 1990–2020 65
표 Ⅱ-3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20 66
표 Ⅱ-4 휴원 · 휴업 기간 돌봄공백, 2020 73
표 Ⅱ-5 어린이집 등 · 하원 전후 돌봄자, 2016–2020 74
표 Ⅱ-6 성별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률, 2020.3 77
표 Ⅱ-7 팬데믹 선언 전후 가정내 자녀돌봄 변화, 2020.3 77
표 Ⅱ-8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변화, 2020.3 78
표 Ⅱ-9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가구의 어려움, 2020.7 79
표 Ⅱ-10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2020.7 80
표 Ⅱ-11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 81

표 Ⅲ-1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치명률, 2021.9.30 96
표 Ⅲ-2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1995–2020 99
표 Ⅲ-3 성인의 성별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2005–2019 99
표 Ⅲ-4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9 101
표 Ⅲ-5 연간 미충족 의료율, 2016–2019 102
표 Ⅲ-6 의료이용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2017–2020 106
표 Ⅲ-7 응급실 내원환자 상위 20개 상병, 2020 107

표 Ⅳ-1 성별 중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20 133
표 Ⅳ-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9 136
표 Ⅳ-3 성인의 인적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2013, 2020 153
표 Ⅳ-4 취업자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2013, 2020 154
표 Ⅳ-5 한국과 OECD의 임금근로자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비교, 2012 155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20–2021.6 163
표 V-2 각종 고용보조 지표 추세, 2019–2021.9 165
표 V-3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2019–2021 166
표 V-4 노동시간별 노동자 수 변화, 2020.3/4–2021.3/4 168
표 V-5 유연근무제 활용률, 2015–2021 168
표 V-6 직종별 임금 및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2019, 2020 169
표 V-7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 2020–2021 170
표 V-8 사회보험 가입률, 2021 170
표 V-9 일자리 특성별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7
표 V-10 청년층 졸업 후 첫 일자리 중 1년 이하 계약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19–2021 181
표 V-11 산업 소분류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 2020 185
표 V-12 연령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1/4–2021.2/4 188
표 V-13 서울시 상권특성별 평균 월매출액, 2019.10–2020.12 189
표 V-14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감액, 2020.1/4–2021.1/4 190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9 196
표 VI-2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6, 2019 200
표 VI-3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6, 2019 203

표 VII-1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상위 10개), 2019–2020 230
표 VII-2 여가시간과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2019–2020 238
표 VII-3 사회인구집단별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의 비중, 2020 239
표 VII-4 사회인구집단별 디지털 여가활동 참여율, 2020 240
표 VII-5 스마트폰 미디어 기능 이용 장소, 2020 242

표 VIII-1 주택보급률, 2005–2019 259
표 VIII-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20 259
표 VIII-3 1,000명당 주택 수, 1995–2019 259
표 VIII-4 노후주택 수와 비율, 1990–2019 261
표 VIII-5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11, 2020 261
표 VIII-6 주택 만족도, 2012–2020 262
표 VIII-7 OECD 주요 국가의 과밀주거비율, 2010–2019 263
표 VIII-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20 264
표 VIII-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20 264
표 VIII-10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19 265
표 VIII-11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 2000–2015 266
표 VIII-12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20 266
표 VIII-13 가계신용동향, 2010–2020 271

표 Ⅸ-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3–2019	289
표 Ⅸ-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19	291
표 Ⅸ-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9	292
표 Ⅸ-4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9	293
표 Ⅸ-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 건수, 2000–2019	294
표 Ⅸ-6	환경분야 예산, 1995–ㅈ2019	294
표 Ⅸ-7	환경보호지출, 2004–2018	295
표 Ⅸ-8	환경오염시설 단속 및 위반 현황, 2010–2019	296
표 Ⅸ-9	지역 및 연령별 환경상태 만족도, 2020	297
표 Ⅸ-10	소음 원인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누적), 2012–2020	302
표 Ⅸ-11	주거형태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누적), 2012–2020	302
표 Ⅸ-12	거주위치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누적), 2012–2020	302
표 Ⅸ-1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 2012–2020	303
표 Ⅸ-14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내역, 2012–2020	304
표 Ⅸ-15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 층간소음 측정 결과, 2014–2020	304
표 Ⅸ-16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접수 건수(2020.6.30. 기준)	305
표 Ⅹ-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10–2019	312
표 Ⅹ-2	아동 대상 범죄별 발생 건수와 발생률, 2015–2019	313
표 Ⅹ-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5–2019	319
표 Ⅹ-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0	319
표 Ⅹ-5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1–2020	332
표 Ⅹ-6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 중상자 수, 2011–2020	333
표 Ⅹ-7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 중상자 수, 2011–2020	334
표 Ⅹ-8	이륜차 배기량별 등록 대수, 2015–2020	336
표 Ⅹ-9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 중상자 수, 2011–2020	336

그림 목차

그림 Ⅰ-1 인구연령구조의 최근 변화, 2000, 2010, 2020 28
그림 Ⅰ-2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90-2020 30
그림 Ⅰ-3 시도별 합계출산율, 2019, 2020 30
그림 Ⅰ-4 출생아, 사망자 및 결혼과 이혼 건수의 추이, 2015.1-2021.7 32
그림 Ⅰ-5 고령인구의 연령집단별 규모 및 증가율, 2015-2020 33
그림 Ⅰ-6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90-2020 34
그림 Ⅰ-7 시도별 조사망률, 2020 35
그림 Ⅰ-8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2000-2020 36
그림 Ⅰ-9 시도 간 전출 및 전입 인구, 2015-2019 37
그림 Ⅰ-10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20 39
그림 Ⅰ-11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의 월별 추이, 2020.1-2021.4 42
그림 Ⅰ-12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 및 이혼 건수의 추이, 2010.1-2021.4 44
그림 Ⅰ-13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출생아 수 대비 2020-2021년 출생아 수의 변화 45
그림 Ⅰ-14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의 변화, 2020 46
그림 Ⅰ-15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 수, 신규 사망자 수 평활화와 누적 사망자 수, 2020.1.21-2021.7.31 46
그림 Ⅰ-16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 추이, 2020.2.1-2021.7.31 47
그림 Ⅰ-17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사망자 수 대비 2020-2021년 사망자 수의 변화 47
그림 Ⅰ-18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결혼 건수 대비 2020-2021년 결혼 건수의 변화 48
그림 Ⅰ-19 코로나19 확산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 2020 49
그림 Ⅰ-20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이혼 건수 대비 2020-2021년 이혼 건수의 변화 50
그림 Ⅰ-21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1990-2020 53
그림 Ⅰ-22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1970-2020 53
그림 Ⅰ-23 시도별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2000-2020 54
그림 Ⅰ-24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 1990-2015 55
그림 Ⅰ-25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 2005-2015 55
그림 Ⅰ-2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주수발자, 2010, 2015 56
그림 Ⅰ-27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거처 종류, 1990-2015 57
그림 Ⅰ-28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생활만족도, 2015 58
그림 Ⅰ-29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장수 사유, 2010, 2015 60

그림 Ⅱ-1 가구주 연령별 1인가구의 비율, 1990-2020 64
그림 Ⅱ-2 노인 거주형태, 2008-2020 64
그림 Ⅱ-3 성별 평균 초혼연령과 재혼연령, 1990-2020 65
그림 Ⅱ-4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994-2020 66

그림 Ⅱ-5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20 67
그림 Ⅱ-6 배우자 관계 만족도, 2005-2020 68
그림 Ⅱ-7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2015-2020 68
그림 Ⅱ-8 성별 성역할 태도, 2005-2020 69
그림 Ⅱ-9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여성) 실태, 2010-2020 69
그림 Ⅱ-10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률과 미이용시 주 돌봄자, 2010-2020 70
그림 Ⅱ-11 초등학생의 방과후 이용 장소, 2010-2020 70
그림 Ⅱ-12 노부모와 비동거자녀 간 교환, 2017, 2020 71
그림 Ⅱ-13 팬데믹 초기 아동 돌봄 변화, 2020.3 74
그림 Ⅱ-14 팬데믹 초기 영아 돌봄, 2020.3 75
그림 Ⅱ-15 팬데믹 초기 유아 돌봄, 2020.3 75
그림 Ⅱ-16 팬데믹 초기 초등 저학년 아동 돌봄, 2020.3 75
그림 Ⅱ-17 맞벌이가구 여부별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률, 2020.3 76
그림 Ⅱ-18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 80
그림 Ⅱ-19 성별 가족가치관 변화, 1998-2020 83
그림 Ⅱ-20 연령별 가족가치관 변화, 2014-2020 84
그림 Ⅱ-21 혼인상태별 가족가치관 변화, 1998-2020 85
그림 Ⅱ-22 미취학아동 유무별 가족가치관 변화, 2006-2020 86
그림 Ⅱ-23 성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86
그림 Ⅱ-24 연령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87
그림 Ⅱ-25 혼인상태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87
그림 Ⅱ-26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88
그림 Ⅱ-27 연령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88
그림 Ⅱ-28 미취학아동 유무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06-2020 88
그림 Ⅱ-29 연령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89
그림 Ⅱ-30 미취학아동 유무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06-2020 89
그림 Ⅱ-31 성 및 교육수준별 결혼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90
그림 Ⅱ-32 한국과 미국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6-2020 91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9 94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20 95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 건수, 2001-2020 96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9 97
그림 Ⅲ-5 암 조발생률, 2001-2018 97
그림 Ⅲ-6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9 98
그림 Ⅲ-7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9 100
그림 Ⅲ-8 건강식생활 실천율, 2005-2019 101
그림 Ⅲ-9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9 102

그림 Ⅲ-10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 1990-2020 102
그림 Ⅲ-1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9 103
그림 Ⅲ-12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20 103
그림 Ⅲ-13 한국과 OECD의 의료 질 지표, 2019 104
그림 Ⅲ-14 의료이용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06
그림 Ⅲ-15 의원 표시과목별 외래환자 수의 변화, 2017-2020 107
그림 Ⅲ-16 종별 입원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08
그림 Ⅲ-17 병원급 유형별 입원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08
그림 Ⅲ-18 종별 외래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08
그림 Ⅲ-19 연령별 입원 및 외래 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09
그림 Ⅲ-20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09
그림 Ⅲ-21 호흡기 감염 외래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10
그림 Ⅲ-22 틀니, 임플란트, 관절치환술, 척추수술 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10
그림 Ⅲ-23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 2020.1-2021.8 114
그림 Ⅲ-24 코로나19 감정촉발 요인, 2020.1, 2020.10 114
그림 Ⅲ-25 코로나19 감염책임에 대한 귀인, 2020.8-2021.8 115
그림 Ⅲ-26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2020.2-2021.8 115
그림 Ⅲ-2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2021.3-8 116
그림 Ⅲ-28 인구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질 인식, 2020.6-2021.8 116
그림 Ⅲ-29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정지 수준, 2020.1-2021.8 117
그림 Ⅲ-30 인구집단별 코로나19와 우울 수준, 2020.10-2021.8 117
그림 Ⅲ-31 우울군과 비우울군의 정신 곤경 극복 수준, 2021.8 118
그림 Ⅲ-32 코로나19와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2020.5-2021.8 118
그림 Ⅲ-33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된 자원, 2020.10, 2021.8 119
그림 Ⅲ-34 코로나19로 심각해질 사회 불평등 문제 인식, 2020.10, 2021.8 119
그림 Ⅲ-35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기회 불평등, 2020.10, 2021.8 119
그림 Ⅲ-36 코로나19 관련 울분 요인, 2021.1 120
그림 Ⅲ-37 외상후울분장애 평균 점수, 2018, 2020, 2021 120
그림 Ⅲ-38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사회적 지지, 2020 121
그림 Ⅲ-39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가족 돌봄 어려움, 2021 121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20 125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20 127
그림 Ⅳ-3 초·중·고 학생의 소득집단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2019-2020 128
그림 Ⅳ-4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0-2018 129
그림 Ⅳ-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 2010-2020 130
그림 Ⅳ-6 중·고등학생 교육내용 만족도, 2012-2020 130
그림 Ⅳ-7 중·고등학생 교육방법 만족도, 2012-2020 131

그림 Ⅳ-8 부모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2012-2020 132
그림 Ⅳ-9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2020 132
그림 Ⅳ-10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 2018 133
그림 Ⅳ-11 과목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5-2020 134
그림 Ⅳ-12 중학생의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점수와 순위, 1995-2019 135
그림 Ⅳ-13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2010-2020 135
그림 Ⅳ-14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등교 일수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40
그림 Ⅳ-15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방식의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41
그림 Ⅳ-16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42
그림 Ⅳ-17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43
그림 Ⅳ-18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44
그림 Ⅳ-19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코로나19 이후 학습 외 목적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 2020.7 145
그림 Ⅳ-20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 2020.7 145
그림 Ⅳ-21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온라인수업 참여에 방해를 받는 학생 비율, 2020.7 146
그림 Ⅳ-22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보호자가 온라인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 비율, 2020.7 147
그림 Ⅳ-23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온라인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학생 비율, 2020.7 147
그림 Ⅳ-24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폐쇄 기간 비율, 2020.3-2021.10 148
그림 Ⅳ-25 한국과 OECD의 연령별 역량 수준, 2012 150
그림 Ⅳ-26 OECD 평생학습 참여율, 2010년대 초중반 150
그림 Ⅳ-27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20 151
그림 Ⅳ-28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2011-2020 151
그림 Ⅳ-29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시간, 2011-2020 152
그림 Ⅳ-30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 참여인원, 2011-2020 152
그림 Ⅳ-31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도움 정도, 2013-2020 156
그림 Ⅳ-32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및 지니계수의 관계, 2017 156

그림 Ⅴ-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0.1-2021.9 161
그림 Ⅴ-2 주요 시기의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0.1-2021.9 162
그림 Ⅴ-3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020.1-2021.9 162
그림 Ⅴ-4 성별 실업률 변화, 2010-2020 164
그림 Ⅴ-5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변화, 2020.1-2021.9 165
그림 Ⅴ-6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2021.7 165
그림 Ⅴ-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020.1-2021.9 166

그림 V-8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변화, 2017.9-2021.9 167
그림 V-9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3-2021.9 167
그림 V-1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2004-2021 171
그림 V-11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률 변화, 2018.1-2021.5 173
그림 V-12 청년층 졸업 전후 경과기간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4
그림 V-13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5
그림 V-14 청년층 학력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5
그림 V-15 청년층 대학졸업자 전공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6
그림 V-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층 실업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8
그림 V-17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구직단념자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9
그림 V-18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79
그림 V-19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취업 준비자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80
그림 V-20 주요 국가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 2020 182
그림 V-21 경제위기 시 취업자 수 변화, 1995.1-2021.6 183
그림 V-22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개월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183
그림 V-23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개월간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184
그림 V-24 경제위기 시 고용원 유무 및 취업시간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184
그림 V-25 산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3-2021.2 185
그림 V-26 경제위기 시 고용원 유무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186
그림 V-27 주요 대면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 수 변화, 2019.7-2021.4 187
그림 V-28 성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2021.2/4 188
그림 V-29 근로자 외 가구 사업소득 증감률, 2007.1/4-2021.1/4 189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9 195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9 196
그림 VI-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2, 2018 197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9 198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9 198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9 199
그림 VI-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9 200
그림 VI-8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 1/4, 2020. 4/4 201
그림 VI-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9, 2020 202
그림 VI-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 2020 204
그림 VI-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0 204
그림 VI-12 경제위기별 경제 성장 및 분배, 재분배 효과 추이, 1990-2020 206
그림 VI-13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감률(시장소득), 2019.2/4-2021.1/4 207
그림 VI-14 코로나19 확산 전후 5분위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2/4-2021.1/4 208
그림 VI-15 코로나19 확산 전후 P50/P1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2/4-2021.1/4 208

그림 Ⅵ-16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5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2/4–2021.1/4 208
그림 Ⅵ-17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1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2/4–2021.1/4 208
그림 Ⅵ-18 코로나19 확산 전후 가구소득 증감률(처분가능소득) 비교, 2019.2/4–2021.1/4 209
그림 Ⅵ-19 코로나19 확산 전후 P50/P10 배율(처분가능소득) 비교, 2019.2/4–2021.1/4 210
그림 Ⅵ-20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50 배율(처분가능소득) 비교, 2019.2/4–2021.1/4 210
그림 Ⅵ-21 코로나19 확산 전후 재분배 효과 비교, 2019.2/4–2021.1/4 210
그림 Ⅵ-22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임시/일용직 비중 비교, 2019.2/4–2021.1/4 211
그림 Ⅵ-23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증감률, 2019.2/4–2021.1/4 211
그림 Ⅵ-24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 비교, 2019.2/4–2021.1/4 212
그림 Ⅵ-25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비교, 2019.2/4–2021.1/4 212
그림 Ⅵ-26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비교, 2019.2/4–2021.1/4 213
그림 Ⅵ-27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증감률, 2019.2/4–2021.1/4 213
그림 Ⅵ-28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 비교, 2019.2/4–2021.1/4 213
그림 Ⅵ-29 코로나19 확산 전후 실효소득 지니계수 비교, 2019.2/4–2021.1/4 214
그림 Ⅵ-30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거비·이자비의 실효소득 재분배 효과 비교, 2019.2/4–2021.1/4 214
그림 Ⅵ-31 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1/4–2021.1/4 217
그림 Ⅵ-32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원 1인당 식료품비 지출액, 2019.1/4–2021.1/4 218
그림 Ⅵ-33 가구주 연령대별 내구재 지출액, 2019–2020 218
그림 Ⅵ-34 가구 소득분위별 내구재 지출액, 2019–2020 219
그림 Ⅵ-35 수입 자동차 등록 대수 전년 대비 순변화량, 2012–2020 219
그림 Ⅵ-36 소비지출 품목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220
그림 Ⅵ-37 가구 소득분위별 사교육 지출액, 2019.1/4–2021.1/4 221
그림 Ⅵ-38 맞벌이 여부별 가구 사교육 지출액, 2019.1/4–2021.1/4 221
그림 Ⅵ-39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득분위별 전년 대비 소비지출 증감률, 2020 222
그림 Ⅵ-40 소득 1분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222
그림 Ⅵ-41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소비지출액 증감률, 2020 223
그림 Ⅵ-42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소득 증감률, 2020 223
그림 Ⅵ-43 소득분위별 전체 가구 대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가구 소비지출액의 비율, 2019.1/4–2021.1/4 224
그림 Ⅵ-44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수혜금 증가량, 2020 224
그림 Ⅵ-45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주요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 2020.1–2021.7 225
그림 Ⅵ-46 지역소득수준별 소비지출 변화, 2020.1–2021.7 225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20 229
그림 Ⅶ-2 문화여가지출률, 2010–2020 230
그림 Ⅶ-3 여가활동 동반자, 2019–2020 232
그림 Ⅶ-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3–2020 232
그림 Ⅶ-5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20 233

그림 Ⅶ-6 국내여행 일수, 2018–2020 233
그림 Ⅶ-7 생활체육 참여율, 1989–2020 234
그림 Ⅶ-8 성 및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2019–2020 235
그림 Ⅶ-9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의 비중, 2019–2020 238
그림 Ⅶ-10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상위 10개), 2020 239
그림 Ⅶ-11 스마트폰 보유율 및 이용률과 필수매체 인식, 2010–2020 241
그림 Ⅶ-12 연령대별 TV 및 스마트폰 이용률, 2020 241
그림 Ⅶ-13 연령대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2020 241
그림 Ⅶ-14 스마트폰 콘텐츠 유형별 이용 빈도, 2020 242
그림 Ⅶ-15 스마트폰을 이용한 TV 시청 방식, 2020 243
그림 Ⅶ-16 TV 시청 시 스마트폰 이용 이유, 2020 243
그림 Ⅶ-17 연령대별 OTT 서비스 이용률, 2018–2020 243
그림 Ⅶ-18 OTT 서비스별 이용률, 2018–2020 244
그림 Ⅶ-19 OTT 서비스 이용 시 매체, 2020 244
그림 Ⅶ-20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2020 244
그림 Ⅶ-21 연령대별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2020 245
그림 Ⅶ-22 필수매체 인식별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2020 245
그림 Ⅶ-23 세계 국제관광인구의 변화, 2019–2021.7 247
그림 Ⅶ-24 내국인 출국자 수의 변화, 2016–2020 247
그림 Ⅶ-25 국내여행 경험률의 변화, 2016–2020 248
그림 Ⅶ-26 국내여행 횟수 및 일수의 변화, 2017–2020 249
그림 Ⅶ-27 국내여행 지출액의 변화, 2017–2020 250
그림 Ⅶ-28 세대별 여행활동력 비교, 2019–2021.5 251
그림 Ⅶ-29 세대별 여행활동 반경 비교, 2019–2021.5 251
그림 Ⅶ-30 코로나19 이후 여행활동 반경의 변화, 2020–2021.5 252
그림 Ⅶ-31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여행활동 반경의 변화, 2020–2021.5 253
그림 Ⅶ-32 선호 여행지 유형과 여행지별 세대 구성, 2019–2021.5 253
그림 Ⅶ-33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여행지 이동량의 변화, 2020–2021.5 254

그림 Ⅷ-1 권역별 주택보급률, 2005–2019 259
그림 Ⅷ-2 유형별 재고주택 수, 2000–2019 260
그림 Ⅷ-3 주택 공급·수요 관련 통계, 1993–2020 260
그림 Ⅷ-4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9 261
그림 Ⅷ-5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20 262
그림 Ⅷ-6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2005.1–2021.5 263
그림 Ⅷ-7 BIS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2000–2020 264
그림 Ⅷ-8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9 265
그림 Ⅷ-9 월별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 2020.1–2021.6 269

그림 Ⅷ-10 월별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변화율, 2020.1–2021.6 269
그림 Ⅷ-11 전국,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가격 변화율, 2020.1–2021.6 270
그림 Ⅷ-12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 2020.1–2021.6 270
그림 Ⅷ-13 코로나19 전후 세대수 증가율, 2019.1–2021.6 271
그림 Ⅷ-14 2019년 4/4분기 대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72
그림 Ⅷ-15 코로나19 이후 오피스 임대동향 변화 종합 273
그림 Ⅷ-16 2019년 4/4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73
그림 Ⅷ-17 코로나19 이후 중대형상가 임대동향 변화 종합 274
그림 Ⅷ-18 2019년 4/4분기 대비 소규모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75
그림 Ⅷ-19 코로나19 이후 소규모상가 임대동향 변화 종합 275
그림 Ⅷ-20 2019년 4/4분기 대비 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76
그림 Ⅷ-21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2001–2019 278
그림 Ⅷ-22 연령대별 부채보유액, 2010–2020 278
그림 Ⅷ-23 세대별 가계부채, 2001–2019 279
그림 Ⅷ-24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2019.3–2021.3 279
그림 Ⅷ-25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2019.3–2021.3 279
그림 Ⅷ-26 전국과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 2011.1/4–2021.1/4 280
그림 Ⅷ-27 세대별 1주택자 비중, 2001–2019 280
그림 Ⅷ-28 세대별 다주택자 비중, 2001–2019 280
그림 Ⅷ-2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19 281
그림 Ⅷ-30 가구별 주거점유 형태, 2017–2019 281
그림 Ⅷ-31 연령대별 수도권 거주 인구 비중, 2006–2019 281
그림 Ⅷ-32 연령별 노동소득, 2010, 2017 282
그림 Ⅷ-33 미국 40대 미만 연령층의 부동산 자산, 주택담보대출, 순자산 비중, 1990.1/4–2020.4/4 283
그림 Ⅷ-34 미국 25–34세 인구의 혼인 상태별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 1990–2017 283
그림 Ⅷ-35 수도권 석·박사 비중의 변화, 2005–2015 284
그림 Ⅷ-36 연령대별 서울·경기 순이동, 2001–2020 284

그림 Ⅸ-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19 288
그림 Ⅸ-2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19 289
그림 Ⅸ-3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8 290
그림 Ⅸ-4 폭염 일수, 1980–2021 290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9 291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9 293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9 293
그림 Ⅸ-8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20 296
그림 Ⅸ-9 층간소음 주요 피해 시간대, 2013, 2017 300
그림 Ⅸ-10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스트레스), 2013–2021 300

그림 Ⅸ-11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 2013-2021 300
그림 Ⅸ-12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 2013, 2017 301
그림 Ⅸ-13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 2015-2020 301
그림 Ⅸ-14 공동주택 주거율, 2015-2020 302
그림 Ⅸ-15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및 폭력 범죄 발생 건수, 2013-2019 303
그림 Ⅸ-16 국내 층간소음 규제 및 관리 현황 305

그림 Ⅹ-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9-2019 311
그림 Ⅹ-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0-2019 312
그림 Ⅹ-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8 314
그림 Ⅹ-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8 314
그림 Ⅹ-5 성별 외인 사망률, 2001-2020 315
그림 Ⅹ-6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2001-2020 315
그림 Ⅹ-7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1-2020 316
그림 Ⅹ-8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1-2019 316
그림 Ⅹ-9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01-2020 317
그림 Ⅹ-10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2001-2020 317
그림 Ⅹ-1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11-2020 318
그림 Ⅹ-1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19 319
그림 Ⅹ-13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320
그림 Ⅹ-14 세계 주요 도시 '재택제한' 전후 일일 범죄 발생 추이 323
그림 Ⅹ-15 세계 주요 도시 일일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제한'의 영향 비교 324
그림 Ⅹ-16 코로나19 전후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4
그림 Ⅹ-17 코로나19 전후 일일 강도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5
그림 Ⅹ-18 코로나19 전후 일일 폭행(상해)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6
그림 Ⅹ-19 코로나19 전후 일일 성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6
그림 Ⅹ-20 코로나19 전후 일일 가정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7
그림 Ⅹ-21 코로나19 전후 일일 데이트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7
그림 Ⅹ-22 코로나19 전후 일일 절도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8
그림 Ⅹ-23 코로나19 전후 일일 사기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329
그림 Ⅹ-24 월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 2019.1-2020.12 332
그림 Ⅹ-25 연령집단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자 수, 2019-2020 333
그림 Ⅹ-26 연령대별 전년 동일 주간 대비 인구이동량의 평균 증감률, 2020.6-12 334
그림 Ⅹ-27 월별 배달앱 사용자 수, 2019-2020 335
그림 Ⅹ-28 OECD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2020.4 337

그림 Ⅺ-1 역대 선거 투표율, 1952-2020 341
그림 Ⅺ-2 최근 선거의 연령집단별 투표율, 2016-2020 341

그림 XI-3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20 342
그림 XI-4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20 342
그림 XI-5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013-2020 344
그림 XI-6 부패인식지수(CPI)와 한국 순위, 2012-2020 345
그림 XI-7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공직사회 부패 심각성 인식, 2007-2016 345
그림 XI-8 사회 영역별 공정성 인식, 2018, 2020 346
그림 XI-9 성 및 연령집단별 성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 인식, 2020 347
그림 XI-10 소득분위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전망, 2005-2019 348
그림 XI-11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0
그림 XI-12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0
그림 XI-13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1
그림 XI-14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1
그림 XI-15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2
그림 XI-16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2
그림 XI-17 남성과 여성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3
그림 XI-18 종교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353
그림 XI-19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8-2020 354
그림 XI-20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2007-2020 355
그림 XI-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07-2015 355
그림 XI-22 이주민 출신국적별 친근감, 2017, 2020 356
그림 XI-23 다문화 공존에 대한 태도, 2012-2020 357
그림 XI-24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 2012-2020 357
그림 XI-25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0.1-2021.7 360
그림 XI-26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정책 변화 및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0.1-2021.7 362
그림 XI-27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백신 접종률 및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1.3-2021.7 363
그림 XI-28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방역-경제활성화 간 우선순위, 2020.9-2021.7 364
그림 XI-29 국가의 책임 정도, 2020.8, 2021.8 365
그림 XI-30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한 견해, 2020.8, 2021.8 365
그림 XI-31 코로나19 위험이 심각해질 때의 정부 대응에 대한 선호, 2020.8, 2021.8 366
그림 XI-32 코로나19 대응과 민주주의 원칙 간 딜레마, 2020.8, 2021.8 366
그림 XI-33 정치효능감, 2020.8, 2021.8 367
그림 XI-34 코로나19 관련 효능감, 2020.8, 2021.2 367
그림 XI-35 주요 국가별 국가 방향성 평가와 우려하는 사회문제, 2020.4-2021.6 368
그림 XI-36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접촉 우려, 2020.2-2020.9 369
그림 XI-37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2020.3-2020.9 369

그림 XII-1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 비율, 1998-2020 374
그림 XII-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0 374

그림 XII-3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비율, 2003–2020 375
그림 XII-4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 2013–2020 376
그림 XII-5 성 및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0 376
그림 XII-6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1998–2020 377
그림 XII-7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 2006–2020 378
그림 XII-8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집단 비율, 2013–2020 378
그림 XII-9 성 및 연령별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집단 비율, 2013–2020 379
그림 XII-10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 2018 380
그림 XII-11 세계 국가별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2006, 2020 380
그림 XII-12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0 381
그림 XII-13 대만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382
그림 XII-14 중국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383
그림 XII-15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비율, 2013, 2018 383
그림 XII-16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 2013, 2018 384
그림 XII-17 한국과 주요 국가의 긍정/부정적 정서경험, 2006–2020 385
그림 XII-18 OECD 국가별 부정 정서 우세집단 비율, 2013, 2018 385
그림 XII-19 사회적 교류 빈도, 2019, 2020 388
그림 XII-20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389
그림 XII-21 사회단체 유형별 비활동률, 2019, 2020 389
그림 XII-22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2019, 2020 390
그림 XII-23 부정적 감정 경험 추이, 2016–2020 391
그림 XII-24 성 및 연령대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391
그림 XII-25 성 및 연령대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392
그림 XII-26 성 및 연령대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392
그림 XII-27 사회적 지지 수준, 2019, 2020 393
그림 XII-28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394
그림 XII-29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19, 2020 394
그림 XII-30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행복감, 2019, 2020 395
그림 XII-31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부정 정서, 2019, 2020 395
그림 XII-32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유데모니아, 2019, 2020 396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 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6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41

김두섭 | 한양대학교,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변화와 생활 김주현 | 충남대학교 52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20년 현재 5,183만 명이며, 이미 자연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대 후반에 4,000만 명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의 출산력은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15년 이후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고 있다.
- 한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환과 아울러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들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하였다. 경기도와 세종은 유입인구와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
-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에 미친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가장 뚜렷하다. 결혼의 감소는 추후 출생아 수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20년 10월과 11월에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사망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의 광범한 확산은 결혼, 출생, 사망, 이동 등의 인구현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력 저하,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고령화 추세,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분석은 「인구

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 성장과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 규모는 2020년 현재 5,183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해당하며, 인구성장률은 0.08%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의 자연감소와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의 추세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20년 규모의 47.8%와 50.5%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20년의 2.2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60세 이상 인구가 두터워지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남녀 인구의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각 49.7%와 50.3%로 집계되었고, 2020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각각 49.8%, 50.2%로 여자 인구의 비중이 약간 높은 상태이다.

연령구성은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2020년 현재 항아리 형태를 보이며, 2050년대에 이르면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20

(%)

	1990	2000	2010	2020
성				
남자	50.2	50.2	49.7	49.8
여자	49.8	49.8	50.3	50.2
연령				
0-14세	25.7	21.0	16.2	12.3
15-64세	69.4	71.7	72.5	71.3
65세 이상	5.0	7.3	11.3	16.4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5
읍	8.3	8.1	8.6	9.8
면	17.3	12.2	9.3	8.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14.4
중학교	18.5	13.6	11.9	9.3
고등학교	34.0	34.6	31.2	31.6
대학 이상	14.1	26.1	36.6	44.7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31.1
유배우	59.1	60.6	57.7	55.9
사별	7.2	7.4	7.6	7.2
이혼	0.8	1.9	4.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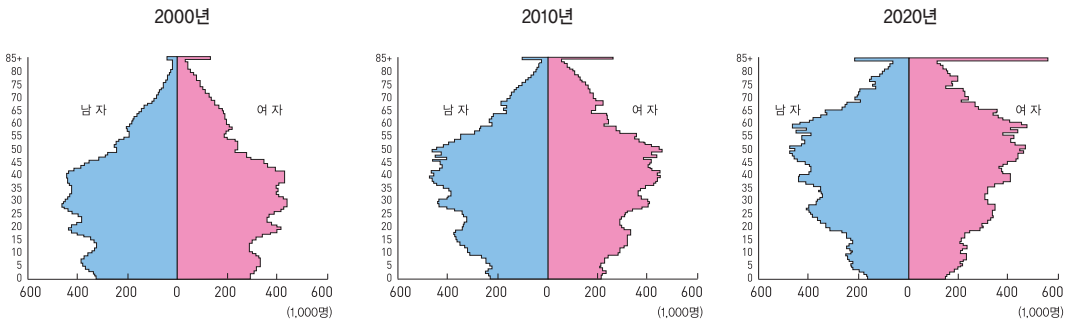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20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2020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20년 등록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1.0%, 그리고 2020년 12.3%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로 약간씩 증가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뀌었으며, 2020년에는 71.3%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3.3배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82.0%와 81.5%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중이 각각 90.7%와 91.2%에 이른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 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 9.8%에 이르렀다. 한편,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최근 변화, 2000, 2010, 202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서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9.3%와 8.8%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20년 14.4%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 9.3%로 집계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중은 2000년 34.6%를 기록한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여 2010년 31.2%에 이르렀으나 2020년에는 31.6%로 약간 상승하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20년 기간에 14.1%에서 44.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5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비혼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20년에 각각 87.4%와 56.4%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20년 5.8%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5-59세에서 11.6%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초저출산의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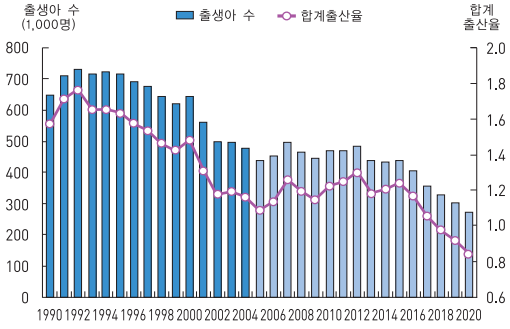
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진 이후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9만 명과 1.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I-2]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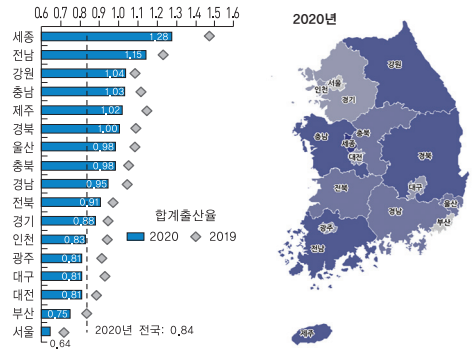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저하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 수는 2006년 45.2만 명, 2007년 49.7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20년에는 27.2만 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 2010년 1.23, 2015년 1.24, 2017년 1.05, 그리고 2020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84로 집계되었다. [그림 I-2]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년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출생아가 많은 지역은 2020년에 경기도(7.8만 명), 서울(4.7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출생아가 14.1만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1.9%를 차지하였다. [그림 I-3]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합계출산율은 세종(1.28), 전라남도(1.15), 강원도(1.04) 순으로 높고, 서울(0.64)과 부산(0.75)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모든 시도에서 2020년 합계출산율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세종, 대구와 제주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그림 I-3] 시도별 합계출산율, 2019, 202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그리고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각각 27.8세와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각각 33.2세와 30.8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각각 32.3세와 33.1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33.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0대 후반 집단에서 30대 초반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0대 후반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대 초반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된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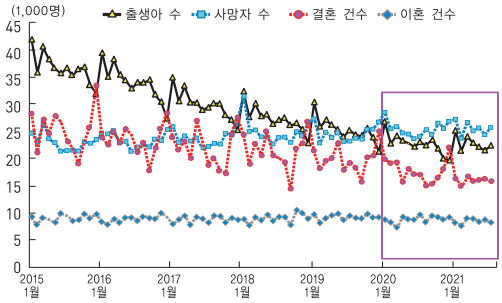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생활과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혼,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 영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의 각 측면에 미친 파급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를 자료의 형태로 포착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I-4]는 2015년 이후 출생아, 사망자 및 결혼과 이혼 건수의 월별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는 하락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또한 결혼, 사망과 출생은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의 양

상을 나타내며, [그림 I-4]에서 2020년 1월 이후 관찰되는 모든 변화를 코로나19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림 I-4] 출생아, 사망자 및 결혼과 이혼 건수의 추이, 2015.1-2021.7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월.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달에서 결혼 건수가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혼의 감소는 2021년부터 출생아 수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닌다. 한편, 출생아 수는 202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2019년 대비 14.6%와 15.5%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11월 이후 출생아 수가 2019년 수준에 점차 근접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2021년 10월 1일 현재 2,49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0년 사망자 30.5만 명의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월별 사망신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8월 사망자가 2019년 8월보다 6.7%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증가분을 모두 코로나19의 파급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신고 자료가 가용해지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그림I-4]에서 보는 것처럼, 이혼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 분포

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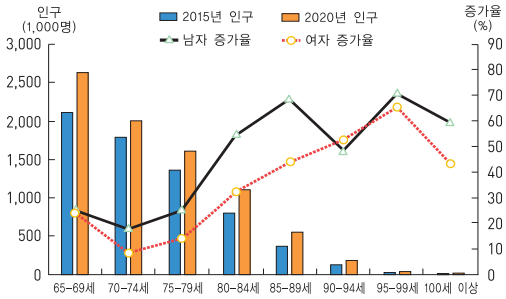
한국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표 I-2〉에 제시된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5.7%와 3.6%로 상승하며, 2067년 각각 46.5%와 20.7%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연도	인구 (100만 명)	인구구성률(%)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 인구	80+ 인구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20	51.8	15.7	3.6	43.7	21.7	129.0
2040	50.9	33.9	10.2	54.4	60.1	345.7
2060	42.8	43.9	19.2	61.3	91.4	546.1
2067	39.3	46.5	20.7	62.2	102.4	574.5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그림 I-5] 고령인구의 연령집단별 규모 및 증가율, 2015-2020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15, 2020.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3.7세로 높아지며 2067년에는 무려 62.2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 수준이었으나 2020년 21.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67년에 이르면 102.4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20년과 2020-2067년의 기간에 각각 18.7배와 4.5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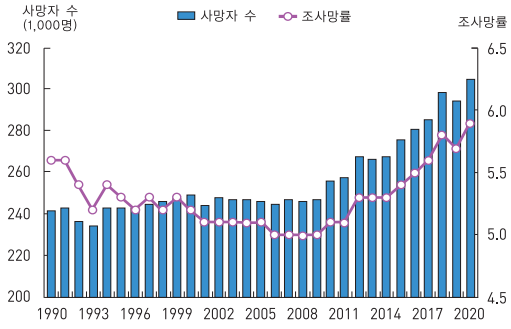
[그림 I-5]는 2015-2020년 연령집단별 고령인구 규모와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5.3만 명에서 813.5만 명으로 24.1%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70세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초고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은 2020년 현재 면 지역이 31.5%이고, 동 지역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4.6%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성군, 군위군, 영덕군, 영양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합천군, 남해군, 의령군)과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화성, 대전, 시흥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림 I-6]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90-202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사망률의 변화와 지역 편차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력은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20년 1,000명당 5.9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수 역시 2006년 24.4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30.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그림 I-6).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8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지난 15년간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 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3.4년씩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는 2020년

〈표 I-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조사망률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률 (인구 1,000명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7.5	29.3	69.9	74.7
선진국	10.2	4.5	76.2	82.3
개발도상국	7.0	31.9	68.6	72.9
아시아	6.9	24.9	71.2	75.5
한국	5.9	2.1	79.6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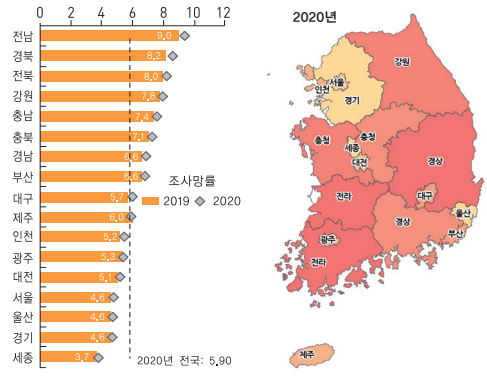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남자 16.5만 명, 여자 14.0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 수는 각각 6.5명과 5.4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최근에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망력 수준은 거주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20년에 경기도(6.3만 명), 서울(4.6만 명), 부산(2.3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7%에 해당하는 12.4만 명이었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9.4)와 경상북도(8.6) 및 전라북도(8.2)가 높고, 세종(3.8), 울산(4.7)과 경기도(4.7) 및 서울(4.8)이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과 세종, 경기도의 순으로 낮았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서양의 질병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최근 코로나19의 광범한 확산으로 전염병에 의한 초과사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

[그림 I-7] 시도별 조사망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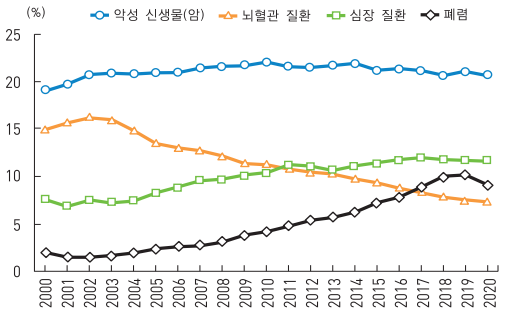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20.

사회에서 사망자 수의 증가에 미친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선진사회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20년 25.7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1997년의 13.2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I-8]에서 보는 것처럼,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장 질환,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의 상승 추세가 두드러진다.

[그림 I-8]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2000-2020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예를 들어, 2020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0.7%, 심장 질환 11.7%, 폐렴 9.1%, 뇌혈관 질환 7.4%이다. 만약 암이 제거된다고 가정하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6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장 질환과 폐렴이 제거된다면 각각 1.4년과 0.9년의 수명 증가가 기대된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에는 자살과 운수사고가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암은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에 의한 사망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폐렴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에 의한 고령집단의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20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2%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9.0%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21만 명이 감소한 95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20년 18.5%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는 2020년 현재 전국 인구의 50.2%에 해당하는 2,604만 명에 이른다.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20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시(동)부	군(읍/면)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6,997	17,992	24,989
1970	5,433	6,327	8,730	12,710	18,173	30,882
1980	8,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411
2000	9,895	19,441	21,354	36,755	9,381	46,136
2005	9,820	20,960	22,767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39,823	8,758	48,580
2020	9,586	23,658	26,043	42,065	9,764	5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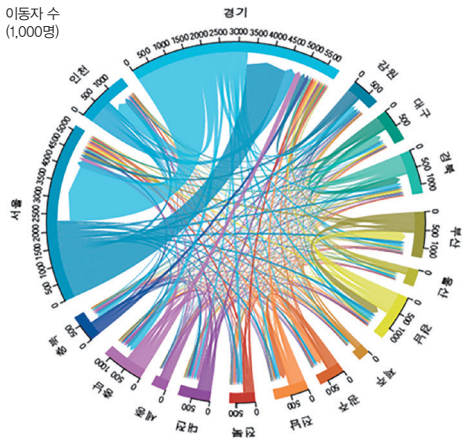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자료이며, 2020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전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와 4.3%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20년 기간에 10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I-9]는 2015-2019년 기간 각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이동의 규모와 방향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보다 12.5만 명이 많았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출발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의 순으로 많았고, 전출인구의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순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20년 2,604만 명으로 2,579만 명의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그림 I-9] 시도 간 전출 및 전입 인구, 2015-2019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의한 순이동 인구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런데 2020년 시도별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세종, 서울, 울산,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졌다. 자연감소의 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와 부산광역시의 순으로 컸다. 또한 권역별로는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역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해 2018년에는 중부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대 이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권역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20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8.1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20년 4,20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에 성장거점도시와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와 국제결혼 추이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국제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9년 25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인구의 4.9%에 해당된다. 체류외국인은 지난 6년간 연평균 8.2%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3.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대상 확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2020년 현재, 중국이 44.0%로 가장 많고, 베트남(10.4%), 태국(8.9%), 미국(7.2%), 우즈베키스탄(3.2%), 필리핀(2.4%)의 순이다. 체류목적별로는 재외동

포(F-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면제(B-1), 영주(F-5),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단기방문(C-3) 등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며, 외국인 거주자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1990-2020년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 규모는 64.8만 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46.2만 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4%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같은 기간 18.5만 건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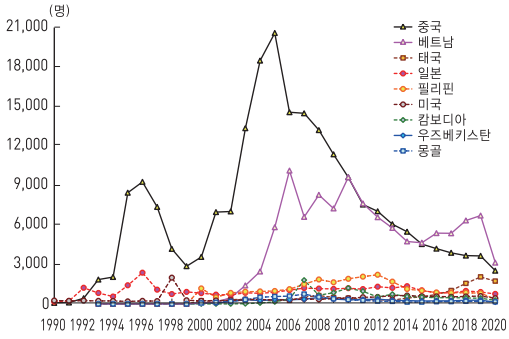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 4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15,341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결혼 건수에 대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7.2%로 집계되었다.

[그림 I-10-1]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여자 배우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제결혼의 초기 단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2015년 이후 베트남 출신의 여자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2020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 태국, 일본,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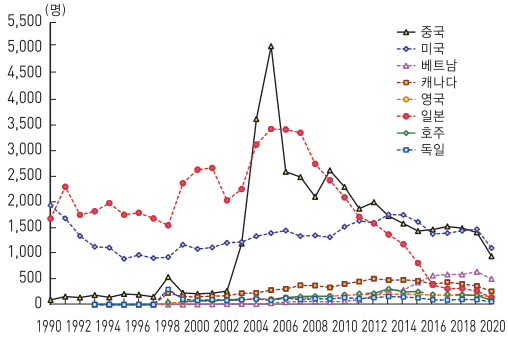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재 그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출신국가 역시 소수의 국가

[그림 I-10]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20

1)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김두섭,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201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I-10-2]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인 및 일본인 남자와의 결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미국인 및 중국인 남자와의 결혼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20년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 여섯 국가가 전체의 72.7%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는 귀화한 한국인이 대부분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했던 베트남 여자의 일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류외국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노동하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2019년 11월 현재 51.5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78.3%와 21.7%를 구성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 16개 국가로 제한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가족 동반이나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자연감소하며,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젊은 남자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인력과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당면한 일부 사회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세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 인구의 민족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처럼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한 복지와 취업기회의 박탈 등 역차별의 주장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김두섭 (한양대학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생활과 사회활동의 광범한 제약은 출생, 사망, 결혼과 이혼 양상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의 분석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단계에 결혼과 임신의 연기가 광범하게 이루어졌으며, 2020년 말에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결혼 감소는 추후 출생아 수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국제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매우 적으며, 2021년 8월 1일 현재 2,098명이다. 지난 3년간 평균 사망자에 비해 두드러진 초과 사망이 계절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모두 코로나19의 직접적 파급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가장 뚜렷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결혼이 연기되고 결혼 의향이 저하하였다. 결혼 건수가 계절에 관계없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혼 건수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출산율이 하락하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될 것이다.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경우,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이 한국 사회의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청장년과 노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과 사회활동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인구 영역의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한국 인구에 미친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 진행 중이고 가용한 인구자료도 제한적이지만, 2020년 초 이후 한국 인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작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사회와 인구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동향이 과거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 이혼 건수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결혼 및 출산 의향과 가족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분석을 위해 2010년 이후 연도 및 월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 OWID(Our World in Data)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자료와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회조사 원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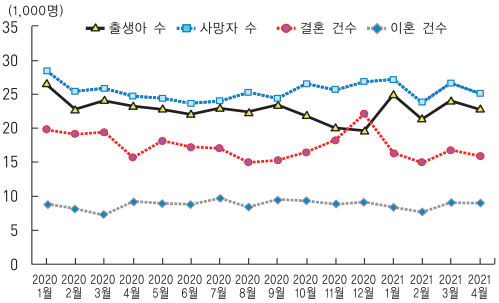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이 출생, 사망, 결혼 및 이혼 동향에 미친 파급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료의 형태로 포착이 가능하다.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한국 인구의 상황에서 2020년 1월 이후 관찰되는 모든 인구 변화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결혼, 출생과 사망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파급효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및 출생 신고의 시점이 음력 신년이나 선호하는 절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림 I-11]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의 월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는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며, 월별 편차의 폭이 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망자 수와 이혼 건수는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은 임신 기간 10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림 I-11]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10월부터 3개월간 출생아 수가 두드러지게 하락하였다. 그 후 2021년 1월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 출생아 수가 2021년 1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 상승추세로의 반전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지난 16개월간 사망자 수는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2020년 전반부에 천천히 하락하던 사망자 수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완만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으며, 그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겨울에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을 코로나19의 파급효과로 보기는 어

[그림 I-11]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와 이혼 건수의 월별 추이, 2020.1.–2021.4.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20–2021.

려우며, 계절적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2020년 12월 말에 917명으로 월평균 77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또한, 2020년 2월과 3월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사망자 수는 미미하였다. 결국, 지난 1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보다는 개인 위생의 철저한 관리에 따라 독감 등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자 감소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11]에서 결혼 건수는 대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며, 2020년 4월에 현저하게 감소하고 2020년 10-12월에 두드러지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결혼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주기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제한조치로 인하여 예정했던 결혼식을 연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2020년 4/4분기에 결혼이 증가한 것은 해가 바뀌기 전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계절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I-11]을 보면, 이혼 건수는 2020년 1-3월에 감소하였고 4월에 다시 평균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 후에는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혼 건수가 2020년 초에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가정법원이 휴정하여 이혼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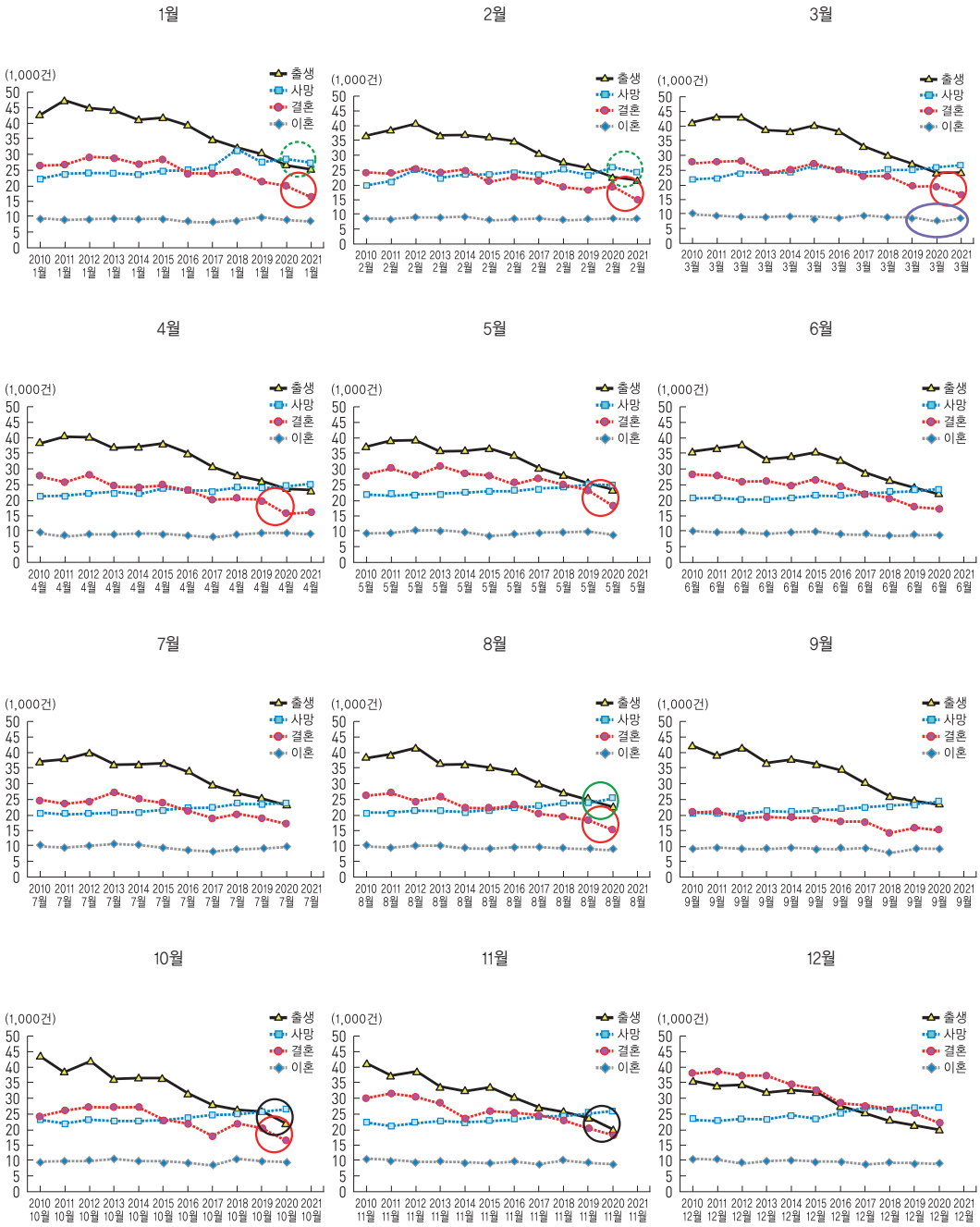
결혼, 출생과 사망은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며, [그림 I-11]에서 관찰되는 모든 변화를 코로나19의 파급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계절적 변동성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매 연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작성한 출생, 사망, 결혼 및 이혼 지표들의 변화추세가 [그림 I-12]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12개 그림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관찰되는 특징적인 양상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그림 I-12]에서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검은색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2020년 10월과 11월에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출생아 수의 저하 기울기가 2010년 이후의 전반적 하향추세에 비해 더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I-12]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2010년 이후 사망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녹색 점선의 원으로 표시된 것처럼, 2021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1년 전에 비해 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사망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코로나19에 기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림 I-12]를 보면, 계절에 따른 결혼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건수는 2020년 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4월, 5월 8월과 10월에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2021년 1-3월에는 감소의 폭이 더욱 깊게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사회활동의 광범한 제한이

[그림 I-12]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결혼 건수 및 이혼 건수의 추이, 2010.1–2021.4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0–2021.

젊은이들의 결혼 연기 또는 기피 경향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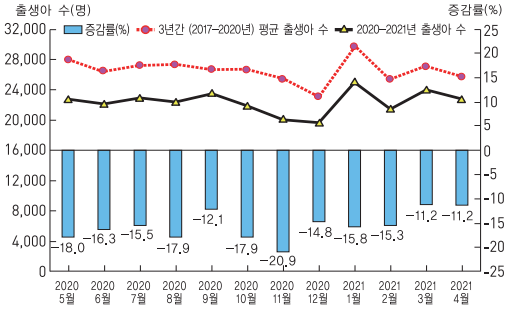
이혼신고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신고된 이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3.9%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혼은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림 I-12]에서 보라색 타원으로 표시된 2020년 3월과 2021년 3월에 각각 약간의 감소와 반등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이혼 건수의 의미 있는 변화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초저출산의 심화

코로나19의 초기단계만 해도 일부에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출산력이 저하하는 '2차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초저출산의 심화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 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생아 수의 감소를 좀 더 조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1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출생아 수를 지난 3년(2017년 5월 – 2020년 4월) 출생아 수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을 살펴본다.

[그림 I-13]을 보면, 최근 1년간 출생아 수가 지난 3년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모든 월별 증감률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 특히, 2020년 5월, 8월, 10월과 11월에는 출생아 수가 모두 17%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20년 5월과 8월은 코로나19 사태의 시작 이후 10달의 임신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시점이다. 이 시기 출생아 수의 감소는 코로나19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초저출산이 심화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2020년 10월과 11월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후 2021년 1/4분기까지 하락 폭이 점차 둔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림 I-13]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출생아 수 대비 2020–2021년 출생아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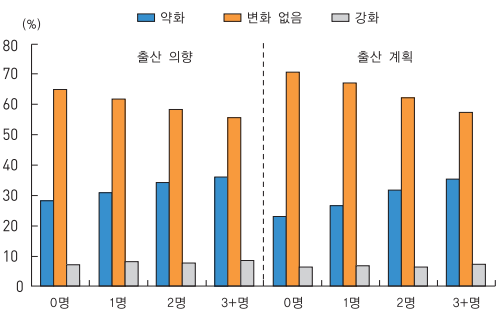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출산은 개인의 출산의향에 따라 임신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획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개인의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은 출산력의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과 11월에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에 출산의향이 약화되어 임신을 연기한 부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결혼 후 3년 이내의

25–28세 여성들이 첫째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연기하고자 했던 성향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판단된다.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25–39세 기혼 여성의 31.2%가 출산의향이 약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임신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응답자도 각각 27.6%와 19.9%에 달했다. [그림 I-14]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의향이 약해지고 출산계획을 미루는 경향은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4]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출산의향과 출산계획의 변화, 2020



주: 1) 전국 만 25–3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후, 확산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자녀 출산 의향'과 '자녀 출산 계획'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약화되었다', '약화되었다', '변화 없다', '강화되었다', '매우 강화되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각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로 약화는 '매우 약화되었다'와 '약화되었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강화는 '강화되었다'와 '매우 강화되었다'를 합한 응답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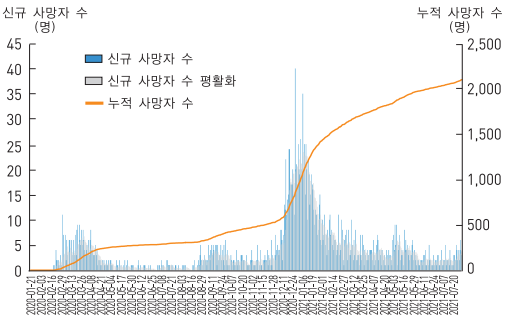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의향의 실현분석과 출산율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 원자료, 2020.

사망자, 치명률 및 초과 사망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누적 사망자는 2021년 7월 31일 현재 2,098명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40.5명 수준으로,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I-15]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사망자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즉, 제1차 확산 시기인 2020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신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제2차 확산이 이루어졌던 2020년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누적 사망자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3차 확산 시기인 2020년 12월 중순부터 매우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 2월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할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로 흔히 치명률이 사용된다. 치명률은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

[그림 I-15]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 수, 신규 사망자 수 평활화와 누적 사망자 수, 2020.1.21–2021.7.31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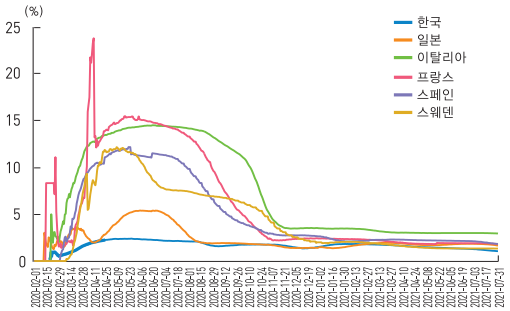
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020년 5월 25일 2.4%의 정점에 도달한 후 하향추세로 반전되어 2%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31일 현재 1.05%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치명률은, [그림 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주요 유럽 국가의 치명률은 2020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1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치명률은 2021년 7월 31일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2-3% 수준을 나타내며, 전 세계의 평균값은 2.13%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률보다 낮으며, 미국의 계절독감으로 인한 치명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코로나19와 연관된 합병증 또는 간접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의 사망자 증가 추이에서 벗어나는 초과 사망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17]에는 최근 1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사망자 수를 지난 3년(2017년 5월 – 2020년 4월) 사망자 수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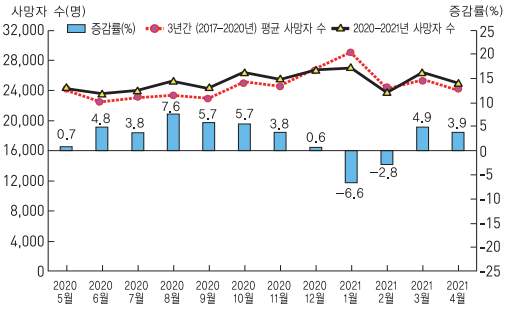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별 사망자 수는 2020년 5월과 2021년 1월 및 2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 같은 시점의 평균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7]에 제시된 증감률을 보면, 2020년 8월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 사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1월과 2월의 사망자 수가 같은 시점의 과거 3년 평균값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도 흥미롭다. 코로나19로 강화된 개인위생관리와 사회활동 제약, 그리고 독감 등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자 감소에

[그림 I-16]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 추이, 2020.2.1-2021.7.31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그림 I-17]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사망자 수 대비 2020-2021년 사망자 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기인하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초과 사망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앞으로 초과 사망을 고령자 연령집단이나 사망원인에 따라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 연령집단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추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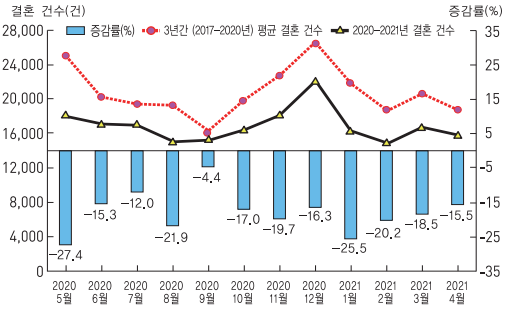
결혼의 감소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에 미친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다. 한국 인구는 출산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한 결혼적령 인구의 감소와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 또는 기피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11년에 32.9만 건의 혼인이 신고되었으나 2019년에는 23.9만 건으로 27.3%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결혼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2020년에 신고된 결혼 건수는 21.4만 건으로, 이는 2019년에 비해 10.7%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결혼이 감소한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계획했던 결혼의 연기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년들의 고용과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었고, 아울러 집값의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당분간 단념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셋째, 국제이동과 혼인이주의 제한으로 2020년 국제결혼이 2019년보다 35.1% 감소하였다.

[그림 I-18]은 최근 1년(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결혼 건수를 지난 3년(2017년 5월 – 2020년 4월) 결혼 건수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모든 월별 증감률이 음의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2020년 9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의 하락 폭이 12%를 넘는다. 특히 계절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2020년 5월과 2021년 1월에는 결혼 건수가 지난 3년 평균값에 비해 각각 27.4%와 25.5%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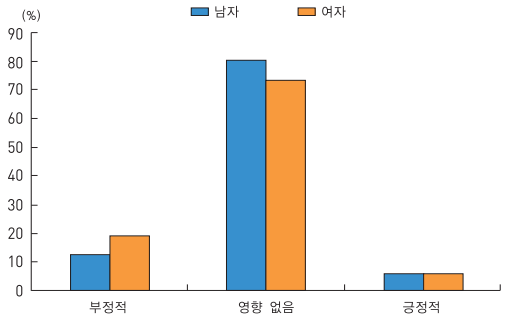
[그림 I-18]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결혼 건수 대비 2020–2021년 결혼 건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결혼 감소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의향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림 I-19]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30대 남녀 미혼자의 각각 13.0%와 19.6%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19] 코로나19 확산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 2020



주: 1) 전국 미혼 만 3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쪽으로 바뀜', '잠시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바뀜', '아무 영향 없음(동일함)', '잠시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바뀜',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뀜'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각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로 부정적은 '장기적으로', '잠시지만' 부정적으로 바뀜을 합한 응답률이고, 긍정적은 '잠시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뀜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7차 저출산인식조사: 30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 원자료, 2020.

결혼 의향의 변화는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도 편차를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층 계층에 속한 미혼자가 상층의 미혼자보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의향이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나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단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혼인율의 편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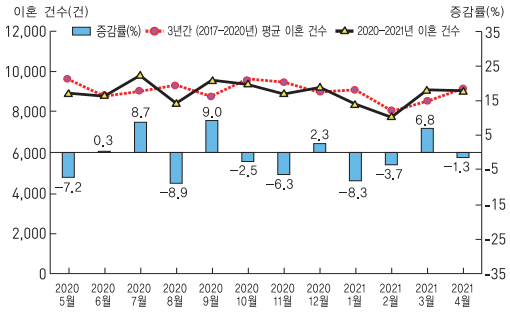
가족관계와 이혼 양상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사회활동의 제약과 재택근무의 광범한 확산으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성을 지닌다. 우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로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가족관계가 좋아졌을 수 있다. 반대로, 자녀 돌봄과 가사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부간에 충돌이 잦아져서 가족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가족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수, 성역할과 자녀양육 부담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성의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면 여성은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혼율이 높아져 2003년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

수)이 3.4의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 후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해왔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2와 2.1로 집계되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에 10.7만 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4,300여 건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I-20] 지난 3년(2017-2020년) 평균 이혼 건수 대비 2020-2021년 이혼 건수의 변화



출처: 통계청, 「월별 인구동향」, 2017-2021.

이혼은 결혼, 출생이나 사망에 비해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신고자료를 보면, 5월, 10월 및 11월에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2월에는 이혼신고가 적은 경향이 발견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 이후 2020년과 2021년의 이혼 건수를 살펴보아도 두 해 모두 2월에 신고된 이혼 건수가 가장 적다. 대체로 음력 설이 포함되거나 귀성과 성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월을 제외하면, 2020-2021년의 월별 이혼 건수는 같은 달의 지난 3년 평균값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I-20]에서 2020-2021년과 지난 3년의 이혼 건수를 비교하여 계산한 월별 증감률도 의미 있는 규칙성이나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맺음말

아직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인구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초기만 해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출산 수준이 감소하는 '2차 충격'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출산력이 하락하였다. 또한, 지난 1년여 한국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진 결혼의 감소는 앞으로 출생아의 초과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의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더욱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현재 집계된 사망률과 치명률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감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경우,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초과 사망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사망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국 인구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른 결혼, 출생과 사망의 편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육아 및 가사노동과 관련한 성 역할 갈등도 더욱 첨예해지고 세대 간 갈등과 함께 민감한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다.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편차와 불평등 및 이에 수반되는 성별, 세대 간 갈등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변화와 생활

김주현 (충남대학교)

- 한국과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더 크지만, 최근의 증가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돌봄은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초고령자의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배우자 및 혈연관계자와 동거하는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43.9%로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도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처럼 급격하지는 않다.
- 과거에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100세 이상 초고령자를 주로 돌봤지만, 2015년에는 유료수발자가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경향이 맞물려서 진행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평균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에서 2000년 76.0세, 2019년 83.3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 전체 인구의 15.7%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7% → 20%)하는데 각각 154년, 79년, 75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그 소요기간이 36년으로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5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집단을 65세 이상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인집단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른 특성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1990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그 규모는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와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은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규모 변화를 개관하고 가족, 돌봄, 주거, 활동, 건강 등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 앞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세계 최고의 고령화

수준에 도달한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와 그 규모 및 기본적 특징을 비교한다. 또한,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가장 주요한 변인인 성별, 돌봄,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초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시사점을 찾고자 시도한다.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규모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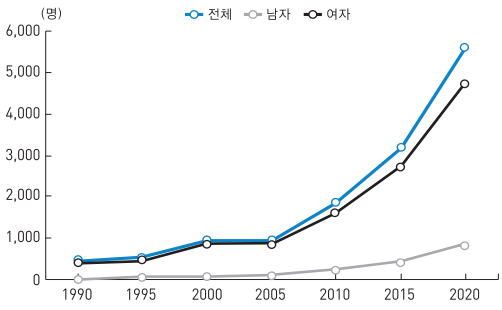
[그림 I-21]은 초고령인구의 규모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5,581명으로 1990년 459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과 2010년에 비해서도 각각 6배와 3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증가속도 또한 빠르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여자 4,731명, 남자 850명으로 여자가 남자의 5.6배였다. 그러나 100세 이상 인구에서 여자의 비중은 1995년 91.5%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여자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86.1%와 84.8%로 집계되었다.

[그림 I-22]에 제시된 바,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는 [그림 I-21]과 유사한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는 1970년 339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3,625명, 2010년 4만 7,756명, 2020년 8만 6,51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초고령인구에서 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남녀인구의 비중이 각각 11.6%와 88.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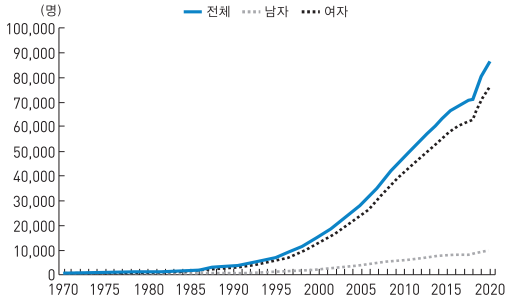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규모는 2020년 현재 한국의 15.5배에 달한다. 전체 인구에서 100세

[그림 I-21]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1990-2020



주: 1) 내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I-22]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197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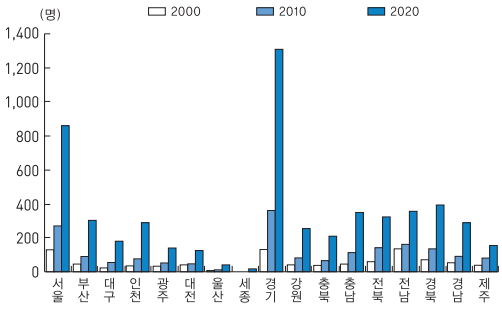


주: 1) 주민기본대장 인구 기준, 해외 재류 일본인 제외.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100세 노인 표창 대상자는 43,633명」, 보도자료, 2021.9.14.

이상의 초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0.06%)이 한국(0.01%)보다 높다. 단지, 최근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23]은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이 초고령인구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크고, 증가 속도 역시 두드러지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인구의 규모는 2020년 현재 경기도가 1,3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858명), 경상북도(393명), 전라남도(354명)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고령자가 2,454명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초고령자 수를 계산해보면, 제주도가 2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20.3명), 강원도(17.0명) 순이다.

[그림 I-23] 시도별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 2000-2020



주: 1) 내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00세 이상 초고령자 가족 및 돌봄

한국과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가족생활은 혼인상태 및 세대 구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I-5〉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 모두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유배우자와 이혼자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미혼자의 비중 역시 2005년 이후 마찬가지 추세가 관찰된다. 그러나 미혼자와 이혼자의 절대 규모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일본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는 한국과 대체로 유사한 구성과 변화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표 I-5〉 한국과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 1995-2015

(%)

	사별	유배우	미혼	이혼	미상
한국					
1995	98.0	1.6	0.4	0.0	0.0
2000	94.0	2.0	2.2	0.1	1.6
2005	97.1	2.2	0.5	0.2	0.0
2010	96.8	2.4	0.6	0.2	0.0
2015	90.9	3.4	0.7	0.3	4.7
일본					
1995	93.1	3.5	1.1	1.4	0.9
2000	91.5	2.9	1.3	1.4	2.9
2005	90.8	3.5	1.5	1.2	2.9
2010	86.2	3.6	1.8	1.3	7.1
2015	87.1	4.7	2.1	1.4	4.7

주: 1) 내국인 기준.
2) 일본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1995, 2000 ;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06.6, 2011.6, 2016.6.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statistics/0020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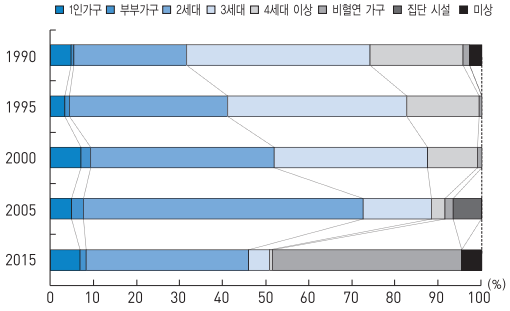
유배우자, 미혼자 및 이혼자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일본의 초고령자 규모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감안하면, 혼인상태별 초고령자의 규모의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일본의 100세 이상 미혼자는 1,30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 초고령 미혼자 규모의 60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림 I-24]에서 한국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 세대구성의 변화를 보면, 1995년까지는 성인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2,3,4세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2세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며, 2005년 이후에는 비혈연가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의 세대구성을 보면,비혈연가구가 43.9%로 가장 많고, 2세대 가구가 37.6%로 두 번째로 많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고령자 돌봄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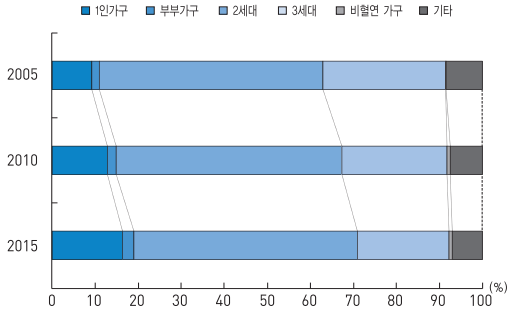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I-25]에서 일본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우선, 성인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2세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2015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초고령자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3세대 가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진다. 비록 비혈연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절대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국과 대비된다.

[그림 I-24]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 1990-2015



주: 1) 내국인 기준임.
2) 2010년의 경우 100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00;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06.6, 2011.6, 2016.6.

[그림 I-25] 일본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세대구성,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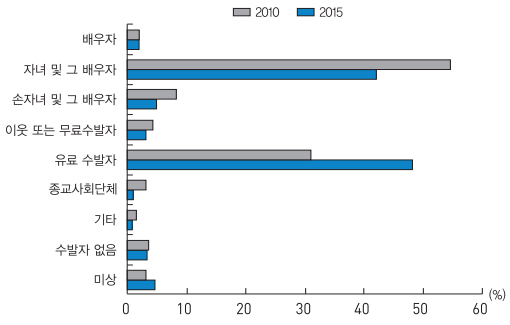


주: 1) 내국인 기준임. 일본 인구센서스 자료 활용함.
출처: Statistics of Japan, e-Stat
(https://www.e-stat.go.jp/statistics/00200521).

[그림 I-26]은 한국의 100세 이상 초고령자를 돌보는 주수발자의 구성을 보여준다. 유료수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05년 조사

자료는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초고령자에 대한 돌봄은 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고령자조사에서 확인되며, 이는 2010년 조사자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림 I-26]을 보면, 2010년에는 유료수발자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발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5년에는 초고령자를 돌보는 유료수발자의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그림 I-2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주수발자, 2010, 2015



주: 1) 내국인 기준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11.6, 2016.6.

그런데 주수발자의 구성은 초고령자의 성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I-6〉을 보면, 남녀 초고령자 모두 2010년에 이르기까지 과반수가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돌봄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유료수발자가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돌봄은 초고령자의 성별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남자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14.7%가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반면, 여자 초고령자는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경우가 미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에는 유료수발자의 돌봄을 받는 여자 초고령자가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돌봄을 받는 여자 초고령자보다 많았다.

〈표 I-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주수발자, 2010, 2015

(%)

	2010		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배우자	14.7	0.0	12.6	0.3
자녀 및 그 배우자	51.7	55.2	46.3	41.5
손자녀 및 그 배우자	6.2	8.6	2.6	5.3
이웃 또는 무료수발자	3.8	4.4	3.3	3.1
유료 수발자	23.7	32.2	33.9	50.5
종교사회단체	0.9	3.6	0.9	1.1
기타	2.4	1.4	0.7	0.8
수발자 없음	7.6	3.0	5.4	3.0
미상	5.2	2.9	6.5	4.4

주: 1) 내국인 기준임.
2) 복수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11.6, 2016.6.

초고령자의 성별에 주수발자의 구성이 달라지는 양상은 일본에서도 관찰된다. 일본건강·체력만들기사업재단(Japan Health Promotion & Fitness Foundation)에서 2000년 100세 이상 초고령자 1,9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초고령자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44.9%)가 주수발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녀(36.2%)가 그 다음이었다. 한편, 여자 초고령

자의 주수발자는 요양원 직원(33.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배우자(30.8%), 자녀(29.2%) 순이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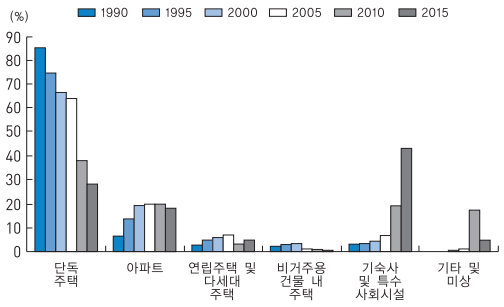
초고령자에 대한 돌봄은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와 점유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초고령자는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27]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85.4%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초고령자의 비중이 64.1%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05년 조사부터 노인복지시설이 거처 종류에 포함되면서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초고령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이 28.4%로 낮아지고,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다.

주택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고령자들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42.2%로 집계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동지역 39.5%, 읍면지역 47.1%이었다.

초고령자의 종교생활, 시간활용, 대인관계, 생활만족도 등의 일상생활은 통계청의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우선, 2015년 조사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55.2%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면, 여자 56.9%, 남자 44.9%로 여자의 종교활동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표 I-7〉을 보면, 일상적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초고령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며, 2015년에 50.7%로 집계되었다. 초고령자들의 일상적 활동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38.5%)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사교 활동(8.8%), 노인정 및 마을회관(6.4%), 집안일(5.3%)의 순이었다.

[그림 I-27]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거처 종류, 1990-2015



주: 1) 내국인 기준임.
2) 2005년부터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00;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보도자료, 2006.6, 2011.6, 2016.6.

〈표 I-7〉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시간활용,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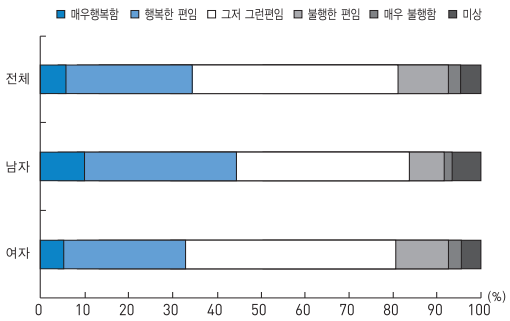
(%)

	2005	2010	2015
활동이 있음	59.2	53.1	50.7
집안일	7.2	5.0	5.3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29.8	35.1	38.5
사교	-	6.6	8.8
노인정, 마을회관	5.9	6.7	6.4
종교활동	-	5.4	-
텃밭 등 가벼운 일	0.6	5.8	-
기타	14.7	6.9	12.5
활동 없음	40.8	46.9	44.6
미상	1.0	-	4.7

주: 1) 2005년의 경우 '텃밭 등 가벼운 일'은 '수입이 있는 일'로 조사되었고, '활동 없음'은 '누워서 지냄'으로 조사됨.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05, 2010, 2015.

[그림 I-28]은 2015년 조사에서 측정한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성별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현재의 삶과 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가 34.4%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 46.6%, 불행하다는 응답자가 14.3%이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의 생활만족도가 대체로 여자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즉, 행복하다는 응답자가 남자는 44.4%인데 비해 여자는 32.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불행하다는 응답자가 남녀 각각 9.8%와 15.0%로 나타났다.

[그림 I-28]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생활만족도, 2015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보도자료, 2016.6.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 상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측정하는 방법이 흔히 활용된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의 관리 활동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의 측정을 통해 초기 단계의 질병 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표 I-8〉에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식사, 걷기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행 능력이 성별로 제시되어 있다. 초고령자들은 혼자서 가능한 활동으로 '식사'하기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걷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혼자서 식사가 가능한 초고령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혼자 세수/양치질/머리감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가 21.1%였

다. 혼자서 걷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는 17.0%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15년 자료에서는 초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자의 46.4%가 식사하기를 어려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혼자서 걷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의 비중은 24.8%였다. 그리고 초고령자의 29.4%가 세수/양치질/머리감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혼자서 식사하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남자 초고령자는 59.8%로 여자 초고령자의 44.4%보다 현저하게 높다. 혼자서 걷기가 가능한 초고령자는 남녀 각각 0.0%와 22.5%로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혼자서 세수/양치질/머리감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고령자는 남자 45.5%, 여자 26.9%로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자 초고령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초고령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표 I-9〉에서 보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초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보다 2015년에 더욱 두드러진다. 유배우 초고령자는 ADL 영역 중 식사하기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사

〈표 I-8〉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성별 건강상태(ADL), 2010, 2015

(%)

	2010			2015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상	30.8	19.6	21.1	45.5	26.9	29.4
중	29.4	25.6	26.1	23.0	20.3	20.6
하	39.8	54.8	52.8	31.5	52.8	50.0
식사						
상	44.3	34.2	35.6	59.8	44.4	46.4
중	30.8	33.5	33.2	19.0	19.5	19.4
하	24.9	32.2	31.2	21.3	36.2	34.2
걷기						
상	27.9	15.3	17.0	40.0	22.5	24.8
중	28.9	24.9	25.4	21.8	17.5	18.1
하	43.3	59.8	57.6	38.3	60.0	57.1

주: 1) 해당 일상수행에 대해 '상'은 '할 수 있음', '중'은 '약간 어려움', '하'는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미상'을 제외하고 분석함.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10, 2015.

〈표 I-9〉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혼인상태별 건강상태(ADL), 2010, 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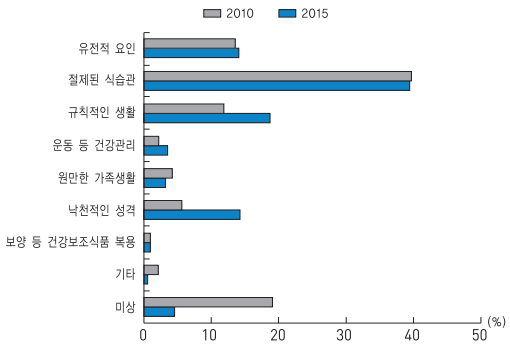
	2010				2015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세수/양치질/머리감기								
상	16.7	47.5	20.4	33.3	22.7	56.5	28.5	0.0
중	0.0	22.5	26.4	0.0	18.2	18.5	20.7	20.0
하	83.3	30.0	53.3	66.7	59.1	25.0	50.7	80.0
식사								
상	16.7	62.5	34.9	33.3	40.9	67.6	45.7	30.0
중	66.7	15.0	33.5	33.3	18.2	14.8	19.6	30.0
하	16.7	22.5	31.5	33.3	40.9	17.6	34.7	40.0
걷기								
상	16.7	42.5	16.2	33.3	18.2	43.5	24.3	0.0
중	33.3	25.0	25.5	0.0	9.1	23.1	17.9	20.0
하	50.0	32.5	58.3	66.7	72.7	33.3	57.8	80.0

주: 1) 해당 일상수행에 대해 '상'은 '할 수 있음', '중'은 '약간 어려움', '하'는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미상'을 제외하고 분석함.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10, 2015.

별자, 이혼자 및 미혼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예를 들어, 2015년 유배우 초고령자의 67.6%가 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사별자, 이혼자 및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식사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30-40% 수준에 불과하였다. 유배우 초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또는 걷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림 I-29]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들의 장수가 주로 식습관, 유전적 요인과 규칙적 생활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수의 사유를 절제된 식습관이라고 응답한 초고령자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39.7%와 39.4%로 가장 높았다. 장수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응답한 초고령자는 2010년과 2015년 모두 13-14% 수준이었다. 장수의 사유를 낙천적 성격이라고 응답한 초고령자도 2010년 5.8%에서 2015년 14.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규칙적 생활이라고 응답한 초고령자의 비중도 2010년 11.9%에서 2015년 18.8%로 높아졌다.

[그림 I-29] 100세 이상 초고령자의 장수 사유, 2010, 2015



출처: 통계청,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원자료, 2010, 2015.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아울러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건강추구행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67년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초고령인구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 구조와 돌봄 양상, 주거와 생활 환경, 건강 상태와 행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초고령인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2021 Household & Family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Ⅱ 가구·가족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 서울대학교 62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72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계봉오 | 국민대학교 82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서울대학교)

- 출산율 감소와 세대 분리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1인가구, 1세대가구, 2세대가구의 비율 차이가 줄어들어 지배적인 가구유형이 없어지고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 전 연령층에서 1인가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남성은 30대에서,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
-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기혼자녀보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비율이 더 높다.
- 혼인율은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체 혼인율과 외국인과의 혼인율이 모두 낮아졌다.
- 조이혼율은 2005년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평균 이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돌봄은 여전히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다.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12–24세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관계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나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 노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은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구적, 신체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가구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곳이다. 가족과 가구의 변화는 공적 영역과 대비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나타낸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은 2021년까지 장기화하면서 가족과 가구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여기서는 가족과 가구 동향을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 돌봄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구성과 규모, 1인가구 및 노인단독가구, 가족형성에서는 결혼과 이혼,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가사분담,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에서는 자녀 돌봄과 부모–자녀간의 지원 교환에 대해 다룬다.

가족구조

가족구조의 변화 동향은 가구 구성의 다양화, 가구 소규모화, 1인가구 증가 가속화로 요약되며, 2020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가구구성의 다양화 및 규모 축소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 수가 점차 적어져서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평균 가구원수는 2019년 2.39명에서 2020년 2.34명으로 0.05명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표 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 구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1인가구와 1세대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며 2020년 기준 각각 31.7%, 1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의 과반수를 차지했던 2세대가구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세대가구의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1.3%p 감소하여 44.0%이다. 이러한 변화로 미뤄볼 때 2세대 중심의 지배적인 유형이 사라지고 가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 가속화

1인가구는 생활과 관계 단위가 분리되는 삶의 양식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현상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삶의 양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1〉을 보면,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30년 사이에 약 3.5배 증가하였다.

2020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19.1%, 30대 16.8%, 40대 13.6%, 50대 15.6%, 60대 15.6%, 70대 이상 18.1%로 70대와 20대가 서로 비슷하게 많다. 성별을 구분하여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30대 1인가구가 21.6%, 여성은 70세 이상 1인가구가 27.5%로 가장 많다.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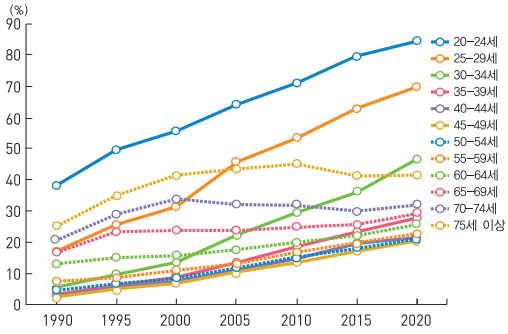
연도	평균 가구원수 (명)	세대별 구성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20	2.3	31.7	18.6	44.0	3.7	2.0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II-1]을 보면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1인가구 비율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대 74.8%, 30대 35.7%, 40대 21.2%, 50대 21.6%, 60대 27.4%, 70대 이상 37.9%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20대인 가구는 대다수가 1인가구이다. 20대는 학업, 진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II-1] 가구주 연령별 1인가구의 비율,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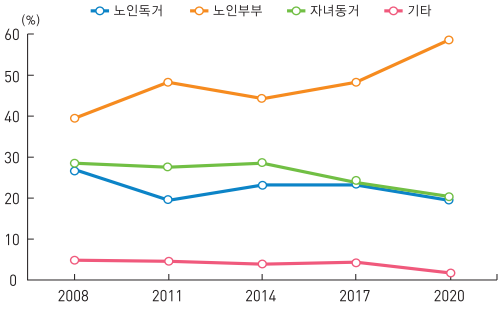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노인가구 증가세 유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만 따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이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020년 노인 혼자 살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는 19.8%로 2011년 19.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년기 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부부가구는 5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48.5%에 비해서 9.9%p 증가한 수치이다.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특히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의 평균수명보다 더 빨리 증가하면서 노년기에 부부만 같이 사는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II-2).

한편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011년 27.3%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0.1%보다 7.2%p로 감소한 수치이다. 과거에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혼자녀보다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2020년 노인이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9.8%,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10.8%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2011년 27.6%에서 2020년 12.8%로 감소하여 노년기에 혼자 혹은 부부만 같이 사는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 노인 거주형태, 2008-2020



주: 1) 65세 노인 인구 중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가족 형성

전통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경로는 혼인, 출산, 입양이지만, 이혼과 미혼 출산도 가족을 형성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부/모 가족은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인 감소

2020년 혼인건수는 21만 3,502건으로 전년 대비 2만 5,657건(10.7%)이 감소하였다. 2010년 혼인건수가 32만 6,104건이었으므로 지난 10년 사이 혼인건수는 11만 2,602건이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시기는 2015년 이후로, 30만 건 이상을 유지하던 혼인건수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조혼인율 역시 지난 10년 사이 6.5건(2010년)에서 4.2건(2020년)으로 감소하였다. 15세 이상 인구의 일반혼인율은 지난 10년 사이에 남성의 경우 2010년 15.7건에서 2020년 9.6건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일반혼인율 역시 2010년 15.5건에서 2020년 9.4건으로 감소하였다.

〈표 II-2〉 혼인건수 및 혼인율, 1990-2020

연도	혼인건수 (1,000건)	조혼인율 (‰)	일반혼인율(‰)	
			남성	여성
1990	399.3	9.3	25.2	24.9
1995	398.5	8.7	22.9	22.5
2000	332.1	7.0	17.8	17.5
2005	314.3	6.5	16.1	15.8
2010	326.1	6.5	15.7	15.5
2015	302.8	5.9	13.9	13.7
2016	281.6	5.5	12.8	12.7
2017	264.5	5.2	12.0	11.8
2018	257.6	5.0	11.6	11.5
2019	239.2	4.7	10.8	10.6
2020	213.5	4.2	9.6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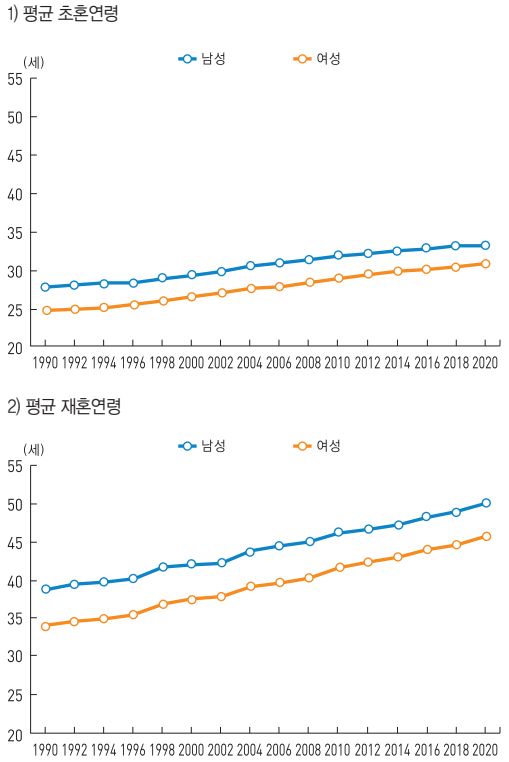
주: 1)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2) 일반혼인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혼인건수 및 혼인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는 것과도 관련된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혼인건수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만혼화 경향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3.2세로 전년보다 0.1세 감소하였고, 여성은 30.8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여성을 기준으로 볼

[그림 II-3] 성별 평균 초혼연령과 재혼연령, 1990-2020



주: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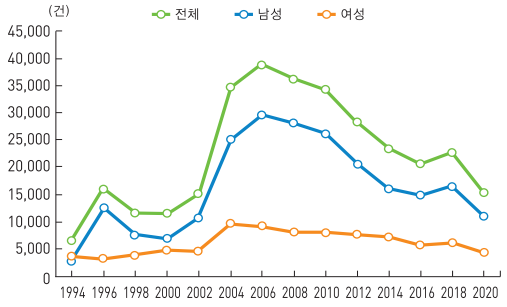
때, 연령별 혼인건수는 25–29세가 전체 혼인건수의 3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40세 이후 혼인건수도 전체의 15.2%를 차지할 정도로 중년기 이후 결혼도 적지 않다.

남녀 모두 재혼은 2020년 전체 혼인건수의 11.8%로 나타나며, 이는 2009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초혼의 감소 추세보다는 급격하지 않아 중년기 이후의 재혼이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남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50.0세, 여성은 45.7세로 전년에 비해 남성은 0.4세, 여성은 0.6세 증가하였다(그림 II–3).

외국인과의 혼인 감소

[그림 II–4]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를 보면, 외국인과의 결혼은 2020년 기준 총 1만 5,341건으로 2019년 2만 3,643건보다 8,302건 줄어들어 전년 대비 35.1% 감소하였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6년에 3만 8,7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 2만 2,698건으로 다시 증가세였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4]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994–202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혼 감소

이혼은 하나의 가정이 두 개의 가정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혼인건수가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표 II–3〉을 보면 이혼건수는 증감의 변동이 있다. 2003년 이혼건수가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6,500건으로 전년도 11만 831건보다 3.9% 감소하였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4건이며,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일반이혼율은 남성 4.8건, 여성 4.7건이다.

〈표 II–3〉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20

연도	이혼건수 (1,000건)	조이혼율 (‰)	일반이혼율(‰)		평균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0	45.7	1.1	2.9	2.8	36.8	32.7
1995	68.3	1.5	3.9	3.9	38.3	34.5
2000	119.5	2.5	6.4	6.3	40.1	36.5
2005	128.0	2.6	6.6	6.5	42.1	38.6
2010	116.9	2.3	5.6	5.6	45.0	41.1
2015	109.2	2.1	5.0	5.0	46.9	43.3
2016	107.3	2.1	4.9	4.8	47.2	43.6
2017	106.0	2.1	4.8	4.7	47.6	44.0
2018	108.7	2.1	4.9	4.8	48.3	44.8
2019	110.8	2.2	5.0	4.9	48.7	45.3
2020	106.5	2.1	4.8	4.7	49.4	46.0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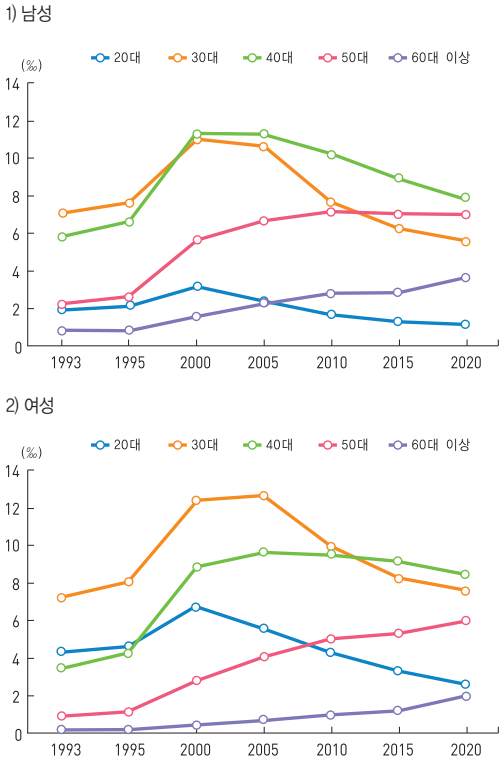
이혼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9.4세,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6.0세로 2000년에 비해서 평균 이혼연령이 남성 9.3세 여성 9.5세 높아졌다. 이혼연령의 상승은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림 II-5]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이혼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보여준다.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에서 남성 또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낸다. 2000년에는 30대와 40대 남성의 이혼율은 각각 11.1건과 11.3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6건과 7.9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50대와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율은 2000년 5.6건, 1.6건에서 2020년 7.0건, 3.6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이혼율은 2000년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2.4건과 8.8건이었다가 2020년에 7.6건과 8.4건으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0년 2.8건, 0.4건에서 2020년 6.0건, 2.0건으로 이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중노년 세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노년기가 길어지고 중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부모로서의 과업을 마치는 시기가 50대 이상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II-5]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20



주: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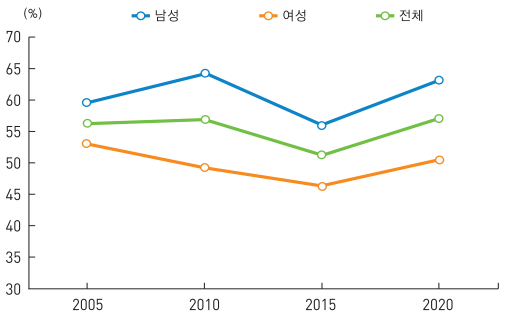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전반적인 만족도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감소하다 2020년 상승 반전하였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림 II-6]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추이를 보면, 2020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57.0%로 2015년 51.2%에 비해 높아졌다.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2015년 배우자 관계에 만족하는 남성은 56.0%, 여성은

46.2%에서 2020년 남성 63.2%, 여성 50.6%로 높아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2015년보다 남성의 만족도 증가가 여성의 만족도 증가보다 더 크다.

[그림 II-6] 배우자 관계 만족도, 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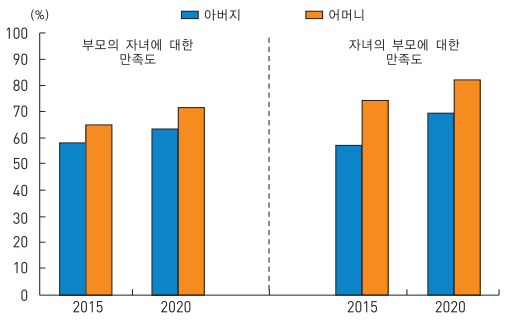


주: 1) 배우자 관계만족도는 현재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 만족도 변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청소년자녀 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부모와 청소년자녀 모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이 각각 63.4%, 71.5%로 2015년에 비해 아버지는 5.2%p, 어머니는 6.5%p 높아졌다. 청소년 자녀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의 경우 69.4%, 어머니의 경우 82.3%로 2015년에 비해 각각 12.2%p, 8.1%p 높아졌다.

[그림 II-7]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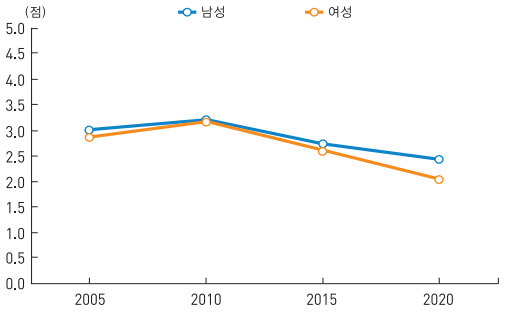
주: 1)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청소년 자녀(만 12-24세)가 있는 가구의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성역할 태도와 자녀 돌봄 분담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태도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2010년, 2015년에는 "남성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이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조사하였고, 2020년에는 질문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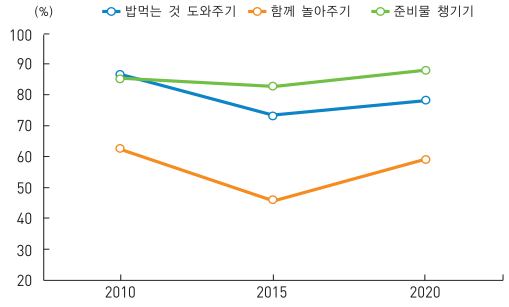
이 문항의 점수를 시계열로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남녀 모두 가정 내 성역할 구분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성의 동의 수준은 2010년 3.2점, 2015년 2.7점, 2020년 2.4점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동의 수준은 2010년 3.2점, 2015년 2.6점, 2020년 2.1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I-8] 성별 성역할 태도, 2005-2020



주: 1) 성역할 태도는 2010년, 2015년에는 '남성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이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고, 2020년에는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값의 평균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9]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여성) 실태, 2010-2020



주: 1) 자녀돌봄 분담은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중 '자녀 밥먹는 것 도와주기, 자녀와 놀아주기, 자녀 준비물 챙기기'를 주로 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로 아내가'와 '주로 아내가'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2020년에는 조사 내용이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함께 놀아주기나 책읽어주기', '준비물 챙기기'로 조사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부부가 자녀돌봄을 공평하게 담당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서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자녀 밥 먹는 것 도와주기'를 대체로 혹은 주로 아내가 한다는 비율은 2010년 86.6%, 2015년 73.3%, 2020년 78.2%로 나타났다. 여전히 어린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여성이다. '자녀의 어린이집 혹은 학교 준비물 챙기기'를 대체로 혹은 주로 아내가 하는 비율도 2010년 85.5%, 2015년 82.6%, 2020년 88.4%로 대부분 여성이 하는 현실이다. '자녀와 놀아주기'는 아내가 하는 비율은 2010년 62.7%, 2015년 46.0%, 2020년 59.3%로 2015년에 비해 다시 더 높아졌다. 조사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성이 어린 자녀돌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돌봄 체계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가정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이 다시 높아진 경향이 관찰된다.

가족 돌봄

자녀 돌봄

어린 자녀나 아픈 가족 구성원,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는 것은 가족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돌봄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82.3%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였다. 영유아의 기관 이용율은 2010년 59.3%, 2015년 78.9%에 비교할 때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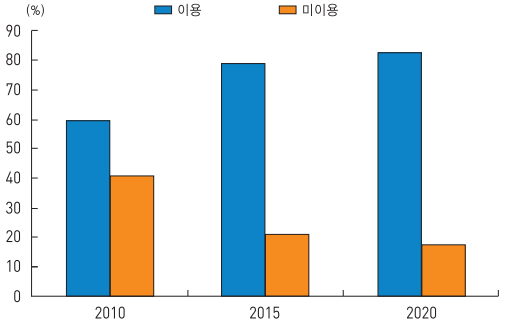
한편, 영유아 자녀가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2020년 어

머니가 87.4%, 조부모 9.1%, 기타 8.1%였다. 2010년 어머니 81.2%, 조부모 5.9%, 기타 10.0%와 비교하면 어머니나 조부모가 주로 양육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주된 돌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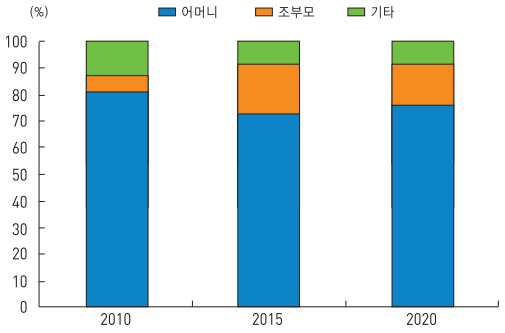
2020년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42.1%, 학원이 37.7%였다. 이 비율은 2015년에 비해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 비율이 23.1%p 증가, 학원 23.0%p 감소한 것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0]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률과 미이용시 주 돌봄자, 2010-2020

1)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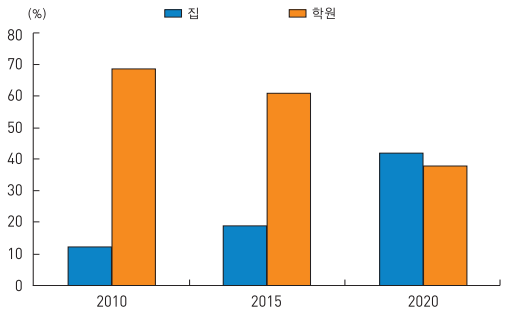


2) 영유아 돌봄 기관 미이용 시 주 돌봄자



주: 1) 취학전 영유아(만 0-6세)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영유아 돌봄 기관은 주중 낮 시간에 다니고 있는 기관을 말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있음.
3) 기관 미이용 시 주 돌봄자는 영유아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응답률로, '조부모'는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말하며, '기타'는 아버지, 기타 친인척, 육아전문인력 등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11] 초등학생의 방과후 이용 장소,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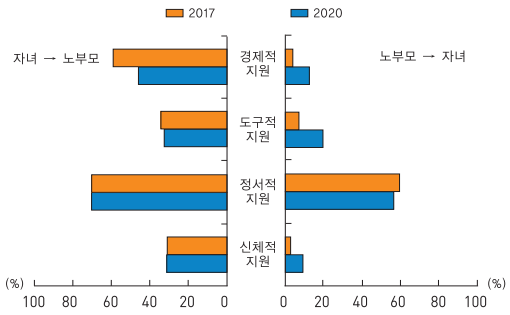
주: 1)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집'은 주로 보호자가 있는 경우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노부모 돌봄과 교환

노인과 자녀 세대 간의 교환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과 신체적 도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노인과 따로 사는 자녀는 노부모를 지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를 지원하기도 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의 46.0%는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12.5%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의 70.5%는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56.4%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한다. 자녀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는 노인은 31.3%이며, 자녀에게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은 9.4%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노부모가 따로 사는 자녀 세대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정서적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높아져서 세대 간 교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II-12] 노부모와 비동거자녀 간 교환, 2017, 2020



주: 1) 만 65세 이상 노인과 비동거 자녀 간의 도움의 교환이며, '경제적 지원'은 정기적 현금 지원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맺음말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들은 개인화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춰준다. 가구유형이 다양화하고,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장기적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혼인율과 이혼율이 감소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요한 가족 생애사건을 연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평한 성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주로 하고 있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더 필요하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이 요구된다.

가족 관계의 질적 측면을 보았을 때,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가 중요해지는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 만족도가 높았졌다.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세대간 지원 교환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할 때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도구적, 신체적 지원이 증가하여 부모세대의 자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백의 비율이 2020년 연간 35% 내외로 일정 수준을 보여 돌봄 취약층이 드러났고,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는 가구는 약 60%를 차지하였다.
- 휴원·휴업 동안 개별가정의 자녀돌봄은 변화 없음에서부터 다양한 양육방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이 크고, 자녀연령과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 이용이 주요한 양육체계로 작동하였다.
-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중에서 유급휴가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무급휴가 사용 등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일-돌봄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코로나19는 여러 차원에서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가구소득 및 부/모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감소, 시간사용의 변화가 있었으며, 가족 관계에는 긍정과 부정의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았다.
- 아동돌봄가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돌봄공백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노동 및 소득의 변화와 사회활동의 제약,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직장생활유지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2021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약 2년에 걸친 영향은 전 세계 아동에 대한 교육과 돌봄, 육아 분야에 커다란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례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돌봄교실, 유치원·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의 공적 교육·돌봄 체계는 5차례 이상의 휴원·휴업·휴관 조치와 온라인 원격수업의 변화로 대응하였다.

이로써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개별 가정과 부모의 역할로 회귀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온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교육과 돌봄의 개별화와 사적 영역에의 의존도 증가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한 격차의 심화와 계층화가 진전되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성장·발달의 지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전후로 아동돌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20년 3월 25일-3월 27일, 2차 조사는 2020년 7월 8일-7월 10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의 자녀양육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 양육자는 1차 조사 564명이었으며, 맞벌이가구(43.8%), 외벌

이가구(48.2%), 비경제활동가구(8.0%)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 응답자의 61.9%인 349명이 참여하였다.

휴원·휴업 기간 돌봄공백 현황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아동 관련 공적 돌봄체계는 작동을 멈췄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요 육아지원 인프라의 휴원·휴업 조치가 내려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엄중하게 적용되었다. 휴원·휴업 기간 동안 '돌봄공백'(낮 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을 겪은 가구는 〈표 II-4〉에서 2020년 3월 36.2%, 2020년 7월 37.5%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의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2020년 연중 일정 수준을 보였다.

〈표 II-4〉 휴원·휴업 기간 돌봄공백, 2020

(%)

시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계
2020.3	31.6	32.3	26.6	9.6	100.0
2020.7	28.9	33.5	31.2	6.3	100.0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1차 2020년 3월 25일-3월 27일, 2차 2020년 7월 8일-7월 10일임.
2) 1차 조사는 '2월 중순 이후', 2차 조사는 '6월 한 달간'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으로 이전에 없던 돌봄공백이 발생하였는지 질문하였음.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의 변화를 경험한 가구,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봉화, 의성), 취약가구,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돌봄공백을 경험하는 돌봄 취약층의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돌봄공백이 외벌이가구에 비해 큰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벌이가구의 돌봄공백도 약 30%로 증가했다.

휴원·휴업 기간 아동 돌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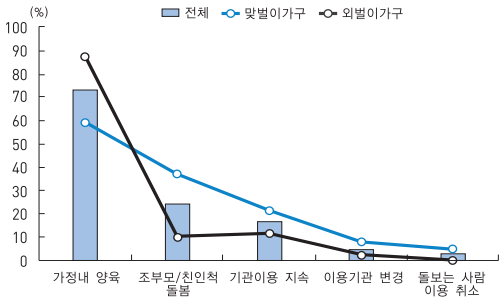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자녀 돌봄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59.0%, 없는 경우는 41.0%로 나타났다.

팬데믹 초기의 자녀돌봄은 [그림 II-13]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내 양육을 한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24.0%, '자녀가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 16.8%,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 4.8%,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가 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맞벌이가구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등·하원 전-후 개인양육지원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II-5〉

에서 보듯이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경우는 2016년 70.2%에서 2019년 81.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5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반면 혈연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15.5%에서 43.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비혈연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은 2016년 2.0%, 2019년 2.7%에서 2020년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보이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II-13] 팬데믹 초기 아동 돌봄 변화,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표 II-5〉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 돌봄자, 2016-2020

(%)

	혈연인	비 혈연인	혈연/ 비혈연인 모두	없음 (어린이집만 이용)	계
2016	27.7	2.0	0.2	70.2	100.0
2017	25.9	2.0	0.2	72.0	100.0
2019	15.5	2.7	0.4	81.3	100.0
2020	43.8	4.5	1.3	50.3	100.0
0세	48.5	6.4	0.0	45.1	100.0
1세	46.5	3.0	1.2	49.4	100.0
2세	36.3	4.7	1.6	57.3	100.0
3세	48.7	4.8	1.6	44.8	100.0
4세	47.1	3.7	0.7	48.6	100.0
5세	42.2	6.0	2.0	49.9	100.0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각 연도.

아동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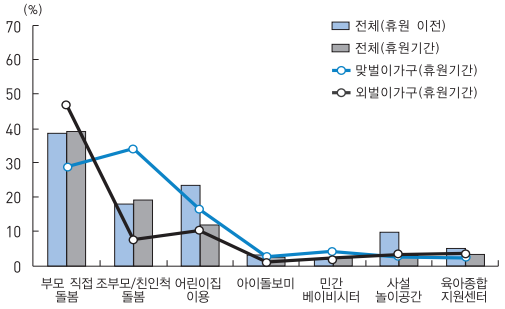
코로나19 초반에는 돌봄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가정내 돌봄으로 전환되었으나, 공적 돌봄체계의 휴원·휴업 및 긴급돌봄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 이용의 증가와 기타 서비스 및 사교육/민간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14]의 영아(만 0-2세) 돌봄의 경우에는 팬데믹 전후 서비스 이용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과 사설 놀이공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외벌이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도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아(만 3-5세) 돌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기관과 사설 놀이공간의 이용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부모의 직접돌봄 및 조부모/친인척의 돌봄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영아돌봄과 마찬가지로 유아돌봄도 외벌이의 경우 부모의 직접돌봄이,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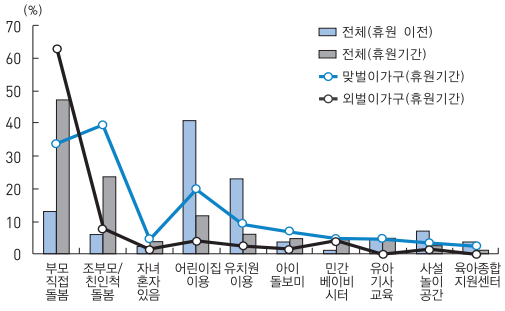
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이용이 10% 이상 일정 비율을 유지하였다(그림 II-15).

[그림 II-14] 팬데믹 초기 영아 돌봄,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2세 영아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자녀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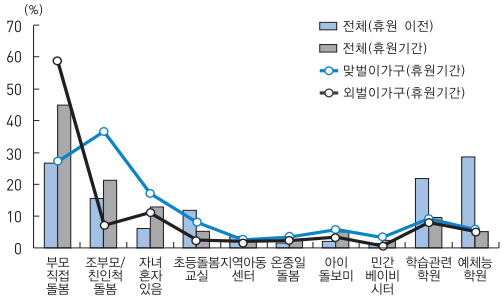
[그림 II-15] 팬데믹 초기 유아 돌봄,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3-5세 유아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자녀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초등 저학년 아동(만 6-8세) 돌봄은 초등 돌봄교실과 학습 및 예체능 학원 이용이 큰 폭으로 줄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도 다소 감소하였다. 다른 연령대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접 돌봄과 조부모/친인척 도움이 증가하였고,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12.8%로 6.6%p 증가하였다. 외벌이의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이,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도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II-16).

[그림 II-16] 팬데믹 초기 초등 저학년 아동 돌봄,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6-8세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응답임.
2) 해당자녀가 이용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한 것이므로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초기에는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의 이용이 주요한 양육지원체계로 작동하였다. 취학 전 영유아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초등 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경우 3월 말 조사 기준 맞벌이가구의 약 25%, 외벌이가구의 약 9% 이상이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월 말에는 전국 평균 70%를 상회하게 되었다.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위험 상황에서 영유아 자녀 돌봄에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37.1%, 외벌이가구의 경우 8.0%로, 맞벌이가구에게 조부모/친인척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돌봄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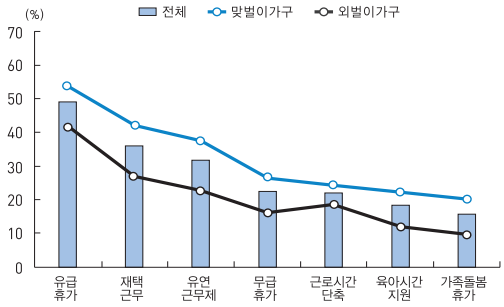
또한 공적 돌봄 및 사적 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감소 하에서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별 가정에서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수요가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초등자녀의 사교육 이용이 팬데믹 초기에는 10% 이상의 일정 비율을 보였다.

이후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초등학교 휴업과 온라인수업 전환이 반복되면서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학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교육/민간영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의 차이로 휴원·휴업 기간 아동의 학습 격차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동안 자녀돌봄을 위해 제공된 직장 내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은 [그림 II-17]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의 직장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49.2%, 재택근무 36.1%, 유연근무제 31.9%, 무급휴가 22.4%, 근로시간 단축 21.9%, 육아시간 지원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신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응답가구의 15.8%가 이용하였다. 외벌이가구보다는 맞벌이가구에서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한 비율이 모두 높았다. 시간 지원의 경우 외벌이가구의 이용률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7] 맞벌이가구 여부별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률, 20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응답자 본인의 직장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 '충분히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직장 내 자녀돌봄 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보다는 모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표 II-6〉의 지원제도 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급휴가, 무급휴가,

유연근무제는 부와 모의 이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부보다 모의 이용률이 더 높아 자녀돌봄지원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보였다. 평소에도 자녀돌봄을 주로 모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자녀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모가 지원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결과이다. 이런 가운데 자녀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한 부의 비율이 약 15–50%를 차지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II-6〉 성별 직장 내 자녀돌봄지원제도 이용률, 2020.3

(%)

	전체	부	모
유급휴가	49.2	49.5	48.3
재택근무	36.1	33.4	42.7
유연근무제	31.9	31.5	33.0
무급휴가	22.4	22.2	22.9
근로시간 단축	21.9	20.2	26.0
육아시간 지원	18.3	15.5	24.6
가족돌봄휴가	15.8	14.3	19.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응답자 본인의 직장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 '충분히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 1차」, 원자료, 2020. 3.

〈표 II-7〉을 보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후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직접 돌봄이 증가하고 부와 모가 함께 돌보는 비율도 증가하였으나, 모의 자녀돌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모의 돌봄 참여가 부에 비해 약 3–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을 10을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도 모:부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이 각각 6.7:3.3, 6.5:3.5로 나타나, 모가 부보다 2배 정도 돌봄을 더 많이 담당하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표 II-7〉 팬데믹 선언 전후 가정내 자녀돌봄 변화, 2020.3

(%)

구분	코로나 전-후 시점	부모 직접 돌봄	아버지가 주로 돌봄	어머니가 주로 돌봄	부모 함께 돌봄	조부모 /친인척 돌봄
영아 자녀	전	33.2	3.6	29.2	7.9	18.6
	후	39.5	7.5	36.8	12.3	20.9
유아 자녀	전	15.0	1.4	13.6	4.3	6.4
	후	38.2	10.0	29.6	15.0	26.4
초등 자녀	전	24.4	5.0	20.1	4.3	12.6
	후	44.7	7.0	35.2	7.7	20.3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는 만 0–2세, 유아는 만 3–5세, 초등자녀는 만 6–8세(초등 1–3학년)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81호」, 2020;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 1차」, 원자료, 2020. 3.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2020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51.2%는 긴급보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48.8%가 긴급보육을 이용하였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2월 10.0%, 3월 28.4%, 4월 55.1%, 그리고 5월 72.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20. 5. 9.).

연령별로 0세 영아의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이 30%로 가장 낮았고, 2세, 3세, 5세 아동은

50% 이상이 긴급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률이 다른데, 비취업모가 상대적으로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 중 재택근무를 한 경우 긴급보육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자녀를 돌보면서 집에서 일하는 지원의 형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변화

코로나19는 여러 차원에서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소득 및 지출의 경제적 변화, 근로 및 여가 등의 시간사용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표 II-8〉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의 조사에서는 가구소득 및 부/모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은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특별재난지역의 가구에서 경제활동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85.5%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 및 TV/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각각 72.2%, 77.8%, 대면 접촉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9.5%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39.7%,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6.6%, 부부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가족 관계에는 긍정과 부정의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았다.

〈표 II-8〉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변화, 2020.3

		응답률(%)		평균(점)
		줄어듦/나빠짐	늘어남/좋아짐	
경제적 변화	가구소득	32.1	5.1	2.61
	부 근로소득	25.5	4.8	2.70
	모 근로소득	19.7	4.6	2.71
	가구지출	28.7	36.3	3.12
	자녀양육비 지출	30.3	29.8	3.01
시간 사용 변화	부 근로시간	19.9	9.0	2.85
	모 근로시간	19.0	7.4	2.78
	자녀와 보내는 시간	5.3	72.2	4.07
	집안에 있는 시간	3.2	85.5	4.46
	TV/미디어 이용시간	3.4	77.8	4.18
	오프라인으로 만나는시간	79.5	6.9	1.64
관계 변화	자녀와의 관계	6.6	39.7	3.45
	부부 관계	10.3	20.9	3.15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2월 대비 3월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줄어듦/나빠짐'부터 '상당히 늘어남/좋아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설문조사 1차, 원자료, 2020. 3.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가구의 어려움(3가지 중복응답)은 〈표 II-9〉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순위로 응답한 어려움은 '가계소득의 변화' 18.6%, '사회적 교류와 바깥활동의 제약' 12.0%,

'자녀돌봄공백의 발생' 11.7%, '모의 직장생활 유지' 11.5%, '자녀양육비 증가' 11.2%, '자녀양육의 전반적인 어려움' 10.9%, '부의 직장생활 유지'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 외에도 가계상황 악화(소득 감소와 양육비 증가), 일과 자녀돌봄 양립의 어려움이 주를 이룬다.

3가지의 응답을 종합하면 아동돌봄가구의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가 바뀌는데, '사회적 교류와 바깥활동의 제약'(42.1%), '자녀양육이 가져오는 전반의 어려움'(36.4%)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불안/우울/스트레스'(30.7%), '가계소득의 변화'(30.7%), '자녀양육비 증가'(29.2%), '자녀돌봄공백의 발생'(28.4%), '감염예방과 위생관리'(27.8%), '부의 직장생활 유지'(19.2%), '모의 직장생활 유지'(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가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돌봄공백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용·노동 및 소득의 변화와 사회활동의 제약,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맞벌이가구는 가계수입의 변화와 모의 직장생활유지, 자녀돌봄공백의 발생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외벌이가구는 전반적인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양육비 증가, 사회적 교류와 바깥활동 제약의 어려움이 좀 더 많았다. 이로써 맞벌이가구의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돌봄공백에 대한 대응이 우선 과제로 해석되며, 외벌이가구는 늘어난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등 자녀교육 지원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9〉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가구의 어려움, 2020.7

(%)

	1순위 응답	1-3순위 다중 응답
사회적 교류/바깥활동 제약	12.0	42.1
자녀 양육 전반	10.9	36.4
가계 수입 변화	18.6	30.7
불안/우울/스트레스	4.9	30.7
자녀 양육비 증가	11.2	29.2
자녀 돌봄 공백 발생	11.7	28.4
감염예방/위생관리	5.7	27.8
부의 직장생활 유지(출근/근무)	7.7	19.2
모의 직장생활 유지(출근/근무)	11.5	17.2
아동용 마스크 구입	2.6	15.5
자녀 마스크 착용/관리	2.0	12.6
감염 관련 직접 경험	1.1	9.7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코로나로 인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1순위로 꼽은 응답 비율 및 1-3순위 내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부모-아동의 정신건강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아동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했는지 질문한 결과, 〈표 II-10〉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불안/스트레스의 부정적 정서를 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우울/불

안/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영아자녀는 33.0%, 유아자녀는 39.7%, 초등자녀는 46.4%였다. 부모의 경우는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부 51.0%, 모 59.6%로 부와 모 모두 절반 이상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모의 경우 부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부의 경우 모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2020.7

(%)

	전혀 증가하지 않음	별로 증가하지 않음	보통	약간 증가함	상당히 증가함	잘 모름/비해당
영아자녀	7.6	12.7	24.6	23.7	9.3	22.0
유아자녀	3.3	19.0	29.8	28.1	11.6	8.2
초등자녀	5.5	15.5	24.5	30.9	15.5	8.2
부	2.9	8.9	24.6	31.2	19.8	12.6
모	2.0	7.2	18.1	30.4	29.2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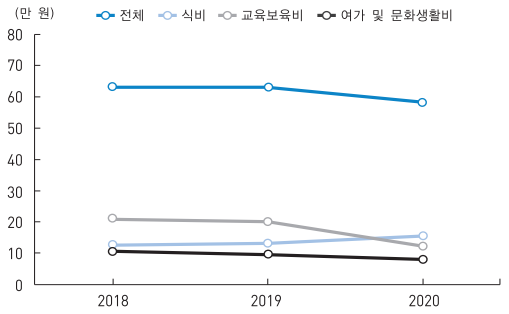
주: 1)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0-8세 자녀를 둔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2월 코로나 발발 전과 비교하여 6월 한달 동안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것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2020.

아동돌봄가구의 양육비 지출 변화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평균 58만 2,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만 8,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로 교육보육비는 2019년 평균 20만 1,000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2만 3,000원으로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여가·문화생활비의 경우 2018년 10만 9,000원, 2019년 9만 7,000원에서 2020년 8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식비는 2018년 13만 2,000원, 2019년 13만 4,000원에서 2020년 15만 6,000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출의 규모와 항목 비중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영유아자녀 양육비용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보육·교육 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체험활동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자녀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8]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



주: 1)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87호」, 2021.

한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11〉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0

가구소득	2018		2019		2020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 (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율 (%)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 (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율 (%)	영유아 1인당 양육 비용 (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율 (%)
전체	63.3	15.8	63.0	14.9	58.2	12.7
299만 원 이하	46.2	21.6	51.8	23.9	48.3	26.7
300-399만 원 이하	54.3	15.4	52.8	15.1	50.3	14.1
400-499만 원 이하	68.2	15.0	63.2	14.1	52.1	11.6
500-599만 원 이하	70.7	12.7	70.1	12.8	62.9	11.5
600만 원 이상	92.5	11.8	83.8	10.8	73.4	9.8

주: 1)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87호」, 2021.

〈표 II-11〉에서 전체 가구소득 구간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폭이 큰 경향을 보였다.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따른 것과 연관된 결과로,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율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299만 원 이하)에 증가하여 26.7%에 달한다. 반면,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2019년 10.8%에서 2020년 9.8%로 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보다 취약함을 보여준다.

맺음말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가정내 돌봄이 증가하고 취업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돌봄공백이 나타났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동돌봄가구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일-생활의 균형을 저해하지 않도록 아동돌봄의 개별맞춤과 공적돌봄체계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난상황에서의 아동돌봄지원체계는 기존의 아동돌봄지원체계의 확장과 연계의 강화, 긴급돌봄체계의 운영기준 정비, 재난상황에서의 서비스 운영의 연계와 전이, 보건의료/사회복지지원체계와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아동돌봄서비스의 가동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0. 5.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보도참고자료.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계봉오 (국민대학교)

- 한국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태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어 왔다.
- 성, 연령, 혼인상태, 가족구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가치관 차이와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 코로나19 이후 대졸 이상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향후 가족형성 및 가족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는 미국과 비교할 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가치관은 가족 형성 및 부부 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한다.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혼인의 지연, 출산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구학적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결혼의 중요성과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는 예측이 보다 어렵다.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족가치관의 중장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단기적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사회를 휩쓴 코로나19의 충격은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는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고용불안의 증가,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의 확대로 인해서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과 더불어 인구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가치관은 결혼, 이혼, 혼전동거(cohabitation), 비혼출산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가족가치관의 측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 또한 관계를 맺는 대상(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족구성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의 가족 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를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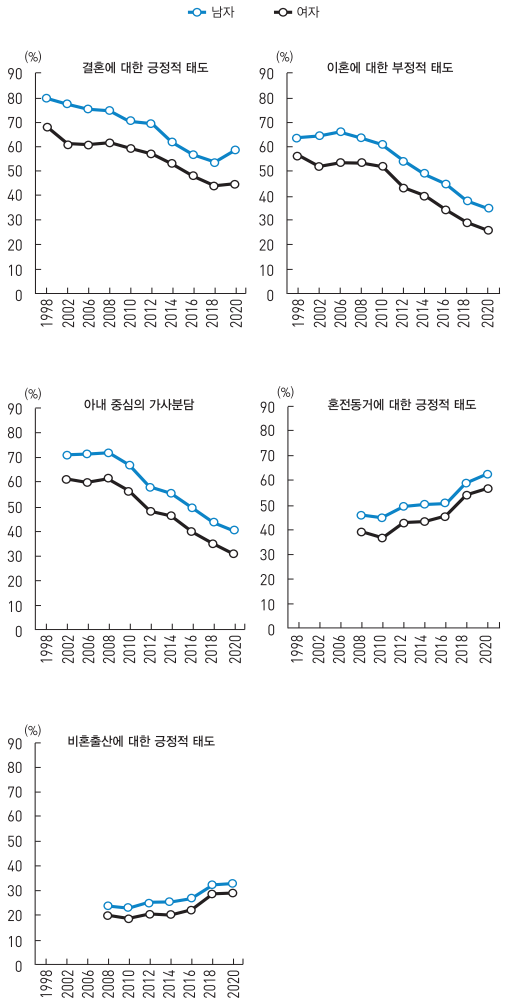
가족가치관의 변화

성별 및 연령별 가족가치관의 변화

[그림 II-19]는 성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족가치관을 측정하는 항목은 결혼, 이혼, 성별 가사분담, 혼전동거,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이며, 각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가장 이른 시점부터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남녀 모두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혼하면 안 되며,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다. 결혼, 이혼, 아내 중심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비율이 높은 반면,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족가치관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된다. 팬데믹의 유행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추세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

[그림 II-19] 성별 가족가치관 변화, 1998-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혼전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각각 '전적으로 동의' 또는 '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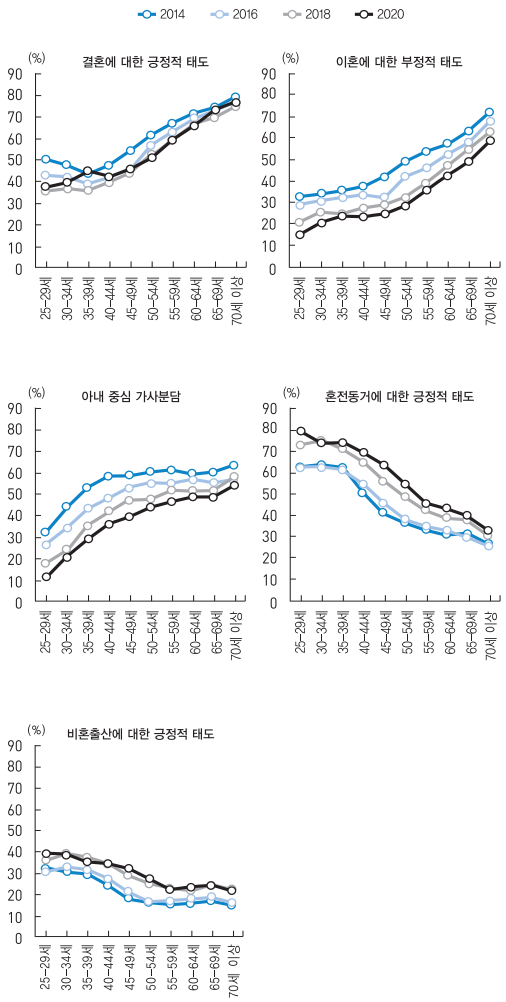
졌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2018년 53.3%에서 2020년 58.4%로 5.2%p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18년 44.0%에서 2020년 44.7%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비혼출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남녀 모두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특히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는 경향을 완화시켰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혼, 가사분담, 혼전동거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의 약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0]은 2014-2020년 기간의 연령별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가족가치관을 보여주는 5개의 항목에서 전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태도를 유지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아내 중심의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혼전동거와 비혼출산과 같은 비전통적인 가족구성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동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 연령층의 가족가치관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18년보다 2020년에 증가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30-40대의 결혼관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

[그림 II-20] 연령별 가족가치관 변화, 2014-2020



주: 1) 만 2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혼전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각각 '전적으로 동의' 또는 '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가사분담, 혼전동거,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감소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다소 둔화되었다. 특히,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켰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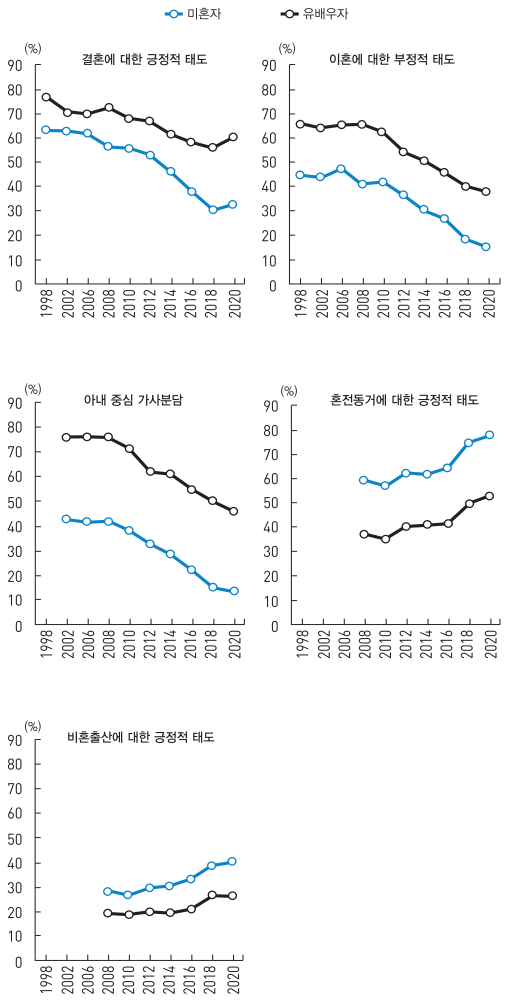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그림 II-21]은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유배우자가 미혼자보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우자가 미혼자보다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가 주로 가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배우자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 등 비전통적인 가족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혼인상태별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미혼자 및 유배우자 모두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2020년에 다소 강화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변화 추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강화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가구 내에 미취학아동(0-5세)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에 대해서

[그림 II-21] 혼인상태별 가족가치관 변화,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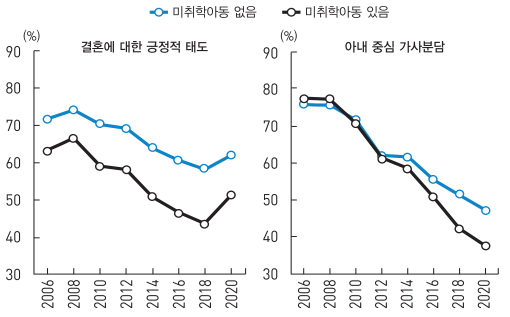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혼전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각각 '전적으로 동의' 또는 '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2018년까지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미취학아동의 양육부담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은 미취학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2018년 58.4%에서 2020년 6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43.5%에서 51.3%로 상승하여 차이가 좁혀졌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내 중심의 가사분담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미취학아동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평등한 부부간 가사분담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22] 미취학아동 유무별 가족가치관 변화, 2006-2020



주: 1) 만 1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미취학아동 유무는 가구 내 만 0-5세 가구원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3)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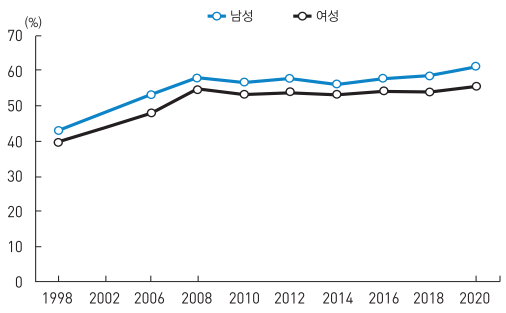
어린 자녀의 존재로 인한 양육부담의 증가가 보다 평등한 가사분담의 형성으로 연결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었고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부는 양육부담 증가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그림 II-23]은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0년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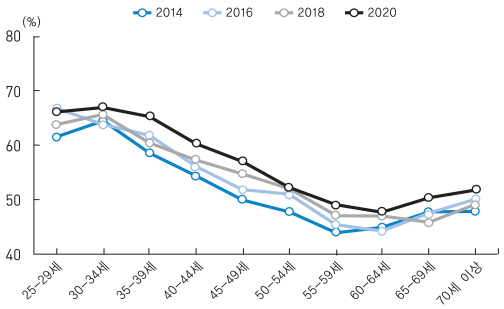
[그림 II-23] 성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2년의 경우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4]는 2014년 이후 연령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패턴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50대 중반 이전까지는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약간 하락하다가 50대 후반 이후에는 만족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2018년 고령층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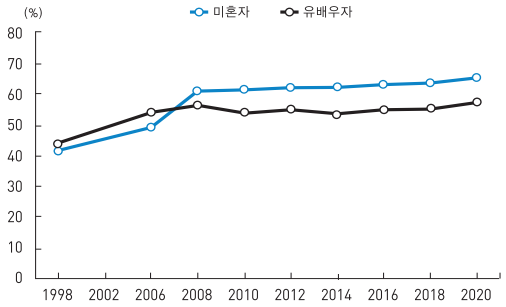
[그림 II-24] 연령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주: 1) 만 2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2006년까지는 유배우자의 만족도가 미혼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상황이 역전되어 유배우자의 만족도가 미혼자의 만족도보다 낮은 수준인데, 그 차이는 2010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II-25).

[그림 II-25] 혼인상태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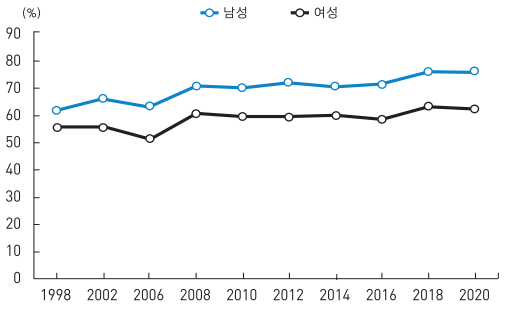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2년의 경우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만족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며 배우자와의 만족도의 성별 격차는 최근에 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남녀 모두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향상 추세가 둔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가 2020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않은 것이다. 단,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이러한 변화 추이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그림 II-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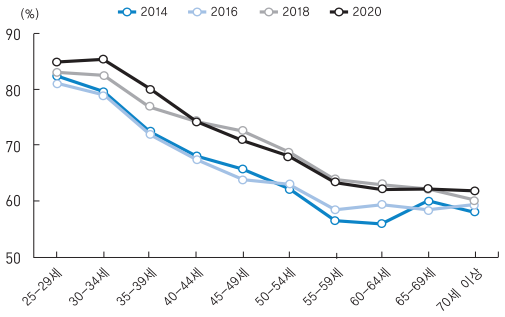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상승되는 추세를 보여

[그림 II-26]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주: 1) 만 1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7] 연령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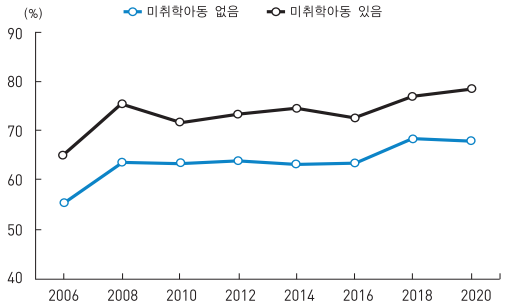


주: 1) 만 2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상승 추세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정체되었다. 2018년에는 그 이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었던 반면에 2020년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이러한 정체의 한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연령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II-27).

한편 미취학아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으며, 2020년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아주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28).

[그림 II-28] 미취학아동 유무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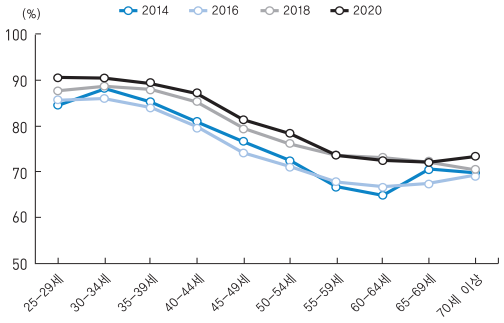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미취학아동 유무는 가구 내 만 0-5세 가구원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3)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전체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다소 부침이 있지만,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지만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향상 추세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정체되었다. 2018년에는 이전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었던 반면에 2020년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패턴에 변화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그림 II-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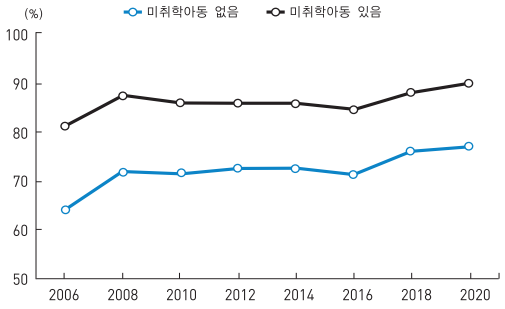
[그림 II-29] 연령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주: 1) 만 25세 이상 인구 중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차이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취학아동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2020년에 소폭 증가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약간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30).

[그림 II-30] 미취학아동 유무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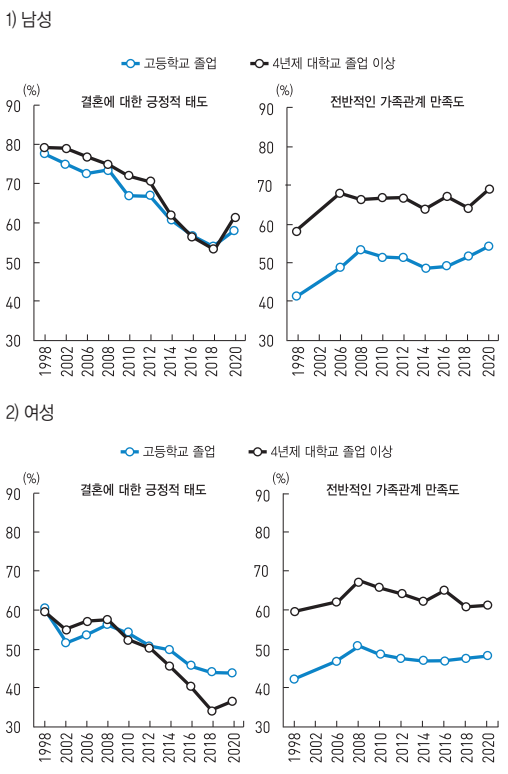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미취학아동 유무는 가구 내 만 0-5세 가구원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3)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앞에서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별 차이가 증가했다. 그런데 성별과 교육수준을 함께 고려할 경우 가족가치관 변화와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31]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성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 이상 남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018년 53.7%에서 2020년 61.6%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고졸 남성의 경우도 4년제 대졸 이상 남성과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II-31] 성 및 교육수준별 결혼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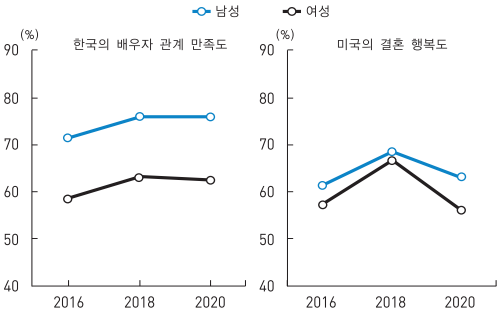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초과-4년제 대학교 졸업 미만',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대표적인 학력집단인 '고등학교 졸업'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3)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2002년의 경우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대조적으로 대졸 이상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18년 대비 2020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졸 이상 남성과 달리 대졸 이상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 변화, 시간사용 변화 등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다룬 연구(진미정 외, 2020)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많이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에서 고려한 네 집단 중 코로나19 이후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한 집단이 대졸 이상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확대, 야근 및 회식의 감소 등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대졸 이상 남성이 결혼 및 가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국제비교

[그림 II-32]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미국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비교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자료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미국 자료는 결혼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행복', '어느 정도 행복', '별로 행복하지 않음'으로 구분되었고, [그림 II-32]는 '매우 행복'

[그림 II-32] 한국과 미국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6-2020



주: 1) 한국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치는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미국의 결혼 행복도는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치는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NORC, *General Social Survey 2016-2020 panel*, 2021.5.

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조사자료에 동일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남녀 모두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결혼 행복도는 2020년에 남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약화되어 왔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어 왔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둘째,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한 2020년에는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특히 대졸 이상 남성이 큰 변화를 경험한 반면 대졸 이상 여성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셋째, 미국과 비교할 때, 코로나19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결혼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의 증가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남성의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실제 결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대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대졸자의 결혼관이 성별로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향후 가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가족생활의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 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4

코로나19와 의료이용 변화 변진옥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병희 | 서울대학교 105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신건강 영향 유명순 | 서울대학교 113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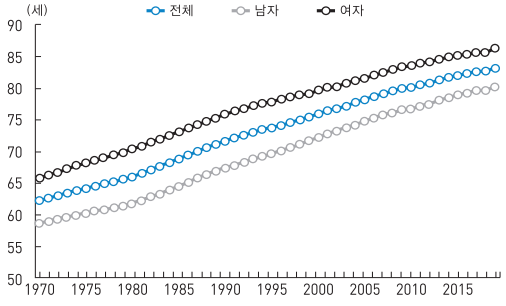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양호한 수준이다.
-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한국은 매우 양호한 방역 성과를 얻었다.
- 비만과 당뇨병, 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흡연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고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사망과 유병 지표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과 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의료이용도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 의료제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건강과 질병

국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로 기대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기대수명이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 83.3세가 되었다(그림 Ⅲ-1).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84.4세), 스위스(84.0세), 스페인(83.9세), 이탈리아(83.6세) 다음으로 기대수명이 길다. 한국은 2003년에 OECD 평균 기대수명에 도달하였고, 이후 기대수명이 더 길어졌다.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9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할수록 수명의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2019년에 남녀 간 수명의 차이는 6.0세였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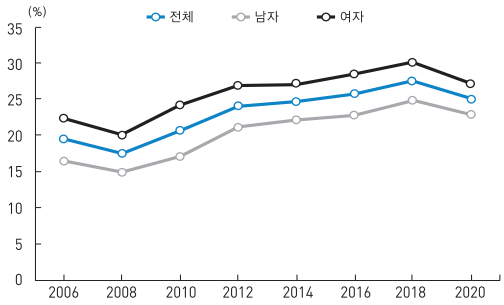
차이는 2019년 기준 네델란드 3.1세, 스웨덴 3.3세, 노르웨이 3.4세, 독일 4.7세, 미국 5.1세, OECD 평균 5.3세, 프랑스 6.0세 등이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남녀 간 수명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노년기에 만성질환에 걸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장수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측정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2021년 *World Health Statistics*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남자 71.3세, 여자 74.7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3.3세)과 약 10.2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의 건강수명은 74.1세, 독일 70.9세, 프랑스 72.1세, 영국 70.1세, 미국 66.1세 등으로 건강수명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15세 이상 국민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8년 43.7%, 2010년 37.6%, 2014년 32.5%, 2018년 32.0%로 계속 하락해오다가 2019년 33.7%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이것은 OECD 평균 67.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는 2020년 50.4%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보건복지부의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주관적 건강이 양호한 경우가 73.8%에 달하였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의 조사 주체와 측정방법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커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질병상태는 유병률로 측정한다. 통상 조사 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이 사용된다. 지난 10여 년간 2주간 유병률은 17.5%에서 27.5%까지 상승하였다가 2020년에 25%로 하강하였다. 아파서 누워있었던 와병일수는 0.5일이었다.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그림 Ⅲ-2). 한편,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즉 활동제한율은 2019년 기준 5.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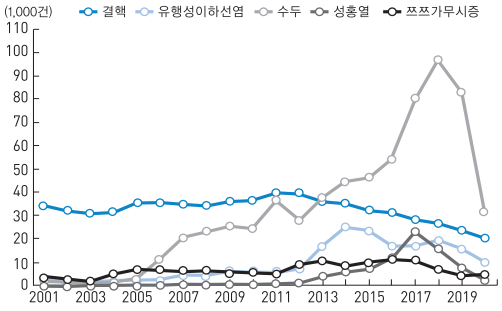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20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감염병은 항생제의 발명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 주요 감염성 질환의 발생 건수(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높은 발생률을 보이던 결핵이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쯔쯔가무시 등이 새롭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Ⅲ-3). 최근 신종감염병이 몇 년 간격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 '신종플루'(인플루엔자A)와 메르스(MERS, 2015)에 이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라사열(Lassa fever, 2009), 신종플루(H1N1, 2009), 에볼라(Ebola, 2014), 지카바이러스(Zika, 2015), 라임병(Lyme disease, 2018) 등도 유행한 바 있다. 사회경제적 이동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바이러스의 서식환경이 변화한 것이 최근의 감염병의 잦은 발생과 재발생 및 대유행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 건수, 2001-2020



주: 1)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연보」, 각 연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 〈표 Ⅲ-1〉이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았지만 국가 간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했다. 초기대응, 정부 효율성, 보건체계의 가용자원, 사회적 신뢰 등의 요인이 국가 간 방역 성과의 차이를 만든 원인으로 추측된다.

〈표 Ⅲ-1〉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치명률, 2021.9.30

	누적 확진자 수 (명)	누적 사망자 수 (명)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 (명)	치명률 (%)
미국	43,349,211	695,114	211.8	1.6
브라질	21,399,546	596,122	282.5	2.8
영국	7,808,054	136,906	204.8	1.8
프랑스	7,100,572	117,407	175.1	1.7
스페인	4,956,691	86,397	183.5	1.7
이탈리아	4,668,261	130,870	217.0	2.8
독일	4,228,774	93,643	112.6	2.2
네덜란드	2,039,630	18,581	107.2	0.9
일본	1,700,687	17,622	14.0	1.0
이스라엘	1,277,270	7,732	85.4	0.6
스웨덴	1,152,027	14,856	144.4	1.3
덴마크	360,103	2,656	45.7	0.7
한국	311,289	2,481	4.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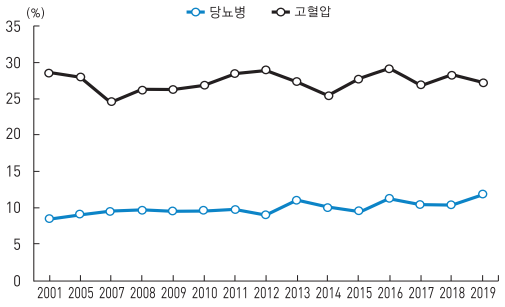
주: 1) 치명률=(누적 사망자 수÷누적 확진자 수)×100.
출처: Johns Hopkins University, *Mortality Analysis* (https://coronavirus.jhu.edu/data/mortality), 2021. 9. 30.

다음으로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5%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8.9%까지 높아진 후 2014년 25.4%로 낮아졌다가 2019년 27.2%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5%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19년 11.8%가 되었다(그림 Ⅲ-4). 30세 이상 성인의 약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은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당뇨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2017년 기준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6.8%로 OECD 국가 평균 6.4%를 약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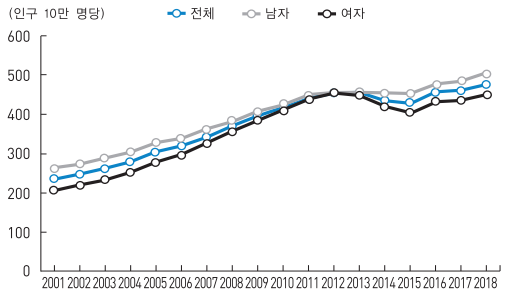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9



주: 1)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암 발생은 일시적인 감소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립암센터의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 수, 즉 암 조발생률은 2001년 234.7명에서 2005년 302.4명, 2010년 417.6명, 2015년 427.6명으로 높아졌고 2018년에 475.3명이 되었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0.1명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암 발생률은 301명이고 한국은 314명으로 약간 높은 편이다. 멕시코 143명, 칠레 196명, 브라질 217명 등 중진국의 암 발생률은 낮은 편이고, 호주 468명, 아일랜드 374명, 미국 352명, 프랑스 344명 등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Ⅲ-5] 암 조발생률, 200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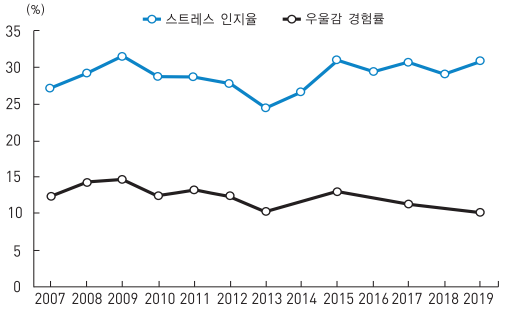
주: 1) 암 조발생률=(신규 발생 암환자 수÷전체 인구)×100,000.
2)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함.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2018 암등록통계)」, 2021.

정신건강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

지율은 2007년 27.1%에서 2009년 31.5%로 높아진 후 2013년 24.4%로 낮아졌으나 2015년 31.0%를 기록한 이후 계속 30%대가 유지되고 있고, 2019년 30.8%로 나타났다(그림 Ⅲ-6).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자가 41.0%, 직장 스트레스 경험자 68.0%,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자 50.6%로 다수의 한국인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과거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로 측정하는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12.5%, 2009년 14.7%, 2011년 13.2%, 2013년 10.2%, 2019년 10.2%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남자 8.1%, 여자 12.5%로 여자가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림 Ⅲ-6]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9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2) 우울감 경험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에 2주 이상 연속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임. 2014년, 2016년, 2018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표 Ⅲ-2〉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조사망률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0년 593.9명을 기록하였다. 인구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고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645명, 여자 사망률은 543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9배 높다. 1일 평균 833명이 사망한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 자살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20년 160.1명으로 증가하였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순으로 높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20년에는 121.1명이 되었다.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 70.8명이 되었다.

한편, 사고와 손상에 의한 외인 사망은 1995년 75.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51.5명이 되었다. 외인사 중 운수사고 사망은 1995년 38.7명에서 2020년 7.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자살은 1995년 10.8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 25.7명이 되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평균이 11.0명인데 우리나라 자

살률은 24.6명으로 아직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 사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인 1순위가 암인데 암 사망률은 남자(198.5명)가 여자(121.9명)보다 월등하게 높다. 남자는 상대적으로 자살, 간 질환, 운수사고 사망률이 높고 여자는 알츠하이머, 고혈압 사망률이 더 높다.

세대별 사인을 살펴보면 1–9세에서는 암과 운수사고, 10–20대는 자살, 암, 운수사고 등이 주요 사인이며, 30대는 자살, 암, 심장 질환, 40대와 50대는 암과 자살, 60대 이상은 암과 심장 질환이 주요 사인이 된다. 자살과 암은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 사망원인별 조사망률, 1995–2020

(인구 10만 명당)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532.1	523.3	505.1	512.0	541.5	593.9
악성신생물(암)	110.5	122.4	134.6	144.4	150.8	160.1
내분비질환	18.8	25.0	25.6	22.3	22.9	19.6
순환기질환	138.9	123.8	116.5	112.5	116.9	121.1
호흡기질환	24.4	34.0	29.4	37.1	54.6	70.8
소화기질환	39.2	31.5	23.2	22.2	23.0	25.1
사망의 외인	75.9	61.2	63.9	65.4	56.5	51.5
자살	10.8	13.7	24.8	31.2	26.5	25.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05년 28.8%에서 2019년 21.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Ⅲ–3). 여기에서 흡연율은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를 합한 수치이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은 평균 16.5%인데,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흡연인구 비율은 16.4%로 동등한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20.6%와 12.7%인데, 한국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28.5%와 4.4%로 성별 차이가 크다.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Ⅲ–3〉 성인의 성별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2005–2019

(%)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흡연율							
전체	28.8	27.5	22.6	23.9	22.3	22.4	21.5
남자	51.7	48.3	39.4	40.7	38.1	36.7	35.7
여자	5.7	6.3	5.5	6.4	6.0	7.5	6.7
음주율							
전체	54.6	60.5	60.6	61.9	62.1	60.6	60.8
남자	72.6	77.8	75.2	75.3	74.0	70.5	73.4
여자	37.0	43.3	46.5	48.9	50.5	51.2	48.4
신체활동 실천율							
전체	-	-	52.7	49.4	48.5	47.6	47.8
남자	-	-	55.8	52.5	50.6	51.0	52.6
여자	-	-	49.8	46.4	46.6	44.0	42.7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3) 신체활동 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1주일에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고강도 1분,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인구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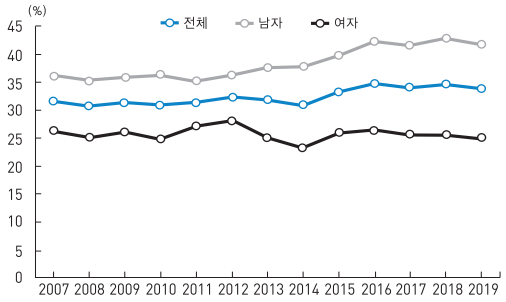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성인의 (월간)음주율은 큰 변화 없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19년 기준 남자 73.4%, 여자 48.4%로 흡연과 달리 여자들도 음주하는 경우가 많다(표 Ⅲ-3).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분량에 해당하는 7잔(여성은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측정한 고위험 음주율은 2019년 남자 18.6%, 여자 6.5%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 수준을 측정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3ℓ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8.7ℓ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고강도 또는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약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9년 47.8%였다. 남자(52.6%)가 여자(42.7%)보다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6년 34.8%가 되었고 2019년에는 33.8%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Ⅲ-7). 남자 41.8%, 여자 25.0%로 남자가 월등하게 높다. 남자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최근 4년간 약 4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자의 비만율은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9년 5.9%로 OECD 평균 24.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Ⅲ-7]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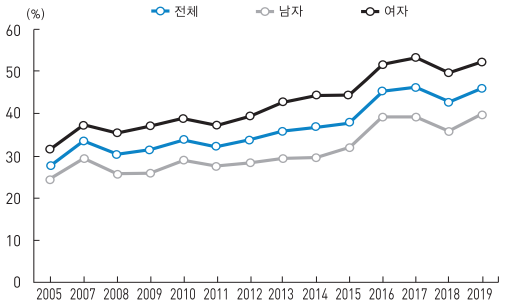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저체중아 출생률은 생존한 신생아 중 체중 2.5kg 미만인 신생아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체중 신생아는 성장장애와 건강위험이 크다. 저체중아 출산은 산모의 영양상태 및 건강관리가 좋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OECD 평균 저체중아 출생률은 6.6%인데 한국은 6.6%로 동일한 수준이다.

영양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건강식생활 실천율은 지방, 나트륨, 과일과 채소의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건강식생활 실천율은

2005년 27.8%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 46%가 되었다. 남자 40%, 여자 52.3%로 여자가 더 높은 건강식생활 실천율을 보여주었다.

[그림 Ⅲ-8] 건강식생활 실천율, 2005-2019



주: 1) 건강식생활 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지방, 나트륨, 과일,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한 인구 비율임. 지방 적정 수준(15-20%) 섭취, 나트륨 1일 2,000mg 이하로 섭취, 과일과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해야 함.
출처: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이 기본적인 투입요소가 된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수와 간호사 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9년 1,174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9년 245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도 341명에서 803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4).

의사인력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practis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임상의사 수는 24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54명보다 훨씬 적다. 간호사는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임상간호사 수는 평균 955명인데, 한국은 794명으로 그동안 간호사의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아직 국제적 기준에는 미달한다. 의료인력의 부족은 인력 분포의 지역적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과부담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표 Ⅲ-4〉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9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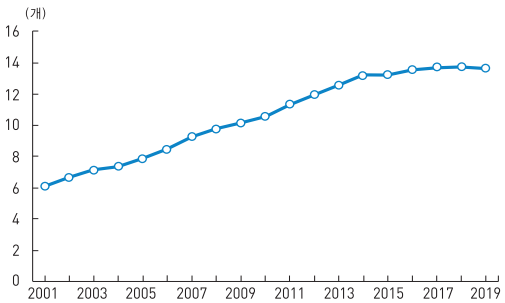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2019
면허 의료인					
전체	578	715	857	1,010	1,174
의사	154	177	205	227	245
간호사	341	443	545	664	803
활동 의료인					
의사	130	163	198	224	246
간호사	298	384	461	594	794

주: 1) 전체 면허 의료인 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2) 활동 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 2021.

병상 수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001년 6.1개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4년 13.2개에 이르렀고, 이후 정체 상태인데 2019년 13.6개였다(그림 Ⅲ-9).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2019년 4.4개인데 한국은 12.4개로 약 2.8배나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한국의료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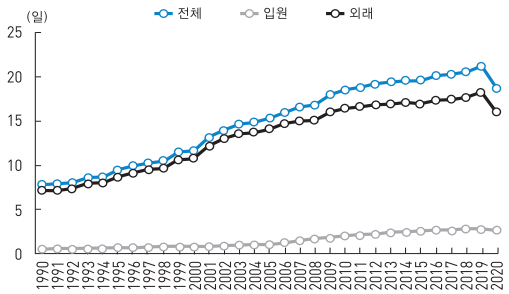
[그림 Ⅲ-9]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9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의료서비스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3.2일, 2010년 18.6일, 2019년 21.2일, 2020년 18.7일이 되었다(그림 Ⅲ-10). 국민 1인당 연 2.7일 입원하고 16.0일 외래 진료를 받는 셈이다. 2020년에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통계를 보아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9년 기준 한국은 17.2회로 2위인 일본의 12.5회와도 차이가 크고, OECD 국가 평균 6.6회의 약 2.6배나 된다.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 많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병상 수나 지불보상제도 등 의료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Ⅲ-10]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 1990-2020



주: 1)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연간 내원일수÷연평균 건강보험 적용 인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도 일부 국민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를 미충족 의료라고 한다. 최근 4년간 미충족 의료의 현황은 〈표 Ⅲ-5〉와 같다. 병·의원 진료를 못 받은 사람이 매년 6-10% 정도 되고, 치과 진료를 못 받은 사람이 약 30%나 되었다. 진료를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거나, 증세가 가벼워서, 또는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연간 미충족 의료율, 2016-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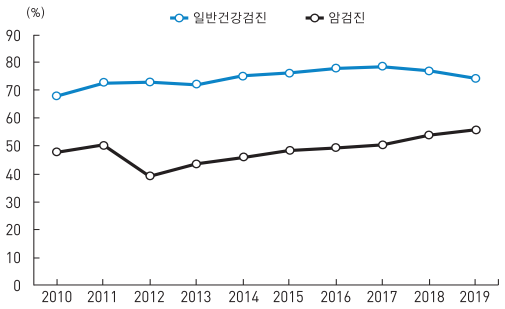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병·의원	9.4	10.1	8.8	6.6
치과	32.6	30.8	31.9	30.9

주: 1)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또는 치과 진료가 필요했던 사람 중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예방보건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0년 68.2%였는데 2019년 74.1%가 되었다. 암검진 수검률은 같은 기간 47.8%에서 55.8%로 상승하였다(그림 Ⅲ-11).

[그림 Ⅲ-1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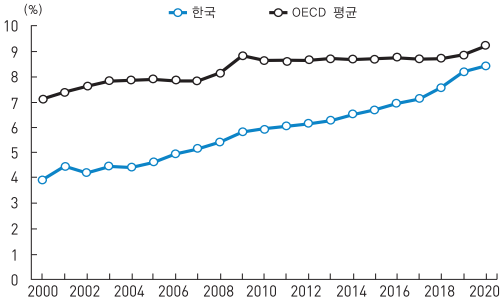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1차 검진 기준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 2020.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144조 원이 되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는 매우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0년 기준 한국이 8.4%로 OECD 국가 평균 9.2%보다 낮다. 그렇지만 [그림 Ⅲ-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치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급여비의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 한다. 이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의 개인적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체로 8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에 65.0%이던 것이 2016년에 62.6%까지 낮아졌다가 2019년에 64.2%로 상승하였다. 건강보험 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이 의료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데 기인한다. 문재인 케어는 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자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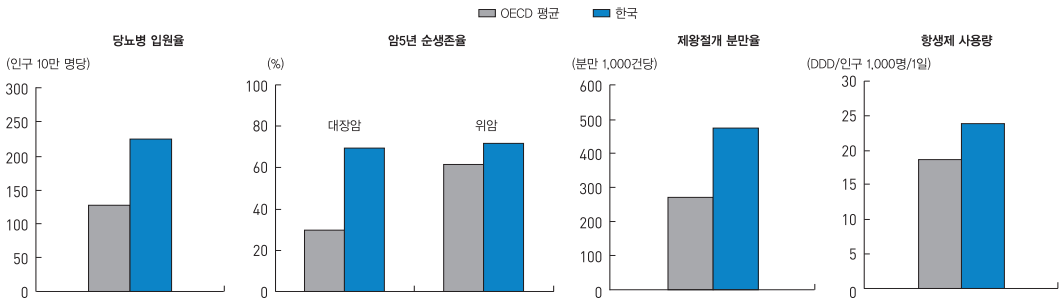
[그림 Ⅲ-12]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20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 2021.

끝으로 의료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림 Ⅲ-13]은 OECD와 한국의 의료 질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당뇨병 등은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병인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게

[그림 Ⅲ-13] 한국과 OECD의 의료 질 지표, 2019



주: 1) 당뇨병 입원율은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 수임.
2) 암 5년 순생존율은 암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임.
3) 제왕절개 분만율은 분만 건수 1,000건당 제왕절개 시술 건수임.
4)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총 항생제 사용량을 1일 총 사용량으로 환산한 후 성인 1인 기준 평균 복용용량인 '일일상용량(Defined Daily Dose, DDD)'으로 나누어 인구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 수를 의미함.
5) 각 지표의 기준연도는 암 지표의 경우 2010-2014년,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8년, 그 외 지표는 2019년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 2021.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수준의 질병관리가 취약하여 당뇨병 입원율이 매우 높은 점이 주목된다.

암은 상당히 중증의 질환으로 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 이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질 지표이다. 위암과 대장암의 5년 생존율에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더 높다. 반면 제왕절개 분만율과 항생제 사용량의 경우 한국이 OECD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료기술이 남용되는 부정적 측면을 보여 준다. 당뇨병 관리나 항생제 처방 등 1차 의료 부문에서는 취약성이 있으나 암 치료와 같은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의료체계의 부문 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는 의료이용자에 의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하였고 2020년 63.1%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불만족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 23.1%, 비싼 의료비 23.1%, 치료 결과 미흡 16.8%, 불친절 10.6%의 분포를 보였다. 전문의료인력 부족(2.3%)과 의료시설 미흡(2.5%)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와 의료이용 변화

변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병희 (서울대학교)

- 2020년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 2.1% 감소하였으며, 응급(−19.1%), 입원(−10.7%), 외래(−2.2%), 수술(−1.3%)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 입원 이용자는 4월에 가장 크게 감소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17.4–28.5%까지 줄었고, 외래의 경우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줄었으며 종별에 따라 13.4–25.4% 감소하였다.
- 연령별로는 영유아와 학령기의 의료이용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외래 이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 선택적 성격의 수술이나 시술은 월별 변동폭이 컸으나, 척추수술이나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수술 인원과 비교해 큰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다양한 환경 변화는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코로나19뿐 아니라 감염병 전반을 감소시켰다. 병원 방문 기피, 의료시설의 방역조치, 의료인력 및 시설 부족 등도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과 4월에 입원환자 수의 40% 이상, 외래방문 수의 약 67%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독일 역시 같은 시기 입원이용이 30–35%가량 줄었다. 특히 봉쇄(lock-down)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의료이용의 감소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영향 연구, 의료체계의 대응 등이 요구된다. 본고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의료이용의 변화를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이용자 연령별로 검토하고, 의료서비스의 특성별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국가적 대응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발생을 시작으로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개인위생 조치를 강조하였다. 대구–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시작된 1차 유행은 2월 29일에 813명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5월 초에 진정되었다.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으나, 1차 유행이 끝나고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부터 유행 규모와 양상에 따른 단계적 개념을 갖추어 본

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차 유행시기인 8월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가, 신규 감염자가 100명대 이하로 낮아진 10월 12일에 1단계로 조정되었다. 2020년 11월 24일에 2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는 가운데 12월에 1,000명대 신규 확진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장소에 대한 일시폐쇄 이외에는 봉쇄조치가 없었고, 지역 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었다. 따라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펼쳤던 국가들에 비해 의료이용에 대한 물리적 장애 정도는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종류별 이용변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원, 외래, 수술, 응급 서비스를 이용한 실인원은 연간 0.5–2.3% 증가해 왔으나, 2020년 의료이용자 수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표 Ⅲ–6).

〈표 Ⅲ–6〉 의료이용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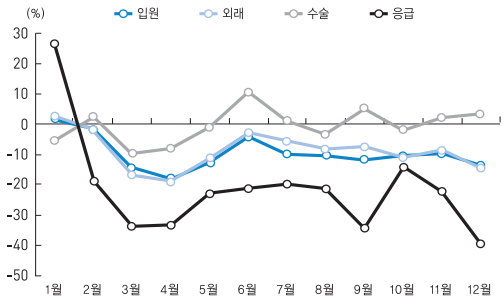
	의료이용자 수(명)				연평균 증감률(%)	
	2017	2018	2019	2020	2017-2019	2019-2020
전체	49,169	49,468	49,631	48,567	0.5	-2.1
입원	7,664	7,783	7,866	7,024	1.3	-10.7
외래	48,940	49,236	49,400	48,300	0.5	-2.2
수술	14,915	15,143	15,609	15,412	2.3	-1.3
응급	4,655	4,826	4,706	3,805	0.5	-19.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응급과 입원서비스 이용자의 감소가 가장 컸는데, 전년도에 비해 각각 −19.1%, −10.7% 감소하였다. 외래에서 −2.2%, 수술의 경우 −1.3%의 이용자 수 감소가 있었다.

2020년의 의료이용자 수를 2019년과 월별로 비교하였다(그림 Ⅲ–14).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부터 실인원의 감소 경향이 전 영역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응급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마다 다른 서비스에 비해 더 많이 감소했고, 지속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환자 수가 적었다. 전년 대비 감소폭이 적은 10월에도 −14.2%였고, 3월과 4월, 9월, 12월 등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30%가 넘는 큰 폭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였다. 입원, 외래, 수술 서비스의 실인원은 3월과 4월에 가장 크게 감소한 이후 변동 폭이 줄어들었다.

[그림 Ⅲ–14] 의료이용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응급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2020년의 응급서비스 이용자의 상위 20개 상병을 2019년과 비

교해 보았다(표 Ⅲ-7). 1위부터 3위까지의 상병 순위는 변하지 않았지만, 2019년 응급실 방문의 9%를 차지하던 감염성 소화기계 질환인 A09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폐렴과 상기도 감염의 경우 순위가 각각 7단계와 10단계 하락하였다. 2019년에 비해 감염성 호흡기 및 소화기계 질환, 손상, 두통, 열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였던

〈표 Ⅲ-7〉 응급실 내원환자 상위 20개 상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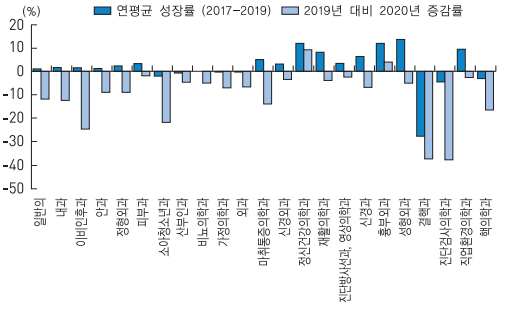
순위	질병기호	상병명	환자 수 (1,000명) 2019	환자 수 (1,000명) 2020	순위 변동	전년 대비 증감률 (%)
1	A09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427	286	0	-33.0
2	R10	복부 및 골반 통증	211	174	0	-17.7
3	S01	머리의 열린상처	184	148	0	-19.4
4	S61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162	147	1	-9.2
5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	150	120	1	-20.4
6	R50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166	115	-2	-30.9
7	S06	두개내손상	103	86	2	-17.2
8	L50	두드러기	111	84	-1	-24.9
9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75	74	6	-1.6
10	R07	목구멍 및 가슴의 통증	81	69	2	-14.3
11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88	68	0	-22.5
12	Z1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63	-	-
13	H81	전정기능의 장애	74	61	3	-17.1
14	I63	뇌경색증	63	59	4	-5.3
15	S00	머리의 표재성 손상	77	58	-2	-24.2
16	R51	두통	75	56	-2	-24.8
17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94	56	-7	-41.1
18	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104	44	-10	-58.0
19	T1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50	42	3	-15.6
20	R06	호흡의 이상	52	39	1	-23.8
		총계	4,706	3,805	-	-19.1

주: 1) 순위는 2020년 환자 수 순위를 말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반면, 두개 내 손상, 결석, 뇌경색, 전정기능 등의 상대적 순위가 상승하였다.

의원급(한의원 제외)의 표시과목별로 외래환자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Ⅲ-15). 의원급 중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는 기존 3년간 감소 경향이 있었는데, 2020년에도 이들 과목 진료인원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기존에 증가 경향을 보이면서 절대적 인원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는 이비인후과에서 -24.7%, 일반의와 내과에서 -12% 내외의 외래환자 수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림 Ⅲ-15] 의원 표시과목별 외래환자 수의 변화, 2017-2020



주: 1) 외래환자 수의 절대적 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됨. 진료과목 미표시, 병리과, 예방의학과는 제외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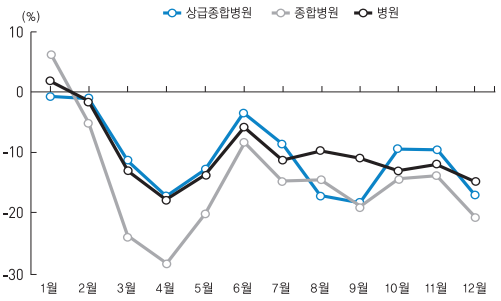
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입원환자 수 변화는 코로나 유행시기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Ⅲ-16).

1차 유행의 영향이 컸던 3월과 4월에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 감소가 가장 컸던 데 반해, 2차 유행시기인 9월에는 상급종합병원급의 감소 경향이 두드러졌다가 3차 유행시기에는 다시 종합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수 감소가 컸다. 병원급 환자 수의 변화율은 3월 이후로 상대적으로 작게 유지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월과 9월에 전년 대비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2차 유행의 신규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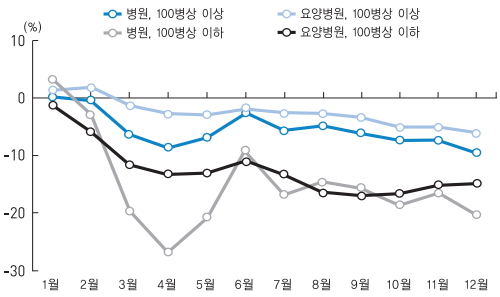
[그림 Ⅲ-16] 종별 입원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병원급 입원인원의 감소가 종합병원보다 적었던 데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병상수가 유사한 다른 병원과 비교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의 감소가 적고, 가장 변동이 큰 1차 유행시기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그림 Ⅲ-17).

[그림 Ⅲ-17] 병원급 유형별 입원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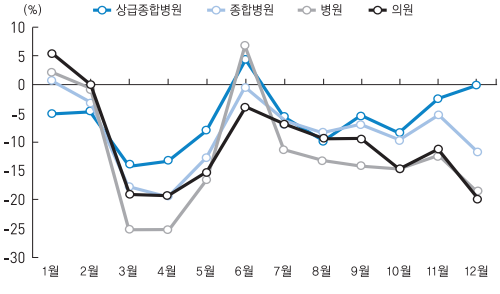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유행시의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2차 및 3차 유행 시기에서는 1차 때와 같은 큰 감소율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그림 Ⅲ-18).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인원의 추세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감소율은 병원 〉 의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종별에서 외래환자의 감소가 큰 상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그림 Ⅲ-18] 종별 외래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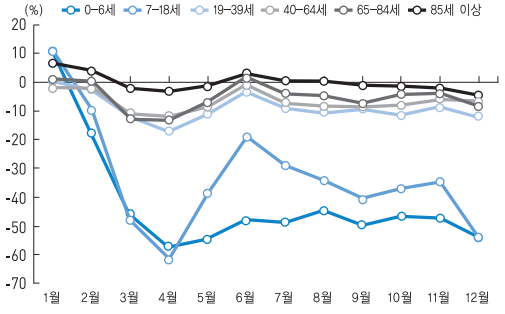
연령별 의료이용

연령별 의료이용자를 2019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6세 이하 및 7–18세 연령에서 입원과 외래 서비스 이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두 연령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은 2020년 연말까지 유지되었다(그림 Ⅲ–19). 학령기인 7세부터 18세의 경우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된 5월 이후 입원 및 외래 이용자 감소율이 줄어들었다가, 12월에 다시 감소율이 높아졌다. 미취학 아동인 6세 이하에서는 외래의 경우 취학연령과 유사하게 감소율이 낮아졌으나, 입원인원 감소율은 높게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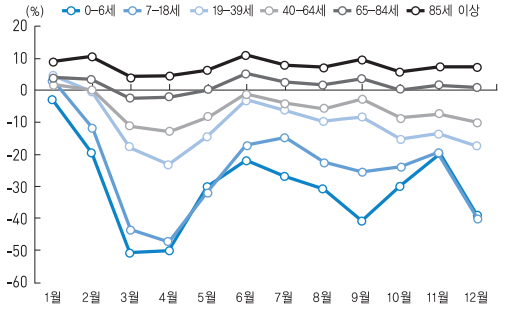
연령별 의료이용에서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이용량은 다른 연령 인구에 비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적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외래서비스는 85세 이상 연령에서 지난해보다 이용이 증가하였다.

[그림 Ⅲ–19] 연령별 입원 및 외래 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1) 입원인원



2) 외래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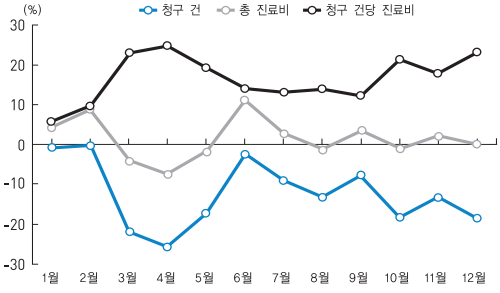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의료이용의 감소와 진료비

2020년의 의료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진료비 청구 건수도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일관되게 감소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각 청구건 당 진료비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총 진료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그림 Ⅲ–20).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3월과 4월에 건당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청구 건수와 건당 진료비의 추세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Ⅲ–20]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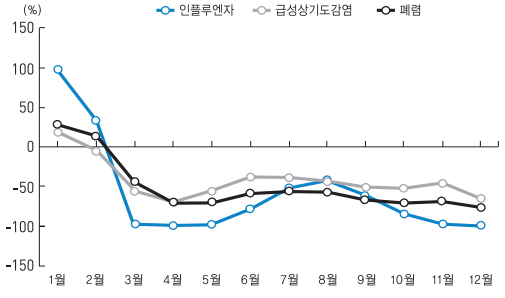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질환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호흡기 감염성 질환

인플루엔자 감염과 상기도 감염증, 그리고 폐렴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이중 인플루엔자 감염이 8월을 제외하고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Ⅲ-21). 전체 외래진료는 6월, 9월, 11월에 다소 회복되었지만, 인플루엔자는 발생빈도가 낮은 여름시기를 제외하면 감소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 상기도 감염증과 폐렴의 경우 인플루엔자보다 감소율은 낮지만, 경향은 유사하다. 상반기 급격히 감소한 인플루엔자 및 상기도 감염증 의료이용이 환자발생 자체의 감소인지, 감염 우려로 인한 병원방문 기피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대표적인 후유증인 폐렴의 감소경향으로 볼 때, 감염 우려로 인한 기피보다는 개인위생과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발생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21] 호흡기 감염 외래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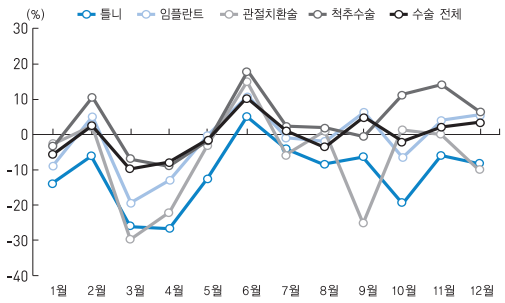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제왕절개, 임플란트, 정형외과 수술

틀니와 임플란트는 저작기능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해 적용되는 치과 시술이며, 정형외과 수술인 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은 관절염과 추간판탈출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통증완화 및 활동성 증대를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향상과 건강보험의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이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생명과 직결된 의료적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적 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2020년에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난 변화 역시 우리나라 의료 이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그림 Ⅲ-22).

[그림 Ⅲ-22] 틀니, 임플란트, 관절치환술, 척추수술 환자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관절치환술은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이용자 수 변화가 가장 커서 3월에 -29.9%로 감소했다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6월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환

자 수가 14.8% 많았다. 9월에는 다시 −25.2%의 감소율을 보였고, 10월에서 11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를 나타낸 후 12월에 −10.2%로 감소하였다.

척추수술은 관절치환술과 비교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전체 수술 양상과 비교해 보아도 감소폭이 크지 않고 3–5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척추수술은 시기조정이 가능하여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다소 수술이 적어지나, 수술의 전반적 수요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1차 유행시에 각각 −26.1%와 −19.3%로 감소하였고, 틀니의 경우에는 4월에 더 감소하여 −26.7%였다. 임플란트보다는 틀니이용이 전년보다 더 감소하였고, 임플란트는 전체 수술양상과 유사하게 움직였다.

맺음말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확인해본 의료서비스 이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감염성 질환의 감소,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의 의료이용 저하가 입원, 외래, 수술, 응급 이용량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응급서비스의 감소폭이 컸으나, 비교적 중증인 심뇌혈관질환의 감소는 적고 급성 감염성 질환자의 이용이 크게 줄었다. 병원 진료과 및 의원 표시과목별 차이의 상당부분이 급성 감염성 질환의 감소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들의 의료이용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외래서비스의 경우 초반에는 코로나19의 유행 경향에 따라 인원의 감소가 컸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그런 연관성은 다소 줄어든다. 특히 고연령층의 의료이용에서 코로나19 발생과의 연동이 강하지 않았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폐렴환자도 함께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방문을 꺼려서 발생하는 이용지연보다는 위생조치의 강화로 인한 질환 발생의 감소가 주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 관련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위 '선택적' 개입에 대한 이용변화를 틀니, 임플란트, 관절치환술, 척추수술을 통해 보았을 때, 관절치환술의 변동 폭이 컸다. 틀니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척추수술과 임플란트에서 현저한 수요 감소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노령층의 의료이용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던 데는 이들의 의료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장애가 크지 않았던 우리나라 방역환경이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1차 유행기의 패닉 상황에서도 입원감소가 적었는데,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돌봄자원의 취약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Boserup, B., McKenney, M., & Elkbuli, A. 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mergency department visits and patient safe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Dopfer, C., Wetzke, M., Scharff, A. Z., Mueller, F., Dressler, F., Baumann, U., ... & Happle, C. 2020. "COVID–19 related reduction in pediatric emergency healthcare utilization – a concerning trend." *BMCpediatrics*, 20(1), 1–10.

Hartnett, K. P. 2020.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mergency Department Visits—United States, January 1, 2019 – May 30, 2020." *MMWR.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9.

Kolata, G. 2020. 4.25. "Amid the coronavirus crisis, heart and stroke patients go missing."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4/25/health/coronavirus–heart–stroke.html.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신건강 영향

유명순 (서울대학교)

-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알려진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는 바이러스 감염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웰빙의 위기'라는 문제의식하에 그동안 학계 및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2차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의 정신건강 영향을 살펴본다.
- 코로나19의 주관적 위험 판단에 매우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난다. 감염될 가능성보다 확진이란 결과가 불러올 건강과 일상 영향의 심각성을 훨씬 더 크게 인지하는 결과가 계속되는 것이다.
- 초기보다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귀인 경향성이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 이상이 확진의 낙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점, 감정촉발 요인 중에서 사람이 초래하는 위험, 위험으로 인한 참사 가능성, 불확실성 요소 점수의 상승 등은 코로나19가 개별적 발생 사안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 위험임을 엿보게 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의 위축된 일상 회복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주부의 일상 회복도는 계속해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에서 개인이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스스로 상실했다고 느끼는 삶의 중요 자원 중에서 '자기계발 기회의 감소'와 '일상의 흥미 상실'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 우울 점수가 작년보다 높아졌으며, 기준값을 적용한 결과 우울군은 비우울군보다 코로나19가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대비 2021년의 울분 점수가 상승했으며, 저소득층, 주택 비소유자, 주관적 건강 나쁨 집단에서 높았다. 코로나19 관련 사안에서는 '방역을 방해한 개인이나 집단이 법망을 피하거나 미흡한 처벌을 받는 것(87.0%)'과 '코로나19 관련 사실의 왜곡 · 편파 보도(86.6%)', '거리두기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 지도층의 언행(86.5%)' 등에서 울분을 높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작년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극복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감염 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의 불평등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 생계, 돌봄 등 삶의 전반에서 나타날 어려움을 완충해 주는 자원의 하나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인 소득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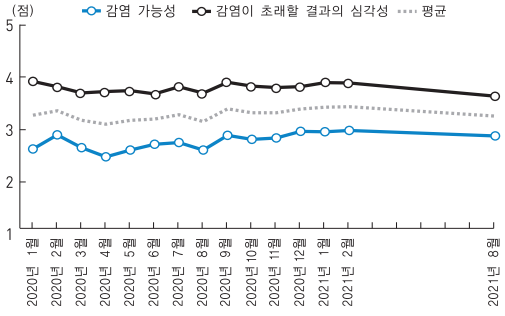
코로나19 위험 인식

'개인이 위협에 대해 주관적으로 내리는 평가와 해석'을 뜻하는 위험 인식은 위험 예방 조치의 채

택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출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험 인식을 '감염 가능성' 및 '감염으로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으로 각각 측정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조사 내내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8월 조사에서는 객관적 감염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감염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그동안 조사 중 최저치(3.62점)를 보이면서 주관적 위험의 크기(평균 3.24점)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Ⅲ-23).

[그림Ⅲ-23]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 2020.1-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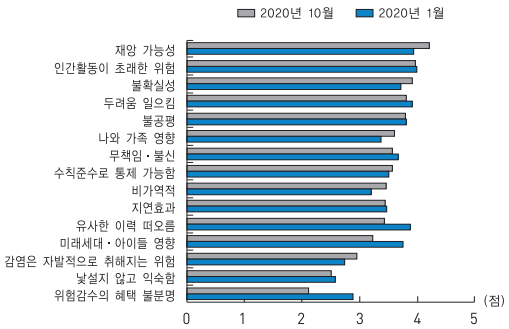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감염 가능성 인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부터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3)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이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부터 '매우 심각하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4차」, 원자료, 2020.1-4.
케이스탯리서치, 「케이스탯 리서치 정기조사: 3-11차」, 원자료, 2020.5-2021.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3차」, 원자료, 2021.2, 2021.8.

코로나19 감정촉발 요인

개인에게 감정 반응을 촉발하여 객관적인 위해성 정보와 다르게 위험을 느끼도록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감정촉발 요인(outrage factors)을 총 15개로 조사했다. 2020년 1월과 10월 두 차례의 조사 결과, 코로나19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 활동이 생산해낸(man-made) 위험'이며, 코로나19로 동시다발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재앙 가능성'(catastrophic potential) 두 요인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해 1월과 달리 10월 조사에서 코로나19의 원인, 경과, 치료가 불확실하다는(uncertainty) 요인이 5순위 내 신규 진입했다.

[그림Ⅲ-24] 코로나19 감정촉발 요인, 2020.1,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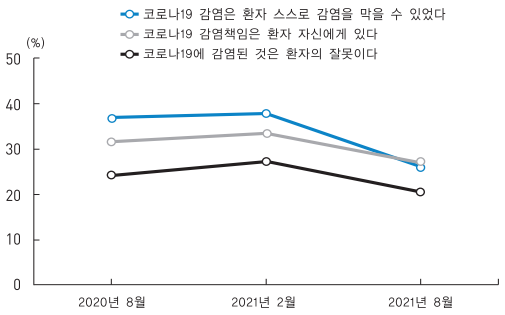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코로나19의 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3) 그래프는 2020년 10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 7차」, 원자료, 2020.1, 2020.10.

코로나19 감염책임의 개인 귀인

감염의 책임을 환자(확진자)에게 돌리는 귀인 경향성이 높으면 해당 사회에서 감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헌을 코로나19 인식 조사에 적용했다. 작년 8월, 올해 2월의 조사 대비 올해 8월의 조사에서 3개 문항 모두 '그렇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Ⅲ-25).

[그림 Ⅲ-25] 코로나19 감염책임에 대한 귀인, 2020.8-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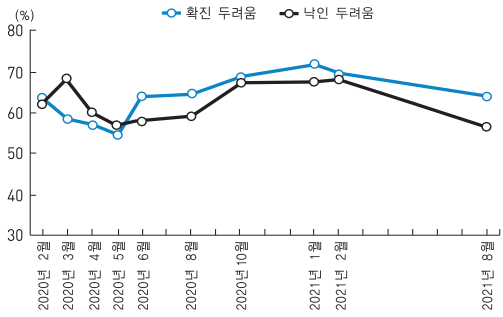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감염책임에 대한 귀인은 각각 해당 진술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3차」, 원자료, 2020.8, 2021.2, 2021.8.

코로나19 두려움

감염증이 유행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무엇이 두려운가'는 감염이 유행하는 사회의 정서와 규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헌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감염되는 두려움과 감염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을 나누어 지속 조사한 결과, 1차 유행 직후 한동안 감염의 두려움보다 확진을 이유로 낙인되는 두려움이 높은 결과가 계속 나타났으나 작년 6월을 기점으로 결과가 역전했다. 다만, 최근 8월의 조사에서도 확진을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약 57% 수준으로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26).

[그림 Ⅲ-26]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2020.2-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확진환자가 될까봐 두렵다' '내가 확진환자가 될 경우 그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 는 진술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2-8차」, 원자료, 2020.2-6, 2020.10, 2021.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3차」, 원자료, 2020.8, 2021.2, 2021.8.

코로나 19 장기화의 정신건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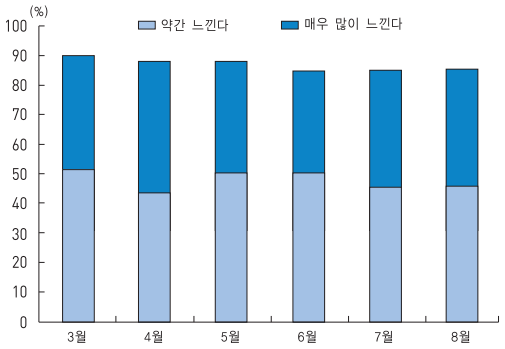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의 피로감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느끼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올해 3월부터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85% 이상이 코로나19 대응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스트레스와 피로를 '매우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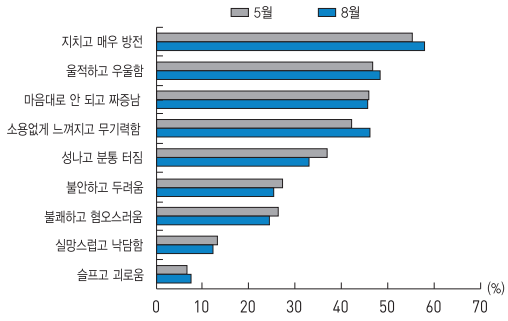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거리두기 지속으로 의한 스트레스는 '지치고 무기력함'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7).

[그림Ⅲ-2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2021.3-8

1) 거리두기 지속에 의한 스트레스나 피로감



2) 스트레스와 피로감의 감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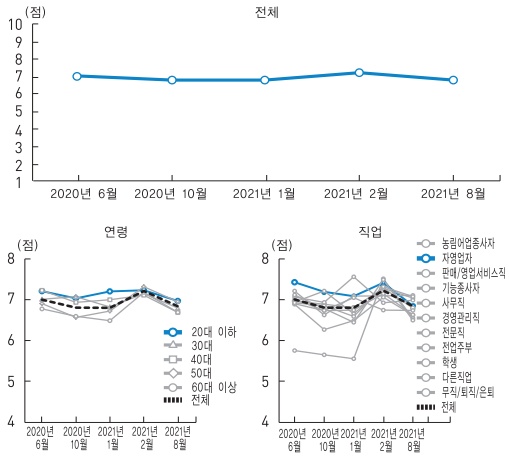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거리두기 지속에 의한 스트레스나 피로감은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스트레스와 피로감의 감정 유형은 위 문항에서 스트레스 혹은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중 코로나19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해당 감정유형에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다중응답).

출처: 유명순 교수팀 · KBS 공동 조사, 「KBS 코로나19 백신 여론조사: 1-6차」, 원자료, 2021. 3-8.

코로나19와 삶의 질

코로나19가 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1점(매우 긍정적 영향)-10점(매우 부정적 영향)으로 질문한 뒤 평균 점수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7점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연령 중 20대가, 직업 중 자영업자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28).

[그림Ⅲ-28] 인구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질 인식, 2020.6-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질 인식 수준은 "코로나19 사태는 귀하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긍정적 영향'부터 '전적으로 악영향'까지 1점-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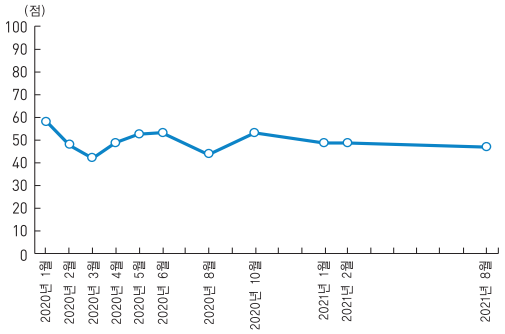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6-8차」, 원자료, 2020.6, 10, 2021.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3차」, 원자료, 2021.2-8.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회복도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회복도를 0점은 '완전한 일상정지 상태', 100점은 '완전한 이전 일상 상태'로 정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한 조사가 작년과 올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올해 8월에도 절반의 회복인 50점에 미치지 못했고(그림 Ⅲ-29), 특히 주부의 일상회복 점수가 이

전 조사와 일관되게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43.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9]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정지 수준, 2020.1-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일상정지 수준은 "귀하의 일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0점)'부터 '변화 없음(1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8차」, 원자료, 2020.1-6, 2020.10, 2021.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3」, 원자료, 2020.8, 2021.2,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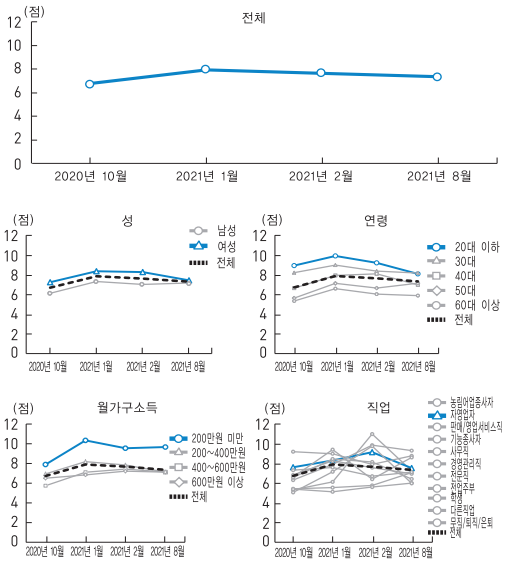
코로나19 우울과 회복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활용하여 우울의 수준을 탐색하는 조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작년 10월 평균 6.8점이었던 우울 점수는 올해 1월 말에는 7.9점으로 상승하였고, 2월과 8월 조사에서는 그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작년 대비 점수가 높았다.

우울 점수는 여성, 20대, 저소득층(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서 꾸준하게 전체 평균보다 높다(그림 Ⅲ-30).

한편, 올해 8월 한국판 정신건강회복 척도(MHRM-K)의 하위 영역인 '곤경 극복'의 4개

[그림 Ⅲ-30] 인구집단별 코로나19와 우울 수준, 2020.10-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우울수준은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활용하여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우울 증상을 겪었는지 측정함. 9문항에 대해 4점 척도(0=전혀 그런 적 없음, 1=며칠 동안, 2=일주일 이상, 3=거의 매일)로 응답한 결과의 합산 점수를 각 인구집단별 응답자 수로 나눈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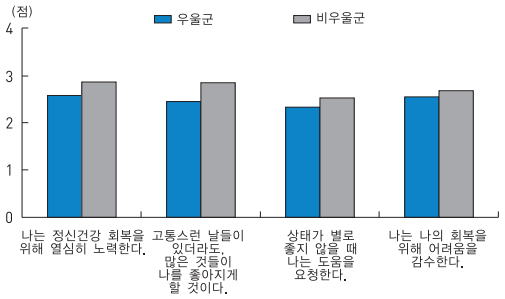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7-8차」, 원자료, 2020.10, 2021.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3차」, 원자료, 2021. 2, 2021.8.

문항을 적용한 결과, 전 항목에서 우울군은 비우울군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고(그림 Ⅲ-31),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코로나19 스트레스

Brunet 등이 개발한 외상 직후 트라우마 스트레스 측정 도구(peritraumatic distress inventory)를 적용하여 코로나 19 이후 스트레스 수준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였다. 절단값을 적용하여 분포를 살핀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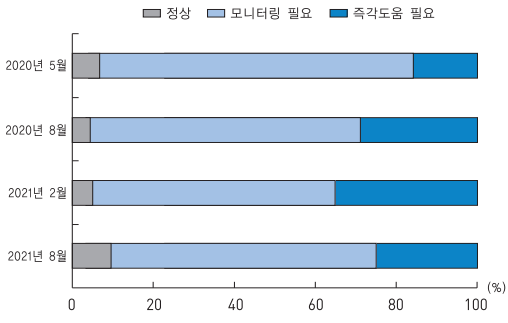
[그림Ⅲ-31] 우울군과 비우울군의 정신 곤경 극복 수준, 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정신 곤경 극복 수준은 한국판 정신건강회복 척도의 하위영역 중 '곤경극복' 영역의 4문항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0-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임.
3) 우울 수준은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활용하여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우울 증상을 겪었는지 측정함. 9문항에 대해 4점 척도(0=전혀 그런 적 없음, 1=며칠 동안, 2=일주일 이상, 3=거의 매일)로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군으로 분류.

출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3차」, 원자료, 2021. 8.

[그림Ⅲ-32] 코로나19와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2020.5-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수준은 Brunet 등이 개발한 외상 직후 스트레스 측정도구(PDI, Peritraumatic Distress Inventory)에서 제시하는 13가지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0=전혀 아니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많이 그렇다, 4=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7점 미만이면 '모니터링 필요 없음', 7-28점이면 '추가 모니터링 필요', 28점보다 높으면 '즉각적인 도움 필요'로 분류한 후 그 구성 비율을 제시한 것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5차」, 원자료, 2020.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3차」, 원자료, 2020.8, 2021.2, 2021.8.

트레스 집단의 비율은 작년 5월 93.3%에서 8월 95.9%로, 그리고 올해 2월 95.1%에서 8월 90.7%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즉각적인 도움 필요' 집단의 비율은 작년 5월, 8월 및 올해 2월에 걸쳐 증가하다가 최근 8월에는 약 10%p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그림 Ⅲ-32).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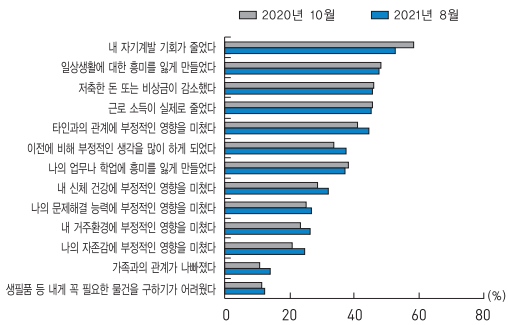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객관적 자원 손실을 다룬 Hobfoll(1989)의 자원보존이론 도구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자원의 주요 내용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작년 10월 및 올해 8월 조사 모두 총 13개 문항 중 자기계발 기회 감소, 일상생활 흥미 감소, 비상금 감소, 근로 소득 감소, 가족 외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 순으로 손실 자원이 언급되었다(그림 Ⅲ-3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문제와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2020년 10월)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동일 문항을 적용한 올해 조사(2021년 8월)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더욱 증가했다. 또한, 작년의 상위 3순위는 경제적 불평등〉 종교(갈등)〉 건강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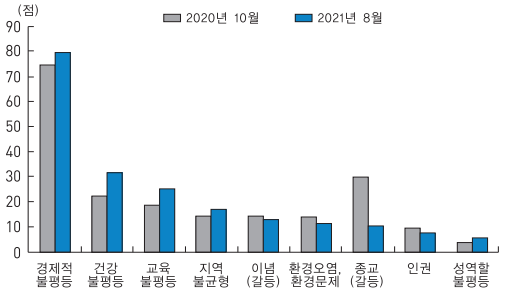
순이었으나 올해 8월 조사에서는 종교(갈등) 문제 대신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상위 3순위에 진입했다(그림 Ⅲ-34).

[그림 Ⅲ-33]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된 자원, 2020.10, 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각 해당 진술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7차」, 원자료, 2020. 1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3차」, 원자료,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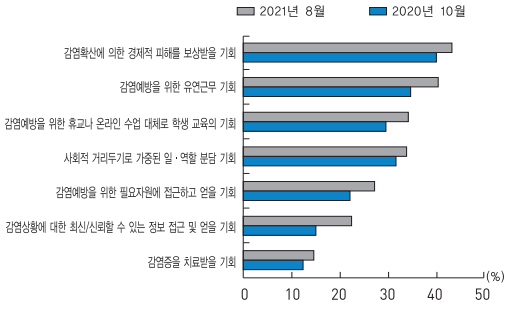
[그림 Ⅲ-34] 코로나19로 심각해질 사회 불평등 문제 인식, 2020.10, 202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기존의 사회문제를 9개의 선택지 중 두 가지를 고르도록 한 응답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7차」, 원자료, 2020. 1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3차」, 원자료, 2021.8.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의 불평등이 7개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불평등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기회는 '감염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43.3%)였다. 작년 10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8월 조사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그림 Ⅲ-35).

[그림 Ⅲ-35]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기회 불평등, 2020.10,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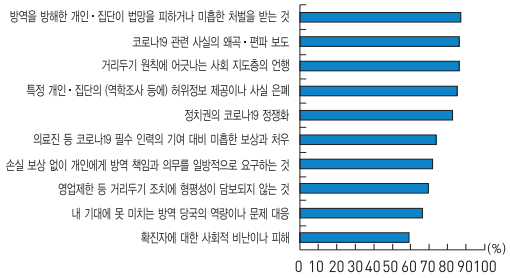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기회 불평등 수준은 각각 해당 진술에 대해 '불평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7차」, 원자료, 2020. 1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3차」, 원자료, 2021.8.

코로나19 관련 울분

올해 1월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방역을 방해한 개인이나 집단이 법망을 피하거나 미흡한 처벌을 받는 것(87.0%)', '코로나19 관련 사실의 왜곡·편파 보

도(86.6%)', '거리두기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 지도층의 언행(86.5%)'에 울분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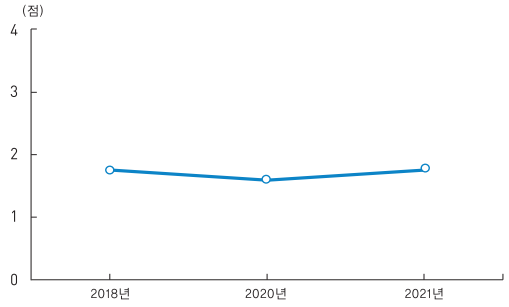
[그림Ⅲ-36] 코로나19 관련 울분 요인, 2021.1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울분 요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건에 대해 얼마나 울분을 느끼는지를 4점 척도(1=전혀 울분을 느끼지 않는다, 2=별로 울분을 느끼지 않는다, 3=울분을 약간 느낀다, 4=울분을 많이 느낀다)로 묻고, 각 문항에 대해 울분을 느낀다는 비율을 나타냄.
출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3차」, 원자료, 2021.8.

이와 별도로, 독일의 Linden 외(2009)가 개발하고 한창수 외(2014)가 번역한 한국어판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도구(Self-Rated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이하 PTED)를 사용하여 울분을 측정했다. 2021년의 울분의 평균 점수(1.75)는 2018년(1.73)과 2020년(1.58) 대비 증가하였다. 울분 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높았고 이 외 주택 비소유자 (세입자 및 공공시설 무상거주),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서 더 높았다(그림 Ⅲ-37).

[그림Ⅲ-37] 외상후울분장애 평균 점수, 2018,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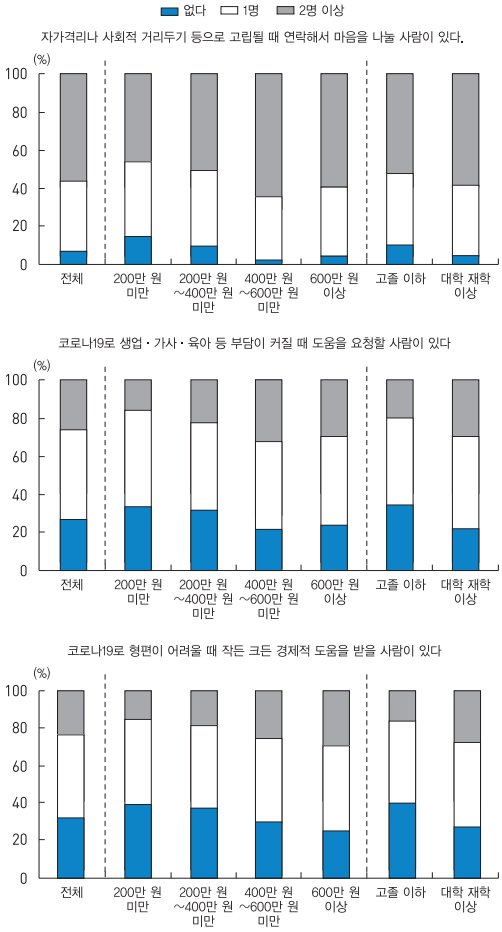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외상후울분장애 수준은 한국어판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도구인 (PTED, Self-Rated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에서 제시된 "지난 1년 동안의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묻는 19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0=전혀 없었다 1=거의 없었다, 2=약간 있었다, 3=많이 있었다, 4=아주 많이 있었다)로 측정한 응답 결과의 평균값임.
출처: 유명순 외, 「사회공정성과 울분에 관한 조사」, 원자료, 2018.
유명순, 「한국의 공정성과 울분 조사」, 원자료, 2020; 「2021년 한국사회의 울분 조사」, 원자료, 2021.

사회적 지지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업·가사·육아 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2020년)한 결과, 국민들의 7.2%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고립 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생업·가사·육아 등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였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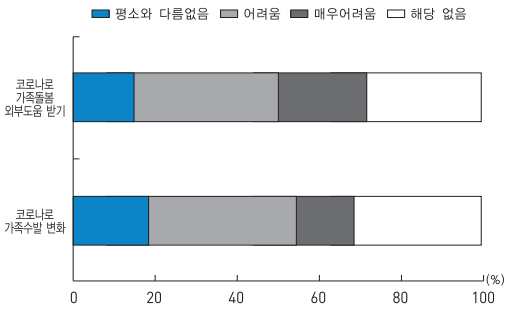
[그림Ⅲ-38]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사회적 지지, 2020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7차」, 원자료, 2020.10.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족 돌봄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2021년). 응답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12.1%를 차지함), "수발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졌는가?"과 "가족 돌봄을 위해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워졌는가?"를 질문한 결과, 해당 질문 각각에 대해 50.4%와 57%가 더 어려워졌다(어렵다+매우 어렵다 응답 비율)고 답했다(그림 Ⅲ-39).

[그림Ⅲ-39]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가족 돌봄 어려움, 2021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가족 수발에 변화가 있었는지와 외부로부터 가족 돌봄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6점 척도(1=평소와 다름없음. 2= 평소에 비해 약간 어려움, 3=평소에 비해 어려움, 4= 평소에 비해 상당히 어려움, 5=평소에 비해 심각하게 어려움, 6=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다름 없음(1)', '조금 어려움(2+3)', '매우 어려움(4+5)', '해당 없음(6)'으로 재분류한 결과임. 본 문항은 김홍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개발하여 제공함.
출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3차」, 원자료, 2021.8.

맺음말

최근 학계는 Long Covid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감염됐던 사람에게서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더 많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나긴 코로나'의 영향은 신체 증상의 목록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이 보여주었듯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이 보고하

는 크고 작은 심리·사회적인 후유증 역시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을 기점으로 사회적 전환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이 글에 나온 결과들은 방역 조치 완화 자체만으로 실효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을 전망하게 한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 개개인은 코로나19 위협에 맞서 급속히 형성된 '방역 사회'를 수용하고 적응하며 살아왔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사회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을 장시간 감수한 것이다. 거기 더하여, 이 글은 코로나19 장기화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방역의 일상을 안겼지만, 심리적 고립, 우울과 울분감, 경제적 곤란, 학습·육아·돌봄 같은 사회적 역할 부담 누적 등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개인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문제에 대처할 완충 자원 역시 서로 균등하지 않은 것을 엿보게 했다.

감염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단기 내 코로나19 질병 종식이나 종결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만일 누구도 그 끝을 모른다면, 분명한 끝이 있다고 가정하고 초집중하던 전투적 대응에서 '팬데믹 장기화의 영향으로부터 인구집단의 회복에 탄력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공격에 면역력을 갖는 신체적 상태만이 아니라, 각종 위험 정보를 합리적으로 다루는 인지적 판단력, 감염 환자와 각종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적 감수성,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를 공유하는 집합적인 역량이 고루 필요하다. 여전히 끝 모를 팬데믹에서 계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서로의 안전을 살피고, 정책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념하고 참여하려면 사회의 정신적 회복력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심리적인 곤경을 겪은 집단의 일상과 건강 회복 방안이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일상 회복 방안의 핵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이유다.

2021 Education & Training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Ⅳ 교육·훈련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24

코로나19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 및 교육격차 실태 김경근 | 고려대학교 138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채창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9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08년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에는 모든 교육단계 중 가장 높았으나 2017년 현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력 격차도 한층 심화했다.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했지만, 지난 10년간 의미 있는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진흥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이 기구에서 회원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도 거두지 못한 성과를 일구면서 주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선진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무엇보다 교육·훈련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을 무지와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인력의 공급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육·훈련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도 성장기에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작용했던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양극화의 그늘이 날로 짙어지는 가운데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한국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던 교육·훈련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교육·훈련에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교육·훈련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먼저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과 관련해서 교육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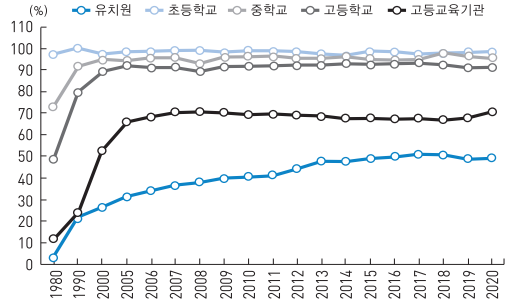
별 취학률과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고, 사교육 참여 실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 드러난 성취도 수준 변화,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관련 지표들은 국민이 다양한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어떻게 누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생교육 참여율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취학률은 국민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서,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림 Ⅳ-1]에는 각 교육단계별로 1980년 이후의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이미 97.7%로 실질적으로 완전 취학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일시적이지만 1990년에는 100.5%까지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취학했던 학생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취학률은 98.4%이다.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20



주: 1) 취학률=(취학 적령 재적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3) 취학 적령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9)를 기준으로 하였음(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될 수 있음).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이었고 1990년에 91.6%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98.0%까지 높아졌다. 이후 취학률이 다소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2020년 현재 95.7%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그쳤다. 하지만 1980년

대에 교육기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가 되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그 후로도 줄곧 이어져 2017년 93.8%까지 높아졌다. 2020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1.4%로 보고됐다. 실질적인 보편교육 수준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더라도 취학률의 큰 변동은 없으리라 예측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되고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취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에는 52.5%로 상승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뒤로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70.6%로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0.4%로 보고됐다.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게 된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50%의 벽을 돌파하여 50.8%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취원율이 다소 하락해 2020년 현재 49.0%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취학 아동 중 상당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더라도 많은 아동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8년 현재 한국의 만 3세 및 만 4세 취학률은 각각 92.3%, 93.8%로 OECD 평균 78.1%, 88.2%보다 높았다(OEC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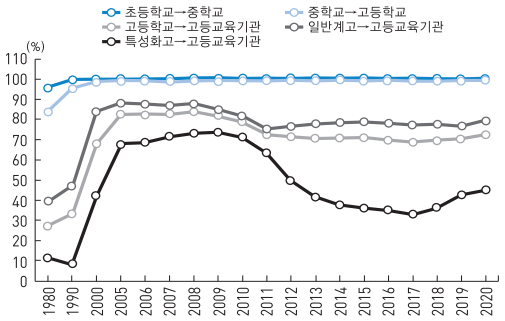
진학률도 교육기회의 향유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중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진학률은 취학률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나 입시제도 개혁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 두드러진 편이다.

[그림 Ⅳ-2]에는 각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100%와 진배없는 수준을 보인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에 줄곧 99.6-99.8%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 그쳤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약적 상승을 보이면서 2000년에는 68.0%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83.8%로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2.5%이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매년 2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다소간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은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로 저점을 기록한 뒤에 다시 조금씩 높아져 2020년 현재 79.4%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다다른 후 큰 폭으로 떨어져 2017년 32.8%를 기록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여 2020년 현재 44.8%로 상승한 상태이다.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20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당해 연도 졸업자 수)×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5) 일반계·특성화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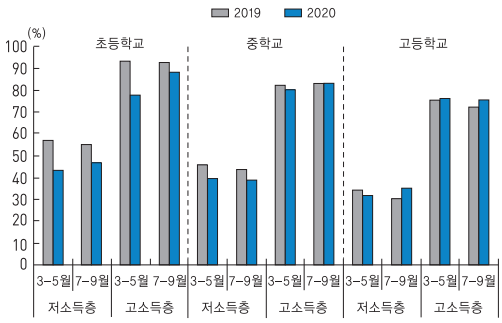
2004년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도입과 함께 대학에 좀 더 쉽게 진학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90%에 달하는 등 특성화고 운영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제시하면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고졸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대학 진학 성과가 사교육 참여 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참여 실태는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영역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림 Ⅳ-3]에는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 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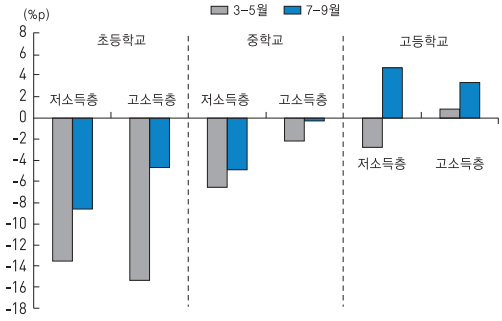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와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이 있었던 2020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같은 학교급 내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감소 정도가 더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 3-5월에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56.5%였는데, 2020년 같은 시기에는 43.0%로 낮아졌다. 2019년 7-9월에 이 저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54.9%였지만, 2020년 같은 시기에는 46.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그림 Ⅳ-3] 초·중·고 학생의 소득집단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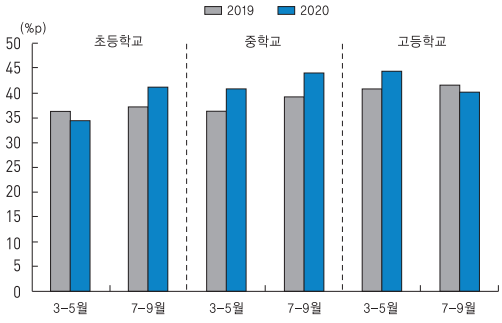
1) 사교육 참여율



2)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사교육 참여율 증감



3)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 및 소득집단 전체 학생 중 해당 기간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이고, '고소득층'은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집단임.
3) 참여율 격차=고소득층 참여율-저소득층 참여율.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원자료,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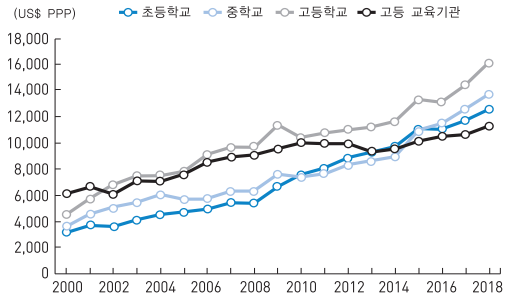
3-5월에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92.8%였지만, 2020년 같은 시기에는 77.4%로 크게 낮아졌다. 2019년 7-9월에 이 고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92.1%였으며, 2020년 같은 시기에는 87.4%로 약간 낮아졌다.

중학생의 경우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며,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저소득층 집단과 고소득층 집단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2020년에 더 심화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집단은 2019년보다 2020년에 사교육 참여가 일관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집단은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20년 3-5월에는 사교육 참여가 줄었으나 7-9월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0년 3-5월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계층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44.3%p)가 발생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서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Ⅳ-4]는 각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여준다. 대체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00년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3,155달러, 중학교 3,655달러, 고등학교 4,440달러, 고등교육기관 6,118달러로 초등학교가 가장 낮았고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 정도에서 교육단계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초등학교 1만 2,535달러, 중학교 1만 3,775달러, 고등학교 1만 6,024달러, 고등교육기관 1만 1,290달러로 2000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Ⅳ-4]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0-2018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연간 공교육비÷연간 학생 수. 공교육비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지수(PPP) 기준 환산액임.
2) 공교육비의 경우 기존 교육기관 경상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합으로 산출되었으나, 2015년부터 교육기관 직접 지출로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음.
3) 2010년 이후 공교육비는 교육단계 미분류 프로그램 금액을 각 교육단계별로 안분하여 포함시킨 수치임(2010-2013년 자료는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수치 활용).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3-2021.
통계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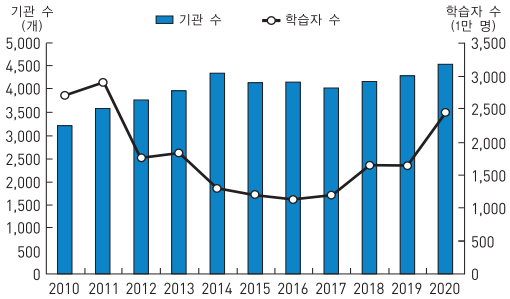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가장 낮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낮은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6.6%로 OECD 평균 37.5%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대학생 1인당 투자 규모도 OECD 평균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OECD, 2021).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고용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고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평생교육기관의 수와 그곳을 이용하는 학습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교육·훈련 기회 및 자원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림 Ⅳ-5]에는 2010년 이후 비형식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 수와 그곳을 이용한 학습자 수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0년 3,213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4,342개가 되지만, 2017년 4,032개까지 감소했다가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현재 4,541개를 기록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학습자 수는 2010년 2,702만 6,042명에서 2011년 2,892만 780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1,133만 6,564명으로 저점을 기록한다. 2017년부터는 학생 수가 다소 증가세로 전환해 2020년

현재 2,439만 7,282명까지 회복된 상태이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학습자 수가 격감한 것은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시설이 학원으로 전환되거나 폐원되면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을 듣는 학습자가 크게 늘면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학습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Ⅳ-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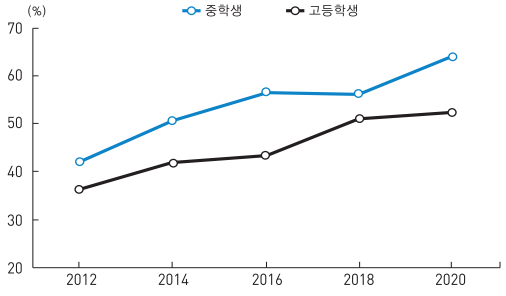
주: 1) 기관 수는 조사기준일(해당연도 5월 1일)에 휴원, 폐원, 연락두절인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수치임.
2) 학습자 수는 프로그램별 중복 학습자를 각각 학습자로 간주하여 합산한 것으로 프로그램 등록 건수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각 연도.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 지표들은 크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뉜다. 학생수준 지표에는 학교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등이 포함되고, 학교수준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 진행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6]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전 기간에 걸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차이는 2016년이 13.0%p로 가장 컸고, 2018년이 5.1%p로 가장 작았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아졌다. 중학생의 경우 교육내용 만족도가 2012년 42.1%였지만 2020년 63.8%로 크게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그림 Ⅳ-6] 중·고등학생 교육내용 만족도, 2012-2020



주: 1) 교육내용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교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만족도도 2012년 36.3%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52.2%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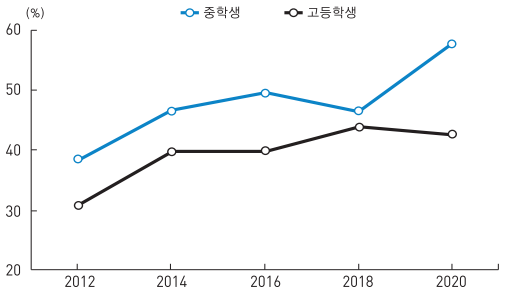
[그림 Ⅳ-7]에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사의 수업이나 평가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에 비해 개별 교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시기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가 높았다. 두 집단 간 교육방법 만족도 차이는 2018년이 2.7%p로 가장 작았고, 2020년에 15.1%p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아울러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교육방법 만족도도 상승세를 보여 중학생은 2012년 38.3%에서 2020년 57.6%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경우 30.7%에서 42.5%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행위를 대표하는 자녀 학교운영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에는 자녀교육을 향한 관심과 상승이동 열망이 투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 편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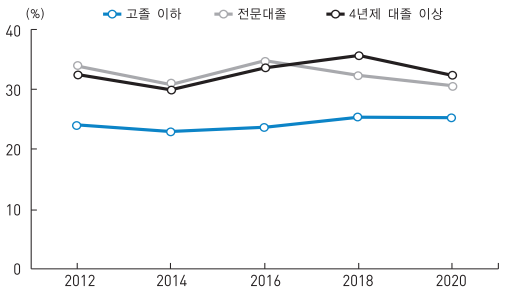
[그림 Ⅳ-8]에는 부모의 교육수준별 학교운영 참여도가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운영 참여가 활발해서 고졸 부모보다는 전문대졸 또는 4년제 대졸 이상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가 높았다. 2016년까지는 전문대졸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 부모보다 높은 학교운영 참여도를 보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전문대졸 부모보다는 4년제 대졸 이상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고졸 부모, 전문대졸 부모, 4년제 대졸 이상 부모 모두 학교운영 참여도가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는 고졸 부모 25.3%, 전문대졸 부모 30.7%, 4년제 대졸 이상 부모 32.5%로 보고됐다.

[그림 Ⅳ-7] 중·고등학생 교육방법 만족도, 2012-2020



주: 1) 교육방법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교육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8] 부모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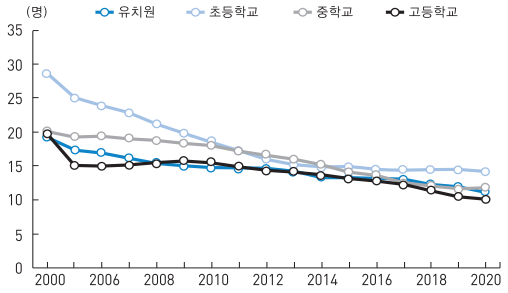


주: 1)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수업 참관, 급식 배부, 학부모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임.
2)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은 이전 학교급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금까지는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 학생수준 주요 지표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수준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 교수 및 학습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편이었으나 최근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Ⅳ-9]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교육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교육단계는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8.7명에 달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기 아동이 격감하면서 2020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2명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교육단계보다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2020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교육단계는 고등학교(10.1명)이고, 유치원(11.4명), 중학교(11.8명), 초등학교(1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어쨌든 모든 교육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5명 이내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림 Ⅳ-9]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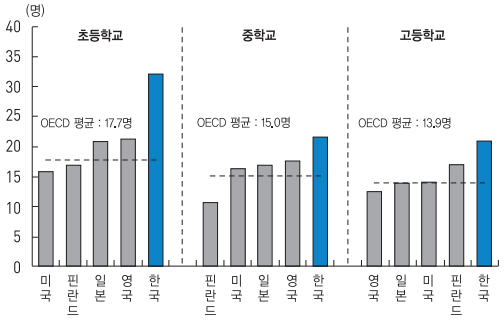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교원 수.
2) 교원 수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앞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밀했음을 지적했는데, 국제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Ⅳ-10]은 한국과 주요 OECD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는 거의 모든 교육단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 정도가 심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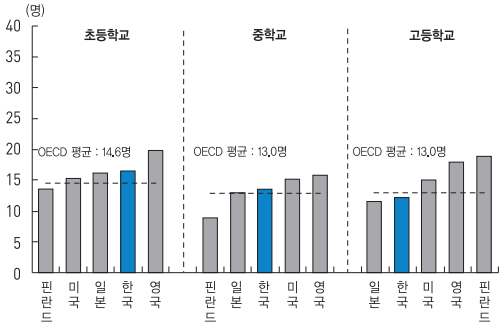
개선되면서 2018년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고 중학교는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 다만 아직도 초등학교는 OECD 평균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10]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 2018

1) 2000년



2) 2018년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교원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2020.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포착한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로 측정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서 얻은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를 보여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과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수준을 살펴본 후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Ⅳ-1〉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요구되는 수준의 학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학생들의 전반적 성취도가 낮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표 Ⅳ-1〉 성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20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4	2.1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2019	6.4	8.2	4.4	5.5	6.8	4.2
2020	9.0	12.0	5.8	9.6	13.3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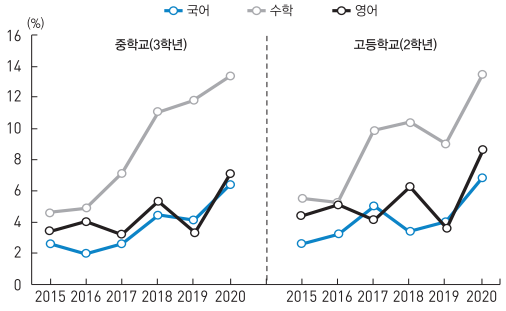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2017년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전체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초래한 결과로 읽힌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 부진에 빠졌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장기간에 걸친 원격수업의 피해를 훨씬 더 크게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4%에서 2020년 5.8%로 1.4%p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에 남학생의 경우 8.2%에서 12.0%로 3.8%p나 급증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은 4.2%에서 5.8%로 1.6%p 증가에 그쳤으나 남학생은 6.8%에서 13.3%로 무려 6.5%p 폭증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남녀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중학교는 6.2%p이고 고등학교는 7.5%p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실태는 과목에 따라 크게 다른 경향이 있다. [그림 Ⅳ-11]을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2017년부터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2020년에서는 전년 대비 4.5%p 증가했지만, 중학교의 경우 1.6%p 증가에 그쳤다.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체로 안정적 추이를 보였지만 고등학교에서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도 2019년(3.3%) 대비 2020년(7.1%) 증가폭이 3.8%p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세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과목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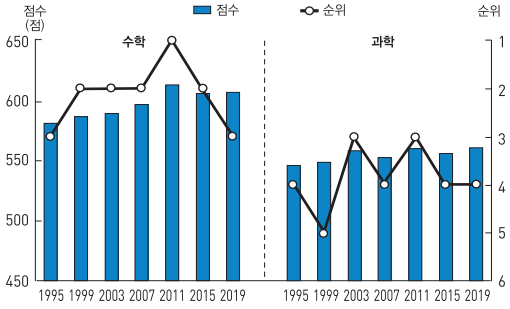


주: 1) 2017년도부터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다음 단계 학습을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급증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기초학력 미달 급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도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녀 간 성취도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Ⅳ-12]는 한국 중학생의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수준이 1995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는 TIMSS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 및 과학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학보다는 수학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성취도 점수 자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학 과목의 성취도 순위가 2011년 1위에서 2019년 3위로 하락한 점과 과학 성취도 순위가 2003년 이후 3-4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배경을 살펴보고 적절한 타개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2] 중학생의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점수와 순위, 199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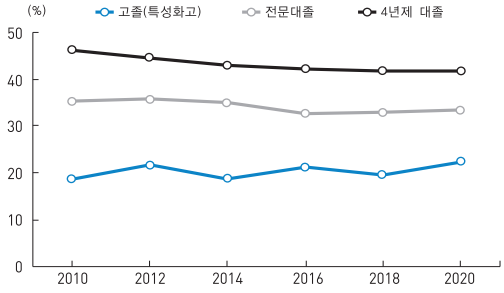


주: 1)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함.
2) TIMSS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며,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점수임. 400점 이상이면 '기초수준 이상', 475점 이상이면 '보통수준 이상', 550점 이상이면 '우수수준 이상', 625점 이상이면 '수월수준'으로 분류됨.
3) 2019년 기준 39개국이 중학교 2학년 대상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시기별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일부 존재함.
출처: IEA. *TIMSS 2019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and Science*. 2020.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으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면 직업만족도, 정규직 취업 가능성, 임금수준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며,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높으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다.

[그림 Ⅳ-13]에는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구체적으로 고졸(특성화고) 취업자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여 지난 10년간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2010년 18.7%와 2020년 22.3% 사이를 탈피하지 못했다. 2-3년제 대졸 취업자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지난 10년 내내 30% 초중반 수준에 갇혀있다. 4년제 대졸 취업자의 경우 2010년

[그림 Ⅳ-13]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2010-2020



주: 1)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직업이 전공과 일치(매우 일치한다+일치하는 편이다)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은 이전 학교급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함.
3) 고등학교 졸업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자만 포함되며, 대학원 졸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46.3%였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하락하여 2020년에는 41.8%를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어떤 교육수준에서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표 Ⅳ-2〉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66.2-68.1%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별화된 양상이 관찰된다. 즉 남성의 경우 2011년 70.7%이던 취업률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하락하여 2017년 67.8%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현재 69.0%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의 취업률은 2011년 64.5%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며 2016년 66.4%까지 높아졌다가 2019년 현재 65.2%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률 추이를 고등교육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취업률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순으로 높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9년의 취업률이 더 낮았지만, 전문대학의 상황은 그 반대였다. 최근 4년제 일반대에 다니던 중에나 졸업 후에 취업했다가 다시 전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고등교육기관별 취업률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남성의 경우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취업률이 67.5-70.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2011년 67.3%에서 2019년 71.6%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4년제 대졸 남성의 경우 2011년 69.1%에서 2019년 66.0%로 취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여성 취업률은 60.4-62.4%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일반대학원을 마친 남성

〈표 Ⅳ-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9

(%)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2011	67.6	67.8	65.5	79.2
2012	68.1	68.1	66.0	79.1
2013	67.4	67.9	64.8	78.5
2014	67.0	67.8	64.5	77.5
2015	67.5	69.5	64.4	77.8
2016	67.7	70.6	64.3	78.3
2017	66.2	69.8	62.6	77.7
2018	67.7	71.1	64.2	78.9
2019	67.1	70.9	63.3	79.9
남성				
2011	70.7	68.3	69.1	86.1
2012	70.6	68.5	68.9	84.6
2013	69.9	68.2	67.7	84.7
2014	69.0	67.5	67.2	83.3
2015	69.0	68.8	66.4	83.1
2016	69.0	69.5	66.3	83.0
2017	67.8	68.5	64.9	82.9
2018	69.6	70.7	66.7	83.6
2019	69.0	69.9	66.0	84.7
여성				
2011	64.5	67.3	61.7	68.7
2012	65.7	67.8	63.0	71.1
2013	65.1	67.8	61.8	70.3
2014	65.2	68.0	62.0	69.9
2015	66.1	70.0	62.4	70.9
2016	66.4	71.4	62.3	72.4
2017	64.8	70.8	60.4	71.3
2018	66.0	71.4	61.8	72.9
2019	65.2	71.6	60.6	73.8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2) 조사시점 기준일은 해당연도 12월 3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의 취업률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011년 68.7%이던 취업률이 2019년에는 73.8%까지 높아졌다. 2019년 현재 성별 취업률 격차는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는 일반대학원 졸업자 사이에서 훨씬 컸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014년 이래 남녀 간에 취업률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2019년 현재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1.7%p 높았다.

맺음말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교육·훈련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진행된 유례없는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교육·훈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이 크게 약화하면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핵심 기제가 되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진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한편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너무 미온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루바삐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_____.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35a14e5-en.

코로나19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 및 교육격차 실태

김경근 (고려대학교)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처음 시작된 2020학년도 1학기에 초·중등 교사들은 자체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을 주로 실시했지만 2학기에는 대부분 실시간 화상 수업을 선택하였다.
- 교사들은 원격수업이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 많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품평의 대상이 된 상황을 곤혹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가정배경이 좋은 집단일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은 높은 반면, 디지털 기기를 학습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학생 비율은 낮았다.
-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양호한 방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교폐쇄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긴 편이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심대한 변화와 상흔을 남겼다. 교육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재앙은 원격수업이 전통적 등교수업을 일거에 대체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교육계는 원격수업의 가치와 효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문제는 등교수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점이다.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여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관리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학생들의 학력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초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저하됐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20학년도에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얼마나 이루었는지 각 시도별로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초·중등교육에서 일어났던 변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실태를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4월

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네 차례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자료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1] 도농 지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2020년 현재 전국 초등학생의 28.3%, 중학생의 27.6% 및 고등학생의 26.2%가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는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대표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폐쇄 기간 및 양상이 주요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와 초·중등학교 등교 일수

2020학년도 1학기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교육부는 개학일을 세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단행했다. 온라인 개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5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졌다. 2학기에는 1학기보다 좀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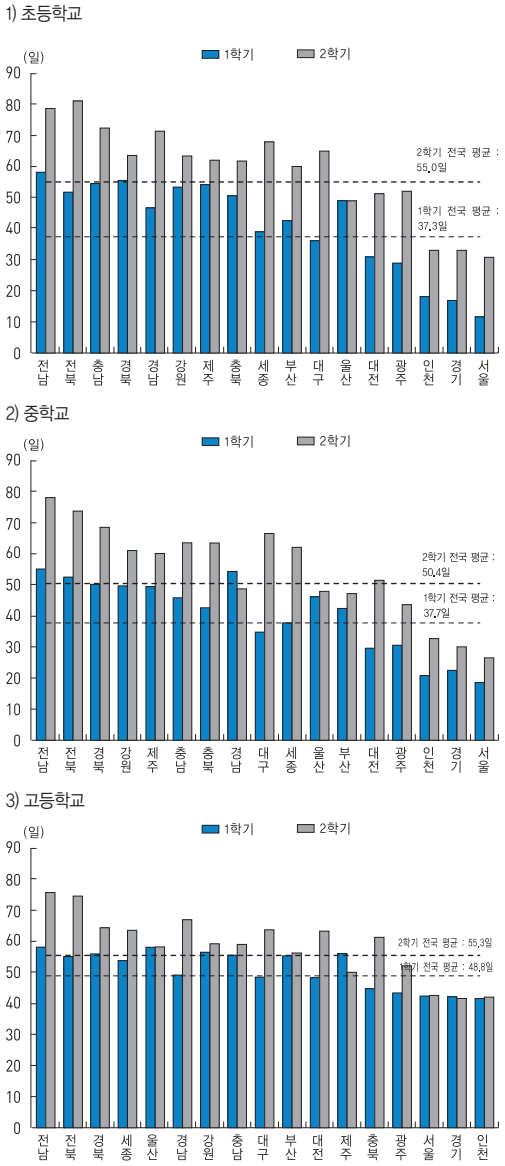
[그림 Ⅳ-14]에는 전국 각 시도 초·중등학교의 등교 일수를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교육단계에서 1학기보다 2학기에 평균 등교 일수가 길다. 1학기에는 등교 개학 자체가 5월에야 이루어졌지만, 2학기에는 1학기 동안 겪었던 혼선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방역에 힘쓰며 등교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일수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짧은 것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2, 3차 유행이 이어져 불가피하게 학교를 폐쇄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전국 평균 등교 일수는 37.3일인데, 전남(57.9일), 경북(55.5일), 충남(54.4일), 제주(54.0일), 강원(53.3) 등이 등교 일수 상위권을 형성했고, 서울(11.6일), 경기(17.0일), 인천(18.1일), 광주(28.9일), 대전(30.8일) 등이 하위권에 포진했다. 2학기 전국 평균 등교 일수는 55.0일이었으며 전북(81.2일), 전남(78.8일), 충남(72.4일), 경남

1) 각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조사명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코로나19 이후 생활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
조사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 2020)	경기도교육청 (백병부·정재엽, 2020)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외, 2020)	경기도교육연구원 (백병부·정재엽, 2021)
조사대상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및 학생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사례수	교원	30,571명	28,445명	21,064명	16,926명
	학부모	–	433,591명	31,042명	105,624명
	학생	286,550명	200,085명	3,860명	98,918명
조사기간		2020.4.19–4.24	2020.6.11–6.16	2020.7.15–7.27	2021.1.4–1.8

[그림 Ⅳ-14]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등교 일수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주: 1) 그래프의 순서는 2020년 1년 평균 등교 일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출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실, 교육부 제공.

(71.3일), 세종(68.0일) 등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던 반면, 서울(30.8일), 경기(33.0일), 인천(33.0일), 울산(48.8일), 대전(51.1일) 등이 평균을 밑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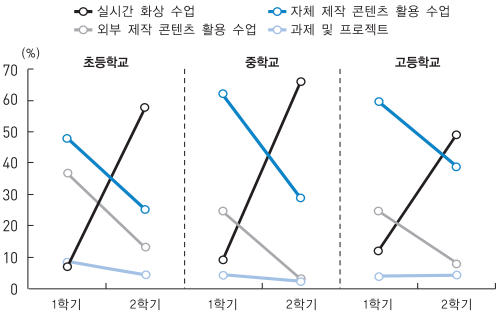
2020학년도 1학기 중학교의 평균 등교 일수는 37.7일로 초등학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1학기의 시도별 편차를 살펴보면 전남(55.3일), 경남(54.5일), 경북(50.2일), 강원(49.7일), 제주(49.6일) 소재 중학교의 등교 일수가 길었고, 서울(18.6일), 인천(20.8일), 경기(22.5일), 대전(29.7일), 광주(30.6일) 소재 중학교의 등교 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다. 중학교의 2학기 평균 등교 일수는 50.4일인데, 전남(78.1일), 전북(73.9일), 경북(68.7일), 대구(66.6일), 충남(63.6일) 등이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서울(26.6일), 경기(30.0일), 인천(32.8일), 광주(43.7일), 부산(47.3일) 등이 평균을 하회했다.

고등학교의 전국 평균 등교 일수는 1학기에는 48.8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11일 정도 많았다. 시도별 실태를 살펴보면 전남(58.3일), 울산(58.1일), 강원(56.5일), 제주(56.0일), 경북(55.8일) 등의 등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고, 인천(41.7일), 경기(42.2일), 서울(42.3일), 광주(43.3일), 충북(44.7일) 등의 등교 일수가 짧았다. 2학기 평균 등교 일수는 55.3일로 1학기보다 6일 남짓 늘어났고, 전남(75.7일), 전북(74.5일), 경남(67.1일), 경북(64.3일), 대구(63.7일) 등이 상대적으로 긴 등교 일수를 기록한 반면, 경기(41.7일), 인천(42.0일), 서울(42.6일), 제주(50.1일), 광주(52.1일) 등의 등교 일수는 비교적 짧았다.

학기에 따른 교수·학습의 변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1학기와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친 2학기에는 수업방식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5]는 경기도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단계별로 1학기와 2학기의 수업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준다. 어떤 교육단계에서든 1학기에는 자체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이 주종을 이루었다(초등학교 47.8%, 중학교 62.1%, 고등학교 59.6%). 외부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이 다음으로 많았으며(초등학교 36.6%, 중학교 24.7%, 고등학교 24.5%),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실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초등학교 6.9%, 중학교 9.0%, 고등학교 11.8%). 하지만 2학기에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이 대세를 형성했으며(초등학교 57.5%, 중학교 65.8%, 고등학교 48.9%), 실시간 화상 수업 비율이 높아진 것에 비례해 자체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 및 외부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 비율은 낮아졌다. 어떤 교육단계에서든 1학기나 2학기 모두에서 과제 및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림 Ⅳ-15]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방식의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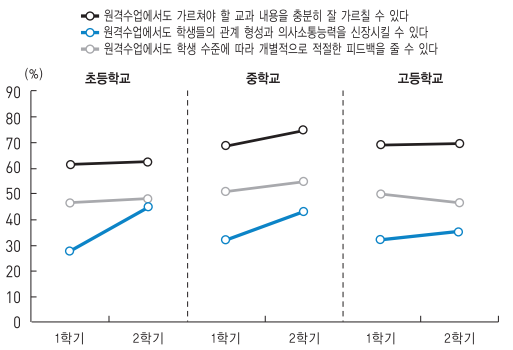


주: 1) 원격수업 방식은 "선생님께서는 2020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주로 어떻게 원격수업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 원자료, 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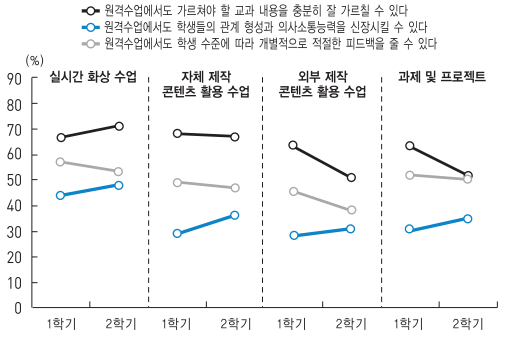
교사들이 인식한 원격수업의 효과도 교육단계별, 원격수업 방식별로 다르고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6]을 살펴보면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원격수업의 효과는 '교과 내용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 '학생 수준별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학생들과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순으로 높았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도모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로 읽힌다. 대체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각각의 항목별 효과성은 1학기보다 2학기에 더 높았다. 특히 '학생들과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에서 향상도가 두드러졌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1학기에 27.8%에 불과했지만 2학기에는 44.9%로 상승했다.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실시간 화상 수업이 크게 활성화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원격수업이 '학생 수준별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 비율이 1학기에 49.9%였지만 2학기에는 46.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6]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 학교급별



2) 원격수업 방식별



주: 1) 원격수업 효과는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교사가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한 비율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경기도교육연구원,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 원자료, 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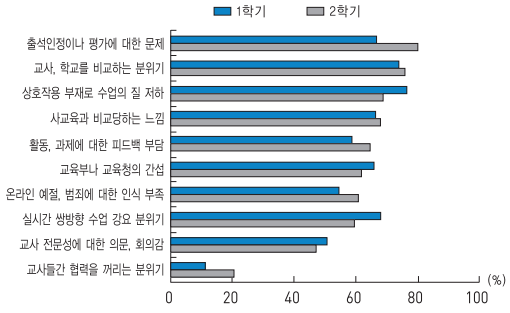
한편 원격수업 방식별로 효과성을 따져보면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제외한 자체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 외부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및 프로젝트 방식 수업으로 '교과 내용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는 박한 점수를 주었다. 특히 외부 제작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학기에 63.3%에서 2학기에 50.7%로 크게 나빠졌다. '학생 수준별로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다'와 관련해서는 모든 원격수업 방식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악화했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징후로 보인다. 다만 교사들은 어떤 원격수업 방식에서든 '학생들과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는 1학기보다 2학기에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림 Ⅳ-17]은 2020학년도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면서 교사들이 인식한 원격수업 장애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교육단계별로 보여준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1학기에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없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76.7%)',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를 비교하는 분위기(74.2%)',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요하는 분위기(68.2%),' '출석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문제(66.7%)', '사교육과 비교당하는 느낌(66.6%)' 순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학기에는 '출석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문제(80.2%)',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를 비교하는 분위기(75.9%)',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없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68.8%)', '사교육과 비교당하는 느낌(68.0%)',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부담(64.7%)'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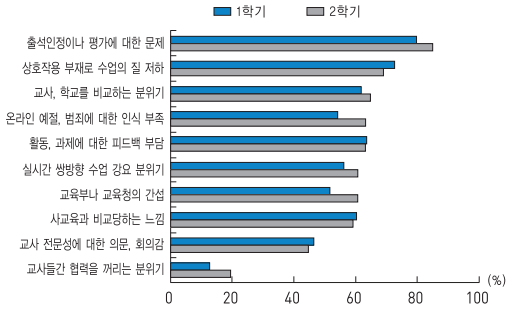
큰 틀에서 볼 때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초등학교

[그림 Ⅳ-17]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 초등학교



2) 중·고등학교



주: 1) 원격수업 장애요인은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매우 심각한 문제'+'약간 문제')고 응답한 비율임.
2) 그래프의 순서는 2020학년도 2학기 응답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4.
경기도교육연구원,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 원자료, 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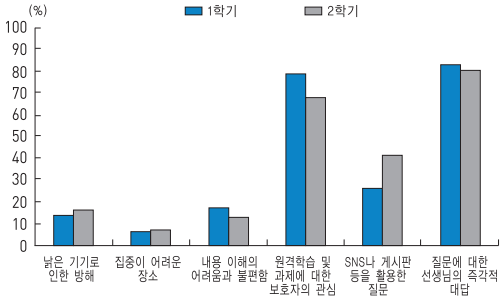
교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안 자체는 같더라도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체감하는 어려움의 강도는 다소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기에는 '출석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문제(80.0%)',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없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72.7%)',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부담(63.5%)',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를 비교하는 분위기(61.9%)', '사교육과 비교당하는 느낌(60.5%)' 등에 대한 고충이 주로 지적되었다. 2학기에도 '출석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문제(85.1%)',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없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69.1%)'를 힘들어했고,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를 비교하는 분위기(64.9%)', '온라인 예절이나 온라인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63.4%),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의 부담(63.3%)',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요하는 분위기(60.9%)'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2학기에 원격수업이 쌍방향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화하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출석 인정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많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품평의 대상이 된 상황을 무척 곤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셋째, 학생들의 활동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해서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됐음 직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절이나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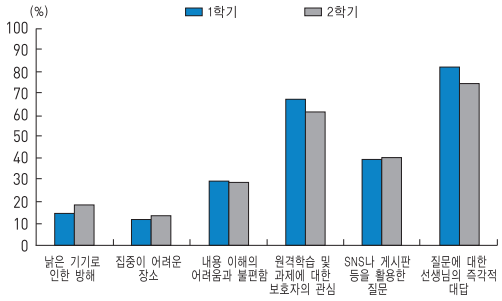
[그림 Ⅳ-18]에는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물리적 환경과 관

[그림 Ⅳ-18]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2020학년도 1학기 vs. 2학기

1) 초등학교



2) 중·고등학교



주: 1) 원격수업 환경은 학생이 원격수업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각각의 진술에 대해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한 비율임.
출처: 이정연 외,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2020.7.
경기도교육연구원, 「원격수업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 원자료, 2021.1.

련하여 느끼는 어려움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대다수 사안에 대해 매우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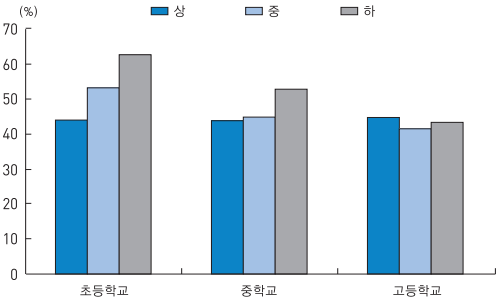
먼저 '원격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적이 많다'라는 점에 초등학생(1학기 13.7% vs. 2학기 16.0%)과 중·고등학생(1학기 14.5% vs. 2학기 18.2%)은 모두 1학기보다 2학기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보호자는 원격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했는데, 초등학생(1학기 78.7% vs. 2학기 67.7%), 중·고등학생(1학기 66.5% vs. 2학기 60.6%) 모두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동의 강도는 약화했다. '선생님은 원격수업과 관련한 나의 질문에 즉각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초등학생(1학기 82.7% vs. 80.3%), 중·고등학생(1학기 81.0% vs. 2학기 73.7%)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동의 정도는 낮아졌다.

계층 간 교육격차의 실태

코로나19 사태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한층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 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만 받는다면 저소득층 학생이 학습 결손을 경험하게 될 요인이 사방에 편재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사교육이라는 대안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학생은 가정에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데도 훨씬 불리한 편이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격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청소년의 미디어 접촉시간이 급격하게 상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Ⅳ-19]에는 가정배경별로 코로나19 이후 학습 목적 외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이 나타나 있다.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가정배경이 열악할수록 코로나19 이후 학습 외 목적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학생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9]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코로나19 이후 학습 외 목적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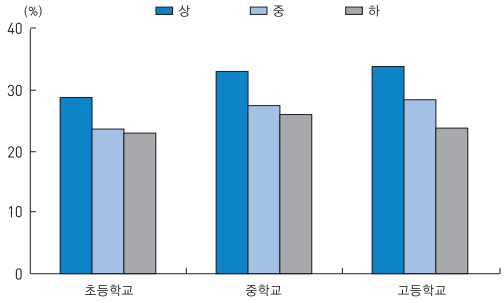


주: 1) 학생이 "학습 외 목적으로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 시간"의 항목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가정경제상황은 "나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잘 산다(=상)', '보통이다(=중)', '못 산다(=하)'의 응답을 근거로 범주화한 것임.
출처: 이정연,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2021.2.17.

특히 초등학생의 상황이 심각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습 외 목적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학생 비율이 가정배경 '상'인 집단은 43.8%에 그쳤지만, '중' 집단 53.0%, '하' 집단 62.8%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보다는 덜하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도 학습 외 목적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이 가정배경 '상' 집단 43.8%, '중' 집단 45.0%, '하' 집단 53.1%로 가정배경이 열악할수록 사이버 중독의 유혹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정배경이 좋지 않은 고등학생의 학습 목적 외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다른 집단보다 이 집단의 디지털 사용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Ⅳ-20]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이 교육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을 늘린 학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했다.

[그림 Ⅳ-20]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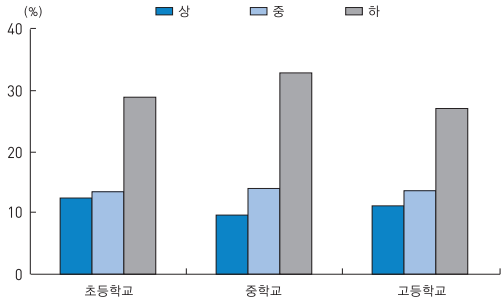
주: 1)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의 항목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가정경제상황은 "나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잘 산다(=상)', '보통이다(=중)', '못 산다(=하)'의 응답을 근거로 범주화한 것임.
출처: 이정연,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2021.2.17.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 참여 증가 비율에서 가정배경 '상' 집단(28.8%)과 '하' 집단(22.9%) 간 차이가 5.9%p였다. 중학교에서 가정배경 '상' 집단(32.9%)과 '하' 집단(26.0%) 간 차이가 6.9%p로 커졌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배경 '상' 집단(33.7%)과 '하' 집단(23.8%) 간에 9.9%p라는 사교육 참여 증가 비율의 격차가 존재했다.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사교육에 참여한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개된 이 같은 사교육 참여 증가 비율의 계층 간 차이는 교육격차를 한층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원격수업에 참여할 때 수업의 효과는 기기의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기가 낡았거나 성능이 떨어져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되면 학습 의욕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학습효과도 크게 떨어지기 쉽다. [그림 Ⅳ-21]에 나타났듯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기기가 낡아 온라인수업 참여에 방해를 받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참여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낡은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정배경 '상' 집단 12.5%, '중' 집단 13.4%, '하' 집단 28.9%로, 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저소득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중학교에서 동일한 문제를 보고한 학생 비율이 가정배경 '상' 집단 9.7%, '중' 집단 14.0%, '하' 집단 33.0%로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노후

[그림 Ⅳ-21]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온라인수업 참여에 방해를 받는 학생 비율,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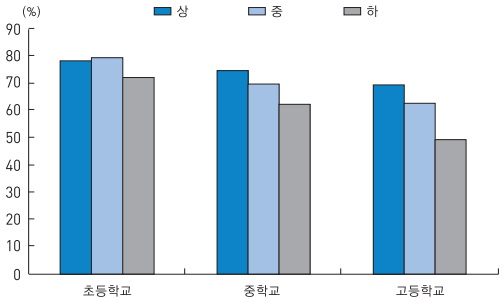
주: 1)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적이 많다"의 진술에 대해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한 학생의 비율임.
2) 가정경제상황은 "나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잘 산다(=상)', '보통이다(=중)', '못 산다(=하)'의 응답을 근거로 범주화한 것임.
출처: 이정연,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2021.2.17.

기기 관련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 비율은 가정배경 '상' 집단 11.2%, '중' 집단 13.7%, '하' 집단 27.1%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는 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등교수업에 비해 원격수업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이나 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가 학습 성과에 훨씬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차이는 상대적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Ⅳ-22]에는 보호자가 온라인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 비율이 교육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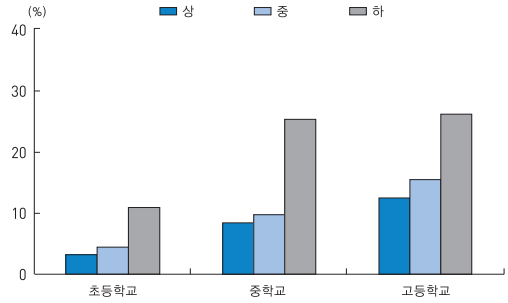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온라인학습이나 과제에 관심을 가진 보호자를 둔 학생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모든 교육단계에서 온라인학습이나 과제에 관심을 가진 보호자 비율은 저소득층이

[그림 Ⅳ-22]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보호자가 온라인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 비율, 2020.7



주: 1) "나의 보호자(부모님/조부모 등)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의 진술에 대해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한 학생의 비율임.
2) 가정경제상황은 "나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잘 산다(=상)', '보통이다(=중)', '못 산다(=하)'의 응답을 근거로 범주화한 것임.
출처: 이정연,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2021.2.17.

[그림 Ⅳ-23]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가정경제상황별 온라인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학생 비율, 2020.7



주: 1) "학교 온라인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의 질문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임.
2) 가정경제상황은 "나는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하여 '잘 산다(=상)', '보통이다(=중)', '못 산다(=하)'의 응답을 근거로 범주화한 것임.
출처: 이정연,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2021.2.17.

가장 낮았는데, 그 비율은 초등학교 72.1%, 중학교 62.1%, 고등학교 48.9%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보호자의 관심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도 분명히 코로나19 시대에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에 일조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Ⅳ-23]은 온라인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학생 비율을 교육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일수록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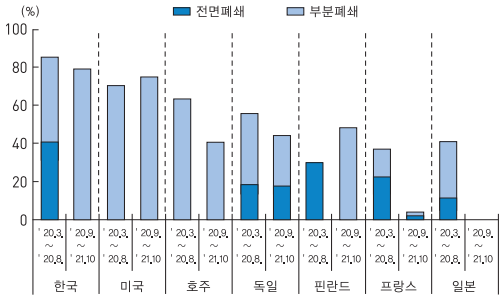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가정배경이 가장 열악한 집단에서조차 11.0%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학생 비율을 가정배경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상' 8.5%, '중' 9.8%, '하' 25.3%였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상' 12.5%, '중' 15.5%, '하' 26.2%로 밝혀졌다. 원격수업에 임하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가정배경이 열악한 집단의 학습에 대한 대처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직면해 세계 각국은 방역을 위해 학교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나라마다 교육제도와 방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했던 까닭에 학교폐쇄의 방식이나 기간은 제각각이었다. 전면폐쇄는 피하면서 부분폐쇄만

으로 대응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전면폐쇄 기간이 꽤 길었던 나라도 있다. [그림 Ⅳ-24]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국가에서 학교를 폐쇄한 기간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24]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폐쇄 기간 비율, 2020.3-2021.10



주: 1) 전면폐쇄는 전국 수준에서 모든 학교가 폐쇄된 상황을 의미하며, 부분폐쇄는 일부 지역이나 일부 학년의 휴교 또는 대면수업 취소를 의미함.
2)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은 27주, 2020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은 61주, 총 88주) 학교 폐쇄 기간을 비율화하였음.

출처: UNESCO, Global monitoring of school closures, 2021.9.30.

전체 기간(2020년 3월-2021년 10월, 총 88주) 중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긴 68주(77.3%) 동안 학교를 폐쇄했고, 미국은 한국 다음으로 긴 62주(70.5%) 동안 학교 문을 닫았다. 전체 기간 기준으로 학교폐쇄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일본(11주, 12.5%)이었고, 프랑스(12주, 13.6%)가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후반부(2020년 9월-2021년 10월, 61주)에는 아예 학교폐쇄가 없었고 프랑스도 후반부에는 2주만 학교 문을 닫았다. 한국의 경우 방역 모범국으로 일컬어짐에도 학교폐쇄 기간은 다른 나라보다 꽤 길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면폐쇄는 없었고 부분폐쇄만 활용했으며 호주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전반부(2020년 3월-2020년 8월, 27주)에는 11주 전면폐쇄와 12주 부분폐쇄를 선택했지만, 후반부에는 41주에 걸쳐 부분폐쇄만 단행했다. 핀란드는 전반부에는 8주에 걸쳐 전면폐쇄만 선택했고, 후반부에는 25주 동안 부분폐쇄만 실시했다.

맺음말

코로나19는 교육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고되지 않았던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교육현장에서 숱한 혼선과 시행착오를 낳았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와 학생이 미래에 전개될 교육의 일단을 미리 경험하는 소득은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계는 원격수업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경험도 했다.

코로나19가 기존의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커다란 과제로 남았다. 상당수 저소득층 학생은 생계형 맞벌이가정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사교육에 참여하기도 어렵거니와 원격수업을 받을 때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나 돌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학력 저하를 경험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심화한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핵심정보 처리 능력)은 30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OECD 평균보다 낮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확대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급격히 저하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평생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생학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34개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9.8%에서 2020년 42.1%로 10%p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직업 관련 교육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재직자 중심의 단기간 교육이어서 1인당 참여시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직업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심각해서,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2013년에 비해 2020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 직업 관련 평생학습의 성과를 참여 목적에 대한 도움 정도로 파악할 경우, 그 성과가 비교적 긍정적이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기존의 숙련이 진부해지고, 요구되는 숙련이 변화함에 따라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숙련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숙련 습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기에 학교에서 배운 숙련만으로 평생 일할 수 있던 시대가 가고 끊임없이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해야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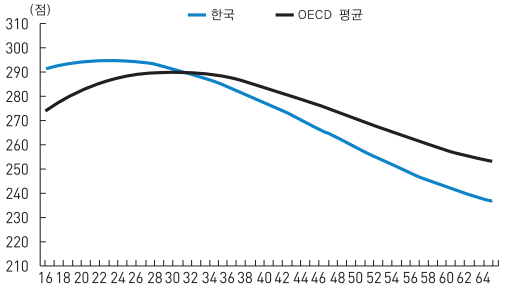
또한 중간 숙련 수준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간 숙련 보유자의 숙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인적자본의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림 Ⅳ-25]에 잘 나타나 있다. 중등 및 고등교육기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보여주지만, 이런 모습이 성인기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성인의 역량(문해력, 즉 핵심정보 처리 능력)이 30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아지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OECD 평균 수준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초중등 단계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고등교육 및 직업생활에서의 재교육 투자가 부족한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이런 현실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림 Ⅳ-25] 한국과 OECD의 연령별 역량 수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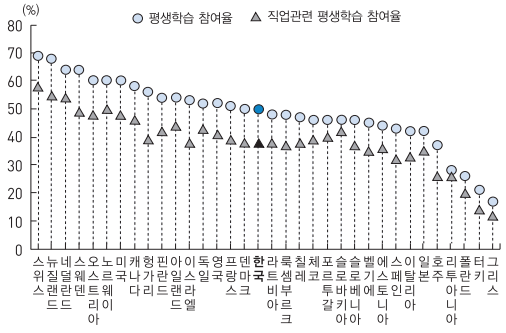


주: 1) 역량은 문해력(literacy)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순한 문해력이 아닌 개인의 핵심정보처리 능력임.
출처: OECD, *Skills Outlook*, 2013.

[그림 Ⅳ-26]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0%인데, OECD 34개 국가 중 16위에 해당된다. 스위스가 69%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68%), 네덜란드(64%), 스웨덴(64%), 오스트리아(60%), 노르웨이(60%) 등이 60% 이상의 높은 참여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국(60%), 캐나다(58%), 헝가리(56%), 핀란드(54%), 아일랜드(54%), 이스라엘(53%), 독일(52%), 영국(52%), 프랑스(51%)도 우리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가 18위로 더욱 낮아진다.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38%이며, 50%를 상회하는 스위스(58%), 뉴질랜드(55%), 네덜란드(54%), 노르웨이(5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그림 Ⅳ-26] OECD 평생학습 참여율, 2010년대 초중반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국가마다 조사 시점이 2012년, 2015년, 2016년으로 상이함.
출처: OECD, "Adult education and learning",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AL).

평생학습 참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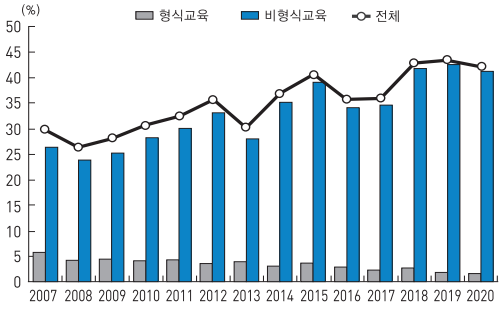
평생학습 참여율을 시기별로 볼 때,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연도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해온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Ⅳ-27]의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07년 29.8%

에서 2020년 42.1%로 10%p 이상 증가했다.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교육 형태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5.7%에서 2020년 1.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비형식교육 형태는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서,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 기관 등록, TV 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방식의 교습이 포함되며, 비형식형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7년 26.4%에서 2020년 41.3%로 크게 증가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율의 증가가 주로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증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7] 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20



주: 1) 평생학습 참여율={(형식교육 참여자+비형식교육 참여자-동시 참여자)/성인 인구}×100.
2)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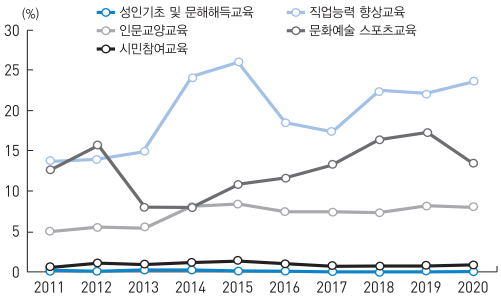
[그림 Ⅳ-28]의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직업능력향상 교육은 2020년 현재 23.7%의 참여율을 보여 평생학습 영역 중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 대비 7.6%p 감소한 2016년, 1.0%p 감소한 2017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능력향상 교육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은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으로서, 2020년 참여율은 13.5%이다.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은 2014년 8.1%에서 2019년 17.3%까지 참여율이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인문교양 교육 참여율은 8.1%를 나타냈고, 2011년-2013년에는 5%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4년 이후에는 7-8% 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시민참여 교육, 성인기초 및 문해해득 교육 참여율은 각각 0.8%, 0.1%로 미미한 수준이

[그림 Ⅳ-28]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율,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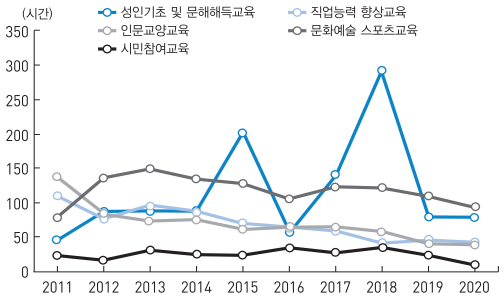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며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Ⅳ-29]의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영역 중에서 참여자의 참여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이다.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에 참여한 경우 2020년에 평균 93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다음으로 참여시간이 많은 영역은 성인기초 및 문해해득 교육이며(78시간), 직업능력향상 교육(41시간), 인문교양 교육(39시간), 시민참여 교육(9시간)의 순이었다.

특히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경우 참여시간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의 111시간 참여에 비해 2020년에는 41시간으로 교육 참여시간이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참여자는 늘어난 반면, 참여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 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의 직업능력향상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 짧은 재직자 대상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보다 확대된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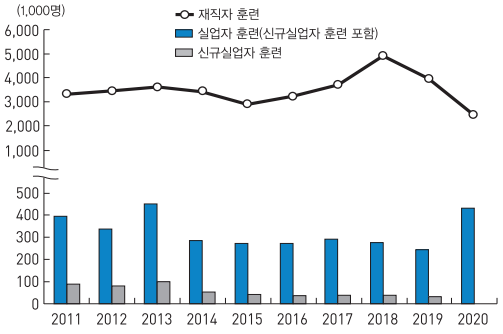
[그림 Ⅳ-29]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시간, 2011-2020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30]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직자 훈련 참여 인원은 2011년 334만 1,118명에서 2018년 491만 4,227명까지 증가한 후 크게 감소하여 2020년 246만 7,8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훈련 참여 인원(신규실업자훈련 포함)은 같은 기간 39만 2,855명에서 2019년 24만 2,845명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43만 1,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Ⅳ-30]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 참여인원, 2011-2020



주: 1) 재직자 훈련=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유급휴가 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지원+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
2) 실업자 훈련=신규실업자 훈련+전직실업자 훈련+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출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각 연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의 격차 문제

〈표 Ⅳ-3〉은 인적 특성별로 2013년과 2020년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을 살펴본 것이다.

성별을 보면 여성(17.1%)보다 남성(30.1%)의 참여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높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보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다.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고 절실한 층에서 오히려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표 Ⅳ-3〉 성인의 인적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2013, 2020

(%)

	2013	2020
성		
남성	18.6	30.1
여성	11.1	17.1
연령		
25-34세	19.5	30.8
35-44세	16.7	29.1
45-54세	11.7	21.7
55-64세	10.1	14.8
학력		
중졸 이하	8.1	12.7
고졸	12.4	14.2
대졸 이상	19.2	32.2
경제활동 상태		
취업	17.6	28.0
실업	19.0	20.0
비경제활동	6.3	4.9
월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10.1	19.1
150-300만 원 미만	12.7	15.0
300-500만 원 미만	15.1	21.4
500만 원 이상	19.5	27.3
지역		
서울 및 광역시	14.8	23.0
중소도시	13.9	23.7
농어촌	17.7	25.6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며,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5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교육 참여율이 1.4배 가까이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이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표 Ⅳ-4〉의 취업자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에서도 확인된다. 비임금근로자(14.8%)보다는 임금근로자(34.7%)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높고, 같은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임시직보다 상용직, 시간제보다 전일제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성이 높거나 직업 위세가 높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높은 반면, 직업 위세가 낮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어, 종업원수 10명 이하 영세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은 300명 이상 대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속기간별로는 근속 5-10년까지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

〈표 Ⅳ-4〉 취업자 특성별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 2013, 2020

(%)

	2013	2020
전체	17.6	26.6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9.3	34.7
상용직-전일제	21.1	39.2
상용직-시간제	19.3	24.3
임시직-전일제	13.5	19.5
임시직-시간제	9.8	10.3
비임금근로자	13.0	14.8
직업		
관리자	18.9	5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2	41.9
사무종사자	21.4	45.3
서비스 종사자	14.2	23.5
판매종사자	8.4	9.3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21.6	1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9.8	30.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0	24.0
단순노무종사자	6.7	12.6
직업군인	28.4	53.5
직장 규모		
10인 이하	11.8	16.1
11-49인	16.1	36.8
50-99인	24.4	42.5
100-299인	27.2	55.3
300인 이상	31.2	57.7
근속기간		
1년 미만	18.4	27.9
1-5년 미만	16.9	26.9
5-10년 미만	16.0	29.2
10-15년 미만	18.0	25.1
15-20년 미만	15.8	24.5
20년 이상	21.4	24.8
월평균임금		
142만 원 미만	11.5	12.7
143-333만 원 미만	18.2	25.5
333-475만 원 미만	22.1	33.5
475-712만 원 미만	25.6	36.4
712만 원 이상	26.3	38.9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율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임금수준이 높은 취업자일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월평균 임금 712만 원 초과 취업자의 경우 142만 원 이하 취업자에 비해 3배 이상 직업능력향상 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직업능력향상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표 Ⅳ-3〉과 〈표 Ⅳ-4〉 모두에서 2013년에 비해 2020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직업능력향상 교육 기회가 주어지던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음을 시사한다.

인적자본이 높은 층에 교육훈련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은 층, 즉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은 층이 교육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상황은 어떤 나라에서건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강하게 드러난다.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심각해서,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다.

〈표 Ⅳ-5〉에 제시된 한국과 OECD의 임금근로자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 25-44세 연령층은 격차가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45세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73.9%이지만, OECD의 평균은 그보다 11%p 정도 높은 84.8%에 달한다.

학력별로는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81.4%로 OECD의 평균 74.4%보다 높지만, 고졸 또는 고졸 미만의 임금근로자의 참여율은 각각 47.7%와 24.2%로 OECD의 평균 52.3%와 36.3%보다 크게 낮다. 특히, 고졸 미만의 저학력 임금근로자의 참여율은 격차가 무려 12%p에 달한다.

직종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과 준전문사무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각각 79.4%와 63.7%로 OECD의 평균 73.7%와 53.7%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단순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27.0%로 OECD 평균 34.0%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위세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경우 70.9%로 OECD 평균 59.8%보다 10%p 정도 높은 반면, 비정규직은 그보다 훨씬 낮은 48.2%이며, 이는 OECD 평균 53.1%보다 낮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도 OECD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도 우리나라는 OECD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 25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3.5%로 OECD 평균 70.4%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250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에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 Ⅳ-5〉 한국과 OECD의 임금근로자 특성별 직업능력 향상 교육 참여율 비교, 2012

	참여율(%)		참여율 차이 (%p)
	한국	OECD 평균	
연령			
24세 이하	89.5	91.8	-2.3
25-44세	100.0	100.0	0.0
45세 이상	73.9	84.8	-10.9
학력			
고졸 미만	24.2	36.3	-12.1
고졸	47.7	52.3	-4.6
대졸 이상	81.4	74.4	7.0
직종			
단순직	27.0	34.0	-7.0
준전문기술직	43.6	43.1	0.5
준전문사무직	63.7	53.7	10.0
전문직	79.4	73.7	5.7
고용형태			
정규직	70.9	59.8	11.1
비정규직	48.2	53.1	-4.9
기업규모			
250인 미만	54.7	55.7	-1.0
250인 이상	83.5	70.4	-13.1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참여율 차이=한국 참여율-OECD 평균 참여율.
출처: OECD,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PIAAC), 2013.

직업 관련 평생학습의 성과

직업 관련 평생학습의 성과를 참여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파악할 경우, 그 성과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이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고용안정(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3점(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Ⅳ-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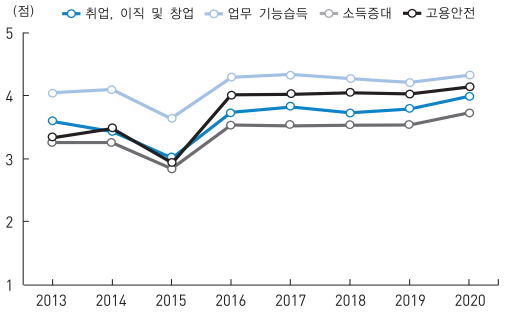
가장 최근 조사연도인 2020년의 응답 결과를 보면,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안정(4.14점), 취업, 이직 및 창업(3.99점), 소득증대(3.72점)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 관련 평생학습이 당장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즉각적인 기술습득과 비교할 때 다소의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2015년에 큰 굴곡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질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림 Ⅳ-32]의 1인당 GDP 및 지니계수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도 직업 관련 평생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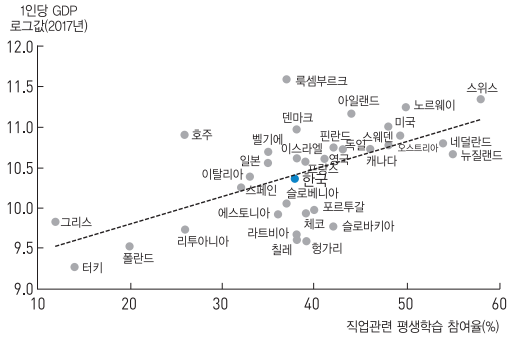
[그림 Ⅳ-31] 직업능력향상 교육의 도움 정도,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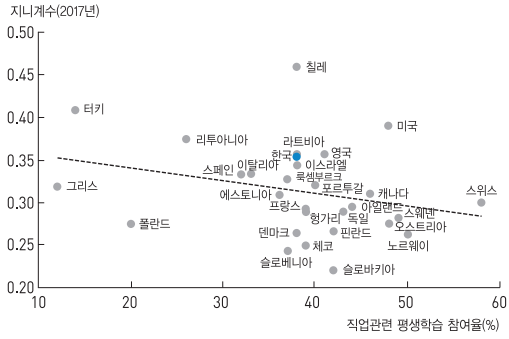
주: 1) 만 25-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32]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및 지니계수의 관계, 2017

1)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GDP



2)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과 지니계수



주: 1) 직업 관련 평생학습참여율과 지니계수는 OECD 자료 활용.
2) 1인당 GDP는 World Bank 자료 활용(당해년가격 미국 달러 기준).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의 성과가 확인된다. 평생학습이 활성화된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적자본의 격차를 줄여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 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60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 권현지 | 서울대학교, 함선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2

코로나19와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182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코로나19 이전 증가추세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참가율이 크게 꺾이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연령별로 20대 청년은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의 부침을 겪었다.
- 고용률 역시 전년 대비 전반적인 감소를 보였고, 시기별로는 2020년 연말에, 연령별로는 20대 남녀의 고용 감소가 가장 컸지만, 30대 고용둔화도 특기할 만하다.
- 2020년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실업률 상승을 주도하였다. 큰 비중의 비경제활동인구층이 있는데도 여성 실업률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이유는 가구소득 보전을 위해 활발해진 구직활동, 위기시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의 특성 때문이다.
- 종사상 지위별로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부침이 컸던 층은 임시직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음식·숙박업에 충격이 가장 컸으며,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사회행정 분야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
- 전반적으로 4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감소하고 36–44시간 노동이 증가했다. 17시간 미만 불완전 노동의 증가도 눈에 띈다. 임금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는 큰 변화가 없다.
- 팬데믹 국면에서 주목된 유연근무는 2019년 10.8%에서 2021년 16.8%로 증가했다. 유연근무형태별로는 비대면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8월 4.3%에서 2021년 8월 32.3%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면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불확실 속에 부침을 거듭했다. 1차 및 2차 대유행과 함께 방대한 고용유지 프로그램이 집행되고 조직과 개인의 방역 역량이 축적되면서 2020년 하반기 노동시장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말–2021년 초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은 1차 대유행기보다 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2021년 1월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취업자 감소율을 기록했다(–3.7%). 그러나 다행히도 백신개발을 통한 집단면역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경기회복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2021년 3월 이후 노동시장은 2019년 동월 취업자 수를 회복할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반복되는 위험과 장기화된 위기로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처한 상황, 속한 집단에 따라 위험의 정도는 크게 달랐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도, 이전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집단 해고 등 고용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시장에 큰 요동은 없었다. 지난 20여년간 구조조정으로 날렵한 조직을 만들어 온 대다수 기업들은 주로 신규 채용 억제, 계약직 중심의 조정으로 이번 위기에 대응한 듯 보인다. 장년보다는 청년이,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큰 타격을 받은 이유다.

또한 고용문턱이 낮았던 대면 서비스 부문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밀려난 사람들과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혼잡해지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어려움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은 2020년 2/4분기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3% 폭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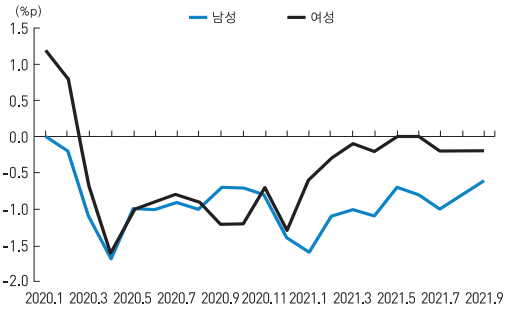
올해 노동동향은 장기추세보다는 코로나 발발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월별 노동시장 추이로 시야를 좁혀 코로나19 국면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피는데 집중한다. 2021년 3월 이후의 여러 고용 지표는 2020년 대비 회복을 가리키고 있지만, 기저 효과를 고려해서 2019년 동월과 비교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증감

코로나19 팬데믹의 본격화 이전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증가세를 견인하던 여성 참가율이 크게 꺾이면서 이러한 추세를 단번에 뒤집었다. [그림 V-1]이 보여주듯 2021년 5-6월 여성 참가율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 국면 내내 2019년 동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갑작스런 충격이 왔던 1차 대유행기, 그리고 장기화의 두려움과 단기고용계약자 정리가 집중되었을 연말 3차 유행기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코로나 집단감염 정체기에는 노동시장도 따라서 호전되었다. 집단 간 증감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예컨대 성별 차이는 코로나 집단감염의 극성기보다는 회복기인 9-10월, 2021년에 두드러졌다. 참여율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남성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0.1-2021.9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p)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2]와 같이 연령별 추세를 더해보면, 20대와 60대가 가장 큰 부침을 겪었다. 예컨대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차 대유행기였던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기 2019년 동월 대비 5.6%p, 3.9%p 감소했다. 감염병 장기화 국면에서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축소는 기업의 신규채용동결과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기 위해 취업을 지연시키려는 청년의 결정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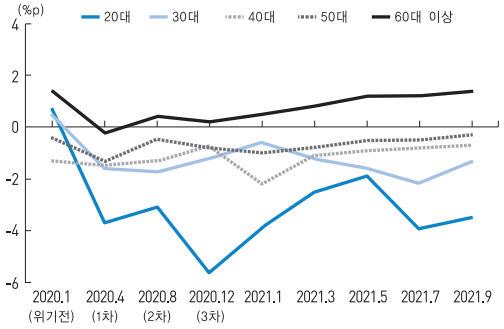
같은 청년의 경우에도 여성 20대의 경제활동참여 패턴은 다소 모습이 달랐다. 고용 유연화 정도가 높은 이들의 노동시장은 감염병 극성기와 회복기 등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진폭이 큰 움직

임을 보였다. 한편, 30–50대 노동시장은 경기변화에도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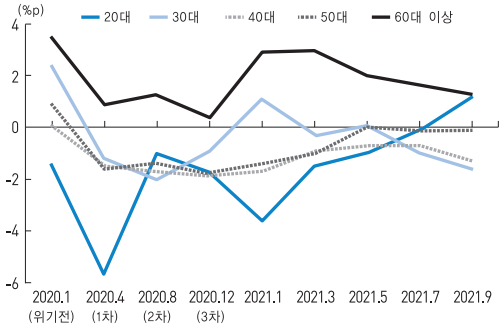
다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의사가 없이 '쉰' 인구가 2021년 8월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6만여 명 감소했지만, 30대에서 1만 9천명 늘었다는(31만 8천명) 점은 주목을 요한다. 20–50대 중 유일하다. 직업경력과 가족형성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30대 노동력 중 '그냥 쉰' 사람들의 증가는 팬데믹 노동시장의 우려스러운 단면이다.

[그림 V-2] 주요 시기의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0.1–2021.9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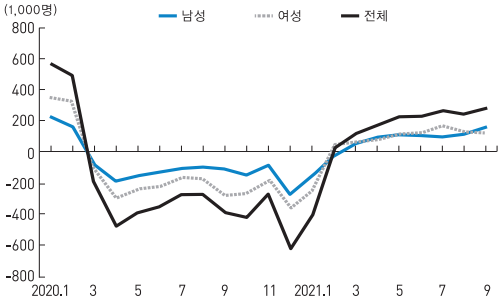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p)임.
2) 2020년 1월은 코로나19 위기 전, 2020년 4월은 1차 대유행기, 8월은 2차 대유행기, 12월은 3차 대유행기에 해당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3]은 취업자 수 증감을 나타낸다. 2020년 내내 그리고 3차 대유행이 지속된 2021년 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는 지속되었다. 감소 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컸다. 어느 정도 안정기였다고 할 수 있는 2020년 9월과 10월에도 여성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각기 28만 3천여 명, 27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전체 취업자가 2019년 상황을 회복한 것은 3차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심리가 커진 2021년 2월 이후 시점이다. 단, 연령별로 30대는 취업자가 줄어 전반적으로 고용지표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 V-3]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020.1–2021.9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변화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고용률과 실업률

2020년 연간 고용률은 남성 69.8%, 여성 50.7%로 2019년 대비 남녀 모두 0.9%p 감소했

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남성이 0.1%p 감소하고 여성이 0.7%p 상승했던 것을 상기하면, 추세적으로는 여성이 더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표 V-1〉을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고용률이 감소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의 고용 감소가 각각 -2.6%p, -2.2%p로 가장 컸다. 그 외에 연간통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40대(-1.2%p), 여성의 경우 50대(-1.7%p)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의 극성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월별 통계를 보면, 3차 대유행기 고용 감소가 남녀 모두 가장 컸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12월에 -1.7%p, 2021년 1월에 -2.6%p 감소하였다. 심리적 충격이 컸던 1차 대유행기(2020년 4월)의 -1.4%p이나 2차 대유행기(2020년 8월)의 -1.0%p 감소에 비해 고용률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2021년 들어 고용률은 1/4분기 58.6%로 전년 대비 -1.3%p, 특히 여성의 경우 50% 밑으로 떨어져 충격을 주었으나 2/4분기 61%(남성 70.4%, 여성 51.9%)로 2019년 2/4분기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2021년 올해 극성기(1월)와 회복기(6월)의 고용률에서 눈여겨 볼 것은 30대 남성의 고용률 저하 경향이다. 30대 남성은 극성기였던 2021년 1월에 이어, 회복기에 해당하는 6월에도 2019년 동월 대비 -1.6%p 고용률 감소를 유지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 남성 청년층의 경우에도 위기의 장기화 국면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고용률 회복이 더뎠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경기에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3차 극성기인 1월 20대 청년 여성의 경우 고용률 감소가 -4.1%p에 이르렀으나, 회복기에 해당하는 6월에는 2019년의 고용률을 상회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 일자리 질이 낮더라도 고용되는 편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집중된 서비스 일자리의 유동적 특성이나, 배달서비스 등 비임금 일자리 증가가 남성에게 많았던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숙박, 음식, 사업/개인 서비스 일자리 축소가 계속되면서 40대 및 50대 여성 고용률은 쉽게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20-2021.6

	2020년				2021년 1월				2021년 6월			
	고용률 (%)		2019년 대비 증감 (%p)		고용률 (%)		2019년 동월대비 증감 (%p)		고용률 (%)		2019년 동월대비 증감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69.8	50.7	-0.9	-0.9	67.4	47.7	-2.0	-1.7	70.6	52.3	-0.5	-0.1
20대	54.7	56.8	-2.6	-2.2	52.0	55.7	-3.6	-4.1	56.0	60.2	-1.0	1.5
30대	88.1	61.3	-0.9	-0.7	87.1	60.6	-1.6	0.1	88.1	61.6	-1.6	-0.7
40대	89.9	63.8	-1.2	-1.4	89.1	62.8	-2.4	-1.9	90.2	64.8	-0.8	-0.9
50대	85.5	63.1	-0.6	-1.7	84.2	61.0	-0.9	-2.4	86.2	64.7	-0.3	-1.2
60대 이상	53.0	33.8	0.7	1.2	47.8	27.0	-0.4	0.9	54.6	36.3	0.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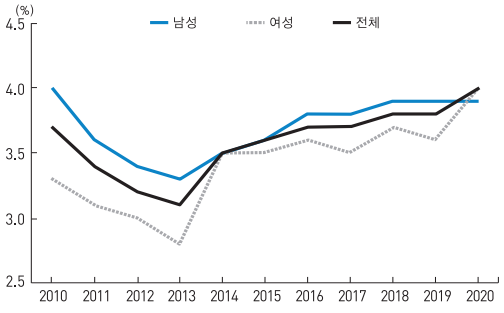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월.

2020년 연간 실업률은 2019년의 3.8%에 비해 0.2%p 높아진 4.0%였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2020년 실업률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여성이었다

는 점이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해서 3.9%로 실업률 변화가 없었던 남성과 달리, 여성은 2018년 3.7% 2019년 3.6%에서 2020년 4.0%로 코로나 국면에서 비교적 높은 실업률 상승을 경험했다.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 실업률이 포착된 것도 처음이다. 한국의 여성 실업률은 높은 비중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반해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림 V-4]가 보여주듯이 최근 5년간 공식 실업률의 성별 격차가 좁혀졌고, 코로나 국면에서 기존의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구 소득보전 요구가 여성의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위기 시 특성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4] 성별 실업률 변화,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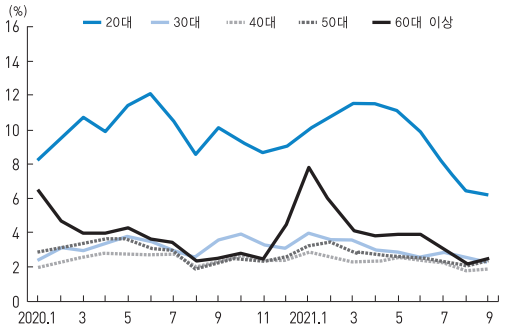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V-5]는 이 같은 성별 실업률 추세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보여준다(2020년 1월-2021년 9월). 알려진 대로 위기국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20대 남성의 경우 2020년 1월, 8월 및 11월을 제외하고 줄곧 9-12%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했다. 전년 대비 실업률 증가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의외로 팬데믹 소강기였던 2020년 9월과 10월 (각기 2.0%p와 1.8%p)이었다. 예년에는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용으로 흡수되던 실업이 위기국면에서 신규일자리, 좋은 일자리 공급 축소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는 낮은 7-9%대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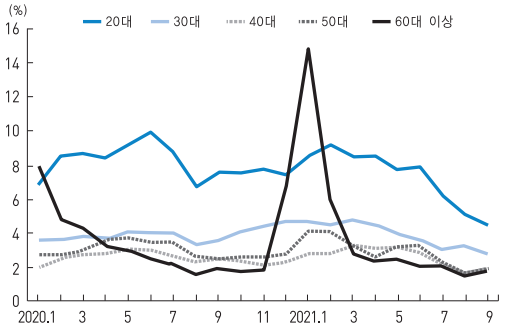
30대 여성 실업률 증가는 특히 눈여겨볼 현상이다. 전체 3.9%, 특히 30대 초반 남성 3.7%에 비해 0.9%p 높은 4.6%에 달했다. [그림 V-5]의 하단에 제시된 여성 연령별 실업률 변화를 보면, 2020년 후반부터 30대 여성 실업률 상승이 뚜렷하다. 집중 육아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지 않는 실업자 증가 현상은 기존의 돌봄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과 양상을 달리한다. 이 밖에도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 3.3%(남성 2.9%), 40대 초반 3.1%(남성 2.5%), 50대 초반 3.2%(남성 2.4%)로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은 연령집단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팬데믹에서 여성의 취업률 위축을 돌봄위기에 따른 공급철회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위기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축소된 일자리 문제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2021년 2/4분기 들어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30대 여성의 5월 실업률은 [그림 V-5]와 같이 4.0%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림 V-5]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변화, 2020.1-2021.9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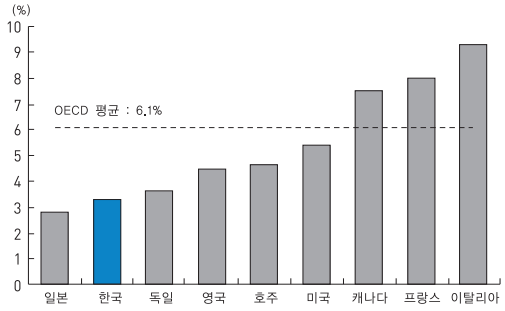
2)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코로나19가 한국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이 여타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덜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실업률은 대체로 예년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V-6]의 최근 OECD 회원국의 통계를 보면, 2%대의 일본, 3%대의 독일 등과 함께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낮은 실업률을 관리해온 경우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초기 13-14%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6%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그림 V-6]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2021.7



출처: OECD, *UnEmployment Rate*, 2021.7.

공식 실업률로만 보면 코로나19 국면의 한국 노동시장은 상대적 안정성을 잘 유지해왔다. 하지만, 통계청이 제공하는 각종 고용보조지표가 제시하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 예컨대, 공식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경제활동인구가 2021년 1월 222만여 명에 달했다.

〈표 V-2〉 각종 고용보조 지표 추세, 2019-2021.9

	고용보조 지표1 (%)	고용보조 지표2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1,000명)	잠재 경제활동 인구 (1,000명)
2019년	6.4	9.3	750	1,703
2020년	7.8	10.0	1,088	1,873
2021년				
1월	10.0	12.8	1,175	2,222
5월	7.9	9.8	1,124	1,859
9월	6.3	8.6	1,033	1,853

주: 1) 고용보조지표1=(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3)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5)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 희망/가능자인 '잠재구직자'를 합한 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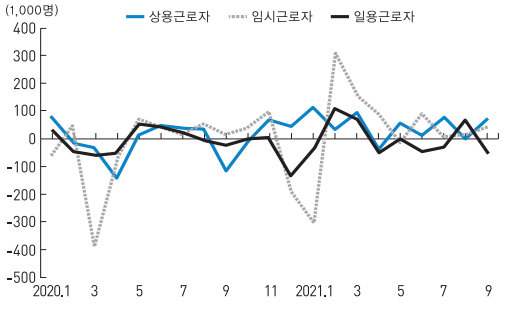
2019년에 비해 약 50만 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조지표1과 관련된 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즉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불완전 고용층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취업자 구성

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시장 부침이 가장 현저했던 집단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직,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440만 명에 달했던 임시근로자는 1차 대유행기 (3-4월)에 13만 5천명 줄었다. 5월부터 11월까지 1차 대유행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3차 대유행기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는 2020년 11월에 비해 각각 38만 3천 명, 87만 8천 명 급감했다. 반면, 아래 [그림 V-7]이 제시하듯 상용직은 2020년 4월의 14만여 명과 9월의 12만여 명 축소를 제외하면 큰 부침을 보여주지 않는다. 팬데믹 국면에서 사용자들이 주로 임시직 수의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왔음을 확인케 한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은 위기와 함께 한층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020.1-2021.9



주: 1) 통계치는 전월 대비 취업자 수의 변화(1,000명)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이어서 〈표 V-3〉을 통해 팬데믹 전후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비정규직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폭 줄었으나 2021년 2%p 이상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6.3%으로부터 2021년 38.4%로(남성: 29.4%에서 31.0%; 여성: 45.0%에서 47.4%) 증가해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가 약 9만 4천명 줄어든 것과(2020년 1,302만 명에서 2021년 1,293만 명) 대비된다. 이는 2021년 경기 회복과 함께 늘어난 일자리가 주

〈표 V-3〉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변화, 2019-2021

(1,000명)

	비정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기간제		
전체						
2019	7,481	(36.4)	4,785	3,799	3,156	2,045
2020	7,426	(36.3)	4,608	3,933	3,252	2,073
2021	8,066	(38.4)	5,171	4,537	3,512	2,278
남성						
2019	3,356	(29.4)	2,238	1,786	846	1,125
2020	3,335	(29.4)	2,079	1,800	915	1,212
2021	3,575	(31.0)	2,234	1,964	1,011	1,342
여성						
2019	4,125	(45.0)	2,547	2,013	2,310	920
2020	4,091	(45.0)	2,529	2,133	2,337	861
2021	4,491	(47.4)	2,938	2,573	2,502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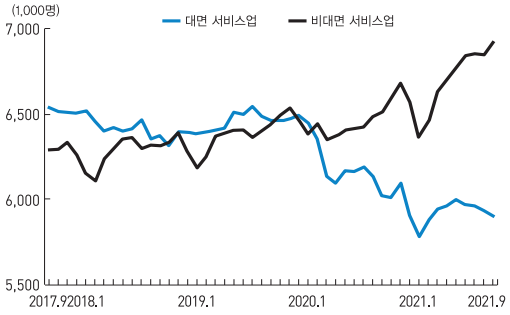
주: 1) 괄호 안에 수치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로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모두 한시적(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가 모두 늘었지만,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증가는 여성에게서, 비전형 노동자 증가는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산업별 취업자 구성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자. 팬데믹 이후 꾸준히 줄어 2020년 7월 435만 명을 밑돌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20년 4/4분기 이후 반등되어 2021년 3월 440만 명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그림 V-8]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도소매,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와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업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 취업자 수의 명암이 확연히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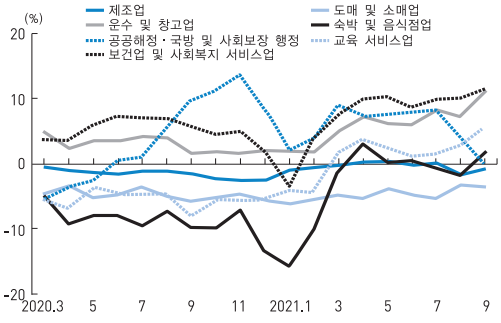
[그림 V-8]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변화, 2017.9-2021.9



주: 1)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매 및 소매업(G)+숙박 및 음식점업(I)+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2) 비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운수 및 창고업(H)+정보통신업(J)+부동산업(L)+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그림 V-9]에서 명암이 갈린 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이전까지 코로나19 국면 내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경기 흐름에 거의 관계없이 취업률 악화가 유지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2021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5% 이상의 취업자 감소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뒤따르고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E-러닝이나 E-이커머스 등 비대면 사업이 혼합되기도 해서 타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V-9]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3-2021.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반면, 다소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운수 및 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사회보장행정 분야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려 2019년 동기에 비해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였다. 특히 중고령 일자리는 2020년 하반기 공공행정 분야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의 확대에 크게 힘입었다.

노동시간과 유연근로

2020년 3분기에서 2021년 3분기까지의 노동시간 현황을 2019년 동분기와 대비해 살펴보면, 가장 현저한 변화는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54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6-44시간 노동이 크게 늘었다. 기업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실천이 장시간 노동의 축소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축소는 1-2시간에 불과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고용나누기 조치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취업자와 18-35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주목을 요한다. 2021년 1/4분기의 경우 2019년 동기 대비 약 39만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가 발견되었다. 노동시간 축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반영한다. 또한 앞서 잠재구직자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일자리만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노동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여러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 지원, 고용조정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이전 지난 5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은 정부 정책과 노동자 요구로 차츰 확대되어 왔으나 증가세는 완만했다. 〈표 V-5〉가 보여주듯 2015년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노동자는 약 5%에 불과했고, 2019년에 그 비중이 약 11%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4.2%, 2021년 16.8%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는데, 그중에서도 비대면으로 일하는 재택근무 활용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20년 유연근무를 사용한 근로자 중 17.4%가 재택근무 경험을 보고했으나, 그 비중이 2021년 32.3%로 크게 늘어 비대면근무가 앞으로도 확대

〈표 V-4〉 노동시간별 노동자 수 변화, 2020.3/4-2021.3/4

(1,000명)

	2020년		2021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17시간	97	94	389	374	303
18-35시간	-976	523	575	598	492
36-44시간	1,248	107	805	975	788
45-53시간	-370	-917	-991	-875	-524
36시간 미만	-878	617	963	972	795
54시간 이상	-580	-519	-1,076	-917	-797
주당평균취업시간(시간)	-0.9	-1.4	-2.2	-1.7	-1.3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기 대비 변화(1,000명)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표 V-5〉 유연근무제 활용률, 2015-2021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1,000명)			유연근무제 활용률 (%)	유연근무 활용자 중 재택근무제 활용률 (%)
	전체	활용함	활용하지 않음		
2015	19,474	902	18,572	4.6	7.3
2016	19,743	823	18,920	4.2	7.3
2017	20,006	1,041	18,965	5.2	5.6
2018	20,045	1,675	18,370	8.4	4.7
2019	20,559	2,215	18,344	10.8	4.3
2020	20,446	2,898	17,548	14.2	17.4
2021	20,992	3,534	17,459	16.8	32.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될 전망임을 암시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업자 구성변화 및 노동시간 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플랫폼 노동의 확대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증가 추세를 보여온 플랫폼 노동은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로 크게 확산되었다.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대규모 조사를 통해 15-64세 취업자의 약 0.92%, 22만여 명의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고 소득활동을 영위하는 플랫폼 노동자로 추산했다.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의 절반 이상은 배달 운송이 차지했다. 또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약 46%는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했지만,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경우에는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30%에 달했다 (40-52시간 미만 취업: 약 21%).

임금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352만 7천원이었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0.5%에 그쳤다.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2.2%로 전년 대비 1.9%p 하락했다. 여기에, 특별급여 감소폭이 확대되어 2011년 이후 가장 저조한 전년 대비 0.4%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0년 임시,일용직의 임금 상승률은 7.8%로 전년 대비 1.6%p 상승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임금(2020년, 163만여 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등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통계라 볼 수 있다.

한편, 직종별 임금과 성별 임금 격차는 예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직, 판매직 등에서 임금 상승률이 평균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타격이 가장 컸던 서비스직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전년 대비 임금 하락이 발생했다. 노동시간 축소와도 관련있는 결과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0.2%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서비스직, 장치/기계/조립직, 관리직, 판매직 등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하락이 초래되기도 했다.

〈표 V-6〉 직종별 임금 및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2019, 2020

	월평균 임금총액(천 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2019	2020	상승률 (%)	2019	2020	증감 (%p)
전체	3,720	3,757	1.0	66.1	66.3	0.2
관리직	9,829	10,385	5.7	80.1	79.1	-1.0
전문직	4,221	4,347	3.0	62.6	62.6	0.0
사무직	4,131	4,185	1.3	67.4	68.7	1.4
서비스직	2,114	1,928	-8.8	67.0	64.4	-2.6
판매직	3,223	3,399	5.5	61.3	61.1	-0.2
기능직	3,360	3,480	3.6	61.4	63.0	1.6
장치·기계조작·조립직	3,421	3,405	-0.5	79.0	76.5	-2.5
단순노무직	2,197	2,199	0.1	76.1	76.9	0.8

주: 1) 상승률(%)과 증감(%p)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 V-7〉의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를 보면, 2021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3.4% 상승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 비전형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 V-7〉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 2020-2021

	2020.8		2021.8	
	월평균 임금 (1,000원)	증감률 (%)	월평균 임금 (1,000원)	증감률 (%)
임금근로자	2,681	1.4	2,734	2.0
정규직	3,234	2.2	3,336	3.2
비정규직	1,711	-1.0	1,769	3.4
한시적	1,857	-0.2	1,871	0.8
기간제	1,877	3.9	1,888	0.6
비기간제	1,741	-15.9	1,751	0.6
시간제	903	-2.6	916	1.4
비전형	1,854	-0.2	1,967	6.1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6-8월) 간 평균 임금임.
2)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V-8〉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9.4%, 건강보험 77.0%, 고용보험 75.2% 등이다.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88%를 상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50% 수준이거나 미만으로 고용형태별 격차가 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보험 가입률이 2020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적 용역형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표 V-8〉 사회보험 가입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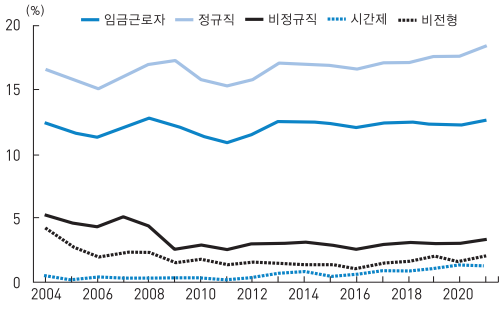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	증감 (%p)	가입률 (%)	증감 (%p)	가입률 (%)	증감 (%p)
임금근로자	69.4	-0.4	77.0	0.3	75.2	2.6
정규직	88.8	0.8	93.6	1.0	90.9	1.7
비정규직	38.4	0.6	50.3	1.3	52.6	6.5
한시적	50.1	-0.4	65.2	0.0	62.0	2.0
기간제	53.0	-0.8	69.1	-0.7	64.4	0.8
비기간제	28.9	-2.5	37.7	-0.8	44.5	5.1
시간제	21.0	0.5	29.5	0.6	31.3	3.5
비전형	17.7	0.5	31.1	1.7	43.8	16.8

주: 1) 증감은 전년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8.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사분규

[그림 V-10]이 보여주듯, 2021년 노조 조직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12.6%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증가세가 위기와 함께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복원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만 7,622명, 전국교수노동조합 631명 등 공무원 및 공공부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공무원부문 조직률(86.2%)은 3.5%p 증가, 중앙공공기관 조직률(70.5%)은 1.9%p 증가한데 비해 민간부문 조직률은 10.0%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21).

[그림 V-1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2004-202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2020년에는 일부 대기업의 파업으로 손실일수는 전년 대비 다소 늘었지만 (402일에서 554일), 코로나19 위기로 전년 대비 25.5% 줄어든 파업을 비롯해 단체행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노조 활동에 제약이 컸던 탓이다. 특히 상반기 분규건수는 24건으로 지난 5년여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위기의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조정이 가시화될 경우 분규증가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 2021. 「월간 노동리뷰 2021년 1월호(통권 제190호)」.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

권현지 (서울대학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의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는 중장년층보다 더 큰 폭으로 전개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감소폭은 청년층 내에서도 졸업 후 경과기간이 짧은 신규 구직자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1년 이내인 신규 구직자 중에서도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의 고용률 감소가 컸다.
- 학력별로는 고졸자인 청년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사무직에서 취업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 단순노무직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단기 근로자 중 추가 취업 의향자도 늘어났는데, 이는 청년층에서 불완전 고용이 확대되었음을 함의한다.
- 고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특히 전문대졸 이상 졸업 후 1년 이내인 남성 청년들은 취업 준비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속성장 시대가 저물고 기업의 경력자 선호가 강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입지는 계속 위축되어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경기침체는 청년에게 특히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서비스 사업침체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신규채용 동결로, 청년은 이중의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독립적 생애의 출발선에 선 청년의 고용위기는 살아가는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들이 자칫 통째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 글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을 기술한다. 청년집단 내에도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므로, 특히 큰 충격을 받은 취약한 이들은 누구인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 현황과 일자리 특성도 알아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청년은 청년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15–34세로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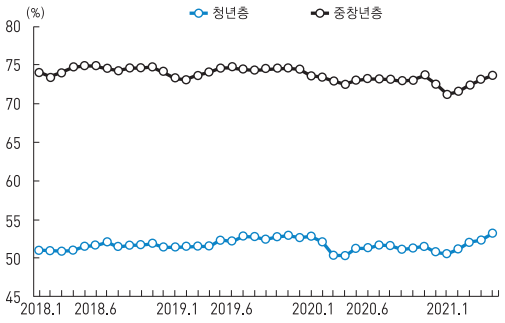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2020년 2월 대구지역 집단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은 3월 고용타격으로 바로 이어졌다. 이 시기 중장년층 고용이 전년동월 대비 0.8%p 하락하는 동안 청년층은

1.2%p 하락했다. 2020년 3–4월 1차 대유행 이후 다소간의 회복기를 거쳤으나 2020년 연말 3차 대유행의 충격은 1차 대유행을 넘어섰다. 2021년 1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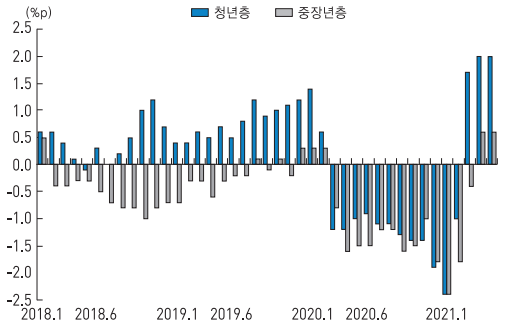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여 동안 청년층에 몰려온 고용 충격은 위의 수치보다 더 크게 체감되었다. 첫째, 2018년 이후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이 꺾였기 때문이다. [그림 V–11]이 보여주듯 코로나 이전 2년여간 하락추세를 보였던 중장년층 고용률과 달리,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 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률 하락의 체감 정도는 수치상의 하락률에 비해 컸다. 둘째, 50% 내외로 낮은 청년층 고용률은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즉, 2021년 1월 3차 대유행 당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률은 모두 2.4%p 감소했지만, 증감률은 청년층 –4.5%로 중장년층 –3.3%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V–11]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률 변화, 2018.1–2021.5

1) 고용률



2)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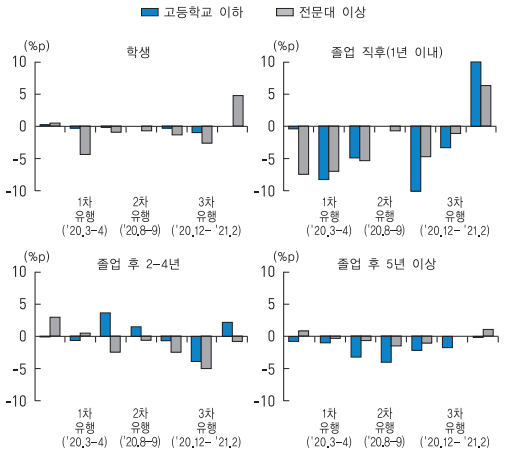
주: 1) 청년층은 15–34세 인구, 중장년층은 3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청년 집단별 고용률 변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된다. 예컨대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학생, 졸업 후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 그리고 노동시장에 안착한 30대 등 모두 청년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만, 이들에게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은 같지 않았다. [그림 V–12]를 살펴보면 청년층 내에서도 가장 크게 고용률이 감소한 집단은 졸업 직후 청년이었다.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코로나19의 1차 유행기와 3차 유행기 당시 각각 4.3%p 내외, 2.6%p 내외로 고용률이 줄었다. 반면, 졸업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이하 '졸업 직후'로 줄임) 전문대 이상 학력의 청년은 1차 유행기에 전년 동월보다 7%p 이상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1년 내내 이 감소폭이 유지되다가 2021년 상반기에는 다소간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직후 청년의 고용률 감소폭은 대졸자보다 더 컸다. 1차 유행기 당시 8.2%p, 2차 유행기 직후 10.4%p가 줄어들었다. 한편, 졸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2-4년)한 경력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직후보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하반기에 고용률 감소폭이 커졌고, 2021년에 이르러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집단의 경우 특히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고용률 감소가 컸다.

[그림 V-12] 청년층 졸업 전후 경과기간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에 재학(휴학, 수료 포함) 중이거나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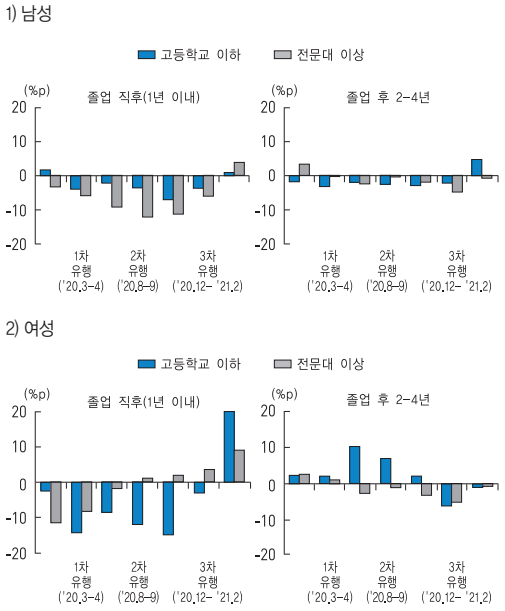
여기에 성별이 만들어내는 차이도 컸다. [그림 V-13]은 코로나19 전후 고용률 변화에 있어 성별과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파고를 겪은 집단은 졸업 직후 남녀, 그리고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고졸 이하 여성이었다. 남성에 국한하면, 졸업 직후 그리고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다. 8월경 전문대 이상 졸업 직후 남성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12.1%p 감소했다.

졸업 후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까지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전문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년보다 노동시장 진입 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암시한다.

반면 여성은 경기변화에 따라 고용률이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는데 여성 내부의 차이도 컸다. 졸업 직후 고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20년 내내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고용률이 감소했다. 특히 대유행기가 되면 감소폭이 컸는데, 1차 유행기 14.4%p에 이어 2차 유행기에는 14.9%p나 감소하였다. 이들의 고용률 감소는 3차 대유행이 후 전년 동기 대비 21.9%p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경기에 특히 민감하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여준다.[1] 한편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 직후 여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고용률 감소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이전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었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여성들의 경우 고졸 이하는 경기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증가 또는 감소했으며, 전문대졸 이상은 줄곧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 2021년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율은 고용률이 급감했던 2020년의 기저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착시효과를 유의해야 한다.

[그림 V-13]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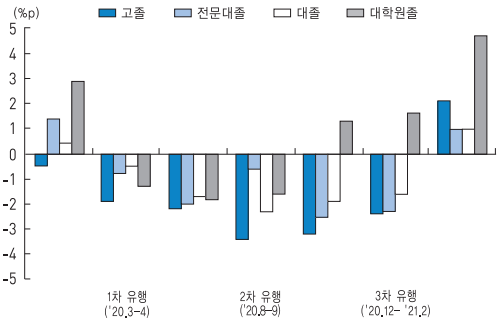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위에서 이미 시사했지만, 학력별 차이도 뚜렷했다. [그림 V-14]는 졸업자의 학력별 고용률 변화를 제시한 것인데, 코로나19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전년 동기보다 고용률이 0.5%p 감소한 이래 2020년 내내 이어져 학력집단 중 가장 큰 고용률 감소를 보였다.

한편, 대학 졸업자의 경우 1차 유행기에는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020년 6월이후 회복기에는 2%p 내외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대학원 졸업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어 2021년에 이르러서는 코로나19 이전 고용률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이 순조로웠다.

[그림 V-14] 청년층 학력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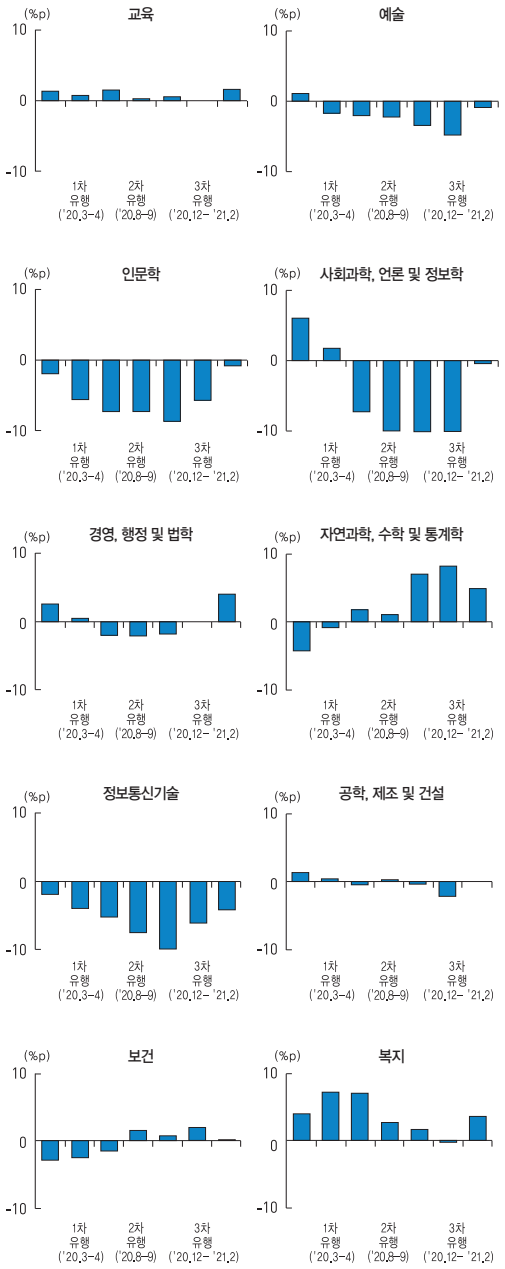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중졸 이하 졸업자는 사례 수가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전공별로도 격차를 보였다. [그림 V-15]를 보면, 예술, 인문, 사회과학 및 언론·정보학, 정보통신 기술 전공 졸업자들의 고용률 감소폭이 컸다.

특히 사회과학 및 언론·정보학 전공자는 2020년 7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10%p를 상회할 정도로 고용률 감소가 컸다. 이 경우 코로나19 직후보다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 2020년 3차 유행기의 고용률 감소폭이 증가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전반적인 고용률 회복이 관측되었던 2021년 3월 시점에도 이들의 회복은 관측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개선된 전공도 있었다. 자연과학 및 수학·통계학, 복지 전공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자연과학 및 수

[그림 V-15] 청년층 대학졸업자 전공별 고용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월별 사례 수 100 미만인 농림어업 및 수의학 전공자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학·통계 분야 전공자들은 2020년 1차 대유행기에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았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폭의 고용률 증가가 시작되었고 2020년 12월에 이르러서는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8.2%p 증가하였다. 최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및 직업별 청년 일자리 변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고용률이 주로 어떤 산업과 직업군, 고용형태에 집중되었는지를 살펴보자. 〈표 V-9〉는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 사업체 규모별 청년층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 직종별로는 서비스직과 사무직에서 가장 현저하게 청년 취업자가 감소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기였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취업자 수가 월평균 28만 명 줄어들었는데, 서비스직이 축소된 일자리의 70%를 차지했다. 타격이 가장 컸던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도소매업에 청년 임시 서비스직 저임금 종사자가 집중된 까닭이다. 당연히 이들 산업에 취업자 감소도 두드러져 숙박 및 음식업에서 3차 유행시 12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한편, 공공, 국방, 사회보장행정 부문 일자리는 다소 늘었다. 2020년 8-9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1만 6천여 명의 취업

자가 증가하였다. 이들 취업자 수 증가는 이 시기 코로나19 관련 대응으로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한 정부 일자리 정책 대응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직(1만 3천명)으로 해당 정책이 일시적 대응책이었음을 보여준다.

눈여겨볼 것은 2차, 3차 대유행기를 거치며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자영 일자리와 서비스업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 간 이동성을 암시한다. 같은 표에서 단순노무직이 늘어난 것도 관련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간제 및 도급 노동이 늘어난 것과 관련 있는 통계이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이 감소하는 사이, 단속적 일자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청년층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주로 고용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30–99인의 중규모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기인 2020년 연말에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사업체의 고용 유지 노력이 포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늘었다. 청년층에서 불완전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함의한다. 2020년 1–2월경에는 추가 취업 가능자 규모

〈표 V–9〉 일자리 특성별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000명)

	코로나19 발생기 (20.1-2)	1차 유행기 (20.3-4)	2차 유행기 (20.8-9)	3차 유행기 (20.12-'21.2)	소강기 (21.3-5)
전체	68.6	-218.6	-225.0	-280.2	172.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7.0	-44.5	-71.6	-36.9	128.7
임시근로자	14.1	-136.8	-146.8	-171.3	91.9
일용근로자	-36.8	-51.9	-20.9	-61.5	-5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24.0	-26.6	-13.2	4.8	17.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48.3	35.1	40.0	10.9	2.0
직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	27.0	-81.8	-13.7	-20.4	42.6
사무 종사자	6.5	-6.9	-105.6	-66.3	22.0
서비스 종사자	34.9	-77.5	-94.0	-196.9	-19.8
판매 종사자	-14.9	-36.0	-18.1	-53.0	-1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16.4	-21.7	-46.0	-2.5	14.3
장치·기계조작·조립직	11.5	-27.8	-45.6	-24.3	17.9
단순노무 종사자	18.6	30.8	96.1	75.9	107.5
산업					
제조업	-20.1	-28.9	-11.5	-15.3	55.9
건설업	-11.3	-5.9	21.3	42.0	17.6
도매 및 소매업	-10.7	-43.8	-44.4	-62.8	-29.3
운수업	42.9	38.3	23.8	43.9	35.7
숙박 및 음식점업	11.8	-77.3	-100.9	-124.0	40.3
교육 서비스업	39.1	-43.2	-52.8	-38.2	25.8
보건·사회복지서비스	-46.6	-23.7	4.1	-14.2	-27.7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15.4	-1.1	15.9	4.1	12.7
사업체 규모					
1-4인	37.6	-118.6	-75.1	-109.1	61.9
5-9인	-20.2	-57.8	-87.6	-85.7	23.6
10-29인	-20.7	-44.2	-70.7	-24.0	32.7
30-99인	36.7	12.0	16.0	-54.0	10.0
100-299인	-23.7	-44.5	-33.1	-16.5	28.2
300인 이상	58.9	34.4	25.5	9.1	16.0
단시간 추가 취업 가능자	3.3	80.3	88.9	101.5	0.9

주: 1) 15–3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취업자 수는 해당 기간 월평균 취업자 수임.
3) 월별 청년 취업자 수가 20만 명이 넘지 않는 산업은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가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직후에 8만 명 수준으로 3차 유행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1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2021년 3-5월에는 그 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 같은 시기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단시간 추가 취업자 등이었다. 코로나19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끼친 변화는 고용의 질 하락을 동반한 고용률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백신접종과 함께 소비자 경기가 다소 회복된 2021년 상반기의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상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 증가를 수반한 회복세가 발견되었다. 괜찮은 일자리를 기다리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에 복귀와도 관련된다. 팬데믹 장기화 국면에서 경기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동시에 내부의 고용 경험이 분화되고 있는 청년층 노동시장을 주의 깊게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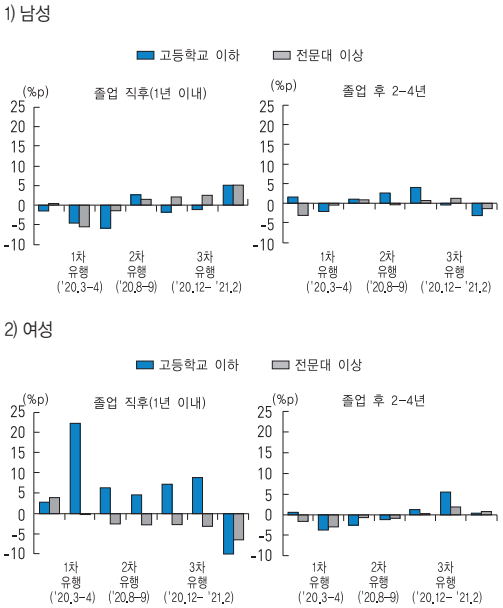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미취업자 현황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밖 청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실업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줄었다. [그림 V-16]에 따르면 특히 전문대졸 이상 졸업 직후 남성의 경우 실업률이 2020년 3-4월에 전년 동기 대비 5.6%p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률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졸업 직후 여성의 경우 학력에 따라 실업률에 차이가 컸다.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감소한 고용률만큼 실업률이 높아진 반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단념자는 늘었다. 졸업 직후 전문대졸 미취업자 중 20% 이상은 여기에 해당했다. 이들은 취업된다면 일할 수 있지만 전공이나

[그림 V-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층 실업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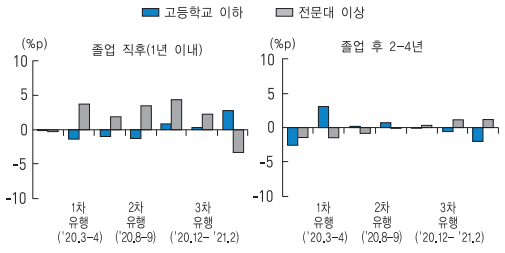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업률은 해당 집단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경력에 맞는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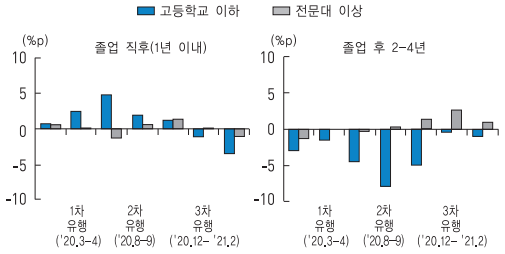
[그림 V-17]에 따르면 구직단념자 비율은 특히 졸업 직후 전문대졸 이상 남성 집단에서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전년 동기 대비 3%p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20년 9-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p 증가하기도 했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전문대졸 이상 남녀 역시 2020년 연말에 그 비율이 전년 동기 각각 1.2%p, 2.7%p 증가했다. 2020년 하반기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단념자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7]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구직단념자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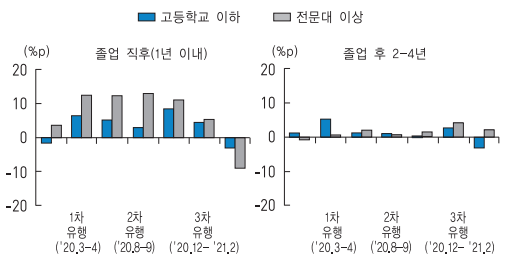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구직단념자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이 된다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전공이나 경력, 근로조건 등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사대상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의 경우 대부분의 집단에서 구직단념자가 감소했으나, 졸업 직후 여성은 2020년 11월까지 0.7-4.8%p의 증가를 보이다가 2020년 연말 이후에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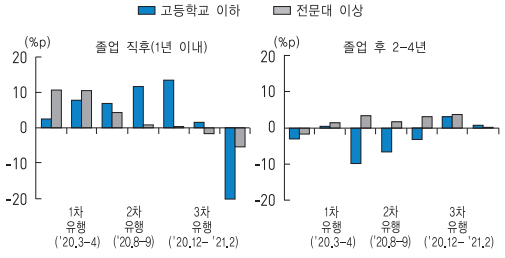
청년층 미취업자 중에서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상당수는 졸업과 함께 노동시장에 바로 뛰어들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서 일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 V-18]이 보여주듯이 청년층 내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전문대 이상 졸업 직후 남성

[그림 V-18]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1) 남성



2) 여성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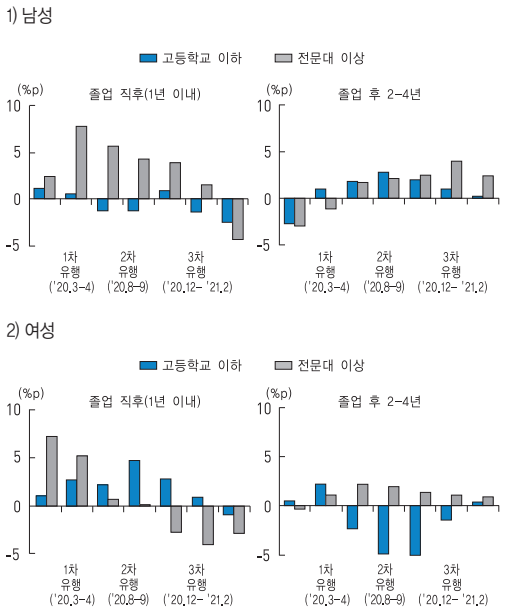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10%p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문대 이상 졸업 직후 여성의 경우,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상당수가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전반적 하락과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가 지속되는 사이, 남성이 상대적으로 기다리는 양상을 보인 것과 달리, 여성은 일자리 질이 낮더라도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빨리 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한 후 2-4년이 경과한 청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 공히 3차 대유행기 고용률 감소, 구직단념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함께 관측되고 있다. 졸업 이후 꽤 시간이 경과했으나, 위기 국면에서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준비 상황에 머물러 있거나 낙담한 상태에 있는 청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 내부의 성별 차이에도 주목을 요한다. 졸업 후 2-4년이 경과한 전문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취업 준비자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12-2월경 그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4%p가량 증가했다(그림 V-19).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취업준비를 장기화하는 이들이나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 준비에 들어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들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범주의 여성 청년들은 같은 기간에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남성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질 낮은 일자리를 수용하는 비중도 남성에 비해 높고,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준비에 투자할 여력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19] 청년층 성 및 졸업 후 경과기간별 취업 준비자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2021.5



주: 1) 15-34세 인구 중 현재 최종학교 졸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취업준비자 비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주된 활동상태가 취업 목적의 학원, 기관 통학이나 취업 준비 중인 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졸업 후 첫 일자리

코로나19 국면에서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질도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V-10〉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2021년 47.1%로 2019년과 2020년의 41.9%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시간제 역시 2019년 31.7%에서 38.3%로 크게 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청년이 시간제 일자리로 노동시장 경험을 시작하는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학력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경험한 비중이 5%p가량 높아졌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고졸 첫 일자리의 50% 이상이 시간제였던 남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에도 첫일자리를 시간제로 시작하는 비율이 확대되었다. 2019년 21.5%에서 2021년 35.1%로 그 비중이 13.6%p 높아졌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질이 노동시장 내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향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0〉 청년층 졸업 후 첫 일자리 중 1년 이하 계약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19-2021

(%)

	2019	2020	2021
1년 이하 계약직 비율	41.9	41.9	47.1
시간제 근로자 비율	31.7	34.4	38.3
남성			
전문대 이상	21.5	32.7	35.1
고졸 이하	57.4	40.9	55.7
여성			
전문대 이상	31.3	33.6	36.1
고졸 이하	44.4	47.3	49.9

주: 1) 30세 미만 청년의 응답 결과임. 조사연도 기준 2년 전부터 조사연도까지 3개년 사이에 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작성함. 예를 들어 2021년 응답자의 경우 2019, 2020, 2021년 졸업자만을 포함함.
2) 학교 졸업 전에 첫 일자리를 구한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5월.

맺음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타격으로 청년층은 2020년 한 해 동안 실직과 입직의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청년층 내에서도 집단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고용률 감소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고졸 이하 여성 청년들에게서 가장 높았던 반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 중인 이들은 주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청년 남성 집단에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연령집단으로 포괄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학력과 졸업 후 경과기간, 그리고 성별에 따라 각기 달리 코로나19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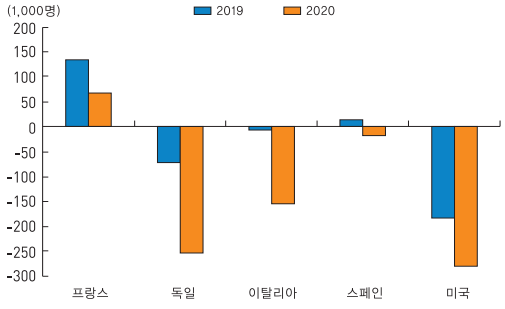
코로나19와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비대면화에 따른 택배 및 배달의 증가, 농림어업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 이번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인한 특성상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볼 때 조업 단축, 일시 휴업을 통해 위기를 넘기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음식배달처럼 비대면화 흐름에 일부라도 편승할 수 있었던 업종은 2020년 말부터는 다소간이라도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그럴 수 없었던 대면 서비스 업종은 4차 대유행기까지 감소 추세가 지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감소 추세 또한 뚜렷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코로나19 정책 대응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이 1년 반째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자영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확산이 거듭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그림 V-20]에서와 같이 선진 산업국가 중 자영업 부문 비중이 큰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뿐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으며 어떤 부문에서 영향이 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V-20] 주요 국가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 2020



주: 1) 통계치는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ILO, "Employment Statistics", ILOSTAT(https://ilostat.ilo.org/topics/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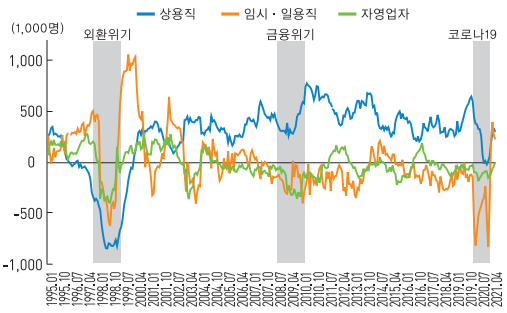
위기별 자영업 고용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이 2020년 2월부터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그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충격이 가해졌다. 위기 성격은 다르나 우리나라는 큰 경제위기를 1997년(외환위기)과 2008년(금융위기)에 겪은 바 있다. 3차례의 위기에서 각각 어떻게 노동시장 충격이 나타났는지를 보면,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21]을 보면 외환위기는 대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모든 종사상 지위에 고용충격을 남겼다. 특히 상용직에서 크게 고용이 조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회복도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자영업은 외환위기 충격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2003-2004년 카드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대형마트 확산과 프랜차이즈 확대 등에 따른 자영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주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여 외환위기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했지만, 자영업은 이 시기에도 외환위기에 버금가게 감소하였다. 이 두 위기와 비교해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인한다. 주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났고, 이들 업종에 주로 고용되어 있는 임시직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앞선 두 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긴 하지만 자영업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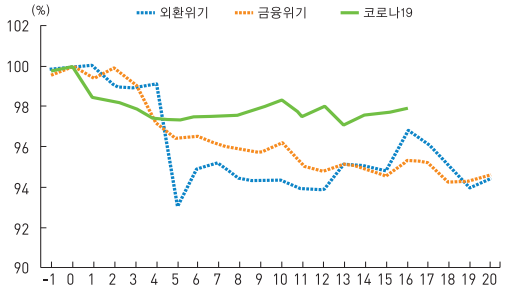
[그림 V-22]의 경제위기별 자영업 고용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림 V-21] 경제위기 시 취업자 수 변화, 1995.1-2021.6



주: 1) 음영은 위기기간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환위기는 1997년 9월-1999년 4월, 금융위기는 2008년 8월-2010년 3월, 코로나19는 2020년 3월-2021년 3월임.
2)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22]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개월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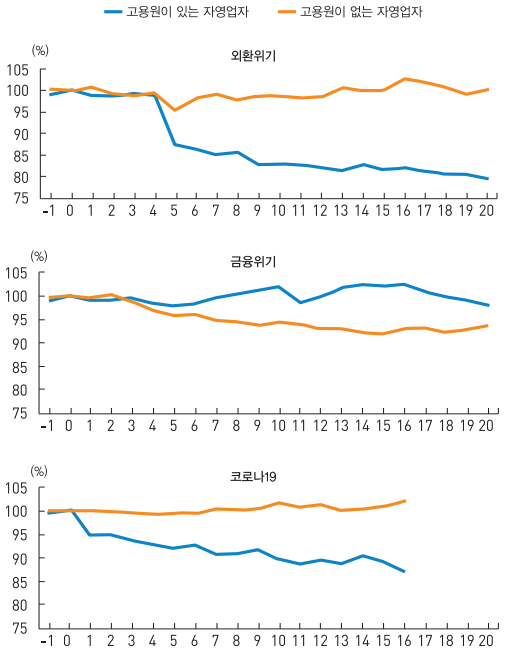


주: 1) 가로축은 각 위기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의 개월수를 의미함. 발생시점의 경우 외환위기는 1997년 8월,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코로나19는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2) 통계치는 각 위기별 발생시점의 자영업자 수를 100으로 할 때 해당 시점 자영업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계절조정 반영).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나눈 [그림 V-23]을 보면 코로나19 위기는 외환위기와 유사하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고용충격이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반면 금융위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나타나며 위기 이후 15개월 후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에게는 대출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 감면, 인건비 지원 정책 등이 지원되면서 다른 경제위기와 다른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림 V-24]를 보면 다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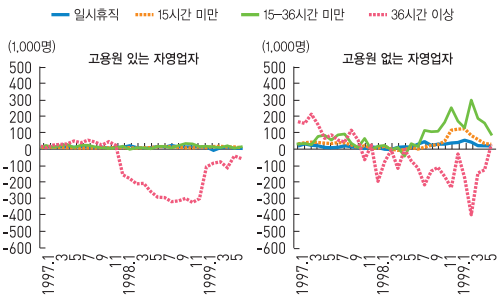
[그림 V-23]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개월간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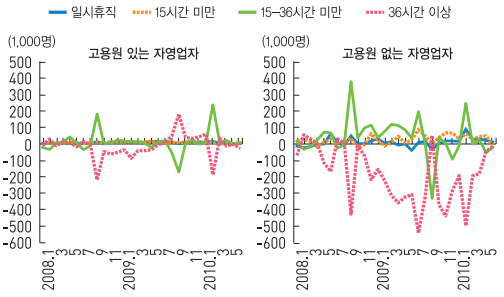
주: 1) 가로축은 각 위기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의 개월 수를 의미함. 발생시점의 경우 외환위기는 1997년 8월,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코로나19는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2) 통계치는 각 위기별 발생시점의 자영업자 수를 100으로 할 때 해당 시점 자영업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계절조정 반영).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24] 경제위기 시 고용원 유무 및 취업시간별 자영업자 수 변화, 1997, 200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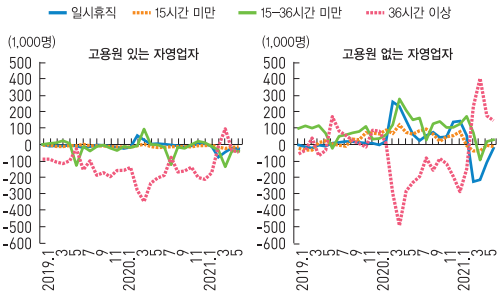
1) 외환위기 (1997.9-1999.4)



2) 금융위기 (2008.8-2010.3)



3) 코로나19 (2020.3-2021.2)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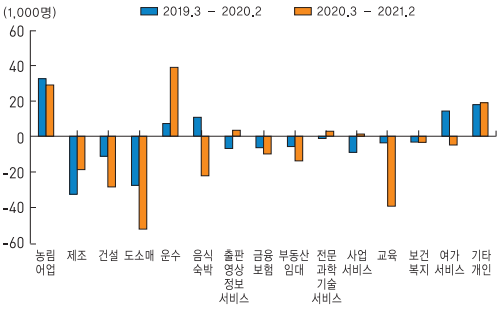
주 36시간 초과해 일하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시에 특히 일시휴직과 15시간 미만 및 15–36시간 단시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위기 시에는 타격을 입은 전일제(36시간 초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폐업에 내몰렸다면, 이번 위기 시에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시휴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또한, 이번 위기 시에 일시휴업 및 근로시간을 줄이는 현상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에도 근로시간 축소 형태의 조업단축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게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일시휴업까지 포함하면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조업단축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별 충격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서비스, 교육, 여가서비스업이 거의 절반(48.2%)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업들은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종은 활성화되었는데, 운수창고업은 배달 및 택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V–25).

[그림 V–25] 산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3–2021.2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업종별 상황을 보다 상세히 보기 위해 〈표 V–11〉의 산업 소분류 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교습 학원과 기타 교육기관의 자영업자와 음식점업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수혜를 받은 무점포 소매업(전자상거래)과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와 배달)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확연히 대조된다.

〈표 V–11〉 산업 소분류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 2020

(1,000명)

	2019		202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체	-41	-42	-72	-78
작물 재배업	27	41	56	22
생활용품 도매업	4	-1	-12	-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	-11	-6	10
무점포 소매업	7	0	-1	9
소화물 전문 운송업	-2	-1	17	20
음식점업	12	10	-18	-2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0	-5	-20	-18
일반 교습 학원	-12	-15	-14	-16
기타 교육기관	12	-1	-19	-27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반기.

다른 위기와 비교를 위해 취업자 감소가 가장 컸던 1998년, 2009년,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해보았다. 외환위기 때는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가 컸고,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감소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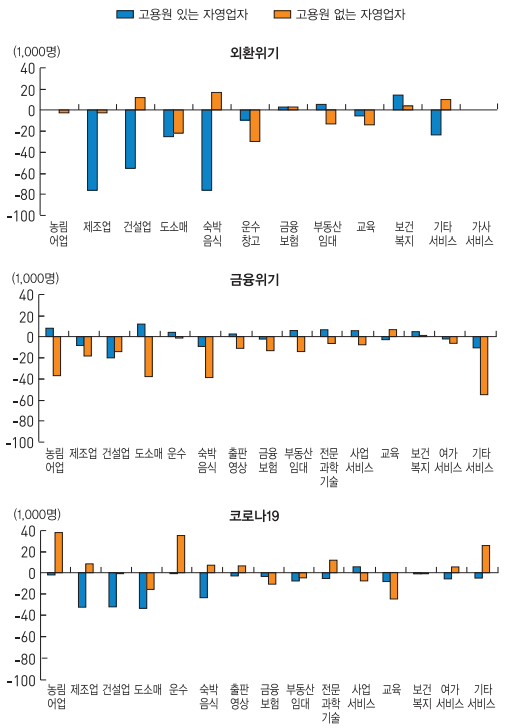
금융위기 때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처럼 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 업종에서는 고용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영업자 감소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해외 수출과 부품 공급망이 마비되고 대면서비스업이 위축된 특성상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폐점보다는 일시적 위기 상태를 각종 지원 등에 기대어 견디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이나 여가서비스 같이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다소 증가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그림 V-27]은 보다 자세한 업종분석을 위해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를 이용해 월별 업종의 업체 수 변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점의 경우 1차 대유행인 2020년 2월 말에서 3월에 감소폭이 커진 후 7월에 반등하는 듯 보였으나 8월과 9월 2차 대유행, 12월에서 2021년 2월 3차 대유행에 따라 회복하지 못하고 감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3월 들어 코로나 추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생활업종인 여행사, 노래방, 목욕탕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또 다른 타격업종인 음식점업은 1차와 2차 대유행기까지는 모든 종류의 음식점 업체수가 감소하는 모습이나, 그 이후로는 업체수가 증가추이로 돌아선 모습이다. 음식점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이 크게 확산되면서 배달이 불가능한 노래방, 주점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림 V-26] 경제위기 시 고용원 유무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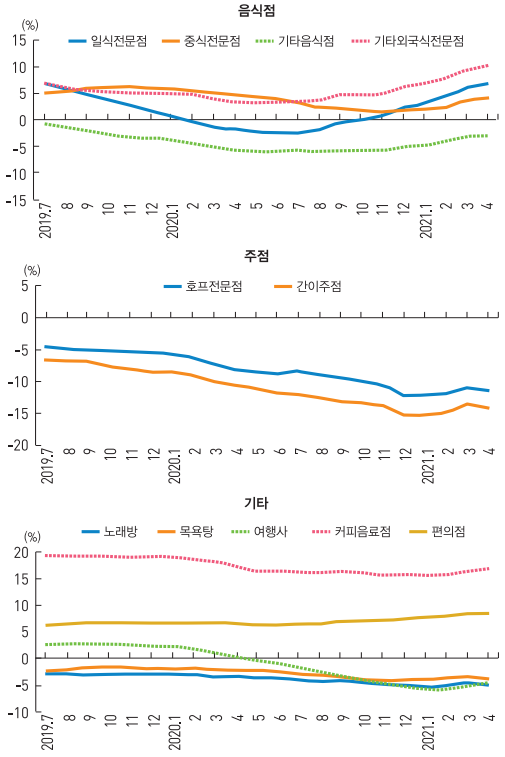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금융위기는 2009년, 코로나19는 2020년 기준임.
2) 통계치는 전년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거리두기의 피해를 만회한 업종이란 점을 반영한 현상일 수 있다.

커피전문점은 신규 출점 확대가 활발한 업종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9% 증가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15%로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약 17%로 업체 수의 증가폭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편의점은 주택가에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수혜를 입은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1차와 2차 대유행기에도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며, 3차 대유행 이후로는 오히려 업체 수가 증가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그림 V-27] 주요 대면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 수 변화, 2019.7-2021.4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수의 증감률임.
출처: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현황」,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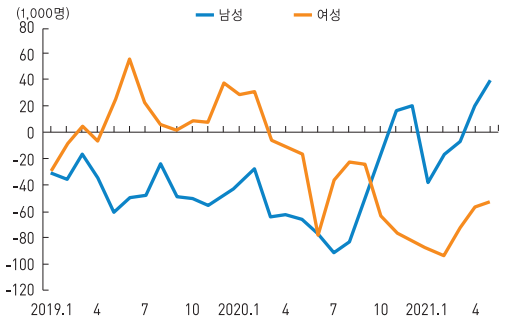
인적 특성별 자영업자 변동

[그림 V-28]을 보면 코로나19 위기가 있기 전 여성 자영업 고용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고 남성 자영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여성 자영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성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되던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20년 말부터는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은 대면서비스업에서 주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2019년 기준 도소매업 21.7% 〉 숙박음식업 19.8% 〉 협회 및 기타 개인 14.8% 〉 교육 14.3%),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자영업 중심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여성 자영업 고용에 더 크게 타격을 입혔고,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비대면화에 따라 운수업이 증가하고, 제조업, 건설업이 20년 말부터 나아지기 시작한 영향을 받아 20년 4분기부터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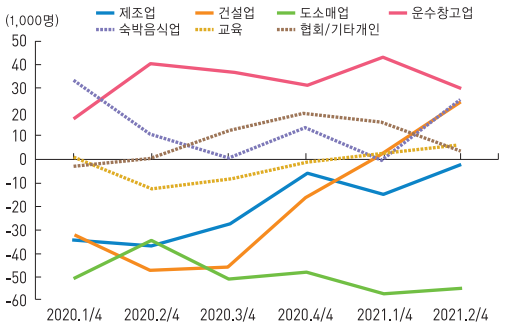
〈표 V-12〉의 자영업 고용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던 핵심 연령층(35-54세)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제조업, 건설

[그림 V-28] 성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20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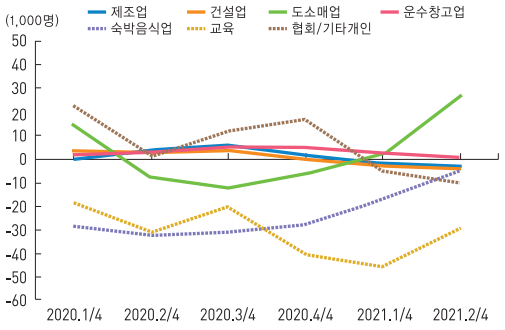
1) 성별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 동월 대비)



2) 업종별 남성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3) 업종별 여성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월 및 분기.

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위기 이후 감소가 이어지거나 감소폭이 더 커졌고, 교육서비스업에서

〈표 V-12〉 연령 및 업종별 자영업자 수 변화, 2019.1/4-2021.2/4

(1,000명)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15-34세										
전체	11	15	5	4	17	16	23	32	18	18
도소매업	-2	-4	1	-3	1	16	22	24	20	15
숙박음식업	9	15	16	3	-5	-8	-5	11	14	18
35-54세										
전체	-86	-80	-101	-89	-115	-162	-151	-126	-123	-48
제조업	-5	-6	-29	-43	-41	-43	-27	-10	-10	2
건설업	-34	-17	-19	-14	-11	-19	-19	-9	-8	-6
도소매업	-41	-44	-37	-25	-29	-33	-46	-38	-30	-14
운수업	-6	-13	-5	-5	-7	13	14	8	8	4
숙박음식업	-9	-9	-4	-14	-22	-29	-34	-10	-2	13
교육	15	18	5	-12	-17	-36	-28	-32	-29	-14
예술스포츠여가	3	-1	6	7	-8	-9	-8	-18	-12	-6
협회/기타개인	-12	4	-1	20	21	7	16	8	-12	-14
55세 이상										
전체	36	40	65	51	72	43	24	27	-1	22
농림어업 제외	-16	30	48	22	13	-15	-7	0	-18	-4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분기.

도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감소폭이 2019년에 비해 커졌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증가 추세를 이어오던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위기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보면 2020년 2분기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년층 자영업자는 무점포 소매업에서 증가가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점포수가 증가하는 업종인 커피전문점 같은 비음료점에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회복이 빨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수 면에서는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변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자영업자 소득변동 및 자영업에서 실직한 가구의 소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가구를 패널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한국노동패널조사」 같은 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 조사자료의 활용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 안에서 간접적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를 확인하였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권 매출동향을 분석하였다. 〈표 V-13〉의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1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2-4월과 2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8-9월, 3차 유행이 있었던 2020년 12월에 확연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9년 10월과 2020년 12월을 비교하면 13.8%의 매출 하락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V-29]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실업자인 가구의 사업소득을 전년도 분기 대비 증감률을 통해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증가하는 부문이라기보다는 감소하는 부문의 성격이 강

〈표 V-13〉 서울시 상권특성별 평균 월매출액, 2019.10-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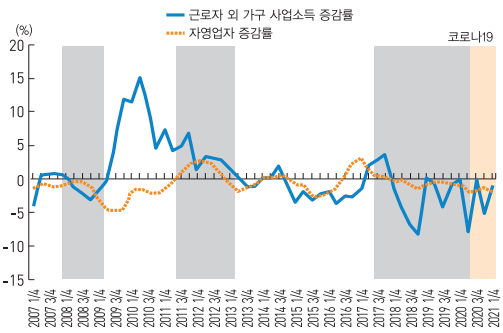
(만 원)

	전체 상권	선방상권	충격상권
2019.10	1,928	1,928	1,928
2019.11	1,883	2,048	1,804
2019.12	1,919	2,048	1,857
2020.1	1,803	1,850	1,780
2020.2	1,699	1,748	1,675
2020.3	1,669	1,743	1,633
2020.4	1,712	1,805	1,667
2020.5	1,982	2,113	1,919
2020.6	1,860	2,025	1,780
2020.7	1,858	2,012	1,784
2020.8	1,727	2,009	1,590
2020.9	1,764	2,055	1,623
2020.10	1,805	2,199	1,614
2020.11	1,743	2,135	1,553
2020.12	1,661	2,086	1,455

주: 1)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에 의해 충격상권을 선별함.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1년…서울 골목상권 59% 매출 하락, 41%는 유지·상승", 보도자료, 2021.3.19.

[그림 V-29] 근로자 외 가구 사업소득 증감률, 2007.1/4-2021.1/4



주: 1)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사업소득 증감률의 경우 2019년까지는 1인 이상 비농림어가, 2020년부터는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자료를 이용해 계산하였음.
3) 음영은 통계청 기준순환일 상 정점에서 저점을 향하는 경기 수축기를 나타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분기.

해서 경기 상승기라고 해도 소득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감소율은 「가계동향조사」로만 보면 2008–2009년의 금융위기나 가장 최근의 침체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감소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이 지표는 가구주가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인 가구의 분기별 사업소득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의 사업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 V–14〉는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외 가구에서 감소한 사업소득을 어떻게 만회했는지를 보기 위해 각 소득 항목의 증감액을 계산하였다. 이를 보면 사업소득의 감소를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만회했음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0년 2분기에 사업소득은 13만 원 감소했으나, 공적 이전소득은 34만 원 증가했으며, 2021년 1분기에 사업소득은 2만 8천 원 감소했으나 공적 이전소득은 16만 원 증가한 것이 그런 예이다. 코로나 위기를 지원하는 공적 지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V–14〉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감액, 2020.1/4–2021.1/4

(원)

	2020				2021
	1/4	2/4	3/4	4/4	1/4
전체	100,874	244,552	72,553	53,457	13,248
경상소득	77,194	246,808	51,445	23,877	51,102
근로소득	66,879	25,164	-18,995	10,707	-70,591
사업소득	-16,321	-132,267	-10,391	-114,773	-28,445
재산소득	8,536	1,840	-3,518	-2,459	-5,128
공적이전소득	33,118	343,633	100,813	99,297	161,332
사적이전소득	-15,018	8,439	-16,465	31,104	-6,065
비경상 소득	23,680	-2,256	21,108	29,580	-37,855

주: 1) 소득 증감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2) 전국 1인 이상, 농림어가 포함, 실질 소득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분기.

맺음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기존의 경제위기와 달리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로 대면이 필수적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으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경기충격이 매우 컸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정도로 타격이 컸고, 재확산이 거듭되며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강제된 위축인만큼 다른 위기와 달리 일시휴업 등 조업단축으로 견디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를 계기로 음식배달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등 비대면화와 연관되는 부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다소간이라도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그럴 수 없었던 대면 서비스 업종은 4차 대유행기까지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미 자리잡은 비대면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한 코로나19 이전으로 자영업 상황이 되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흐름에 기존 자영업자들이 잘 올라타도록 돕는 정책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감소 흐름 또한 뚜렷하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코로나19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기 시에 정책 대응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 시의 대응을 복기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Income, Consumption & Wealth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Ⅵ 소득·소비·자산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94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유경원 | 상명대학교 205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비 동향 이윤수 | 서강대학교 216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경기침체가 최저소득층 시장소득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 최근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다소 높아진 반면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
- 청년 및 노년층의 소득비는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 대학졸 이상 또는 전문직의 소득비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집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최근 소득의 구성에서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산층의 소비가 급감한 반면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소비는 큰 변화가 없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소비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보건 지출 비중이 높아졌다.
- 고소득층에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 최근 부동산자산가치 상승으로 자산불평등은 커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한국은 2020년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최근 3년간 소득계층, 연령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표본가구의 약 80%가 전년도와 기준년도에 동시에 응답하고 있어 동일 가구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대상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이다(소득 기준 2011–2019년).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2019년과 2020년 연간자료 및 분기자료를 비교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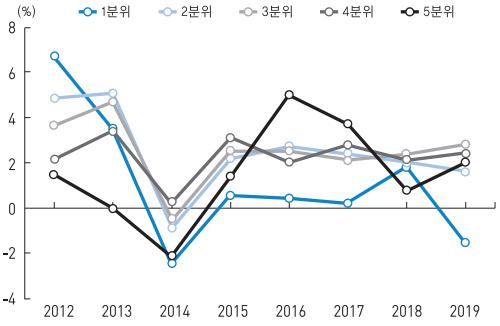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2.7%, 2017년 2.8%에서 경제성장이 낮아짐에 따라 2018년 1.5%, 2019년 2.4%로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 여기서는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그림 Ⅵ-1]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가구 구성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의 실질증가율은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Ⅵ-1]을 보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의 실질소득은 큰 등락 없이 각각 연평균 2.2%, 2.5%, 2.5%의 안정적인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소득 5분위 역시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6,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1분위는 같은 기간 평균 0.3%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1.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1.5%로 급락했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최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Ⅵ-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놓고,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각 가구가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후소득인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실질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표본의 균등화소득을 기초로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9.2%이고 5분위 소득비는 210.1%이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2011년 221.4%에서 2019년 201.9%로 감소하였다.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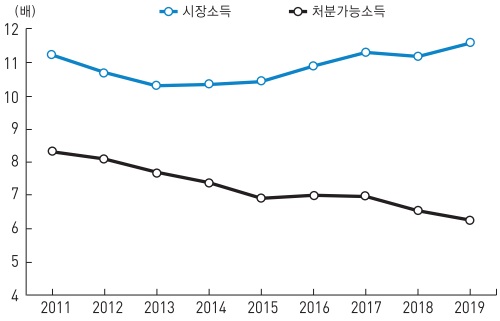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6.6	55.5	81.5	114.9	221.4
2012	27.1	56.2	82.2	114.6	219.9
2013	27.9	58.0	84.2	116.0	214.0
2014	28.6	58.7	85.0	117.4	210.4
2015	29.8	59.8	85.9	119.1	205.6
2016	29.7	59.6	85.7	117.6	207.3
2017	29.8	59.8	85.2	117.9	207.2
2018	31.1	60.8	86.1	118.4	203.6
2019	32.3	61.7	86.7	117.4	201.9
2011-2019 평균	29.2	58.9	84.7	117.0	210.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소득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Ⅵ–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의 소득 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배에서 2013년 10.3배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1.3배, 2019년 11.6배를 기록하였다. 기술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와 더불어 여성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맞벌이소득 가구비중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8.3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6.3배를 기록하였다. 2016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이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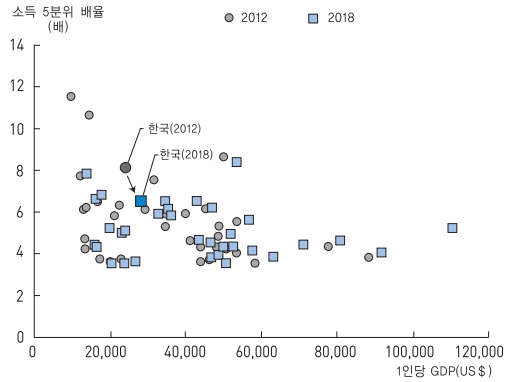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Ⅵ–3]에서는 36개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을 각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5분위 배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수준이 OECD 선진국들의 소득수준에 근접해 감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8.1배에서 2018년 6.5배로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화된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세후기준 소득분배가 유의하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적이전이 주로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계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 대부분이 세전 임금격차 확대는 인지하는 반면 세후소득 기준 소득분배의 변화추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Ⅵ-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2, 2018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OECD 자료 활용. 단, 2012년 한국 자료의 경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활용).
2) 1인당 GDP는 2010년 미국 달러 고정가격 기준임(World Bank 자료 활용).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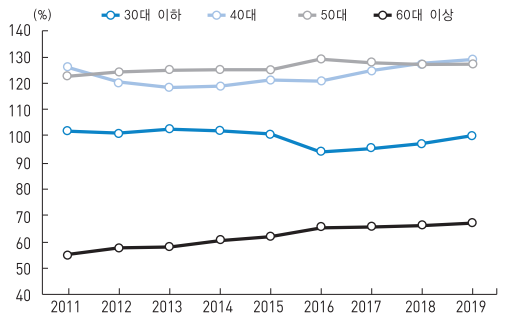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구에게 귀속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이다.[2] 또한 단순히 가구주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들의 소득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을 가구원 수로 표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특성 집단 간 맞벌이 가구 비율과 1인가구 비율의 차이와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Ⅵ-4]는 2011-2019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는 평균 수준

2)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고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다. 최근 2016년에서 2019년 기간에 각 연령대별 소득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30대 이하는 94.3%에서 100.2%로, 40대는 120.8%에서 129.1%로 유의하게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128.9%에서 127.4%로 60대 이상은 65.6%에서 67.3%으로 정체되어 있다.[3)]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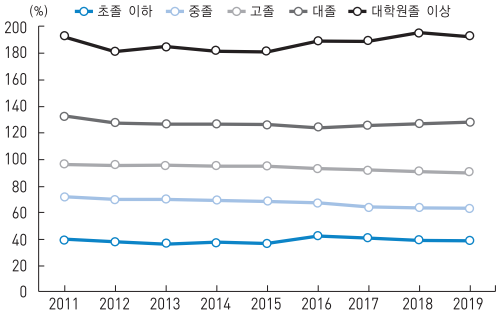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Ⅵ-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의 소득비는 감소한 반면 학력이 높은 집단의 소득비는 증가했다. 초졸 이하 집단은 42.1%에서 38.4%로, 중졸 집단은 67.0%에서 62.8%로, 고졸 집단은 93.0%에서 90.5%로 낮아진 반면 대졸 집단은 124.1%에서 127.9%로,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같은 기간 소득비가 189.2%에서 192.5%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처럼 대학 이상의 학력집단의 소득비는 상승하는데 반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집단의 소득비는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거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Ⅵ-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학력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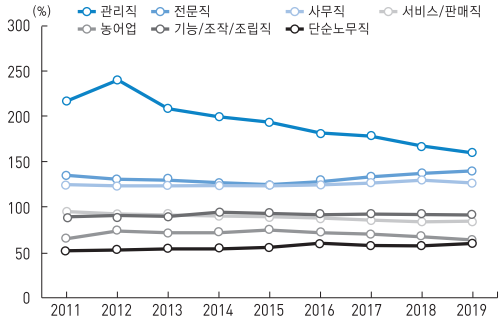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Ⅵ-6]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하였으므로, 2016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의 기간에 전문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소득비는 유의하게 하락했다.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은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관리직의 소득비는 181.7%에서 160.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로 대체가능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소득계층으로 간주되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경상소득에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시장소득의 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각 연도 대상 가구 전체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직업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85.0%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64.9%, 그리고 2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28.0%가 1인가구이므로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1인가구로 파악된다.

2016-2019년 기간 동안 1인가구의 20대 이하,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7.9%, 12.5%, 11.7%에서 5.8%, 10.0%, 10.8%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는 53.1%에서 58.2%로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중은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20대 이하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9.4%에서 2019년 64.3%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17년 61.4%에서 2019년 61.0%로 다소 하락하였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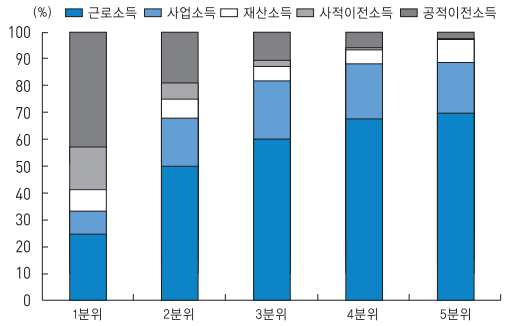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다시 가족 간 이전,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

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6년과 2019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3.9%에서 64.0%로 정체된 반면 사업소득은 22.2%에서 19.4%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재산소득은 6.5%에서 7.0%로,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은 6.0%에서 7.7%로 크게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연금 및 임대소득의 증가와 공적이전이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7]에 제시된 2019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4.8%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7.5%와 69.6%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은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1분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16년 37.0%에서 2019년 42.8%로 크게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Ⅵ-2〉의 2019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20대 이하, 30대에 비해서 40대 이상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낮다.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재산소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상당수가 은퇴시점을 넘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Ⅵ-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0.

〈표 Ⅵ-2〉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6, 2019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2016년					
20대 이하	87.6	6.4	1.2	2.8	2.0
30대	78.9	16.0	2.2	0.7	2.2
40대	70.1	24.0	3.6	0.6	1.8
50대	66.1	25.5	5.8	0.5	2.1
60대 이상	40.1	20.2	14.7	4.6	20.4
2019년					
20대 이하	78.4	13.5	1.4	3.4	3.3
30대	78.5	14.7	2.7	0.8	3.3
40대	70.6	22.0	4.5	0.7	2.2
50대	70.6	20.2	6.0	0.7	2.5
60대 이상	42.2	18.3	13.2	4.7	2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20.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87.6%에서 78.4%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6.4%에서 13.5%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다른 연령대 가구주의 소득원천별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구별되며 20대 이하 가구의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그중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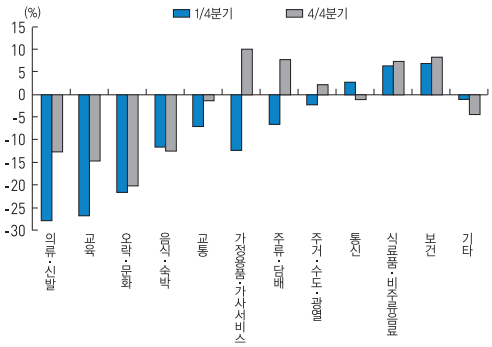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충격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에게 어떤 지출패턴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연간 및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2020년 1분기와 4분기의 실질 소비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2.8% 감소했다. 소득 2분위,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비가 각각 -3.3%, -6.8%, -4.2%로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고 1분위의 소비는 2.8% 증가했다. 최저소득층은 소비수준이 낮고 필수재 위주로 소비해 온 이유로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고소득층은 오락·문화, 교육, 의류·신발 등의 지출이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보건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 항목간 대체소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소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는 교육, 교통, 오락·문화, 의류·신발, 음식·숙박 항목에서 크게 소비가 감소하여, 각 소득분위별로 소비지출의 변화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8]에서 평균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의 변화가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의류·신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통 등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감소가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교육은 상당히 비탄력적인 소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원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정용

[그림 Ⅵ-8]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 2020.4/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20.

품·가사서비스,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비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대외활동의 제약과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보건 지출은 초기 증가세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재택시간의 증가와 보건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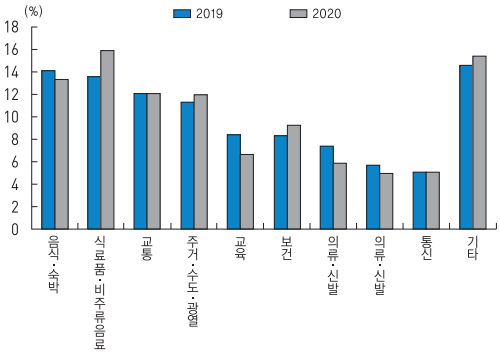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2020년까지 연간자료가 이용 가능하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소비지출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Ⅵ-9]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여준다. 2019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지출 순으로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교육 지출 비중이 8.3%에서 6.6%로, 오락·문화 7.3%에서 5.8%로, 음식·숙박 14.1%에서 13.3%로 낮아졌다.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3.5%에서 15.9%로, 보건은 8.2%에서 9.2%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대면 서비스 위주로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재택 관련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 의류·신발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은 그 비중이 증가했다. 20대에서는 교통, 30대와 40대에서는 교육, 50대와 60대에서는 오락·문화의 지출 비중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의식주[4] 지출 비중은 2019년 30.4%에서 2020년 32.7%로 모든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9, 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 비소비지출의 변화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Ⅵ-3〉을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2016년 17.5%에서 2019년 18.7%로 다소 늘었다.

4)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 · 비주류음료, 의류 · 신발, 주거 · 수도 · 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금 그리고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비중의 합이 11.2%에서 12.0%로 증가한데 있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19년 기준 2분위가 2.2%, 3분위가 2.6%, 4분위가 3.6%, 5분위가 9.5%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2019년의 조세부담률은 4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해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 비중 또한 4분위 소득계층 이상에서 유의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Ⅵ-3〉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6, 2019

(%)

		비소비지출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6년						
전체	17.5	5.6	5.6	1.9	1.3	3.1
1분위	13.3	1.9	4.0	2.1	1.6	3.7
2분위	14.6	2.1	5.2	2.2	1.4	3.7
3분위	15.6	2.6	6.0	2.0	1.3	3.7
4분위	15.6	3.2	6.2	1.8	1.2	3.2
5분위	20.0	8.8	5.4	1.8	1.2	2.7
2019년						
전체	18.7	6.0	6.0	2.5	0.9	3.3
1분위	12.7	1.8	3.2	3.6	1.0	3.1
2분위	14.3	2.2	4.7	2.9	1.0	3.6
3분위	15.6	2.6	5.8	2.7	1.0	3.5
4분위	17.0	3.6	6.5	2.4	0.9	3.6
5분위	21.9	9.5	6.2	2.2	0.9	3.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자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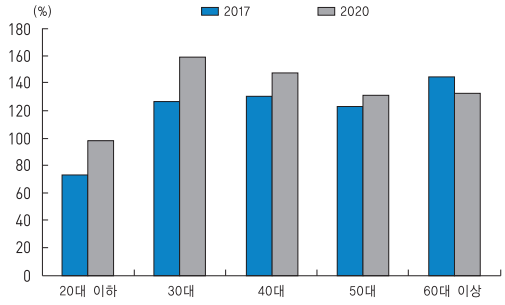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0년 3월 기준 전체 가구의 63.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7년 63.5%와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아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2.0%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9.6%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24.2%와 45.2%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9.4%로 2017년 129.6%보다 다소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는 151.2%에서 151.7%로, 2분위는 144.1%에서 146.8%, 3분위는 141.0%에서 146.7%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4분위는 132.0%에서 140.0%로, 5분위는 120.0%에서 134.1%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대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20.0%이며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차이가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020년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은 20대 이하는 59.2%로 낮은 편이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77.8%와 77.2%로 매우 높다. 다시 50대는 72.9%로 낮아지고 60대 이상에서는 46.7%로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

에 따른 주택구입과 주택담보대출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림 Ⅵ-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대 이하, 30대, 40대에서 크게 상승하였고 50대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하였다. 이 기간에 20대 이하, 30대, 40대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45.4%, 45.7%, 31.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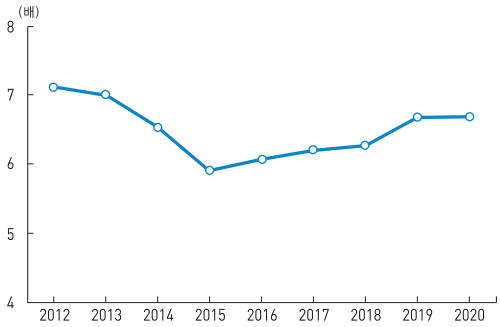
[그림 Ⅵ-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 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대비 부채 비율=총 부채액÷연간 경상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14.9% 증가하였는데,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8.9% 증가에 그친 반면 나머지 분위는 2분위 17.2%, 3분위 14.0%, 4분위 11.4%, 5분위 17.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5] 2020년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6.5%이고 5분위는 43.8%이다.

[그림 Ⅵ-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분위 대비 5분위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2년 7.1배에서 2015년 5.9배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2017년 6.2배에서 2020년 6.7배까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자산가격 상승이 각 소득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전체 가구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비중은 69.5%인데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보유 비율은 48.7%인 반면 최고소득층인 5분위의 보유 비율은 89.9%에 달한다. 2017-2020년 기간 동안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1분위에서는 11.0%만 증가한 반면, 5분위에서는 22.8%로 크게 증가해 순자산 배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5)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했기 때문에 조사자료로만 작성된 2016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유경원 (상명대학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소득 분배지표는 악화되었다.
- 시장소득 분배의 악화는 주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들 계층의 많은 수가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처분가능소득이 확대된 공적이전을 통해 증가하여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주거비와 이자비용은 필수지출로 실질적인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분배정책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2020년은 대부분 국가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그 충격이 컸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확대로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전염력이 높아진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팬데믹에 기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각국 정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소득격차와 자산양극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가계소득 분배 변화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의 효과를 재분배정책 관점에서 살펴본다.[1] 아울러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및 주택가격 급등으로 우려되는 주거비, 이자비와 같은 필요경비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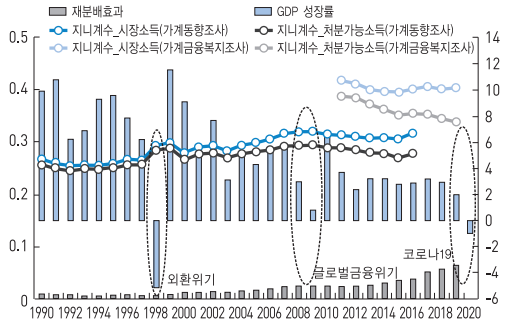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불평등도 비교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GDP 성장률은 -1%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1) 소득분배 관련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연간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 분석 시점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이지만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겪는 역성장이었다. 통상 경기침체 시기에 분배문제 역시 심화되는데 [그림 Ⅵ-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 내지 매우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으로 나타나는 공적이전으로 인해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분배개선은 통상적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공적이전을 감안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이 된다. 즉 이 차이가 커질수록 지니계수로 나타낸 분배의 개선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소득재분배에 있어 정책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12] 경제위기별 경제 성장 및 분배, 재분배 효과 추이, 1990-2020



주: 1) 세로축에서 좌측은 지니계수이고, 우측은 GDP 성장률(%)임.
2) 재분배 효과는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를 활용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되었으며, 이 차이가 클수록 공적이전 등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자료, 각 연도.

과거 위기들이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반면 이번 위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지만 그 경제적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염병 대확산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과 일용·임시직의 구직과 소득에 영향이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소득불평등 관련 연간지표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전체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별 소득분배지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미친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2)]

비교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와 확산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2020년 2분기 이후 2021년 1분기까지로 그리고 이전 시기는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로 상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변수는 두 가지이다. 먼저 시장소득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값이다.[3)]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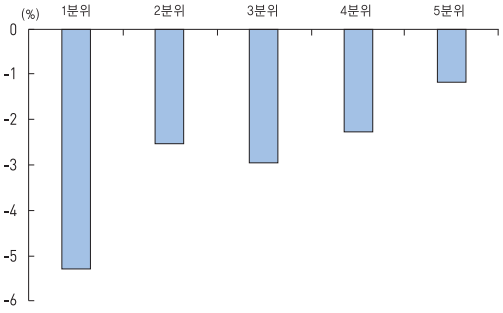
2)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계부 작성방식 및 분기통계로서의 한계(행정자료 미이용)로 향후 보다 엄밀한 논의는 연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OECD Wave6 정의를 토대로 하였으며 사적이전지출을 빼지 않았다. 2021년 1분기부터 적용된 OECD Wave7에서는 소득분배지표 기준소득 개념으로 정의한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시키고, 여기에서 공적이전지출을 제한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과 세금환급금이 포함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도 이 처분가능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개념의 차이를 이용하면 코로나19 확산 전후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불평등지표는 통상적으로 지니계수를 이용하는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짐을 나타낸다. 한편, 지니계수가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적으로 다양한 분위배수를 이용하여 양극단 계층의 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대표적인 5분위 배수(P80/P20)는 하위 20%와 상위 80%의 소득 계층 즉,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지표이며 P90/P10은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90%를 비교하여 양극단 계층의 소득격차를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즉 50%에 해당하는 계층과 상위 10% 또는 하위 10%를 비교하여 중-저 또는 중-고 계층 간 소득격차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가 P50/P10과 P90/P50이다.[4)]

먼저 소득계층별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소득 변화율의 평균을 구하였다(그림 Ⅵ-13).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시장소득은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분위 소득계층의 충격이 다른 계층에 비해 1.8-4.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13]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감률(시장소득), 2019. 2/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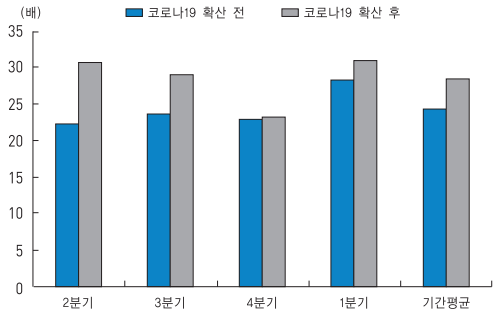
주: 1)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2/4-2021.1/4)의 소득 증감률로 각 분기별 소득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14]에서 5분위 배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비교했을 때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Ⅵ-15]에서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계층 소득을 비교한 P50/P10 지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중위소득과 하위 10%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보다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수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10.4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3.4배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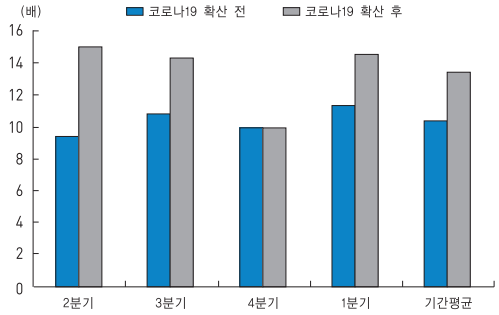
4) 본 고의 분배지표 관련 수치는 가구단위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균등화소득 기준의 수치(그림 Ⅵ-12)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Ⅵ-14] 코로나19 확산 전후 5분위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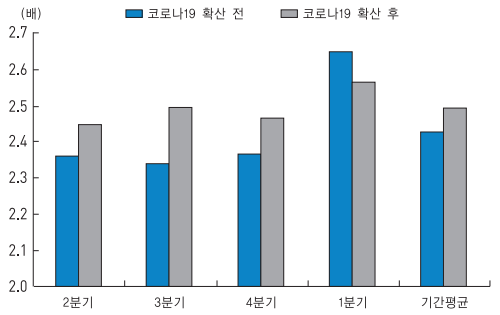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15] 코로나19 확산 전후 P50/P1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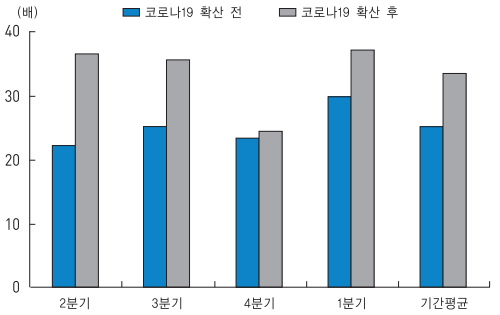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16]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5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17]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1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한편 중상위 계층의 격차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Ⅵ-16]에서 P90/P50 지표는 중위계층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나는데 앞선 중–저 소득계층 격차와는 유사하지만 크기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이들 계층 간 분배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평균 2.5배에서

2.6배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간 격차가 하위소득과 중위소득 격차만큼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림 Ⅵ-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한 P90/P10은 그 격차가 5분위 배율에 비해 보다 확대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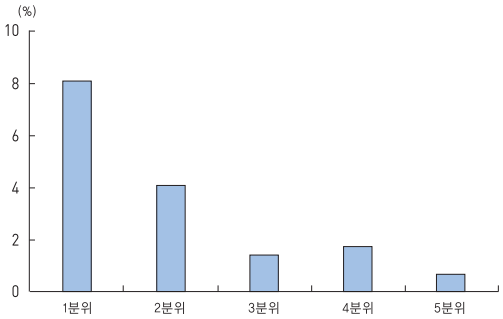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소득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중-고소득계층의 격차보다는 중-저소득계층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분배 악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재분배 정책의 효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이래로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을 조세 및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적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시키고 공적이전지출은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와 관련 지표를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Ⅵ-18]에서 코로나19 전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앞에서 본 시장소득과 달리 1, 2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이 보다 더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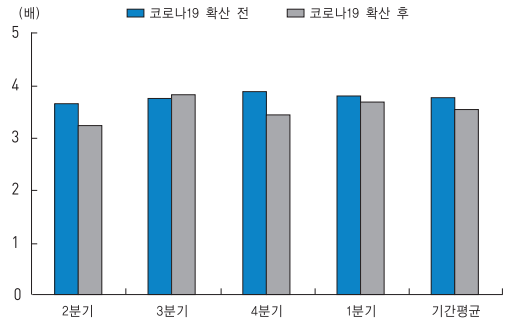
[그림 Ⅵ-18] 코로나19 확산 전후 가구소득 증감률(처분가능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2/4–2021.1/4)의 소득 증감률로 각 분기별 소득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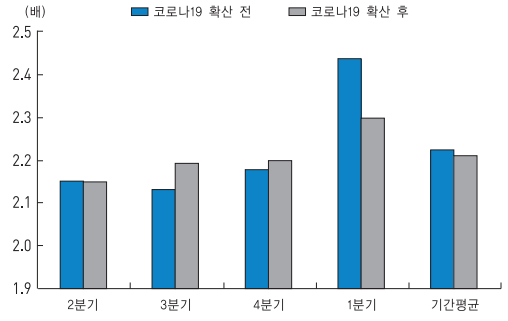
앞서 확대되었던 시장소득 기준 하위 10분위와 중위 50분위 그리고 상위 90분위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Ⅵ-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확산 초기 15배까지 벌어졌던 시장소득 격차가 정부의 재분배정책으로 2020년 2분기에 3.2배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림 Ⅵ-16]과 [그림 Ⅵ-20]을 보면 P90/P50 지표의 경우 코로나 확산 전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Ⅵ-19] 코로나19 확산 전후 P50/P10 배율(처분가능 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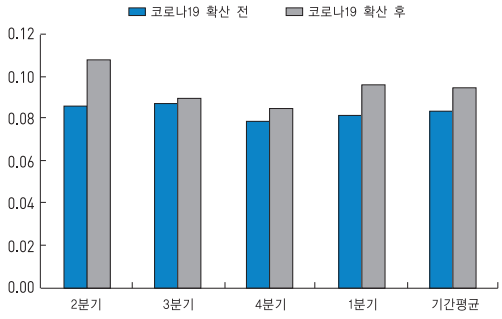
[그림 Ⅵ-20]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50 배율(처분가능 소득)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이와 같은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해 보면, [그림 Ⅵ-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2분기에 0.108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2분기에 비해 25% 이상 컸으며, 나머지 분기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재분배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소득 감소폭이 가장 컸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목표로 하여 공적이전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득보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소득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21] 코로나19 확산 전후 재분배 효과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재분배효과=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4) 저자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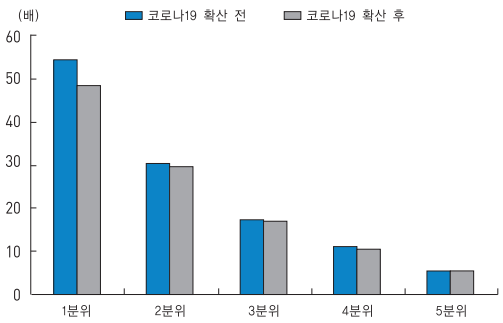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기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의 주요 요인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어떤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을 야기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앞서 분석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된 소득감소가 주된 요인이었다. 이들 계층이 왜 코로나19

소득충격에 취약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하위 소득계층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지자 관련 업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실직과 소득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림 Ⅵ-22]의 소득계층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1, 2분위 계층의 경우 고소득계층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이들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상용직 비중은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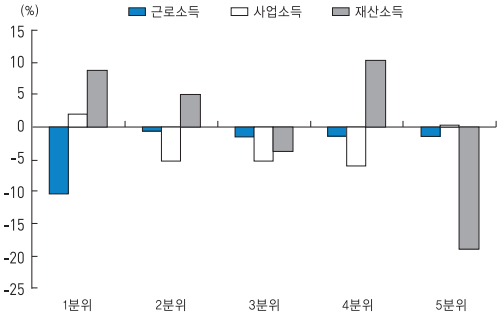
[그림 Ⅵ-22]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임시·일용직 비중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임시·일용직 비중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23]에서 보듯이 코로나19의 확산이 1분위 소득계층의 주된 종사상 지위인 임시·일용직에 충격을 크게 미침으로써 이들의 근로소득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다른 계층이 1% 안팎의 낮은 근로소득 하락을 나타낸 반면,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10.8%의 높은 근로소득 하락률을 나타내어 이들 계층의 근로소득 하락이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6]

[그림 Ⅵ-23]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증감률,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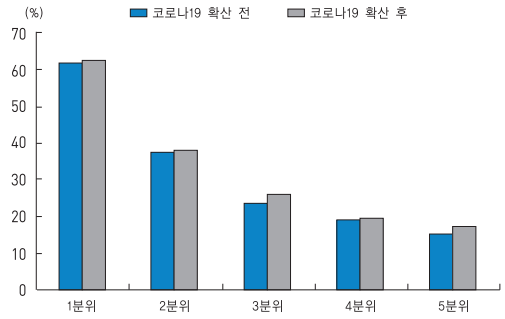
주: 1) 각 소득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3/3-2021.1/4)의 소득 증감률로 각 분기별 소득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2/4.-2021.1/4.

한편 이들 저소득계층의 또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고령층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그림 Ⅵ-24). 따라서 이들 계층의 경우 [그림 Ⅵ-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가능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전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비중이 보다 확대되었

5)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할 때 소득분위별 소득구성항목에 대한 분석은 표본규모가 매우 작아지는 한계가 있어 [그림 Ⅵ-23]에서 나타난 5분위의 재산소득 감소는 실제에 비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실직, 그리고 소득감소가 소득불평등 악화에 주된 요인이었음을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송상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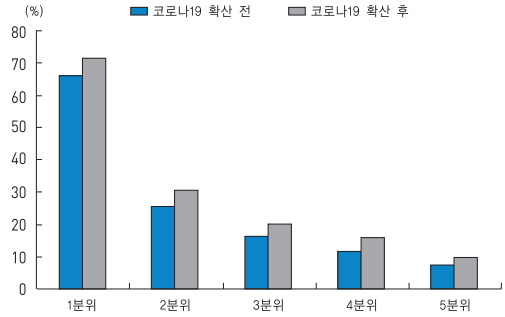
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이 코로나19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7)]

[그림 Ⅵ-24]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임시·일용직 비중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25]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코로나19 확산 전후 '실효소득'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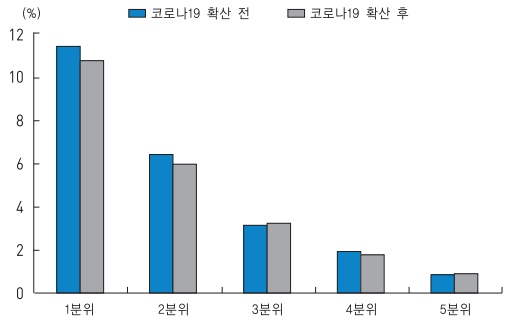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득('실효소득')의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급등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효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효소득'은 가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며,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중 주거비와 이자비용을 제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비는 소비지출의 12대 비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통 등의 비목과 더불어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소비지출이다. 특히 주거비에 주목한 이유는 주거비가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8)] [그림 Ⅵ-26]에 제시된 소득계층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보면, 자가주택 비중이 높은 고소득계층(5분위)에 비해 저소득계층(1분위)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전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부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계층 간 격차는 실질적인 소득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7) 지니계수를 소득항목별(근로, 사업, 재산, 이전)로 분해해 보면 동 기간 중 근로소득의 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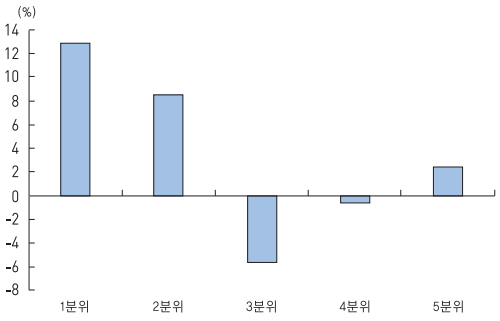
8) 가계동향조사 상의 주거비 추이와 역진성에 관련한 논의는 김영희·정미옥(2019)을 참조

[그림 Ⅵ-26]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Ⅵ-27]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증감률, 2019. 2/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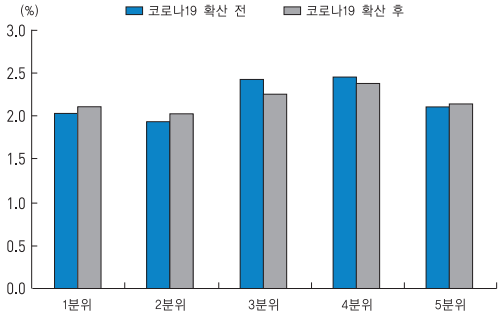
주: 1)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2/4–2021.1/4)의 이자비용 증감률로 각 분기별 이자비용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낮아진 이자율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이자부담 가구가 늘게 된 것도 '실효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면서 자산취득은 물론 부족한 생활자금 마련까지 부채에 대한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역시 가계의 우선지출 항목이기에 실제 쓸 수 있는 돈, '실효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Ⅵ-27]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이자비용을 살펴보면, 1, 2분위 계층의 이자비용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부담 역시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림 Ⅵ-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2% 수준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이자 부담의 격차는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실효소득'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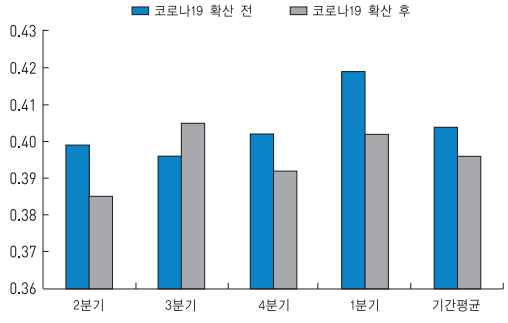
[그림 Ⅵ-28]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2/4.–2021.1/4.

이와 같은 주거비와 이자비용의 실질적인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소득' 지니계수를 구하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Ⅵ-29]와 [그림 Ⅵ-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비는 예상한 대로 실제 소득분배를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미미한 이자비용의 효과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코로나 전후 주거비 및 이자지출로 인한 '실효소득' 분배 악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9]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경기침체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고, 금리 인하로 인해 분배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보다 확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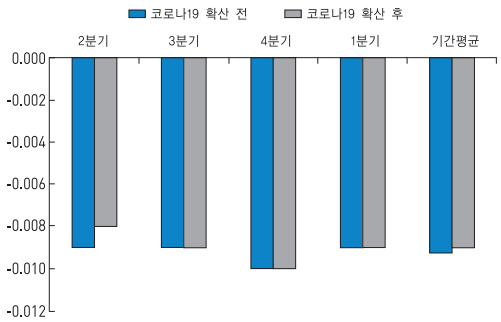
[그림 Ⅵ-29] 코로나19 확산 전후 실효소득 지니계수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실효소득=처분가능소득–(주거비+이자비용).
3)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4) 저자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9)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한계로 나타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밀한 논의는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Ⅵ-30]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거비·이자비의 실효소득 재분배 효과 비교, 2019. 2/4 – 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재분배효과=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 실효소득 지니계수. 마이너스 값은 분배악화를 나타냄.
3)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4) 저자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논의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정확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잠정적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소득하락이 발생하여 시장소득 기준 분배 악화가 확산 초기 크게 나타났으나 공적이전 확대 등 정부의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완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소득 분배악화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경제의 도래로 저소득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 상승은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실효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소득계층 소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은 분배악화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자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 분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임시·일용직 계층과 고령자 가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재분배정책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경기회복 움직임과 함께 높아질 수 있는 주거비와 이자 부담을 고려할 때 분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상윤. 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BOK 이슈노트」 제2021-9호. 한국은행.
김영희 · 정미옥. 2019.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가구의 주거비 추이: 2010~2018년."「KOSTAT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통계청.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비 동향

이윤수 (서강대학교)

-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 1분기에 전반적인 소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거리두기와 외출의 감소로 식사비 지출은 감소한 반면 가정 내에서의 식료품 지출은 증가하였다.
- 2분기에 내구재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자동차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 컴퓨터, 가구, 의료용 소모품(마스크)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단체여행, 오락 및 문화 서비스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캠핑 등 여가에 대한 대체수요와 주류소비는 증가하였다.
-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맞벌이 가구에서는 증가한 반면, 그 외의 가구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 고대면업종인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종사 가구의 경우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이 커서 가계수지는 악화되었다.
- 고대면업종의 상용직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 식료품과 인테리어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2019년 말에 발생하여 2020년에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각 국가는 기존의 바이러스 질환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외출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전면적인 봉쇄까지 일부 지역 혹은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 정책들은 일상생활과 소비 행태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특히, 사람들의 접촉을 제한함에 따라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이나 식당, 대면 접촉의 강도가 높은 헬스클럽, 개인 서비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정책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소비활동 감소로 인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감소와 실업 등에 의한 소득 감소와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세계 경제를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태로 내몰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염병 확산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정책으로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전염병의 확산이 경제 전체의 봉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리두기정책 등으로 인해 소비와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감소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은 음식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편 등교의 제한과 재택근무의 증가로 대면 접촉이 감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을 통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라는 새로운 소비형태의 확산을 가지고 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험했던 2020년 가구의 소비 형태의 특징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기별 소비변화와 전반적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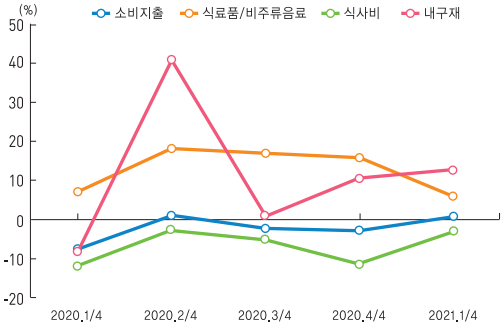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2020년 1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되었다. 2분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다소 회복하였다. 그러나 3분기 중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되었다.

[그림 Ⅵ-31]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비농업 가구의 분기별 소비지출의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반적인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왔다. 대구의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던 2020년 1분기의 경우 가구당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였으나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2분기에 회복하여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 후 재유행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던 3분기와 4분기의 평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감소하였다.

거리두기 정책과 재택근무의 증가, 자발적인 외출 자제 등은 외식의 감소로 이어졌다. 2020년 가구당 식사비 지출은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한편 자연스럽게 식구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급식이 가정 내 식사로 대체되면서, 가구의 식료품 소비지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비주류 음료를 포함하는 식료품 소비는 1분기에 7% 상승하였고, 이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18%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를 겪었던 2020년 가구소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내구재의 증가이다. 1분기 10% 가까이 감소했던 내구재 지출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Ⅵ-31] 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1/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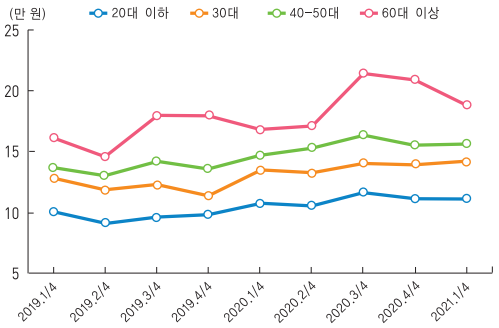


주: 1) 가구주의 종사산업 코드가 농업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3) 내구재는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품목 기준으로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자동차구입, 통신장비, 오락문화내구재,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소비변화

[그림 Ⅵ-32]는 2020년에 증가한 식료품 지출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본다. 2019년 조사대상자보다 가구원 수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 가구원 1인당 지출액을 계산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은 2020년 1/4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Ⅵ-32]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원 1인당 식료품비 지출액, 2019. 1/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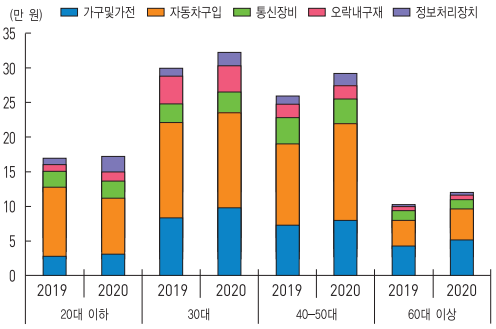
주: 1) 식료품·비주류음료 항목의 가구당 소비 지출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함.
2)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특히 60대 이상 가구에서 높이 증가하여, 2019년 1인당 월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식료품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2분기에 급증한 내구재 소비는, 일반적으로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고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성격의 재화를 포함하는 비내구재 소비 비중이 증가하였던 이전의 경제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다(유경원, 2020).

내구재 소비변화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림 Ⅵ-33]은 가구주의 연령대별 내구재 소비변화를 살펴본다. 내구재 소비를 「가계동향조사」의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주의 나이가 40–50대와 60대 이상인 가구에서 증가한 자동차 소비가 내구재 소비 증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이 대체됨에 따라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의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정보처리장치의 소비지출 증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Ⅵ-33] 가구주 연령대별 내구재 지출액,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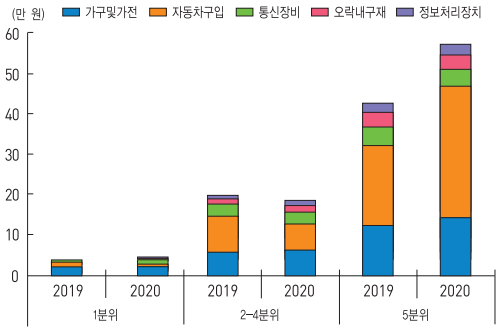


주: 1) 각 항목은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함.
– 가구 및 가전: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영상음향기기
– 자동차구입: 자동차구입
– 통신장비: 통신장비
– 오락내구재: 오락문화내구재, 사진광학장비,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2) 지출액은 명목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내구재 소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그림 Ⅵ-34]는 내구재 소비가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내구재 소비는 특히 5분위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4분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5분위에서 증가한 내구재 소비는 대부분 자동차구입의 지출 증가에 의해서 설명된다.

2020년에 증가한 자동차 소비지출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던 자가용 등록대수는 2분기 0.81%, 3분기 1.13%, 4분기에는 1.26%로 증가하였다. 2020년이

[그림 Ⅵ-34] 가구 소득분위별 내구재 지출액, 2019-2020



주: 1) 각 항목은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기준으로 다음을 포함함.
- 가구 및 가전: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영상음향기기
- 자동차구입: 자동차구입
- 통신장비: 통신장비
- 오락내구재: 오락문화내구재, 사진광학장비,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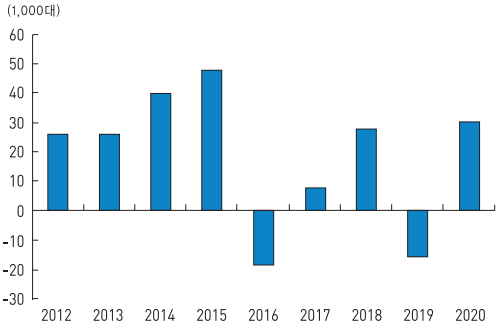
2)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임(「가계동향조사」의 소득5분위(전국_전체가구_1인이상) 변수 사용).
3) 지출액은 명목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와 같은 상대적으로 고가품에 높은 지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던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실시된 세금혜택 등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동향조사」에는 구매한 자동차의 구체적인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림 Ⅵ-35]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수입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0년대 초반 꾸준히 증가하였던 수입 자동차 소비는 2015년 이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다시 예년 수준의 상승폭을 회복하였다는 점은 2020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대적인 고가품의 소비 지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소비지출 증가는 단체 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 등 다른 경비의 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축이 늘어난 가구에서의 대체소비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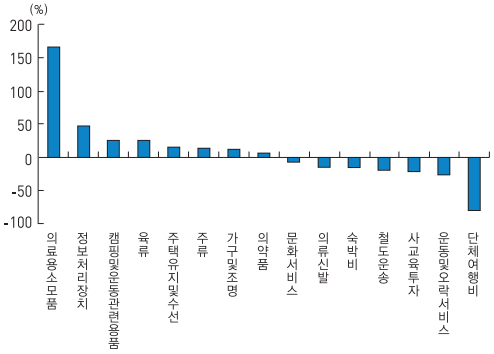
[그림 Ⅵ-35] 수입 자동차 등록 대수 전년 대비 순변화량, 2012-2020



주: 1)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통계의 연도별 합계값을 사용.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브랜드 통계」, 2021.7. 조회.

[그림 Ⅵ-36]에서 살펴보듯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에는 품목별로 소비지출 변화에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마스크 소비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외에도 가구나 주택 수리 등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육류 등 전반적인 식료품 소비 지출은 늘어난 반면 외출의 감소로 의류에 대한 소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아울러, 철도나 단체 여행 등에 사용된 소비 지출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Ⅵ-36] 소비지출 품목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주: 1) 각각의 항목은 의류신발을 제외하면 「가계동향조사」 소분류 품목을 그대로 사용함. 의류신발은 「가계동향조사」 대분류 품목의 의류신발임.
2) 지출액은 명목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각 품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단체 여행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숙박비는 2~30대를 중심으로 2분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였다. 또한 캠핑기구 등에 사용되는 소비지출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즐길거리에 대한 지출이 30-50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단위의 소규모 여행으로 패턴이 바뀌고, 차박이나 캠핑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구매의 증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헬스클럽 등 운동 및 오락서비스와 공연 등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였는데,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연말에 일부 공연이 재개됨에 따라 4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와 봉쇄기간 중 가장 불편했던 것 중의 하나로 이발 등 이미용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외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다. 비록 비중은 크지 않으나 이미용 서비스 지출은 감소한 반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용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했다.

사교육 지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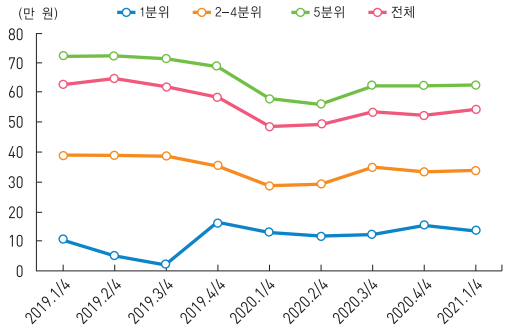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등교일수가 줄고 많은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공교육에 의한 교육서비스 시간의 감소와 질적 저하가 사교육에 대한 대체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한 경제의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공교육의 감소는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나 사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사교육 지출액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 [그림 Ⅵ-37]에서 사교육 지출액은 거리두기로 많은 학원이 문을 닫고 대면 수업에 아이를 보내기 꺼려했던 1분기에 감소하였다. 1분기 사교육 지출의 감소는 소득분위 5분위에 속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1분기의 사교육 지출액은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이용한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참여학생의 지출 감소보다는 참여율 감

소에 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권역, 초등학교 사교육, 예체능 등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강다영·정유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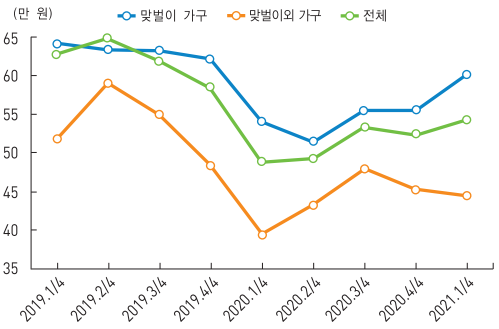
[그림 Ⅵ-37] 가구 소득분위별 사교육 지출액, 2019. 1/4 – 2021. 1/4



주: 1) 사교육투자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분류 품목인 학생학원교육을 사용함.
2)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로 가구원2부터 가구원5까지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미혼자녀이고 연령대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가구원을 학업자녀로 정의해 학업자녀수를 직접 파악한 후 학업자녀수가 0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임(「가계동향조사」의 소득5분위(전국_전체가구_1인이상) 변수 사용).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서비스의 감소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및 교육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대면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학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반면,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의 교육을 외부에 맡겨야 할 필요성에 의해 사교육 지출을 늘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Ⅵ-38]에서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교육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2분기 이후 맞벌이 가구가 사교육 지출액 투자를 다른 가구에 비해 더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사교육 지출액은 맞벌이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감소하였다. 다만, 맞벌이 가구가 2020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사교육 지출액을 늘린 반면, 그 외 가구는 사교육 지출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38] 맞벌이 여부별 가구 사교육 지출액, 2019. 1/4 – 2021. 1/4



주: 1) 사교육투자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분류 품목인 학생학원교육을 사용함.
2)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로 가구원2부터 가구원5까지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미혼자녀이고 연령대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가구원을 학업자녀로 정의해 학업자녀수를 직접 파악한 후 학업자녀수가 0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3) 맞벌이가구는 「가계동향조사」의 맞벌이가구 변수를 통해 정의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고대면업종 종사 가구의 소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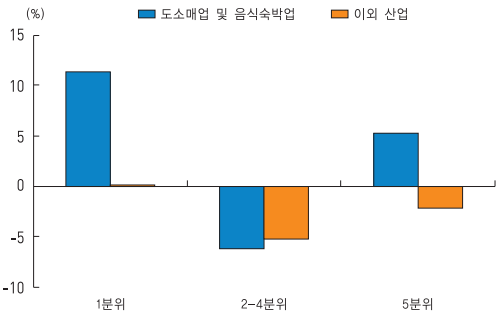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거리두기와 경제활동의 감소는 음식업과 외식업 종사자의 소득을 감소시켰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자발적인 외출 자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 밀도가 높은 업종 종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대표적 대면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 양상을 살펴본다.

[그림 Ⅵ-39]에 제시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4분위는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1분위와 5분위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소비가 더 증가하였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1분위 도소매업 종사 가구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1분위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는 감소해, 같은 대면 업종에서도 소비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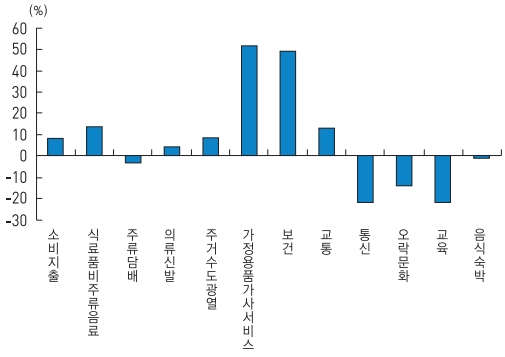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아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다. [그림 Ⅵ-40]을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품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등의 필수재에서 소비지출이 상당 부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의류·신발 등과 같이 필수재로 보기 어려운 품목에서도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

[그림 Ⅵ-39]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득 분위별 전년 대비 소비지출 증감률, 2020



주: 1) 가구주의 종사산업을 가구의 종사산업으로 산정하여 분석 진행.
2) 이외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을 제외한 산업임.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고대면 산업으로 고려.
3)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임(「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전국_전체가구_1인이상) 변수 사용).
4)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그림 Ⅵ-40] 소득 1분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별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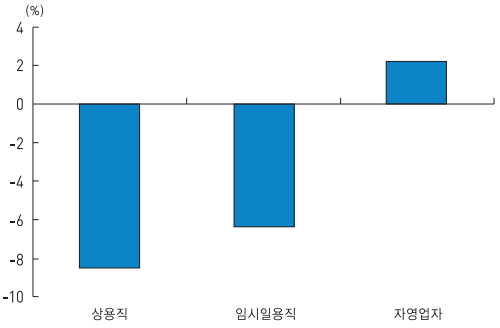


주: 1) 가구주의 종사산업을 가구의 종사산업으로 산정하여 분석함.
2) 오락문화 대분류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3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3)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다. 이러한 품목의 소비량 자체가 원래 적었기 때문에 늘어난 소비량의 크기 자체는 증가율에 비해 크지 않다. 경제위기 시기인데도 취약계층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볼 수 있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분위 가구에서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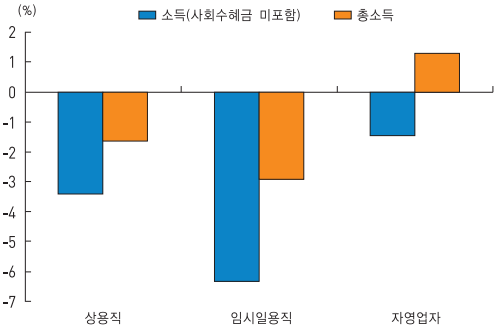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자 지위별 소비변화를 살펴본 [그림 Ⅵ-41]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비 변화는 어느 정도 소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증가하였다(그림 Ⅵ-42). 비록 분석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계청의 최근 연구에서도 전체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2020년 2-4분기에 소득과 소비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향숙·김영희, 2021).

[그림 Ⅵ-41]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소비지출액 증감률, 2020



주: 1) 가구주의 종사산업이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인 가구를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류해서 분석함.
2) 지출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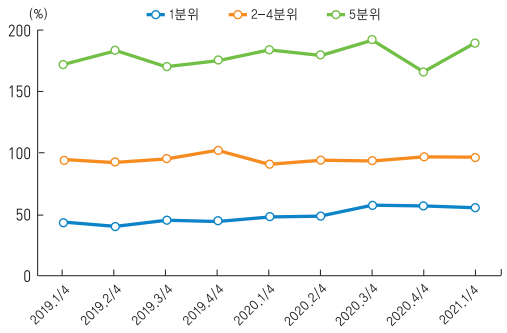
[그림 Ⅵ-42]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 가구의 종사상 지위별 전년 대비 소득 증감률, 2020



주: 1) 가구주의 종사산업이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인 가구를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류해서 분석함.
2) 분기별로 해당 소득분위×산업코드 그룹의 평균소득을 구하고 연도별 평균값으로 전년 대비 변화율을 분석함.
3) 소득액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한 금액을 사용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0.4/4.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1분위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1분위의 절대 소비액이 작아서 소액의 증가분도 비율로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Ⅵ-43]에 나타나듯이 1분위 가구는 소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 소비액은 전체 평균의 50%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1분위의 소비불평등 이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소폭의 소비 증가가 불평도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1분위에 속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소득 증가에 비해 소비 지출의 증가가 더 커서 가계수지는 악화되었다.

[그림 Ⅵ-43] 소득분위별 전체 가구 대비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가구 소비지출액의 비율, 2019. 1/4 – 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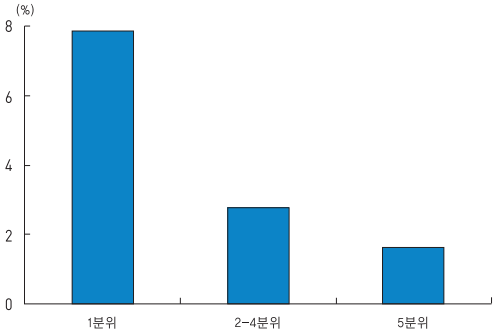


주: 1) 가구원2가 배우자이고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이 가구주보다 높은 경우 가구원2의 산업코드를 가구 산업코드로 정의하였고, 다른 경우엔 가구주의 산업코드를 가구의 산업코드로 정의하여 분석함.
2) 분위별 평균 소비액을 해당 분기의 전체 평균 소비액으로 나누어 분석함.
3) 소득분위는 총소득 기준임(「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전국_전체가구_1인이상) 변수 사용).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1.1/4.

재난지원금의 소득보조효과

소득 1분위에서의 소비 증가는 코로나 이후 제공된 재난지원금과도 상관있어 보인다. [그림 Ⅵ-44]를 보면 2020년 소득 대비 사회수혜금의 증가분이 1분위 가구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분기 이후 재난지원금은 거의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었으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고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가 액수는 5분위 가구의 사회수혜금 증가분이 더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분은 1분위에서 총소득 대비 8%에 육박하는 반면 5분위에서는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체감효과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에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일한 금액의 재난 지원금이라 할지라도 가구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체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1분위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Ⅵ-44]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수혜금 증가량, 2020



주: 1) 분위별로 분기별 평균 소득과 평균 사회수혜금을 구한 후 이를 연도별로 평균내어 계산함.
2) 평균 사회수혜금의 차이를 2020년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1/4–2020.4/4.

미국의 소비 변화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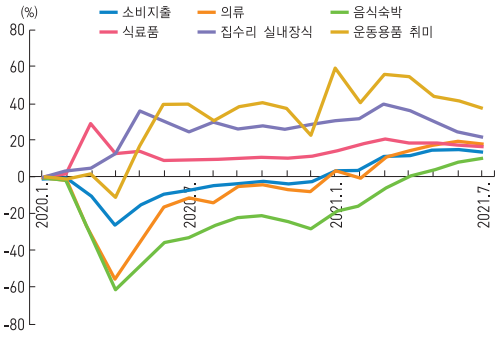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통계청 등 행정자료 외에 카드 매출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Chetty et. al., 2020).

[그림 Ⅵ-45]는 Chetty et. al. (2020)이 Oppotunity Insight 웹사이트에 공개한 카드지출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비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전체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와 음식 숙박은 감소한 반면,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집수리와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항목(home improvement)도 증가하였다. 2021년 상반기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Ⅵ-46]은 소득에 따라 우편번호에 속한 지역을 4분위로 구분하여 지역별 소비변화를 살펴본 그림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 지역의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소비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비를 조절할 여력이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Ⅵ-45]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주요 품목별 소비지출 변화, 2020.1-2021.7



주: 1) 2020년1월을 기준(0)으로 놓고 추후 소비액의 변화를 보여줌.
2) 일일 변화량을 월평균하여 제시함.
출처: https://www.tracktherecovery.org/.

[그림 Ⅵ-46] 지역소득수준별 소비지출 변화, 2020.1-2021.7

주: 1) 2020년 1월을 기준(0)으로 놓고 추후 소비액의 변화를 보여줌.
2) 일일 변화량을 월평균하여 제시함.
3) 우편번호로 구분된 지역을 소득에 따라 4분위로 나눔.
출처: https://www.tracktherecovery.org/.

참고문헌

강다영 · 정유헌. 2021.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안향숙 · 김영희. 2021. "2020년 자영자가구 및 근로자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유경원. 2020.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한국의 사회동향 2020.
Raj Chetty, John N. Friedman, Nathaniel Hendren, Michael Stepner &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2020.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Evidence from a New Public Database Built Using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Series.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Ⅶ 여 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28

코로나19와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37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변화 김은희 | 한국관광공사 246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어난 2020년에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가비용은 여행, 문화소비 운동 및 오락 활동의 위축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활동 중에서 문화예술활동, 여행, 스포츠관람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생활체육활동도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산책 및 걷기는 증가하였고,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시청과 같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비중이 커졌다.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가생활 만족 수준이 낮아졌으나, 10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여가 활동 및 만족 수준에 미친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큼을 보여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여가활동의 제약이 많아지고 재택 근무가 증가하는 등 일상 생활 여건이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여가활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국민 여가생활에 일어난 변화를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한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조사통계가 대부분 "지난 1년"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나타나기 이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코로나19 감염이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변화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주기에 따라서 아직 2020년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통계를 통해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여가활동의 기반으로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살펴본 후 다양한 여가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여가만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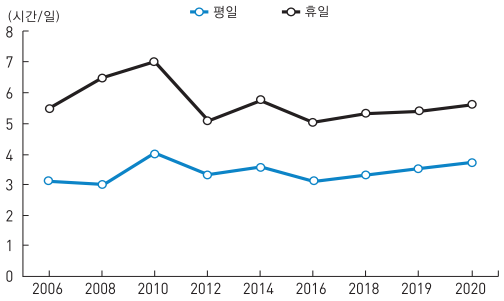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여가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은 3시간 42분, 휴일 여가시간은 5시간 36분으로 2019년

에 비해 평일과 휴일 모두 12분가량 증가하였다(그림 Ⅷ-1).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증가는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이 발표한 미국시간이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미국인의 2020년 여가활동 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2019년 5시간에 비해 10.8% 증가하였다(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2021.7.22).

한편, 2020년의 여가시간 증가에는 지난 2016년 이래 나타난 여가시간 증가 추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 4시간 30분, 휴일 6시간 24분으로 실제 여가시간보다 평일과 휴일 모두 48분 정도의 여가시간을 더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부족 수준은 2019년과 비슷하다. 2019년에 비해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줄지 않았다.

[그림 Ⅷ-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20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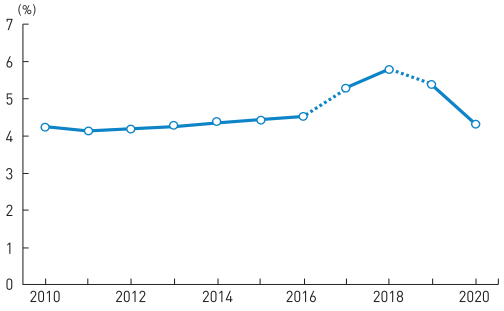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늘어난 반면, 휴가 활용은 2019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0년 휴가 경험 비율은 43.3%로 2019년 55.3%에 비해 12.0%p 감소하였다. 휴가 경험자의 휴가일수도 5.9일로 2019년의 6.4일에 비해 0.5일 감소하였다. 이는 5일 미만의 단기 휴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9%로 2019년의 46.3%에 비해 늘었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 감염이 나타나기 전인 2019년 가을과 겨울의 휴가일수는 1.8일과 1.1일로 전년 가을과 겨울에 비해 각각 0.8일과 0.1일이 증가한 반면, 2020년 봄과 여름의 휴가일수는 0.7일과 2.2일로 전년 봄과 여름에 비해 각각 0.2일과 1.3일 감소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휴가가 짧아졌고, 특히 코로나19 감염 이후인 지난 여름에 휴가기간 단축이 두드러졌다.

「국민여가활동조사」로 파악한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20년 15만 6,000원으로 2019년과 변함이 없었다. 희망 여가비용은 20만 3,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8,000원이 감소하였다. 2019년에 실제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볼 때, 2020년은 실제 지출의 증가세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희망 여가비용도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가활동의 기회 축소가 희망 여가비용의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가비용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휴가, 여행 등의 활동이 봉쇄되면서 희망 여가비용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2020년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지출은 2019년 18만 301원 대비 22.6% 감소한 13만 9,539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지항목별로 보면 단체여행비가 3만 8,446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운동 및 오락서비스가 7,102원, 문화서비스가 3,064원 감소하였다. 오락문화비의 감소 결과,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에서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문화여가지출률도 2019년 5.4%에서 2020년에 4.3%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의 4.3%와 같은 수준이다. 2018년 5.8%까지 증가했던 문화여가지출률이 2010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그림 Ⅶ-2).

[그림 Ⅶ-2] 문화여가지출률, 2010-2020



주: 1) 문화여가지출률=(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100. 1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임(2016년까지는 농림어가 제외, 2017년부터는 농림어가 포함).
2) 가계가동향조사 개편으로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 유의 필요.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주요 여가활동

〈표 Ⅶ-1〉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서 5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율이 높은 상위 10개의 여가활동을 파악한 것이다. 2019년 상위 10개위에 들었다가 2020년 순위에 들지 못한 여가활동은 '목욕·사우나·찜질방'과 '스포츠경기관람'이었다. '목욕·사우나·찜질방'은 2019년 16.8%에서 2020년 8.7%로 감소하였고, '스포츠경기관람'은 2019년 15.1%에서 2020년 9.2%로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없었으나 2020년에 상위

〈표 Ⅶ-1〉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상위 10개), 2019-2020

순위	2019년		2020년	
	여가활동	참여율 (%)	여가활동	참여율 (%)
1	TV 시청	71.4	TV 시청	67.6
2	잡담·통화·문자	38.2	산책 및 걷기	41.3
3	쇼핑·외식	37.4	인터넷검색·1인미디어 제작·SNS	34.2
4	인터넷검색·1인미디어 제작·SNS	35.5	잡담·통화·문자	33.0
5	산책 및 걷기	32.1	모바일컨텐츠·동영상·VOD 시청	32.6
6	친구만남	27.1	쇼핑·외식	26.5
7	모바일컨텐츠·동영상·VOD 시청	20.8	친구만남	25.7
8	음주	16.8	게임	18.9
9	목욕·사우나·찜질방	16.8	음악감상	17.6
10	스포츠경기관람	15.1	음주	14.5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를 합친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10개 여가활동에 속하게 된 활동은 '게임'(18.9%)과 '음악감상'(17.6%)이었다. 또한 '산책 및 걷기'(41.3%)와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32.6%)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 감염 위기가 높은 여가활동의 참여율이 줄어들고 대신 미디어 소비활동이나 야외 활동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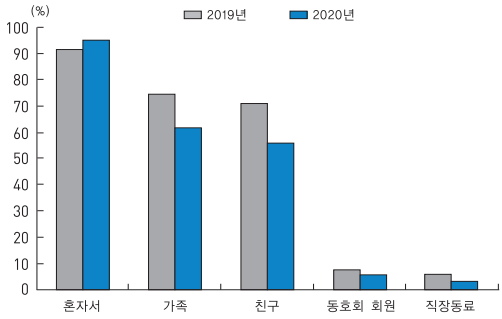
미국시간이용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에서도 이용시간 증감률 기준으로 2020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여가활동은 '게임·컴퓨터 오락활동'(36분)으로 2019년에 비해 37.8% 증가하였고, '휴식·생각'(24분)은 2019년에 비해 33.3% 증가하였다. '독서'(18분), '스포츠·레크레이션 활동'(24분), 'TV 시청'(3시간 6분)도 2019년에 비해 각각 21.4%, 15.6%, 11.3% 증가하였다. 반면 '기타 여가·스포츠 활동'(12분)과 '교제·소통'(30분)이 2019년에 비해 각각 23.8%, 18.2% 감소하였다(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2021.7.22).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증가한 반면, 여가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대면접촉을 포함하는 여가활동이 위축되었다. 일본의 시장조사기업 젬파트너스(GEM Partners)가 2020년 7월 4,07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여가활동이 증가했다는 비율('매우 증가'와 '다소 증가'의 합)이 높았던 활동은 '온라인 회식'(63%), '온라인 강습'(51%),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음식 먹기'(42%), 'VOD 시청'(42%), '동영상 시청'(42%) 등이었고, 감소했다는 비율('매우 감소'와 '다소 감소'의 합)이 높았던 활동은 '당일여행'(71%), '숙박여행'(68%), '가라오케'(64%), '테마파크'(64%), '음식점 회식'(64%) 등이었다(GEM partners, 2020.7.17).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각 나라의 여가활동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가활동 참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주로 함께한 여가활동 동반자(1-5순위 여가활동 기준)는 2020년의 경우 혼자가 94.9%로 2019년에 비해 3.2%p 증가한 반면, '가족'은 61.5%, '친구'는 55.8%로 2019년에 비해 각각 12.9%p와 14.8%p 감소하였다. '동호회' 회원과 '직장동료'가 여가활동의 동반자였던 경우는 7.6%와 5.6%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4%p와 2.7%p 감소하였다(그림 Ⅶ-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를 즐김으로써 가지는 여가의 사회적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가 동호회 활동 경험은 2020년 9.6%로 2019년의 10.3%에 비해 0.7%p 감소하였다. 여가 동호회 활동 유형을 보면, 스포츠참여활동이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18.5%), 문화예술참여활동(10.9%)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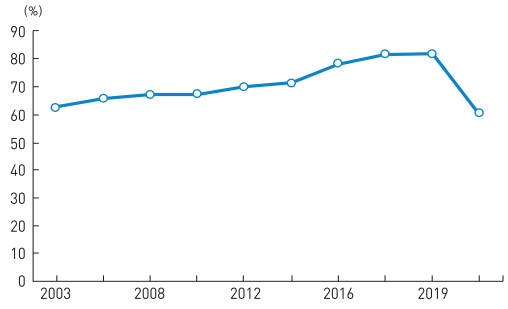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으로는 1-3순위까지의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식당이 38.0%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내 공터(28.8%), 카페(25.6%), 생활권공원(24.6%), 대형마트(21.9%) 등의 순으로 많아서 주거공간 주변의 생활공간에서 여가활동이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Ⅶ-3] 여가활동 동반자, 2019-2020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1-5순위 여가활동 각각에 대해 주로 함께한 동반자 응답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그림 Ⅶ-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3-2020



주: 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등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조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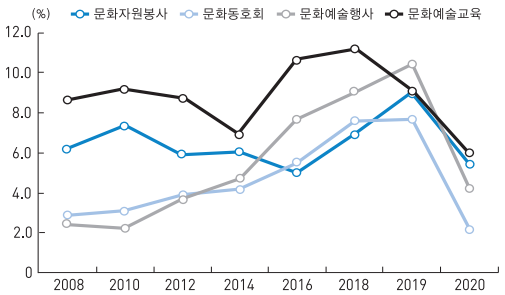
문화예술 활동

[그림 Ⅶ-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국민의 비율은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20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0.5%로 2019년에 비해 21.3%p나 감소하였다. 모든 장르 분야에서 관람률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영화(20.6%p), 대중음악·연예(16.1%p), 연극(9.1%p)의 감소폭이 컸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평균 3.1회로 2019년 6.3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의 감소는 젊은층보다 고령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크게 나타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에서 사회인구집단별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연령대별로 관람률이 가장 높은 20대와 가장 낮은 70대 이상 집단 사이의 격차가 2019년 47.5%p에서 2020년 63.8%p로 확대되었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6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미만 사이의 관람률 격차가 2019년 40.8%p에서 2020년 50.6%p로 벌어졌고, 지역별로도 대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의 격차가 2019년 12.7%p에서 2020년 17.0%p로 커졌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참여활동도 2020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창작발표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4.2%로 2019년 대비 6.2%p 감소하였다. 문화자원봉사 참여율도 5.4%로 2019년 대비 3.6%p 감소하였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2.2%로 전년 대비 5.5%p 감소하였다.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비율도 6.0%로 전년 대비 3.1%p 감소하였다(그림 Ⅶ-5).

[그림 Ⅶ-5]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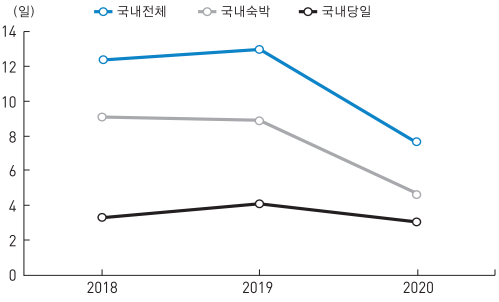
주: 1)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4)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여행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20년 86.4%로 전년 대비 6.0%p 감소했다. 국내여행 일수를 살펴보면, 2020년 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7.7일로 2019년 12.9일에 비해 40.9%가 감소하였다. 숙박여행 일수는 4.6일, 당일여행 일수는 3.0일로 2019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숙박여행 일수는 47.9%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그림 Ⅶ-6).

1인 평균 국내여행 일수는 연령대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가 10.8일로 가장 많은 반면 70대 이상은 2.5일로 가장 적었다. 가구소득 수준에서는 600만 원 이상에서 10.0일로 가장 길었던 반면, 100만 원 미만에서는 3.0일로 가장 짧았다. 2019년 대비 전 연령대와 가구소득 수준에서 모두 여행 일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림 Ⅶ-6] 국내여행 일수, 2018-2020



주: 1) 만 15세 이상 국민의 1인 평균 국내여행 일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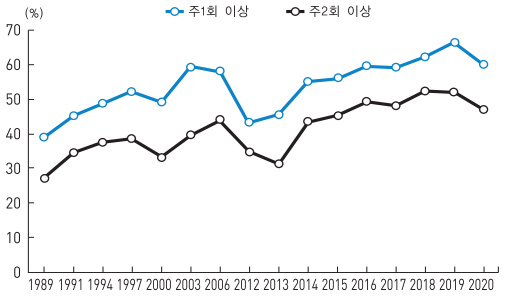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전후 스포츠 관람률의 변화는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당 평균 관중 수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당 평균 관중 수를 보면, 야구의 경우 2020년 경기당 579명으로 전년 1만 280명에 비해 급감하였고, 축구의 경우도 경기당 383명으로 전년

5,769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프로스포츠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급감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관람률 역시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생활체육조사」를 통해 집계된 국민들의 지난 1년간 주 1회 이상 규칙적(1회 운동시 30분 이상) 생활체육 참여 비율을 보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0년 60.1%로 전년 66.6%에서 6.5%p 감소하였고,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0년 47.0%로 전년 52.2%에서 5.2%p 감소하였다(그림 Ⅶ-7). 종목별로 보면 걷기(41.9%)와 등산(17.6%)이 전년 대비 0.3%p 증가한 반면, 보디빌딩(13.3%), 수영(6.2%), 요가, 태보, 필라테스(6.7%)가 전년 대비 각각 2.9%p, 2.8%p, 1.1%p 감소하였다.

[그림 Ⅶ-7] 생활체육 참여율, 1989-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주 1회, 주 2회 이상 등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가입률은 2020년 13.6%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종목별로 보면, 체육 동호회 가입자 기준으로 축구/풋살(20.8%), 골프(14.4%), 배드민턴(6.8%), 탁구(6.7%), 테니스(5.4%), 볼링(5.0%)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미디어 이용

미디어 이용에서는 스마트폰 이용과 TV 시청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들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9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이용률이 77.1%로 높다. 2019년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률은 2.9%p 증가하였고, TV 이용률도 2.1%p 증가하였다. 매체 이용 시간에서는 TV 시청시간이 3시간 9분으로 전년 대비 14분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55분으로 전년 대비 6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기에 두 매체에 대한 이용시간이 모두 증가하였다.

여가활동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은 평일 2시간, 휴일 2시간 18분으로 하루 평균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이 평일 54.1%, 휴일 41.1%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이 평일 16.9%p, 휴일 11.4%p 증가하였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유형으로는 웹서핑이 26.2%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

메신저(19.9%), SNS(12.9%), 인터넷 방송 시청(11.3%), 게임(10.2%)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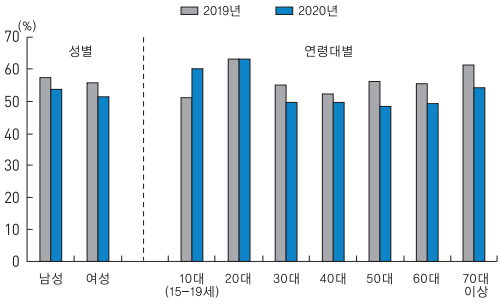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괄한 일반도서를 읽는 비율로 연간 독서율을 산출한다. 2019년 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독서율은 55.4%, 초·중·고 학생의 독서율은 91.9%로 나타나서, 2017년에 비해 각각 6.9%p와 1.3%p 감소하였다. 연간 독서량은 성인 7.3권, 초·중·고 학생 38.8권으로 나타나 성인은 2017년 대비 2.1권 감소한 반면, 초·중·고 학생은 4.5권 증가하였다. 성인의 독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인들이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9.1%)이 가장 많았고,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7.7%),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않아서(13.6%), 다른 여가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의 독서실태를 보여주는 조사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출판시장통계」에 따르면 단행본 부문과 만화·웹툰·웹소설 부문에서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주요 서점 매출이 증가하였고, 서점 온라인 매출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판통계를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독서 활동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신장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여가 만족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5%로 2019년 56.4%에 비해 3.9%p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19년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 비율의 감소폭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가생활 만족 비율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반면, 15–19세 연령층에서는 여가생활 만족 비율이 증가하였다(그림 Ⅷ–8).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여가활동의 제한이 많았음에도 선호 여가활동이나 여가환경에 따라 연령별로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컸다.

[그림 Ⅷ–8] 성 및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2019–2020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만족도는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 또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 이유로는 시간 부족(49.9%)과 경제적 부담(31.4%)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5.6%), 이전 경험 부족(4.3%), 여가 동반자 부족(3.5%), 여가시설 부족(2.7%) 등의 이유가 응답 되었다. 2019년에 비해 시간 부족이 1.3%p 줄어든 반면, 경제적 부담은 2.5%p 늘었다.

참고문헌

U.S. Bureau of Labour Statistics. 2021.7.22. "AMERICAN TIME USE SURVEY: MAY TO DECEMBER 2019 AND 2020 RESULTS."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atus_07222021.htm.

GEM Partners. 2020.7.17. Change in time spent on recreation and entertainment amid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in Japan as of July 2020, by type [Graph]. In Statista. Retrieved October 04, 2021, from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20981.

코로나19와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그동안 증가해 왔던 디지털 여가활동이 더욱 확산되면서 디지털 여가가 여가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 디지털 여가활동의 최근 확산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생활하는 포노 사피엔스의 OTT 서비스 이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젊은 고학력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디지털 여가활동의 증가가 전체 사회집단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방송/OTT 시청 시간 증가를 경험한 경우가 감소보다 많아서 디지털 여가활동의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활동 제한 조치는 여가활동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여러 종류의 여가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여가로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여가활동은 덜 타격을 받거나 오히려 더 활성화되었다는 지적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국내 OTT 산업의 급성장이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여가활동의 디지털화나 관련 산업이 성장해 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더 성장하였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은 드문 상황이었다. 이 글에서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등장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에 나타난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여가활동 시간의 변화를 통해 디지털 여가활동이 일상의 여가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여가활동의 내용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포노 사피엔스의 디지털 여가활동의 특징과 함께 OTT 서비스 이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디지털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

〈표 Ⅷ-2〉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을 포함하는 2020년의 여가시간을 보면, 평일 3시간 42분, 휴일 5시간 36분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1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은 평일 2시간, 휴일 2시간 18분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42분이 증가하였다. 여가시간이 평일과 휴일

모두 12분 증가하는 동안,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시간은 42분이 증가하였다. 여가시간의 변화를 증가율로 산출하면 여가시간의 증가율은 평일 5.7%, 휴일 3.7%인데 반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증가율은 평일 53.8%, 휴일 43.8%에 달했다.

〈표 Ⅷ-2〉 여가시간과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2019-2020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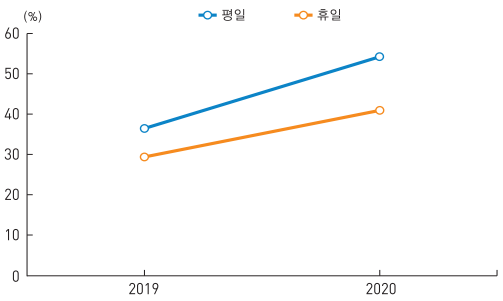
	2019		2020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여가시간	3.5	5.4	3.7	5.6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1.3	1.6	2.0	2.3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게임, SNS활동, TV시청, 영화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2020.

여가시간의 증가보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그림 Ⅷ-9]에 제시된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휴일의 경우 2019년 29.6%에서 41.1%로, 평일은 2019년 36.5%에서 2020년 54.1%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평일은 전체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이다.

이와 같이 1년의 짧은 기간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는 스마트기기 활용의 자연적인 증가를 넘어서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의 규제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축소시키고, 시설이나 동호회 기반의 여가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림 Ⅷ-9]에 나타난 두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이 휴일보다 평일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휴일이 평일에 비해 야외활동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Ⅷ-9]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의 비중, 2019-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의 비중은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게임, SNS활동, TV시청, 영화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표 Ⅷ-3〉은 사회인구집단별로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의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연령대별 차이에서 나타난다. 평일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의 비중은 10대가 84.8%인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25.9%에 머문다.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명확해서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의 비중

이 높았다. 또한 미혼일수록, 동거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일수록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 차이는 평일과 휴일이 달랐다. 평일의 경우 남성의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의 비중이 여성보다 근소하게 높은 반면, 휴일에는 여성의 스마트기기 활용의 비중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성의 야외 여가활동이 휴일에 더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Ⅷ-3〉 사회인구집단별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의 비중,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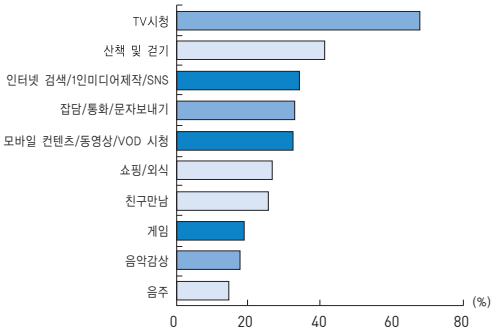
	평일	휴일
전체	54.1	41.1
성		
남성	55.6	40.7
여성	54.1	43.4
연령		
10대	84.8	62.1
20대	78.4	57.4
30대	74.2	49.1
40대	59.4	40.4
50대	48.5	31.5
60대	32.5	25.0
70대 이상	25.9	23.0
학력		
초졸 이하	21.8	21.3
중졸	22.6	21.3
고졸	36.4	31.0
대졸 이상	54.3	38.2
동거 가구원 수		
1인	42.6	37.5
2인	42.5	33.9
3인 이상	61.8	43.6
결혼여부		
미혼	75.0	54.1
기혼	48.6	35.8
사별/이혼/기타	30.0	25.8
월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1.0	31.8
100-200만 원 미만	37.8	32.8
200-300만 원 미만	50.0	39.3
300-400만 원 미만	54.3	42.6
400-500만 원 미만	61.8	43.6
500-600만 원 미만	60.6	42.9
600만 원 이상	63.6	46.3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의 비중은 여가시간 대비 스마트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게임, SNS활동, TV시청, 영화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디지털 여가활동의 내용

다음으로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서 디지털 여가활동이 얼마나 꼽히며 어떠한 디지털 여가활동이 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Ⅷ-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상위 10개 여가활동 중 디지털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진 항목은 인터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 게임 등 세 가지였다. 부분적으

[그림 Ⅷ-10]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상위 10개), 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를 합친 비율임.
3) 그림에서 디지털 여가활동에 해당되는 항목일수록 색깔을 진하게 표시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로 디지털 여가활동이 섞여 있는 항목은 TV시청, 잡담 통화하기/문자보내기, 음악감상 등 세 가지였다. TV시청의 경우 TV수상기를 통한 시청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관람이 늘고 있으며, 시청과 연관된 스마트기기 활동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디지털 여가와 연관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상위 10개 여가활동 중 세 가지가 온전히 디지털 여가활동으로, 또한 디지털 여가활동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항목이 세 가지라는 점에서 디지털 여가활동이 이미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Ⅷ-4〉 사회인구집단별 디지털 여가활동 참여율, 2020

(%)

	TV시청	모바일 컨텐츠/동영상/VOD 시청
전체	67.6	32.6
성		
남성	63.9	35.3
여성	71.3	30.0
연령		
10대	36.2	51.7
20대	39.9	51.7
30대	60.8	44.1
40대	71.8	37.7
50대	76.0	27.8
60대	82.5	15.9
70대 이상	89.3	4.2
학력		
초졸 이하	91.2	2.0
중졸	92.8	4.4
고졸	81.1	19.9
대졸 이상	71.8	31.0
동거 가구원 수		
1인	76.7	25.6
2인	77.8	20.1
3인 이상	63.3	37.5
결혼여부		
미혼	41.3	49.3
기혼	75.5	28.3
사별/이혼/기타	87.8	15.3
월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88.7	10.4
100-200만 원 미만	83.9	15.5
200-300만 원 미만	74.8	27.8
300-400만 원 미만	70.9	35.1
400-500만 원 미만	66.8	40.2
500-600만 원 미만	60.2	38.6
600만 원 이상	55.2	34.7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으로 해당 여가활동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임(1-5순위 복수응답 결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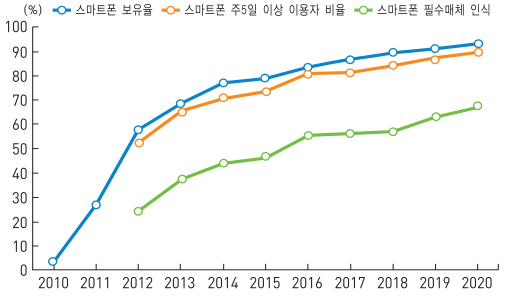
〈표 Ⅷ-4〉는 사회인구집단별 디지털 여가활동의 참여 비율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V시청과 모바일 콘텐츠/동영상/VOD시청을 비교한 것이다. TV시청과 모바일 콘텐츠 시청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와 OTT 서비스 이용

포노 사피엔스의 전제 조건은 스마트폰의 보유와 이용 확산이다. [그림 Ⅷ-11]에 따르면 2010년 3.8%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대 초반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57.5%로 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93.1%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인구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주 5일 이상 이용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 인구 비율도 스마트폰 보유 인구 비율의 증가에 상응하여 2020년에는 90.2%에 달했다.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도 2012년 24.3%에서 2020년에는 67.2%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 이루어진 스마트폰 보유와 이용의 급격한 증가는 포노 사피엔스의 실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림 Ⅶ-11] 스마트폰 보유율 및 이용률과 필수매체 인식,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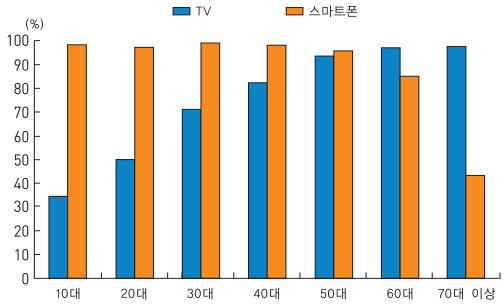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주5일 이상 이용률은 지난 1년 동안 매체를 주 5일 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3) 스마트폰 필수매체 인식은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12]는 TV와 스마트폰을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인구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이용 인구 비율이 TV 이용 인구 비율보다 높다. 포노 사피엔스의 전제 조건으로서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용 빈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와도 연관된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를 TV 혹은 스마트폰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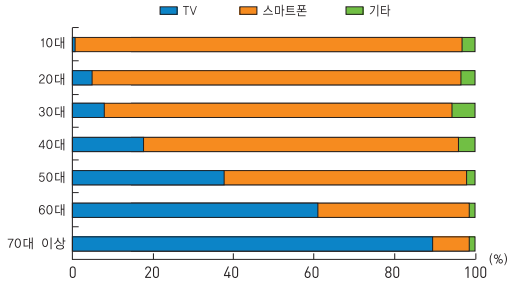
[그림 Ⅶ-12] 연령대별 TV 및 스마트폰 이용률,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해당 매체를 주 5일 이상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13]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60대 이상에서는 스마트폰보다 TV를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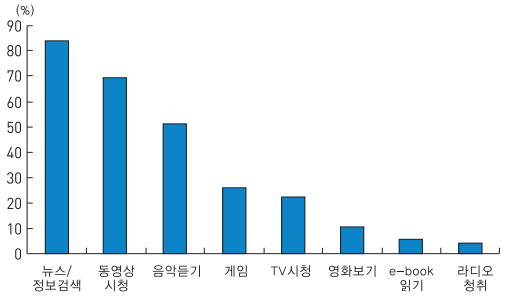
[그림 Ⅶ-13] 연령대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를 한 가지 선택한 비율임.
3) 기타 매체는 라디오, 신문, 데스크톱/노트북 등을 포함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기능 중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뉴스/정보 검색이었고, 다음으로 동영상 시청, 음악듣기, 게임, TV시청, 영화보기, e-book 읽기, 라디오 청취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기능이 뉴스/정보 검색과 같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오락 추구나 여가 휴식 활동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폰이 디지털 여가활동의 중요한 매체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Ⅶ-14] 스마트폰 콘텐츠 유형별 이용 빈도,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표 Ⅶ-5〉는 스마트폰 미디어 기능의 이용 장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미디어 기능을 집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동 중 이용 비율은 음악듣기와 라디오 청취가 높게 나타났다.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모바일 기기로서 이동 중에 활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전기기로서 실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전기와 대중매체의 보급에 따라 활성화되었던 가정 기반 여가활동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디지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Ⅶ-5〉 스마트폰 미디어 기능 이용 장소, 2020

(%)

	집	사무실 / 학교	이동 중
뉴스/정보 검색	84.6	30.0	28.8
동영상 시청	87.4	22.6	25.7
음악듣기	72.2	18.1	40.9
게임	82.4	14.1	24.2
TV시청	80.3	16.4	16.9
영화보기	83.7	8.5	14.4
e-book읽기	77.8	15.4	25.2
라디오 청취	54.4	19.4	40.6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미디어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장소의 해당 여부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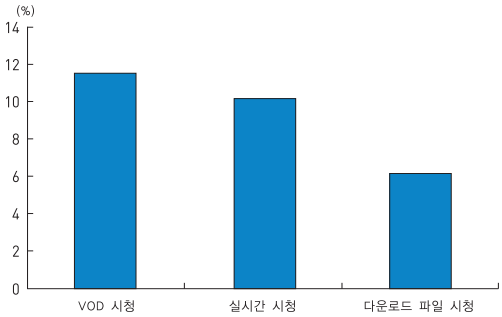
포노 사피엔스의 디지털 여가활동이 가지는 성격은 TV시청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Ⅶ-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TV시청 방식은 실시간 시청(10.1%)보다 VOD 시청(11.5%)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TV수상기로 시청하는 경우 실시간 시청의 비율(87.4%)이 VOD 시청 비율(20.5%)보다 훨씬 많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포노 사피엔스의 TV시청 방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TV시청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TV 시청 중 스마트폰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57.2%로

데스크톱/노트북(8.9%)이나 태블릿PC(4.4%)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그림 Ⅶ-16]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유로 채팅/메신저 이용이 59.8%로 가장 많았고, 습관적 이용(35.3%), 정보 검색(22.1%), 다양한 업무 처리(3.1%), 게임하기(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포노 사피엔스에 의해 TV시청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V시청이 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소비되는 활동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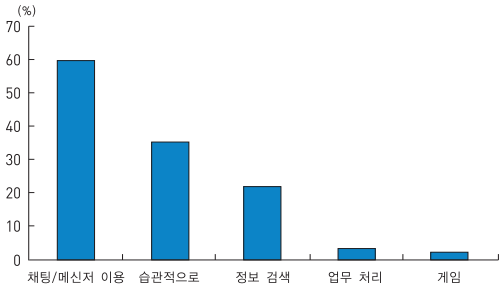
포노 사피엔스의 디지털 여가활동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는 OTT 서비스(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이다. OTT 서비스 이용은 2018년 42.7%에서 2020년 66.3%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Ⅶ-17]의 연령별 OTT 서비스 이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OTT 서비스의 주 연령층은 젊은 층이지만 최근들어 전체 연령층의 이용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Ⅶ-15] 스마트폰을 이용한 TV 시청 방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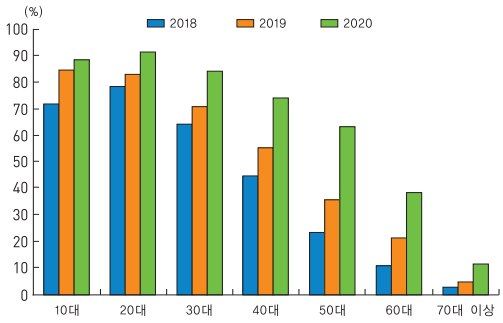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16] TV 시청 시 스마트폰 이용 이유,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TV 시청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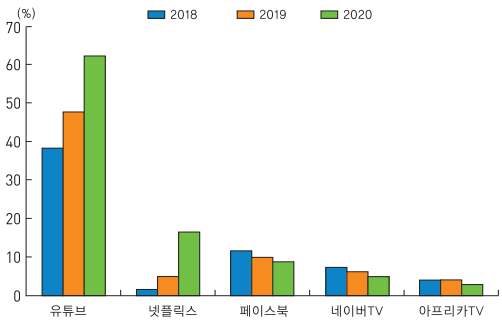
[그림 Ⅶ-17] 연령대별 OTT 서비스 이용률, 2018-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이용률은 해당 연령집단 인구 중 평소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18]에 제시된 것처럼 OTT 서비스 이용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서비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였다. 페이스북, 네이버TV, 아프리카

[그림 Ⅶ-18] OTT 서비스별 이용률, 2018-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이용률은 평소에 해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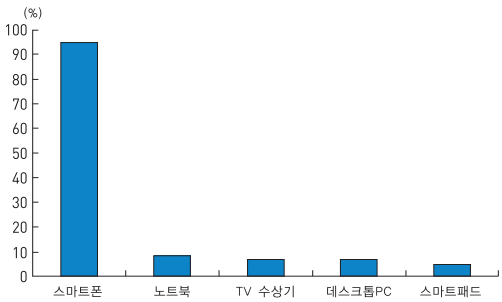
TV의 이용률은 지난 3년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적으로는 유튜브 이용률이 2018년 38.4%에서 2020년 62.3%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OTT 서비스 이용확장을 주도해 왔다. 넷플릭스도 2018년 1%대의 이용률에서 2020년 16.3%까지 이용률이 올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OTT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는 매체는 스마트폰이 94.8%로 단연 높다(그림 Ⅶ-19). 이와 같은 사실은 OTT 서비스 이용이 포노 사피엔스 디지털 여가활동의 주요 사례임을 확인해 준다.

코로나19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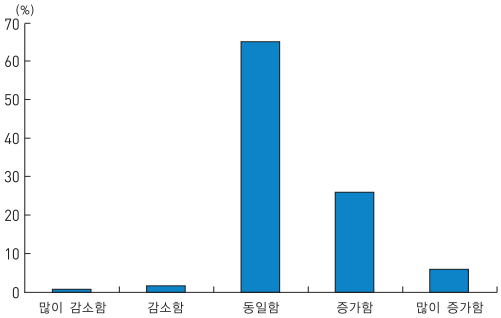
[그림 Ⅶ-20]은 코로나19가 방송과 OTT 시청시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방송이나 OTT 시청시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다.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대부분 증가했다는 응답이었다. 시청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증가함'+'많이 증가함')이 32.1%

[그림 Ⅶ-19] OTT 서비스 이용 시 매체,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평소 OTT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기기를 물어본 결과임(복수응답).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20]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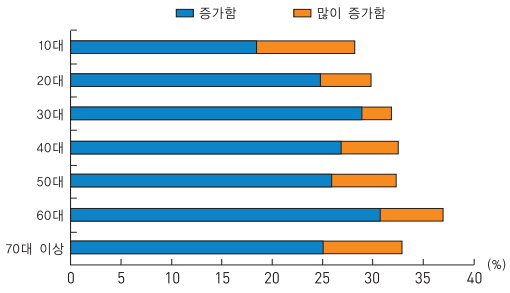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평소에 방송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인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많이 감소함'+'감소함')은 2.3%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시청시간 증가는 전체 연령층에서 모두 나타났다. [그림 Ⅶ-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증가는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 시청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8.1%와 29.8%로 30%에 못 미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30% 이상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60대는 36.9%로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29.9%)보다 여성(34.4%)이 더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일관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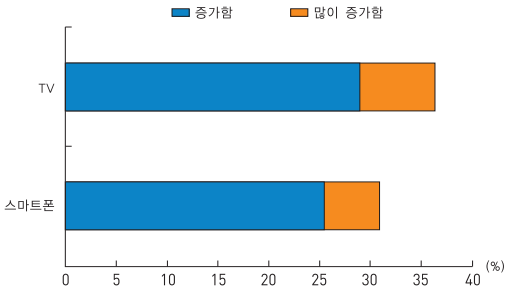
[그림 Ⅶ-22]는 TV를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집단과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집단 간 코로나19 이후 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시청시간 증가가 디지털 여가활동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TV방송 시청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TV를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집단의 시청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은 36.4%로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집단의 30.9%보다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시청시간 증가가 TV를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기존의 방송 TV 시청 확대로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시청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디지털 여가활동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Ⅶ-21] 연령대별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평소에 방송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임. 그림에는 '증가함', '많이 증가함'의 응답 비율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0.

[그림 Ⅶ-22] 필수매체 인식별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TV 또는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소에 방송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임. 그림에는 '증가함', '많이 증가함'의 응답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원자료, 2020.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변화

김은희 (한국관광공사)

- 빅데이터를 통해 세대별 국내 여행활동을 추적한 결과, 여행활동은 50대가 가장 활발했으며, 10대와 70대 이상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이동 반경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적 여행활동을 하기 어려운 1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행이동 반경이 좁아졌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활동은 더욱 위축되었으며, 특히 20대의 여행이동 감소폭이 컸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소폭 증가한 60대 이상 고령층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여행이동 또한 감소하였다.
- 인문형, 레포츠형, 음식형 여행지의 경우 20대의 여행이동 비중이 가장 컸으며, 자연형과 쇼핑형 여행지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대는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이동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은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이동이 증가하기도 했다.
- 10-30대가 주를 이루는 MZ세대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이동이 감소하지만 특색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포함된 음식 유형에서는 이동이 증가해 여행에 선택과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늘 무언가를 향하여 움직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의미하는 호모비아토르(Homo Viator) 즉, 여행하는 인간은 인간과 여행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은 여행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 호모비아토르인 인류와 여행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한다.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발생은 세계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켰고, 호모비아토르인 인류에게 여행의 단절을 가져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동의 제한'을 가져왔고,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여행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협에 강제 '셧다운'을 당하며 격동의 변화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위협은 여행하는 인간인 호모비아토르에게 억눌려온 여행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돌파구로서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들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여행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여행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여행은 사회적 층위에 따라 행동양식의 변화가 큰 사회적 행위이다.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과 역동적 현대사로 인해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층위에 따라 행동양식의 변화가 큰 여행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여행행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세대별 여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UNWTO),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산출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한국의 국내외 여행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www.datalab.visitkorea.or.kr)'이 제공하는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별 여행행동 양식을 시의성 있게 분석함으로써 전환기에 놓인 한국 사회 여행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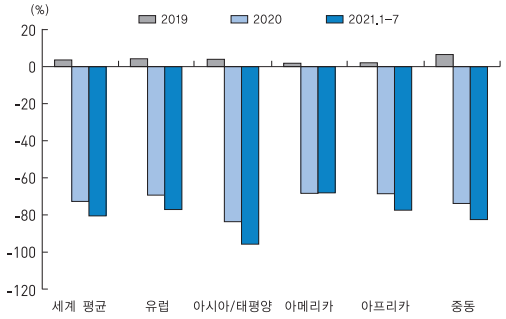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춰버린 해외여행

한국의 현대사는 역동적이다. 역동적인 현대사의 변화만큼 한국인의 여행 또한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마이카시대가 도래하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인의 여가활동에서 여행이 갖는 위치와 의미는 달라졌다. 또한 1988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한국의 경제수준이 상승하면서 여행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행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행행태 변화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만든 코로나19의 발생은 전 세계 해외여행을 '잠시 멈춤' 상태로 만들었다. [그림 Ⅶ-23]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간 이동의 제한으로 2020년 국제여행객은 2019년 대비 73% 감소했으며, 2021년(1-7월)은 2019년 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모든 대륙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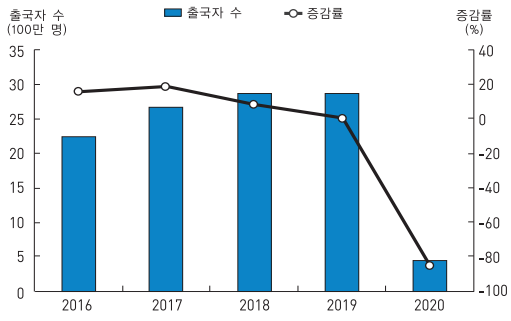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Ⅶ-24]는 한국의 내국인 출국자 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의 내국인 출국자는 2016년 2,238만 3,000명에서 2019년 2,871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85.1%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Ⅶ-23]과 [그림 Ⅶ-24]의 국제관광 관련 감소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2020년 세계

[그림 Ⅶ-23] 세계 국제관광인구의 변화, 2019-2021.7



주: 1)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전년 대비 국제관광인구의 증감률이며, 2021년 자료의 경우 코로나19 전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을 비교연도로 설정함.
2) 2021년은 1-7월 누적 인구 기준임.
출처: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TOURISM DASHBOARD* (https://www.unwto.org/unwto-tourism-dashboard).

[그림 Ⅶ-24] 내국인 출국자 수의 변화, 2016-2020



주: 1) 증감률은 전년 대비 출국자 수의 증감률임.
2) 출국자 수는 1998년부터 승무원(crew members)이 포함된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의 국제관광과 한국의 해외여행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세대별 여행 변화는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내여행 동향

여행이란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단,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예: 단순식사, 출퇴근 등)와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예: 거주지 근처의 산책, 쇼핑, 교양활동, 취미활동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즉 여행행위란 단순히 거주지를 벗어나는 사람의 이동 행위가 아닌 여행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를 벗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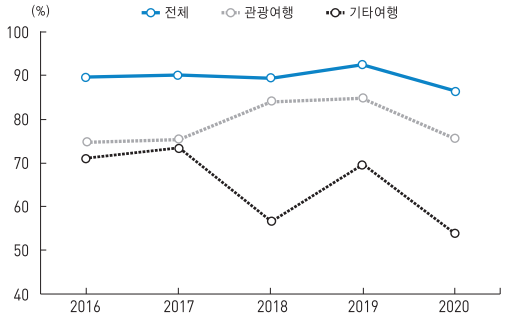
이러한 여행의 정의로 인해 실제 한국인의 여행 총량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197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여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여행총량을 추산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국내여행 총량을 '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등 4가지 항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여행을 '관광여행(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과 '기타여행(출장·업무 방문·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방문, 단순 결혼식 및 장례식 참여 등 목적의 여행)'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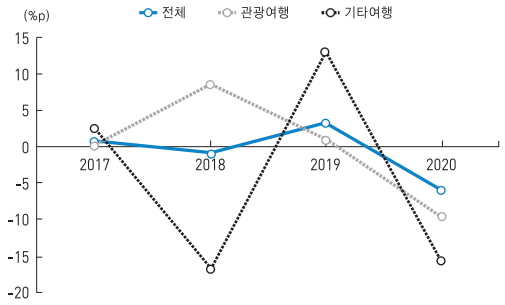
[그림 Ⅷ-25]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여행 경험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5년간 국내여행 경험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6년 89.5%이던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7년 90.1%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였지만, 2018년 89.2%로 전년 대비 0.9%p 소폭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2%p 상승하여 92.4%의 경험률을 나타

[그림 Ⅷ-25] 국내여행 경험률의 변화, 2016-2020

1) 국내여행 경험률



2) 전년 대비 증감



주: 1) 국내여행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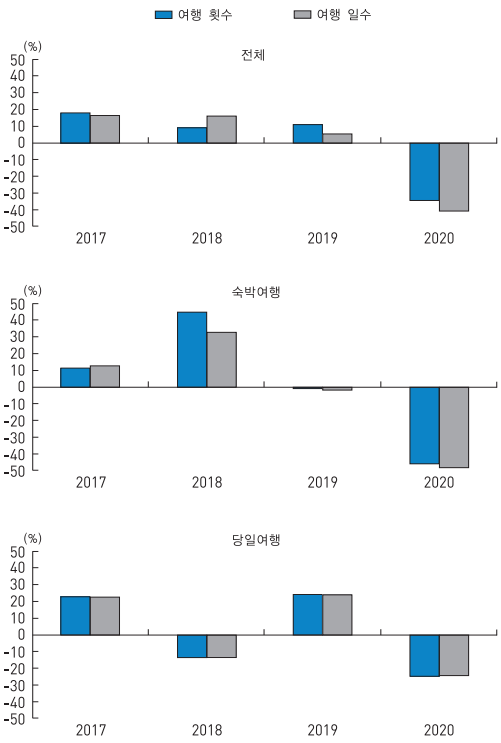
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6.0%p 감소한 86.4%를 나타내며, 분석기간 중 가장 낮은 여행 경험률을 보였다.

국내여행 중 관광여행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코로나19의 등장으로 2020년 큰 폭의 감소세(−9.5%p)를 보였다. 출장, 귀성, 친지방문 등 기타여행의 경우 2019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광여행과 마찬가지로 2020년 큰 폭의 감소세(−15.8%p)를 나타냈다.

[그림 Ⅷ−26]은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것이다. 국내여행 횟수와 일수는 2016년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이동이 급감한 2020년의 경우 여행 횟수(−34.7%)와 여행 일수(−40.6%)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여행 횟수에 비해 여행 일수의 감소폭이 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거리 당일여행을 선호하게 된 여행의 변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여행의 변화는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의 증감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숙박여행의 경우 전년 대비 여행 횟수의 증감률이 −45.5%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 당일여행은 −25.0%로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림 Ⅷ−26] 국내여행 횟수 및 일수의 변화, 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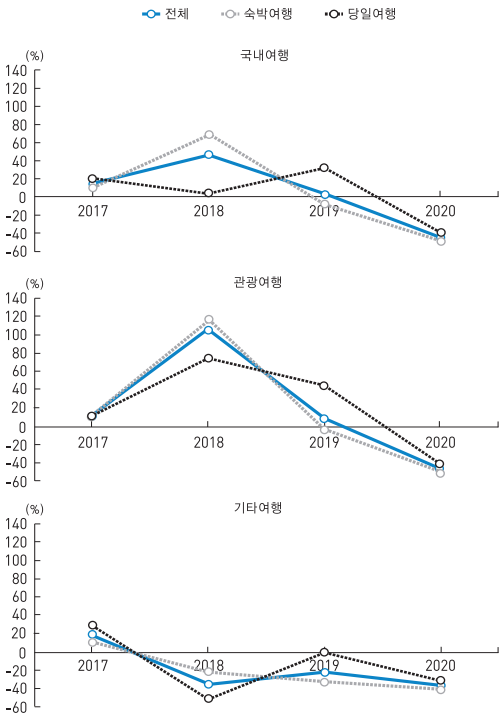


주: 1) 국내여행 횟수 및 일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그림 Ⅷ−27]은 국내여행 지출액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것이다. 국내여행 지출액은 앞서 살펴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여행 지출액은 2020년 45.4% 감소하였으며,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은 각각 −47.9%, −40.0%로 감소해 숙박여행의 감소폭이 당일여행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국내여행 지출을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관광여행 지출액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타여행의 지출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광여행의 경우 2020년 이전까지 당일여행 지출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출액의 흐름은 한국인의 여행 행태가 점차 위락과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짐을 보여주며, 일상에서 멀리 떨어지진 않지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당일 관광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Ⅷ-27] 국내여행 지출액의 변화, 2017-2020



주: 1) 국내여행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빅데이터로 바라본 세대별 국내여행 이동

거주지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을 고유한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여행은 점차 기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일상여행', '한달살기', '워케이션' 등과 같이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한 여행의 행태들이 등장한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의 패러다임은 더욱 일상 속으로 확장됐다. 이렇듯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코로나19 시대에 여행의 행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동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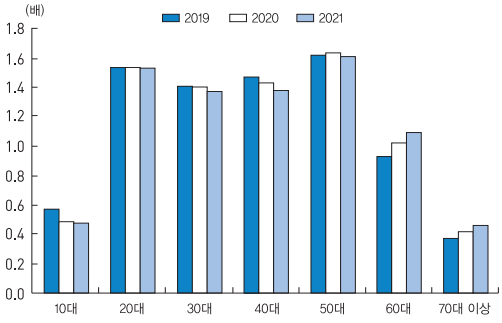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실제 이동행태를 반영하는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여행 이동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여행은 활동적 측면이 강조되는 적극적 여가활동 유형으로서 세대 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여행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대별 여행이동 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Ⅷ-28]은 세대별 여행이동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활발한 여행활동을 보이는 세대는 50대로, 전체 세대 평균에 비해 2019년 1.62배, 2020년 1.63배, 2021년 1.61배의 활발한 이동량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여행활동이 활발한 세대는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대는 전체 세대의 평균적인 여행활동에 비해 활발한 여행이동행태를 보였다. 반면 10대와 70대는 세대의 평균적인 여행이동

량에 비해 낮은 이동량을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행이동량 변화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세대는 10대와 60대이다. 10대의 경우 코로나19 전에는 전체 세대 평균 대비 0.57배이던 여행활동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체 세대 평균 대비 0.49배로 더욱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60대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세대 평균 여행이동량을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여행활동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행이동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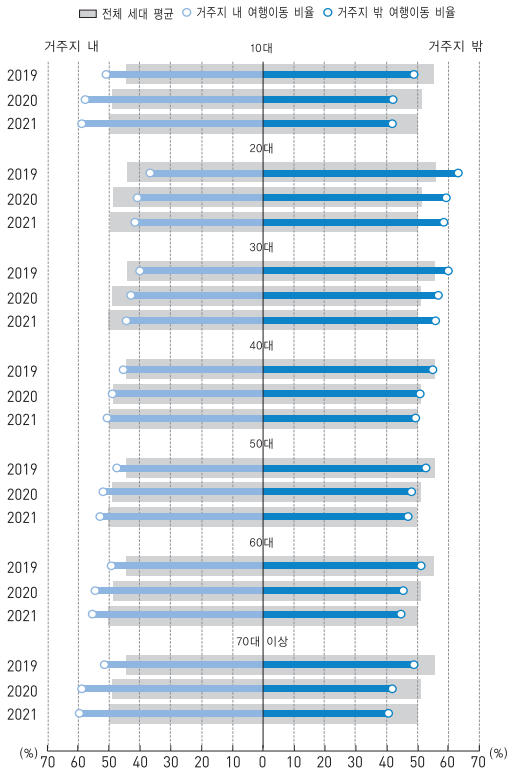
[그림 Ⅶ-28] 세대별 여행활동력 비교, 2019-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여행활동력은 전체 세대 평균 여행이동량 대비 해당 세대 여행이동량의 비로 파악하였음.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그림 Ⅶ-29]는 세대별 여행이동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거주지 내에서의 여행이동 과 거주지 밖으로의 여행이동을 구분한 여행활동 반경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행활동 반경이 가장 넓은 세대는 20대로, 2019년 거주지 밖으로의 여행이동은 전체 세대 평균보다 7.48%p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여행활동 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넓어진 것을 확인

[그림 Ⅶ-29] 세대별 여행활동 반경 비교, 2019-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거주지 내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거주지 밖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외로의 이동을 의미함.
5) 여행활동 반경은 세대별 전체 여행이동량을 거주지 내 이동과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으로 구분해 그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 비중이 클수록 활동 반경이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할 수 있다(2020년 7.93%p, 2021년 8.38%p).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의 여행활동 반경이 좁아진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이 위축됐다.

여행활동 반경이 가장 좁은 세대는 70대 이상으로 2019년 거주지 내의 여행이동은 전체 세대 평균보다 7.08%p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여행활동 반경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여행활동 반경이 좁은 세대는 10대,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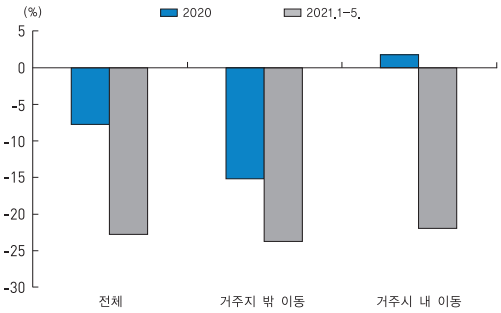
여행활동에 대한 자립성이 낮고, 학령인구가 주를 이루는 10대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여행활동 반경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여행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림 Ⅶ-30]은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여행이동량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의 경우, 전체 여행이동량은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으며, 거주지 내 이동은 오히려 1.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거리 여행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면서 거주지 내 여행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바이러스 등의 위험은 여행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2021년 1-5월의 여행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하였다. 특히 대안적 여행활동으로 부상한 거주지 내 여행이동 역시 2021년에는 대폭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9%의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큰 폭의 여행 감소 현상은 백신접종이라는 긍정적 변수가 있었음에도 3차 대유행 이후 늘어난 확진자 수 규모와 생활권 내 높아진 감염위험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Ⅶ-30] 코로나19 이후 여행활동 반경의 변화, 2020-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거주지 내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거주지 밖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외로의 이동을 의미함.
5) 통계치는 전년(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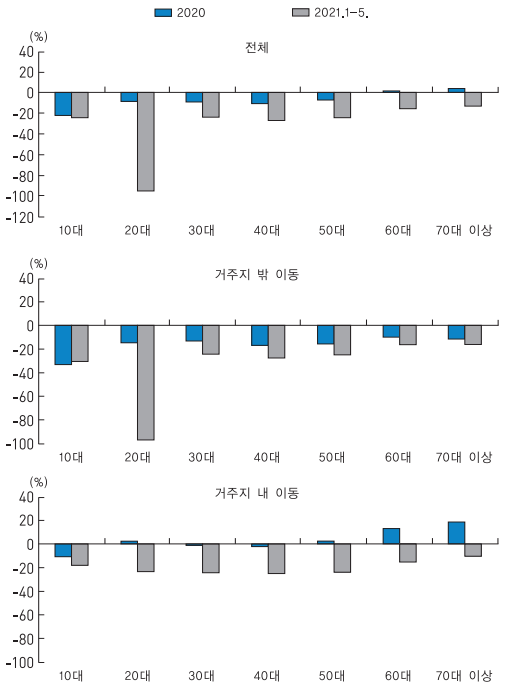
[그림 Ⅶ-31]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대별 여행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활동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세대는 20대로 2021년 거주지 밖으로의 여행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96.8% 감소하였으며, 전체 여행 이동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4.7%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증가한 60대(12.4% 증가)와 70대(18.1%% 증가)는 2021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생활권 내 감염위험 증가로 인해 거주지 내 여행이동이 각각 15.5%, 10.9% 감소하였다.

코로나19는 여행활동을 위축시키고 여행활동 반경을 좁혔을 뿐 아니라 선호하는 여행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지 분류 기준에 따라 자연, 인문(문화/예술/역사), 레포츠, 쇼핑, 음식 등 다섯 가지 대분류로 여행지를 구분하고 여행지 속성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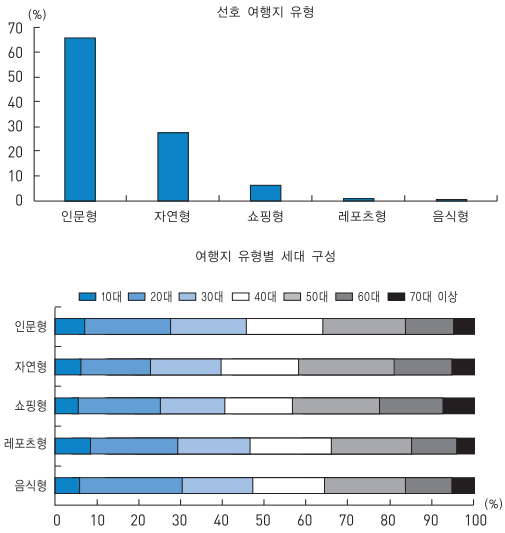
[그림 Ⅶ-32]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세대의 여행이동량을 통합해 선호 여행지 유형과 여행지 유형별 세대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선호 여행지 유형을 보면, 인문형 여행지가 65.7%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형 27.3%, 쇼핑형 6.1%, 레포츠형 0.6%, 음식형 0.3%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그림 Ⅶ-31]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여행활동 반경의 변화, 2020-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거주지 내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거주지 밖 이동이란 해당 POI 행정동 외로의 이동을 의미함.
5) 통계치는 전년(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그림 Ⅶ-32] 선호 여행지 유형과 여행지별 세대 구성, 2019-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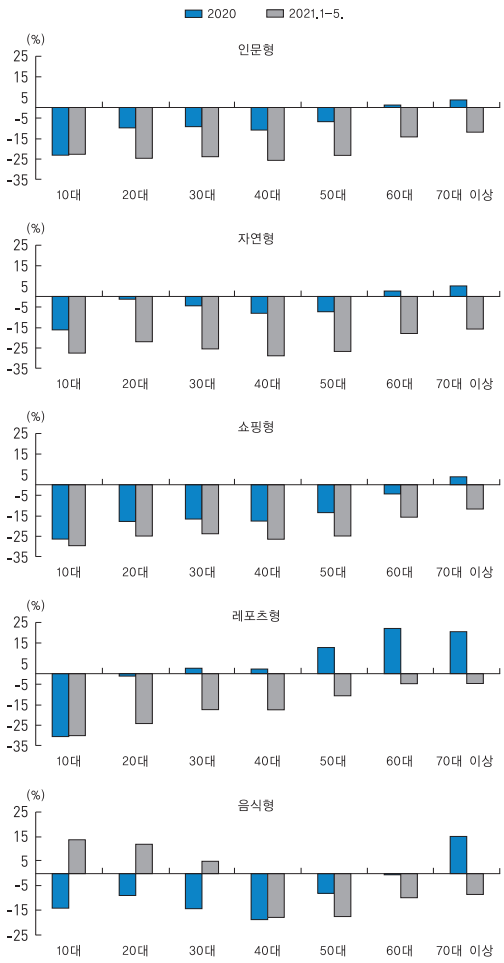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지 유형별 세대 구성을 보면, 인문형, 레포츠형, 음식형 여행지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형과 쇼핑형 여행지는 5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행활동력이 가장 높은 세대인 50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 Ⅶ-33]은 여행지 유형별로 세대별 여행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선호 여행지 유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변화를 보면, 10대는 거의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여행이동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0대 또한 10대 다음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40대는 10대의 부모세대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40대의 여행 감소는 10대의 여행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70대 이상은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여행이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레포츠형, 음식점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징은 70대 이상의 거주지 내 이동 증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60대 또한 쇼핑형과 음식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여행지 유형에서 여행이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세대별 여행이동이 감소한 가운데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레포츠형 여행이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행지 유형에서 모든 세대의 여행이동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이동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림 Ⅶ-33]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여행지 이동량의 변화, 2020-2021.5



주: 1) 통신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는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2) 여행목적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관심지역 1,249개 POI에 대한 월별 이동량을 집계함.
3) 2021년의 경우 1-5월까지의 이동량을 집계함.
4) 통계치는 전년(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kt통신 데이터」, 원자료, 2019.1.-2021.5.

불구하고 음식형 여행지의 경우 MZ세대로 분류되는 10-30대에서 여행이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MZ세대의 여행 트렌드와도 관계된다. MZ세대는 여행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 카페와 특색있는 음식점에 집중되어 여행지 특유의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대별 여행이동 자체는 줄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행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코로나19는 여행을 '잠시 멈춤'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가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끝까지 억누를 수는 없었다.

전 세계는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을 기대하며 '트래블버블(협정을 맺은 국가 간 자유롭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과 같은 여행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여행은 한동안 '잠시 멈춤'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여행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대안적 여행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장거리 여행보다는 단거리 여행을, 유명관광지보다는 일상의 여행지를 여행하며 여행이 금기시되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여행산업은 오랫동안 관광수지 적자, 관광 내수시장 확대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여행지와 일상의 여행지들에 대한 매력을 찾아내는 등 내수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행의 위기는 지역의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관광정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Housing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Ⅷ 주 거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258

이영성 | 서울대학교, 김혜수 | 서울대학교, 오예성 | 서울대학교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268

이영성 | 서울대학교, 안승연 | 서울대학교, 이현무 | 서울대학교

가구주 연령대별 · 세대별 가계부채의 변화: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277

하준경 | 한양대학교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이영성 (서울대학교)
김혜수 (서울대학교)
오예성 (서울대학교)

- 2019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4.8%이다. 2020년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다른 유형(단독·연립·다세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주택 이외의 거처)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51.1%이다.
- 2019년 주택의 점유형태 중 자가의 비중은 58.0%이며 그 이외 점유유형(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이 42.0%이다.
-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11년 357호에서 2019년 412호로 증가했지만, 이것은 2019년 OECD 평균인 462호보다는 적었다.
- 2020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3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존재한다.
- 한국의 과밀주거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0년 11.7%에서 2019년 5.2%로 크게 감소했고, 2019년 OECD 31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 주택가격 증가 폭이 물가 상승 폭을 상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전체 중위값보다 높아 주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 기준 약 166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119만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다.
- 국내에서 체감하는 바와는 다르게 한국의 주택 가격은 주요 5개국(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비교해서 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 통근·통학 시간은 2000년 이후로 최근까지 크게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길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2020년 기준 4.77점(7점 만점)으로 2012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거와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 이용과 만족도 등의 교통부문 변화를 살펴본다. 주거 영역에서는 우선, 주택보급률,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주택 재고 수, 노후주택 등의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면서 주택의 양적 변화를 서술한다. 다음으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과 주택 만족도를 통해 주거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지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복지에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주택임대료 비율을 지역과 계층에 따라 살펴보고,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도 살펴본다. 이러한 주거 영역의 변화 중에서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은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통근 및 통학 시간과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주택보급과 점유형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표 Ⅷ-1〉에서처럼 2005년 대비 2019년 가구 수는 약 446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그보다

〈표 Ⅷ-1〉 주택보급률, 2005-2019

연도	가구 수 (1,000가구)	주택 수 (1,000호)	주택보급률 (%)
2005	15,887	15,623	98.3
2010	17,656	17,739	100.5
2011	17,928	18,082	100.9
2012	18,209	18,414	101.1
2013	18,500	18,742	101.3
2014	18,800	19,161	101.9
2015	19,111	19,559	102.3
2016	19,368	19,877	102.6
2017	19,674	20,313	103.3
2018	19,979	20,818	104.2
2019	20,343	21,310	104.8

주: 1) 가구 수는 혈연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일반 가구 기준임.
2) 주택 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임.
3)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표 Ⅷ-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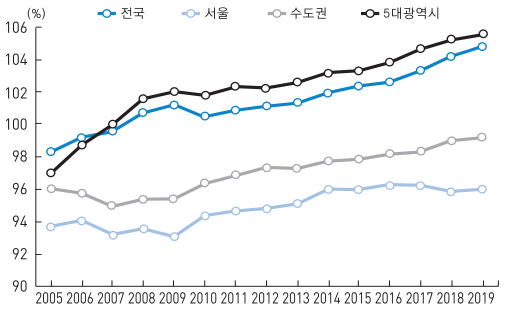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2006	44.5	41.8	3.3	7.4	1.8	1.3
2008	42.9	43.9	3.3	7.2	1.1	1.6
2010	40.4	47.1	4.5	5.6	1.1	1.3
2012	39.6	46.9	3.0	7.2	1.7	1.7
2014	37.5	49.6	3.4	6.2	1.0	2.2
2016	35.3	48.1	2.2	8.9	1.7	3.7
2017	34.3	48.6	2.2	9.2	1.6	4.0
2018	33.3	49.2	2.2	9.3	1.7	4.4
2019	32.1	50.1	2.2	9.4	1.6	4.6
2020	31.0	51.1	2.1	9.4	1.6	4.8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많은 약 569만 호 증가했다. 동기간 주택보급률은 98.3%에서 104.8%로 6.5%p 증가했다.

하지만 [그림 Ⅷ-1]에서 보듯이, 2019년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에 불과해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111.5%와 큰 차이가 있다. 특별·광역시·도 중 주택보급률이 100%를 밑도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그림 Ⅷ-1] 권역별 주택보급률, 2005-2019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주택보급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Ⅷ-2〉의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2006-2020년 사이 단독주택의 비중은 13.5%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9.3%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51.1%에 달한다.

〈표 Ⅷ-3〉 1,000명당 주택 수, 1995-2019

(1,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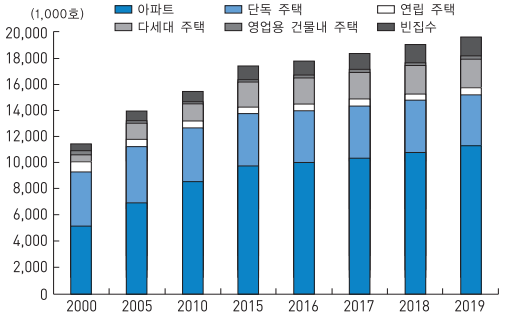
연도	전국	수도권	서울
1995	215	191	169
2000	249	222	199
2005	330	315	316
2010	357	336	342
2015	383	357	367
2016	388	361	372
2017	395	366	377
2018	403	373	381
2019	412	380	388

주: 1) 2005년, 2010년 자료는 주택 수 산정 시 다가구주택을 구분. 거처수로 산정할 경우의 천 인당 주택 수임.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전국 411.6호, 수도권 380.1호, 서울 387.8호에 달했다. 1995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192%, 수도권은 199%, 서울은 230% 증가한 수치이다.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재고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재고 수가 많이 증가했다.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이 주된 주택이었으나, 2000년부터 아파트(47.7%)가 가장 중요한 주택 유형이 되었다(그림 Ⅷ-2). 아파트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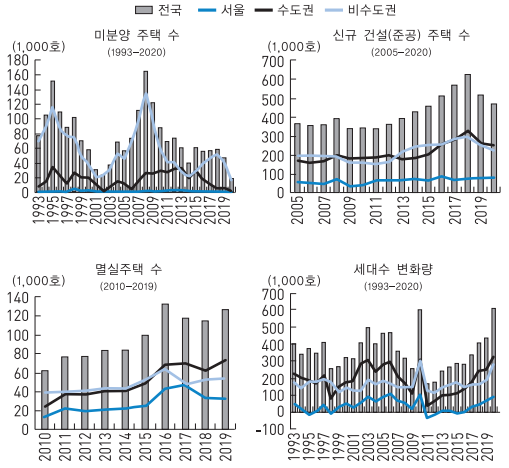
[그림 Ⅷ-2] 유형별 재고주택 수, 2000-2019



주: 1) 주택 수는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 수(+)와 멸실주택 수(-)를 가감하여 산정함.
2) 주택 수에는 준주택과 비주택 미포함하며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편, [그림 Ⅷ-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반적 주택 공급 수준은 그 전망이 밝지 않다. 1993년 이래 미분양주택 수는 2008년의 16만 6,000호가 가장 많은 수치이다. 2020년에는 1만 9,000호로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은 미분양주택이 2020년 49호로 거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의 순증가가 미미했다. 주택공급은 전국에 걸쳐 꾸준히 증가했지만, 멸실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공급의 순효과는 상쇄된 측면이 있다. 멸실주택 수는 2010년에 비해 2019년에는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수도권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주택수요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세대 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세대 수는 특히 경기에 민감하다. 리만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오랜 불경기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세대 수 증가가 2012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회복되면서 주택에 대한 강한 수요를 만들고 있다. 세대 수 증가를 통해 진단한 주택 수요는 2016년 이후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Ⅷ-3] 주택 공급·수요 관련 통계, 1993-2020



출처: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각 연도;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각 연도;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런데 노후주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멸실주택이 더욱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주택 공급을 더욱 제약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전국의 노후주택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3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1990년 8만 5천 호에서 2019년 약 55만 호로 20년 동안 6.5배 증가했다(표 Ⅷ-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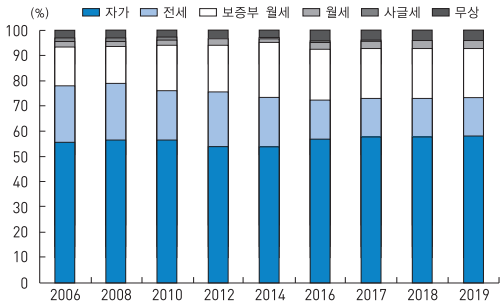
〈표 Ⅷ-4〉 노후주택 수와 비율, 1990-2019

	전국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노후주택(1,000호)				
1990	1,415	85	230	1,184
2000	952	85	190	761
2010	1,349	177	317	1,033
2015	2,669	373	747	1,922
2016	2,805	416	841	1,964
2017	2,889	428	878	2,012
2018	3,084	509	997	2,088
2019	3,291	551	1,102	2,189
비율(%)				
1990	19.8	6.0	8.4	26.8
2000	8.7	4.5	4.2	11.9
2010	7.6	5.1	3.9	10.8
2015	13.6	10.3	8.3	18.2
2016	14.1	11.4	9.2	18.3
2017	14.2	11.7	9.4	18.3
2018	14.8	13.8	10.4	18.6
2019	15.4	14.7	11.2	19.1

주: 1) 노후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임.
2) 비율은 각 권역의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임.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택보급과 함께 자가 가구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그림 Ⅷ-4]는 2006-2019년 사이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기간에 자가 가구의 비율은 55.6%에서 58.0%로 2.4%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의 비율은 22.4%에서 15.1%로 7.3%p 감소하였다. 반면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의 비중이 일부 등락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림 Ⅷ-4]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9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한국과 더불어 OECD 주요 5개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11년 경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더 늘어났다. 특히 프랑스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OECD 주요 5개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평균은 490호인 것에 비해 한국은 412호로 아직도 낮다(표 Ⅷ-5).

〈표 Ⅷ-5〉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11,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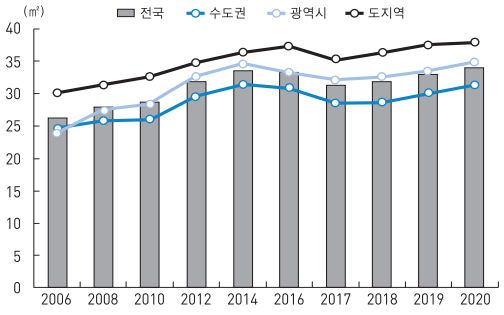
국가	2011(호)	2020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호)	증가율(%)
프랑스	515	590	14.6
독일	505	509	0.8
일본	476	494	3.8
영국	434	434	0.0
미국	424	425	0.2
한국	357	412	15.4

주: 1) 영국, 한국은 2010년, 일본은 2013년 수치임.
2) 독일, 일본은 2018년,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은 2019년 수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019*, 2019.

주거의 질과 만족도

주거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전국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6.2㎡이었으나 2020년에는 33.9㎡로 약 29%가량 늘었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인다. 같은 기간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각각 28%, 45%, 26%가량 증가하여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림 Ⅷ-5]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20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택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 〈표 Ⅷ-6〉은 주택 만족도를 거주 지역, 소득계층,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020년의 평균(전체) 만족도는 4점 만점에서 3.00점이다.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의 평균 만족도는 2.83점이었다. 2020년 조사를 보면, 지역 중에서 수도권의 만족도가 2.99점으로 타 지역보다 다소 낮다. 소득계층별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비례했다.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만족도가 3.05점이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의 만족도는 2.71점에 불과하다. 주택유형별 만족도는 아파트가 3.12점으로 가장 높다.

〈표 Ⅷ-6〉 주택 만족도, 2012-2020

(점)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전체	2.83	2.92	2.99	2.98	3.00	3.00
거주 지역						
수도권	2.80	2.88	3.01	2.96	2.98	2.99
광역시 등	2.87	2.96	2.98	3.02	3.06	3.02
도지역	2.84	2.96	2.98	2.97	2.99	3.00
소득계층						
저소득층	2.75	2.80	2.86	2.85	2.88	2.89
중소득층	2.85	2.95	3.04	3.02	3.03	3.02
고소득층	2.95	3.08	3.18	3.14	3.16	3.16
점유형태						
자가	2.93	2.99	3.07	3.03	3.05	3.05
전세	2.74	2.87	2.93	2.95	2.98	2.98
보증금 있는 월세	2.72	2.82	2.92	2.91	2.95	2.94
보증금 없는 월세	2.41	2.63	2.64	2.59	2.67	2.71
무상	2.69	2.85	2.90	2.87	2.87	2.91
주택유형						
단독주택	2.75	2.79	2.83	2.84	2.87	2.87
아파트	2.92	3.04	3.15	3.11	3.12	3.12
연립주택	2.80	2.78	2.81	2.86	2.82	2.82
다세대주택	2.72	2.78	2.82	2.88	2.94	2.91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73	2.87	2.76	2.73	2.79	2.97
주택이외의 거처	2.77	2.97	3.07	2.79	2.85	2.87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2) 일세, 사글세,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함.
3)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과밀주거비율은 총가구 중 과밀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과밀주거비율의 측정 방식과 기준은 다양하다. Eurostat(2014)의 산정 방식을 따르면, 과밀상태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당 1실 이상; 성인 부부 1쌍당 1실 이상; 18세 이상 인원 1인당 1실 이상; 12–17세 동성 인원 2인당 1실 이상; 12–17세 이성 인원 1인당 1실 이상; 12세 미만 인원 2인당 1실 이상.

이 방식에 따라 산출된 〈표 Ⅷ–7〉의 과밀주거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영국은 과밀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019년 OECD 31개국 중 한국은 5.2%로 9위를 기록했다.

〈표 Ⅷ–7〉 OECD 주요 국가의 과밀주거비율, 2010–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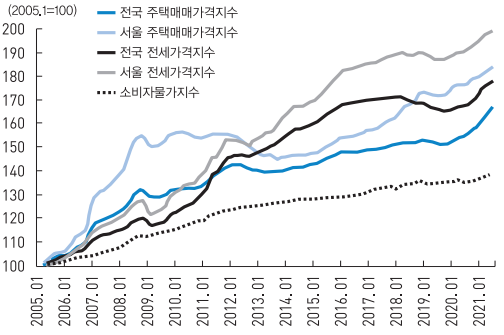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2010	11.7	1.7	3.7	8.0	5.8	3.3
2011	-	-	3.8	7.2	-	3.4
2012	-	1.5	3.7	7.2	5.7	5.1
2013	-	-	3.8	6.4	-	5.7
2014	5.8	1.6	3.8	6.3	6.1	5.5
2015	-	-	4.2	6.3	-	5.4
2016	-	1.9	4.2	6.3	-	5.9
2017	7.7	-	4.2	6.4	-	-
2018	6.4	1.6	4.2	6.4	-	-
2019	5.2	-	4.2	6.5	6.1	5.9

주: 1) 과밀주거비율=(과밀 상태에 있는 가구÷총가구)×100.
2) '–'는 자료 없음.
출처: OECD, *OECD Housing Project,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019*, 2019.

주거비 부담과 주거복지

[그림 Ⅷ–6]은 전국과 서울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38.5% 상승한 데 비해, 전국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는 각각 66.8%와 78.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는 전국 지수보다 20%p 내외로 더 상승하여 각각 83.8%와 98.8% 증가하였다.

[그림 Ⅷ–6]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2005.1–2021.5



주: 1) 비교를 위해 현재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2021.6=100)와 소비자물가지수(2015.1=100)의 기준년월을 2005.1=100으로 조정하였음.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월.

이와 연결되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은 2006–2020년 사이 4.2에서 5.5로 증가하였다(표 Ⅷ–8). 특히 2020년의 수도권 지역 PIR은 전년도 6.8에서 크게 상승하여 8.0을 기록했다. 반면 도지역은 3.9에 그쳤다. 또한 저소득층의 PIR은 8.3이지만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7과 5.4에 그친다.

〈표 Ⅷ-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20

(배)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4.2	5.7	4.1	3.3	6.3	3.4	3.6
2008	4.3	6.9	3.3	3.0	6.4	4.3	4.2
2010	4.3	6.9	3.5	2.9	6.1	4.2	4.0
2012	5.1	6.7	5.0	3.6	7.5	4.3	4.4
2014	4.7	6.9	4.7	4.2	8.3	5.0	4.7
2016	5.6	6.7	5.3	4.0	9.8	5.6	5.0
2017	5.6	6.7	5.5	4.0	8.3	5.2	4.8
2018	5.5	6.9	5.6	3.6	9.0	5.2	4.8
2019	5.4	6.8	5.5	3.6	8.9	5.2	4.8
2020	5.5	8.0	6.0	3.9	8.3	5.7	5.4

주: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Ⅷ-9〉의 월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15.5%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20년에는 16.6% 수준이다. 2020년 수도권의 RIR은 전체보다 높은 18.6%이며 저소득층의 RIR은 18.8%에 달한다.

PIR과 RIR의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볼 때, 수도권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Ⅷ-7〉은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의 2000-2020년 실질주택매매가격을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일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특히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주택가격상승 추이를 보인다. 반면 20년간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변동이 가장 적다. 2012년 이후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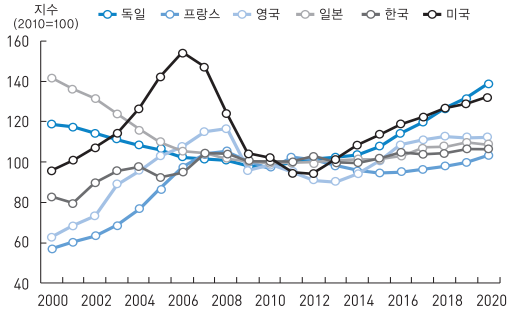
〈표 Ⅷ-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20

(%)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18.7	19.9	18.5	17.8	27.6	18.9	16.1
2008	17.5	22.3	19.3	15.9	25.0	17.6	17.4
2010	19.2	20.9	16.4	14.4	28.2	16.6	21.1
2012	19.8	23.3	16.8	14.5	21.8	17.3	22.6
2014	20.3	21.6	16.6	15.8	29.0	17.0	21.6
2016	18.1	17.9	15.4	14.2	23.1	14.9	19.0
2017	17.0	18.4	15.3	15.0	22.2	15.7	20.3
2018	15.5	18.6	16.3	15.0	20.3	16.7	18.3
2019	16.1	20.0	16.3	12.7	20.3	16.7	18.3
2020	16.6	18.6	15.1	12.7	18.8	15.8	18.7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소득×100.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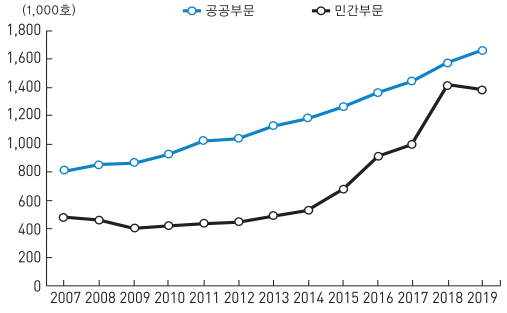
[그림 Ⅷ-7] BIS 실질 주택매매가격지수, 2000-2020



주: 1) 국제결제은행의 실질주택매매가격지수는 각 나라의 공인기관에서 받아온 자료의 지수화 작업을 거쳐 발표하는 것이기에 각 나라의 주택매매가격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BIS에서는 분기별 데이터를 조정하여 지수 100으로 산정하였으나, 보고서상에서는 각 연도의 1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 자료가 명확하게 100이 아닐 수 있음.
출처: BIS, Property prices(https://www.bis.org/statistics/pp_selected.htm), 2020.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영구, 국민, 10년, 장기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민간기업 건설, 정비사업조합, 건축법허가자, 매입임대 등의 형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림 Ⅷ-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2007년 약 81만 호에서 2019년 약 166만 호로 105%가량 증가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2019년 138만 호 보급되어, 2018년보다 약 3만 호가량 감소했다. 총임대주택은 2019년 현재 약 304만 호가 공급되었다.

[그림 Ⅷ-8]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9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표 Ⅷ-10〉은 2016-2019년의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9년의 전체 수급가구수와 수급권자 수는 각각 약 119만 가구와 약 168만 명으로 전체 가구와 인구의 5.7%와 3.4% 수준이다. 수급권자 비율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Ⅷ-10〉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19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수급가구				
수급가구 수(1만 가구)				
2016	94.5	35.7	28.6	50.2
2017	93.6	36.3	28.3	49.3
2018	107.0	42.3	32.4	56.1
2019	118.8	48.5	36.2	61.5
전체 가구 중 비율(%)				
2016	4.8	3.7	5.7	5.1
2017	4.6	3.7	5.6	4.5
2018	5.2	4.2	6.4	5.0
2019	5.7	4.7	7.0	5.3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1만 명)				
2016	138.8	52.7	43.3	72.4
2017	135.1	52.5	42.1	70.0
2018	153.0	60.8	47.5	79.3
2019	168.1	68.9	52.2	86.3
전체 인구 중 비율(%)				
2016	2.7	2.1	3.3	2.6
2017	2.6	2.1	3.2	2.5
2018	3.0	2.4	3.7	2.8
2019	3.2	2.7	4.1	3.0

주: 1) 수급 가구 및 인원은 시설수급자 포함,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수치임.
2) 전체 가구와 인구는 각각 내국인 가구 및 인구 기준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4) 광역시는 세종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교통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근 및 통학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은 교통시설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였다. 〈표 Ⅷ-11〉은 통근과 통학 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 평균 통근 시간은 35.4분으로 2000년의 32.1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015년 기준 43.7분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통근 시간 35.4분에 비해 높다.

2015년 기준 평균 통학 시간은 33.3분으로 이 또한 2000년의 통학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2015년 통학 시간도 수도권이 38.8분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통근·통학 시간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도 지역이 가장 적게 소요된다.

〈표 Ⅷ-11〉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 2000-2015

(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평균 통근 시간				
2000	32.1	39.7	34.3	27.3
2005	31.1	38.4	31.7	27.2
2010	33.7	41.5	34.2	30.0
2015	35.4	43.7	36.6	31.5
평균 통학 시간				
2000	33.9	37.9	34.6	30.9
2005	30.1	34.3	30.1	28.0
2010	31.5	36.4	31.1	29.7
2015	33.3	38.8	33.7	31.2

주: 1) 평균 통근 시간 및 통학 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 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큰 변화가 없다. 〈표 Ⅷ-12〉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 추이를 보여준다. 전국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2012년 4.76점에서 2020년 4.77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12년 대비 서울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0.13점 감소하였고,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좋아졌다.

〈표 Ⅷ-12〉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20

(점)

연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12	4.76	5.04	4.80	4.65	4.75	4.84	4.75	4.66
2013	4.78	5.07	4.83	4.76	4.76	4.88	4.75	4.75
2014	4.84	5.05	4.80	4.76	4.79	4.79	4.71	4.60
2015	4.78	4.93	4.81	4.64	4.77	4.81	4.76	4.56
2016	4.84	5.00	4.83	4.82	4.72	4.79	4.86	4.63
2017	4.87	5.04	4.91	4.79	4.86	4.86	4.81	4.69
2018	4.84	4.95	4.83	4.74	4.83	4.87	4.80	4.67
2019	4.87	5.10	4.98	4.73	5.02	5.13	4.96	4.74
2020	4.77	4.91	4.90	4.69	4.83	5.05	4.88	4.70

주: 1)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맺음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은 양과 질의 모든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일인당 주거 면적, 주택만족도, 과밀주거비율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만, 주거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체되어 있는 점은 보다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주거의 양과 질이 장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주택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의 국제비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뺄 수 없는 필수재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사실상 전재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영성 (서울대학교)
안승연 (서울대학교)
이현무 (서울대학교)

- 주거용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인해 오히려 상승했다.
- 주거용 부동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중대형 아파트(95㎡–135㎡)보다 중형 아파트(62.8㎡–95.9㎡)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 확진자 수보다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 더 영향을 받았다. 세대 수 증가율은 코로나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 가계대출은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 위축,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8.3%(약 100조 원) 증가했다.
-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코로나 이전보다 하락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1.8%)보다 상가의 임대가격지수(–3.1%)가 더 크게 하락했다.
- 코로나 이후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늘었지만, 오피스와 소규모 상가에서는 공실률이 줄어든 지역이 다수 있었다. 팬데믹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유형은 소규모 상가였다.
-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대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생활방식과 경제활동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동안 확인되는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특히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영향 분석을 할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의 변화, 아파트 거래량과 가계대출 변화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한편 상가용 부동산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사람들의 이동과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해당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가용 부동산 시장 변화는 코로나19 전후의 임대가격 지수와 공실률의 변화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

주거용 부동산은 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의 월별 자료를 활용했다. 가계 부채율과 기준금리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연간 데이터를 사용했다. 분석 기간은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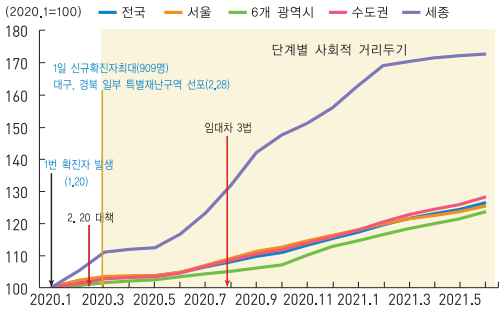
주택가격의 변화

코로나가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 전세가격과 유형별 가격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Ⅷ-9]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1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2021년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0년 1월보다 26%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2%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28%를 기록했다.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과 비슷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주요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대규모 채권 매입을 시행하고 기준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한국은행도 같은 길을 따랐다. 코로나로 인한 거시경제정책 변화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Ⅷ-9] 월별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 2020.1-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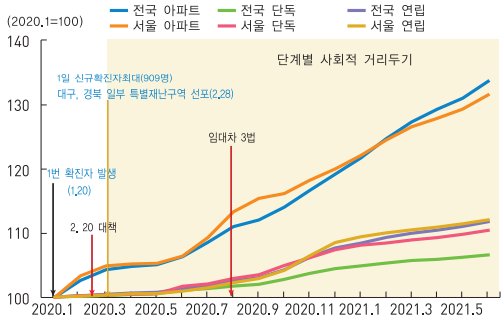


주: 1) 2020년 1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출처: KB국민은행, 「KB 월별주택가격동향」 각 연월.

주거 유형별 분석

[그림 Ⅷ-10]과 같이 주거 유형 가운데에는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33%로 다른 유형을 압도했다. 연립주택은 12%, 단독주택은 7% 상승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코로나 이후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런 징후는 없었다.

[그림 Ⅷ-10] 월별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변화율, 2020.1-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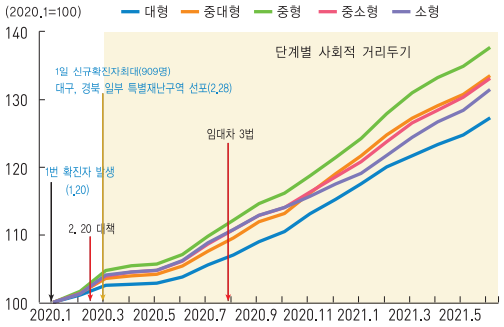
주: 1) 2020년 1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출처: KB국민은행, 「KB 월별주택가격동향」 각 연월.

주거 면적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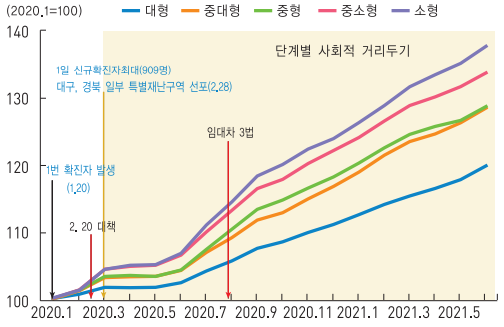
[그림 Ⅷ-11]에서 주거 면적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중형 아파트가 37%로 가장 높았고, 중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는 약 33%였다. 코로나로 인해 넓은 공간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규모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서울에서는 소형 아파트(+38%), 중소형 아파트(+3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중형 아파트 평균가격과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소규모 주택 선호도가 높다기보다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Ⅷ-11] 전국,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가격 변화율, 2020.1-2021.6

1)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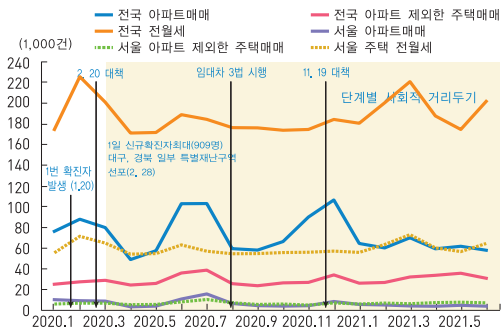
2) 서울



주: 1) 2020년 1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2) 면적별 구분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대형(135㎡ 이상), 중대형('95.86㎡ 이상 135㎡ 미만), 중형(62.81㎡ 이상 '95.86㎡ 미만), 중소형('40㎡ 이상 62.81㎡ 미만), 소형('40㎡ 미만).
출처: KB국민은행, 「KB 월별주택가격동향」 각 연월.

이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위해 월별 아파트 거래량과 부동산 정책 일정, 코로나 유행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 확산세보다는 부동산 정책 일정이 주택 거래량 변동과 일치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2020년 2월과 2021년 3월 20만 건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이는 코로나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Ⅷ-12]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 2020.1-2021.6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s://www.reb.or.kr/r-one/main.do).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보도자료, 각 월.

주택 거래량과 선호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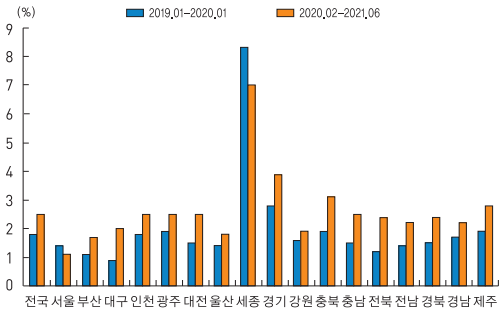
[그림 Ⅷ-12]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특정 시점에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이후 아파트 매매량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 6월, 7월, 12월에는 1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아파트 매매량이 10만 건을 돌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이한 기록이다.

독립된 주거분화 욕구와 가구분화

코로나로 인해 독립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이것이 세대 분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그림 Ⅷ-13]은 코로나 전후 지역별 세대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증가율(2019년 1월-2020년 1월)과 2020년 증가율(2020년 2월-2021년 6월)을 비교하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에서 보여주는 세대수 증가 추이와 연속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2010년 중반 이후 경기회복 및 안정화로 세대수 변화율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그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Ⅷ-13] 코로나19 전후 세대수 증가율, 2019.1-2021.6



주: 1) 증가율은 해당 기간 월평균 성장률(CAGR)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월.

가계부채율 변화

〈표 Ⅷ-13〉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 대출액은 2010년 794조 원에서 2020년 1,630조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가계 대출액 증가율은 2016년 11.6%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았다. 그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9년 4%까지 감소하다 2020년 8.3% 반등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매수 수요가 강해지고,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Ⅷ-13〉 가계신용동향, 2010-2020

연도	가계신용			가계대출		
	금액 (조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조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금액 (조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조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2010	843	67.2	8.7	794	59.5	8.1
2011	916	73.0	8.7	861	67.6	8.5
2012	964	47.6	5.2	906	44.5	5.2
2013	1,019	55.2	5.7	961	54.7	6.0
2014	1,085	66.3	6.5	1,025	64.5	6.7
2015	1,203	117.8	10.9	1,138	112.9	11.0
2016	1,343	139.4	11.6	1,270	131.9	11.6
2017	1,451	108.3	8.1	1,370	100.0	7.9
2018	1,537	86.1	5.9	1,447	76.8	5.6
2019	1,600	63.6	4.1	1,505	57.9	4.0
2020	1,726	125.8	7.9	1,630	125.6	8.3

주: 1) 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됨.
2) 가계대출은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포괄함.
출처: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각 연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분류기준을 따라 분기별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분석하였다.[1] 광역시도별 코로나 전후 임대가격지수와 공실률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1)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수용도	종류	규모
오피스	업무시설	일반건축물	6층 이상
중대형상가	상가	일반건축물	3층 또는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상가			2층 이하 및 연면적 330㎡ 초과
집합상가		집합건축물	

임대가격지수 변화율(%)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임대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2] 2020년 상반기(2분기 말 기준), 2020년 하반기(4분기 말 기준), 2021년 상반기(2분기 말 기준) 데이터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실률 변화(%p)는 2019년 4분기와 최신 자료인 2021년 2분기 공실률의 차이를 이용해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임대가격지수(x)와 공실률의 변화(y)를 상업용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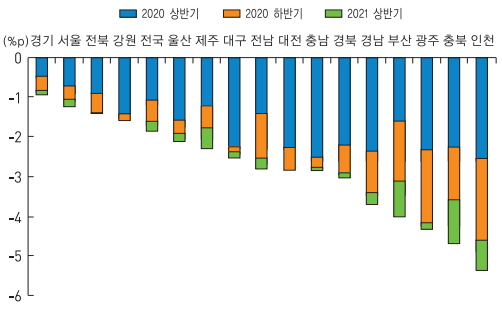
오피스 임대동향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1.8% 하락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 후 점차 하락 폭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림 Ⅷ-14]는 오피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임대가격지수 변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천은 코로나가 발생한 전체 기간 동안 임대가격지수 하락폭이 가장 컸다.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의 주축이라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는 2020년 상반기에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하락 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가 둔화되어 전체 변화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이와 달리 2020년 7월 이후 인구 대비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에서는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하락 폭(-1.2%)이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그림 Ⅷ-14] 2019년 4/4분기 대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그림 Ⅷ-15]는 코로나 이후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변화율(x축)과 공실률 변화(y축)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대가격지수가 많이 하락한 지역이며, 위로 갈수록 공실률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 오피스는

2) 상업용 부동산 통계분석시점

분석 시점	한국부동산원 통계 수집 단위	비고
2020년 상반기	2019년 12월 말~2020년 6월 말	코로나19 발생 1차 대유행 (대구·경북 중심)
2020년 하반기	2020년 6월 말~2020년 12월 말	수도권 중심 2,3차 대유행
2021년 상반기	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공실률이 하락한 지역이 더 많았고, 전국 평균 공실률도 0.1%p 하락했다. 서울과 전북은 임대가격지수 변화도 적고, 공실률도 하락하며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는 임대가격지수 변화는 가장 적었지만, 공실률이 4번째로 많이 상승한 지역이었다. 부산과 광주는 임대가격지수는 많이 하락했지만 공실률은 감소했다.

[그림 Ⅷ-15]에서 인천은 임대가격지수는 가장 많이 하락하고, 공실률은 강원에 이어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충북과 함께 임대가격지수가 꾸준히 하락하는 지역이었고, 2020년 소폭 하락했던 공실률도 2021년 들어 공실률이 무려 5.7%p 상승하며, 오피스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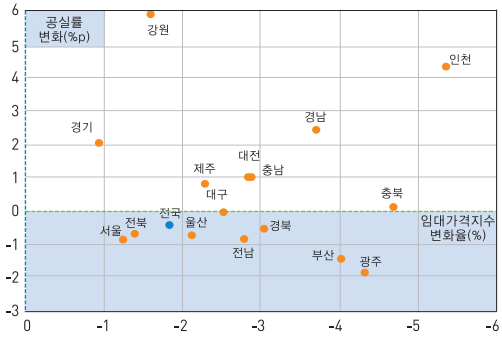
임대가격지수 변화는 적지만 공실률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었다. 강원도는 임대가격지수 변화는 꾸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공실률은 계속해서 많이 상승했다. 임대가격지수 변화가 적은 편인 경기도는 2020년 3분기 이후 공실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대형 상가 임대동향

코로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보다 상가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Ⅷ-16]과 같이 상가의 전국 임대가격지수는 3.1% 하락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누적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2020년 상반기에 크게 하락한 뒤 점차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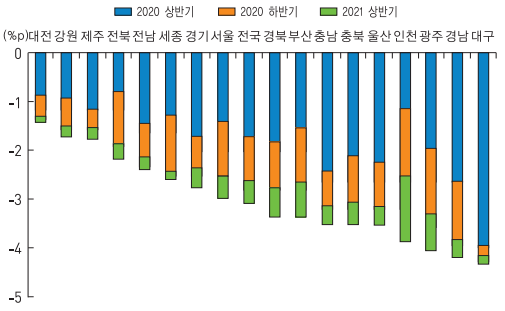
다만 인천은 매 분기 비슷한 하락 폭을 기록했다. 2020년 6월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지역에 속했지만, 2021년 6월 기준

[그림 Ⅷ-15] 코로나19 이후 오피스 임대동향 변화 종합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그림 Ⅷ-16] 2019년 4/4분기 대비 중대형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임대가격지수 하락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오피스 동향에서와 유사하게 인천 지역경제의 침체를 상가 임대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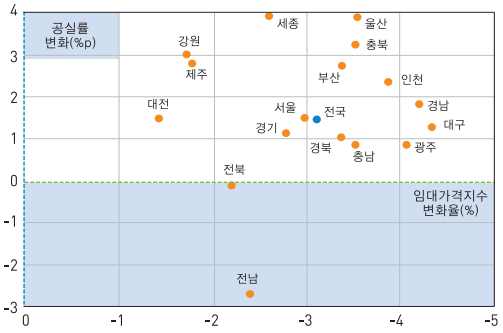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초기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대구의 임대가격지수 하락 폭이 가장 높았다. 2020년 1분기 무려 4.8%나 하락했고, 2분기에 소폭 회복했으나 이후에도 조금씩 하락하여 누적 4.3% 하락을 기록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확진자 수가 많았던 서울과 경기도의 임대가격지수 변화는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p 상승했다.

[그림 Ⅷ-17]은 코로나 이후 중대형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x축)과 공실률 변화(y축)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대가격지수가 많이 하락한 지역이며, 위로 갈수록 공실률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 전남(-2.7%p)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공실률이 상승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평 이상의 중대형 상가에서는 공실률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컸다(8-21%). 세종과 울산은 코로나 이전에도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공실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에도 공실률이 낮은 편이었던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 수준의 공실률 변화를 보였다.

오피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대가격지수 하락 폭이 가장 적었던 대전, 강원, 제주에서는 공실률이 2-3%p 상승하며 코로나로 인한 상권 침체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림 Ⅷ-17] 코로나19 이후 중대형상가 임대동향 변화 종합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소규모 상가 임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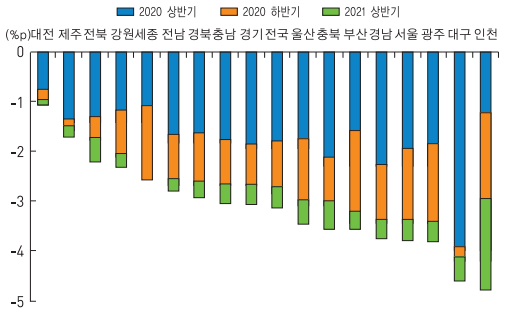
[그림 Ⅷ-18]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3.1% 하락했으나 공실률은 0.1%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 코로나로 인한 상권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2020년 상반기 대구에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서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유형은 소규모 상가였다.

다른 상업용 부동산 유형에서 비교적 선방하던 서울도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가 크게 하락했고(-3.8%), 특히 대규모 유행을 겪은 2020년 하반기에는 공실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었다(+3.3%p).

중대형 상가와 달리 소규모 상가에서는 대구보다 인천의 하락 폭이 더욱 컸다. 2020년 상반기 대구는 -3.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전국 평균 -1.8%), 이후 1년간 0.7% 하락했다.

인천은 2020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임대가격지수 변화가 적은 편(−1.2%)이었지만,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1.5%p). 2020년 하반기 이후 인천은 임대가격지수가 꾸준히 하락하여, 코로나 이후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되었다(−4.8%).

[그림 Ⅷ−18] 2019년 4/4분기 대비 소규모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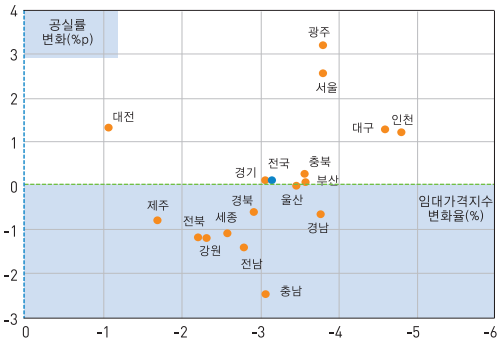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소규모 상가에서는 특정 지역에 타격이 집중되었다. [그림 Ⅷ−19]와 같이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서울, 인천, 광주, 대구에서 공실률도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 전북, 강원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도 낮은 편에 속했고, 공실률도 하락했다.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적게 하락했던 대전에서는 공실률이 크게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의 지역별 편차는 중대형 상가에 비해 적었고(2−12%),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과 전북에서 코로나 이후 공실률이 감소했다. 공실률이 낮은 편이었던 서울, 광주, 인천의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후 지역별 편차가 줄어들었다. 다만, 공실률이 가장 낮았던 제주의 공실률은 감소했다.

[그림 Ⅷ−19] 코로나19 이후 소규모상가 임대동향 변화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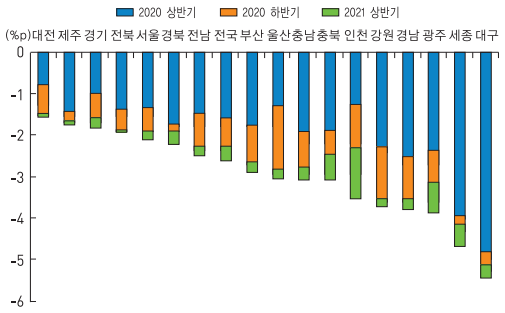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소규모 상가는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 유형이었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크게 상승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임대가격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하락하면서 희망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상가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도 많이 받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집합상가 임대동향

집합 상가의 경우, 공실률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임대가격지수 분석만 진행했다. [그림 Ⅷ-20]과 같이 전국 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는 2.6% 하락했다. 대구와 세종에서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구는 2020년 상반기 대유행을 겪으며 임대가격지수가 4.8% 하락했고, 세종도 같은 기간 3.9% 하락했다. 인천은 집합상가에서도 매 분기 꾸준한 하락을 기록했고, 소규모 상가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광주도 임대가격지수 변화가 컸다. 한편 서울과 경기는 집합상가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의 하락 폭을 기록했으며, 대전, 제주, 전북은 집합상가에서도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

[그림 Ⅷ-20] 2019년 4/4분기 대비 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주: 1) 변화율은 2019년 4/4분기(100) 대비 해당 기간 임대가격지수의 증감임.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재가공(2020.4/4=100 자료를 2019.4/4=100으로 환산).
출처: 한국부동산원, 「21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표(공표용)」, 2021.07.29.

맺음말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눠서 고찰했다. 주택 시장의 경우, 대략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활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 사태의 초기에는 전세계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하면서, 국내 경기가 그 영향을 받고, 주택 시장 또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택 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정 부분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의 타격은 불가피했다.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실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에서는 오피스보다 상가의 타격이 더 컸다. 상업용 부동산이 입은 타격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대별·세대별 가계부채의 변화: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하준경 (한양대학교)

-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는데, 2018년 이후에는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세대별로 보면 에코세대의 부채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 최근에 청년세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집값의 상승추세와 맞물려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즉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의 세대 간 자원재배분과 관련이 있다.
- 인구구조 상 50대, 60대보다 절대 규모가 더 작아진 30대는 과거와 같은 인구배당을 누릴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것이 직·간접적 주거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부담은 세계적 현상이다.
- 청년층의 직·간접적 주거비 상승은 교육, 의료 등 인프라와 노동시장이 공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주거지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그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상당 기간 가계부채가 줄었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급속히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소비, 특히 주거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거비는 전세나 월세 비용으로 측정되지만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도 주거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자는 직접적 주거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액의 경우에는 저축의 성격을 띠지만 미래 주택가격이 불확실한 데 따른 위험부담, 그리고 당장의 유동성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원리금 상환액과 주거비가 애초에 주택을 소유할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정 연령층과 세대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각 연령층과 세대의 가계부채 및 주거비 부담이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령대별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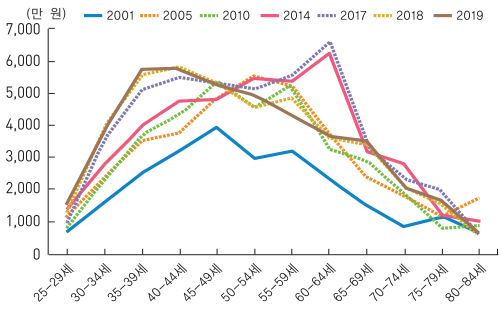
각 연령대별로 가계부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Ⅷ-21]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부채 잔액을 제시하였다. 가계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가공하여 만들었으며,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화하였다.

그림에서 대체로 역 U자형 모양의 전형적인 생애주기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4년부터 특이한 모습이 관찰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연령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한 반면, 2018년 이후에는 30대와 40대 초반 연령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진행된 저금리와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50대와 60대가 먼저 반응하고, 이후 30대와 40대가 따라서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중노년층의 부채가 줄면서 동시에 청장년층의 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은 위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주택과 부채를 함께 넘기는 세대 간 자원이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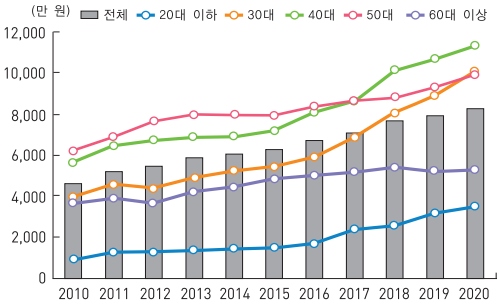
[그림 Ⅷ-21]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2001-2019



주: 1)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함(2015년 기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모습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도출한 연령대별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연령대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30대와 40대의 부채가 급증한 반면 60대 이상의 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Ⅷ-22] 연령대별 부채보유액,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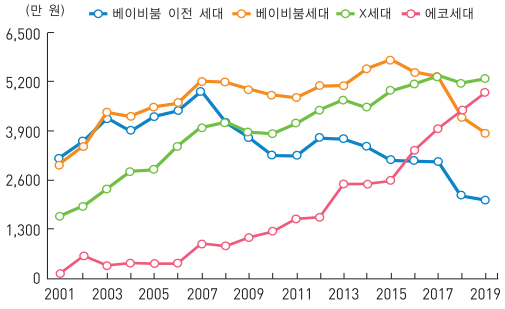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세대별 가계부채 변화

한편 이러한 변화를 생년 코호트, 즉 세대별로 살펴보아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붐 이전세대(1935-1954년생)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X세대(1964-1978년생), 에코세대(1979-1992년생)의 부채 추이를 비교해 보면, 에코세대의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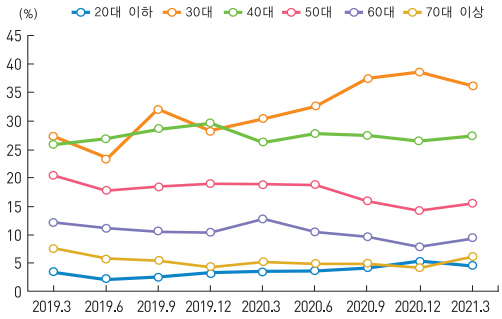
또한 이희선 · 하준경(2021)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2001-2018년 시기에 대해 분석한 것과 같이 연령에 따른 일반적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그림 Ⅷ-23] 세대별 가계부채,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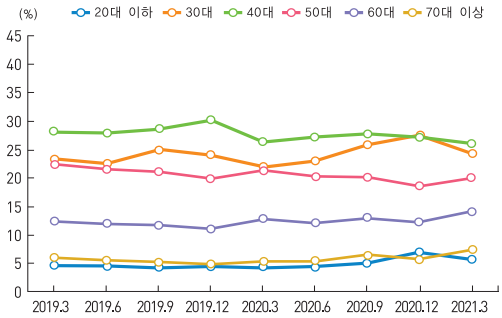
주: 1)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함(2015년 기준).
2)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1935-1954년생,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 X세대는 1964-1978년생, 에코세대는 1979-1992년생을 각각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Ⅷ-24]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2019.3-2021.3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각 연월.

[그림 Ⅷ-25]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2019.3-2021.3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각 연월.

에 따른 효과, 즉 에코세대의 이례적인 부채 급증 현상도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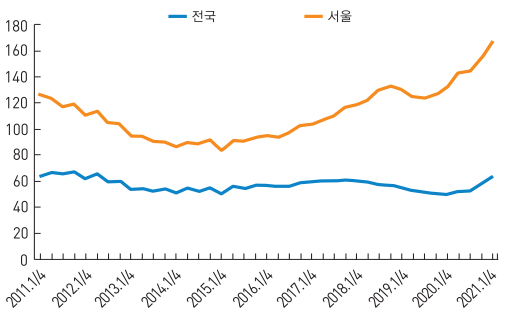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부채 전환 현상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세대 간 자원이전과도 관계가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노후대비 자금이 늘면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가정 형성을 위해 주택이 필요한 에코세대는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부채를 안고 매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Ⅷ-24]를 보면 2019-2021년 기간에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중 서울 지역 30대 인구의 비중이 약 15%로 일정하였음을 감안하면 30대의 주택 수요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Ⅷ-25]를 보면 2019-2021년 기간에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상승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서울 지역보다는 완만함을 알 수 있다. 전국의 30대 인구 비중은 약 13%로 일정하였다.

이와 같은 30대 연령층의 주택 수요는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소득 대비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림 Ⅷ-2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높아져 더 오르기 전에 구입해야 한다는 일종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택수요 패턴은 30대 인구의 가계부채 급등 현상과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그림 Ⅷ-26] 전국과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 2011.1/4-2021.1/4



주: 1)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100.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출처: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시스템(https://www.hf.go.kr/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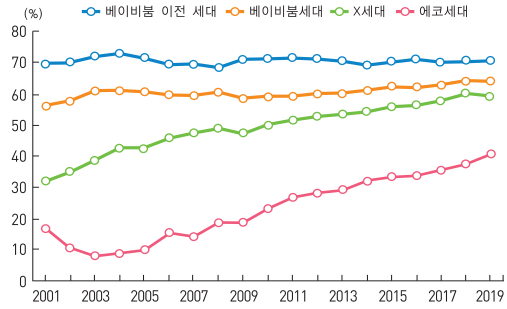
30대 연령층 및 에코세대의 주택투자

30대 연령층이 중심이 된 에코세대의 가계부채 급등과 주택 매입 증가가 이들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상승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주택투자 성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공격적임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Ⅷ-27]을 보면 에코세대 중 1주택자 비중은 크게 올랐으나 이는 약 15년 전의 X세대 1주택자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이전 세대에 비해 1주택자 비중에 큰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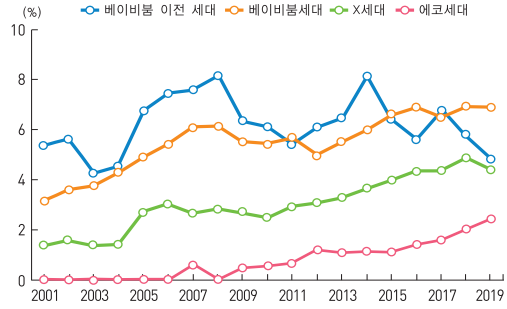
또 [그림 Ⅷ-28]을 보면 에코세대의 다주택자 비중 역시 X세대의 15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에코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특별히 주택투자 성향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들의 부채 급증은 이전 세대에 비해 주택을 소득 대비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Ⅷ-27] 세대별 1주택자 비중, 2001-2019



주: 1)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1935-1954년생,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 X세대는 1964-1978년생, 에코세대는 1979-1992년생을 각각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Ⅷ-28] 세대별 다주택자 비중,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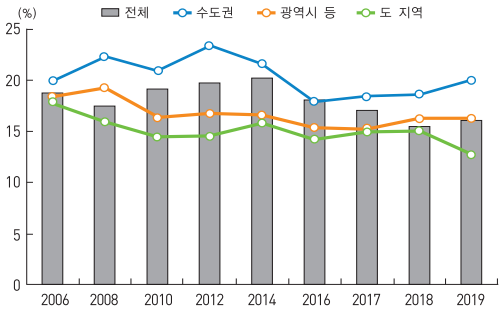
주: 1)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1935-1954년생,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생, X세대는 1964-1978년생, 에코세대는 1979-1992년생을 각각 의미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의 증가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에코세대의 가계부채 급등과 주택 매입 증가가 이들의 주거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자. 직접적인 주거

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먼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추이를 보면 [그림 Ⅷ-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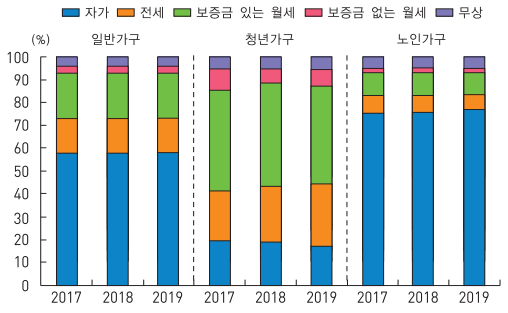
[그림 Ⅷ-2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19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가구소득)×100.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3)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 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에서 2016년 이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상승 추세, 기타 도지역에서는 정체 및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는 노동연령층, 특히 청년층의 주택임대료 부담이 최근 년도에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자가보다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Ⅷ-30]을 보면 2017-19년 사이에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자가 거주 비중은 소폭 늘었으나,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줄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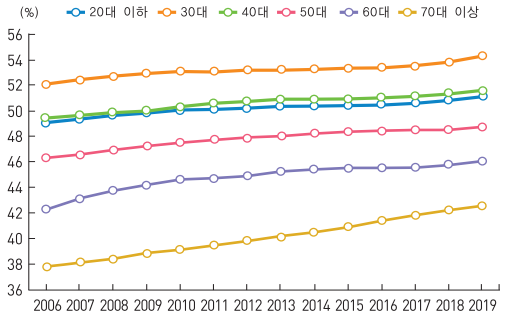
[그림 Ⅷ-30] 가구별 주거점유 형태, 2017-2019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 20-34세,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또 [그림 Ⅷ-31]을 보면, 30대와 40대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19년 현재 각각 54.3%, 51.6%로서 전체 평균 49.8%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에코세대의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임대료 상승과 맞물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늘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택임대비용의 상승은, 청년층의 주택매입 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그림 Ⅷ-31] 연령대별 수도권 거주 인구 비중, 2006-2019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2)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및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부채를 지며 주택을 매입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 부분은 직접적 주거비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라는 자산에 소득을 저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출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비가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택자산은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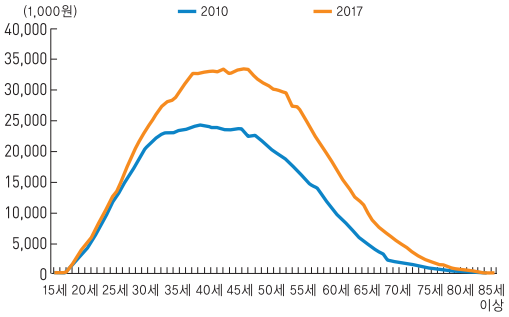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길게는 수십 년 후에 원하는 가격에 아래 세대에게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여부가 장기간 소득을 투입해 저축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부분이 소비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입장에서는 원리금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채부담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리스크 상승과 유동성 제약도 가계부채와 관련된 간접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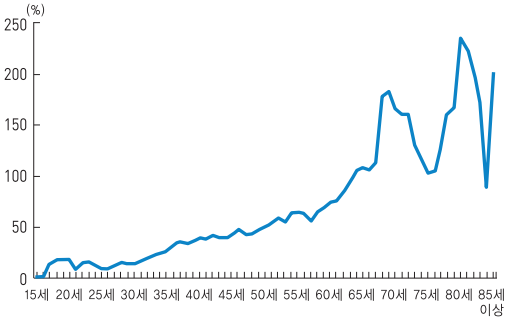
앞의 [그림 Ⅷ-22]에서 30대 연령층의 부채가 최근 50대의 부채보다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의 주거관련 직간접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림 Ⅷ-32]에서처럼 30대의 소득 증가분이 40대나 50대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실질적 부담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Ⅷ-32] 연령별 노동소득, 2010, 2017

1) 노동소득



2) 2010년 대비 2017년 노동소득 증가율



출처: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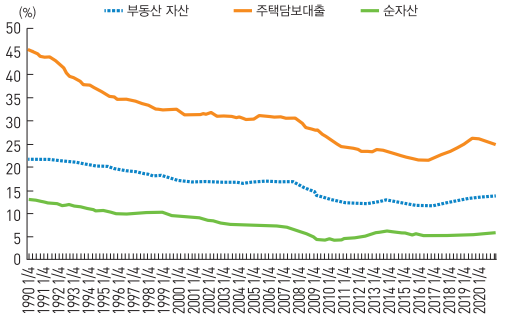
미국의 사례

주거와 관련한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은 대체로 30%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노동연령층, 그리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최근 이 비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연소득 3만 5,000달러에서 7만 5,000달러 계층

의 경우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2010년 27% 수준에서 2018년 36%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청년층의 주택 매입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늘고 부채도 늘었지만 한국보다는 증가세가 작은 편이다. 이는 미국의 대출규제가 까다롭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림 Ⅷ-33]을 보면 미국의 40대 미만 연령층의 주택 담보대출과 부동산 자산의 상대적 비중이 모두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순자산 비중은 정체되어 있어 최근의 청년층은 과거의 청년층에 비해 순자산 축적이 더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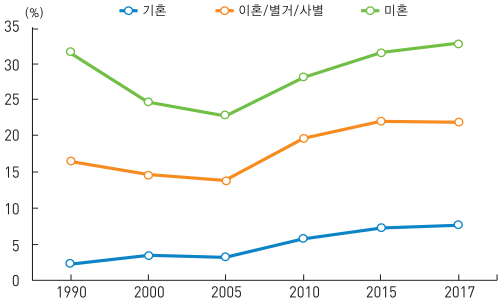
[그림 Ⅷ-33] 미국 40대 미만 연령층의 부동산 자산, 주택 담보대출, 순자산 비중, 1990.1/4-2020.4/4



출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z1/dataviz/dfa/).

또, 미국에서는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그림 Ⅷ-34). 부모와의 거주는 월세 부담, 대출 부담의 탈출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Ⅷ-34] 미국 25-34세 인구의 혼인 상태별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 1990-2017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Decennial Census & American Community Survey.*

수도권 집중화의 영향

한국 청년층의 경우 앞의 [그림 Ⅷ-31]에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0대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 비중이 50%를 넘기면서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는 노동시장의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고학력 숙련노동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이나 일자리가 고급인력이 많은 곳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이 맞벌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대 노동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국의 인재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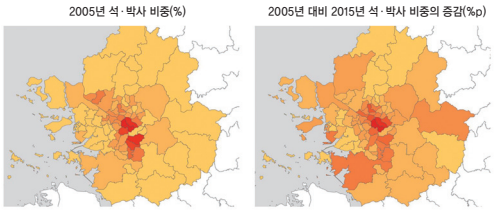
든다는 점도 노동시장의 일극 집중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부부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에는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흐름은 생애주기에서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층에게는 공간을 매개로 한 지위경쟁의 격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즉, 서울–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가 지위재의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과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Ⅷ–35]를 보면 인구 중 석·박사 비중이 높은 지역이 이후 증가도 더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고급인력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의 형성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전국을 보아도 석·박사 등 고학력자의 공간적 집중화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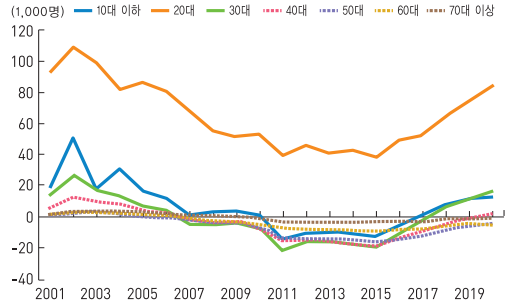
[그림 Ⅷ–35] 수도권 석·박사 비중의 변화, 2005–2015



주: 1) 색깔이 진할수록 큰 값임.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출처: 하준경, 2019.

[그림 Ⅷ–36]은 연령대별로 서울과 경기도로의 순이동 추이를 보여주는데, 지난 몇 년간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Ⅷ–36] 연령대별 서울·경기 순이동, 2001–202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맺음말

가계부채의 급증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연령 및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30대 연령층 또는 에코세대가 부채 및 주거비 부담을 크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지만, 청년층이 여러가지 이유로 주거비가 높은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현상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년층 인구 규모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공간적 대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성세대의 노후대비 자금이 주택가격을 올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활용되게 하기보다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대안과 기회를 늘려주는 세대 간 상생의 매개체로 활용되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희선 · 하준경. 2021. "주택 소유와 부채 보유의 연령 및 세대효과." 「주택연구」 29(3). 69–92.
하준경. 2019. "수도권 인적자본 분포의 변화 추이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 25(2). 157–194.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Living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Ⅸ 생활환경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연구원 28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 규정과 분쟁 양상 박영민 | 한국환경연구원 298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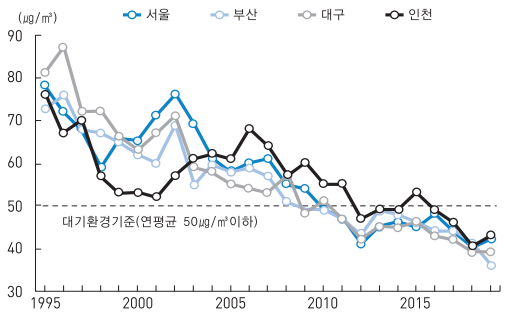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국의 주요 도시지역이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0년대 중반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모두 발생량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정부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 비중과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2018-2020년에 모든 영역에서 높아졌으며, 특히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만족도가 높다.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대기환경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_{10})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Ⅸ-1).

[그림 Ⅸ-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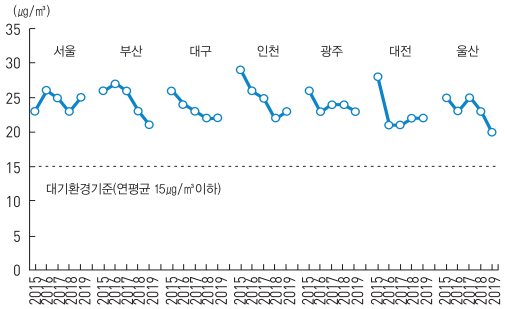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하지만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는 20-25㎍/㎥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15㎍/㎥)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10㎍/㎥)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Ⅸ-2). 또한 연평균농도의 지역 간 편차도 커서, 2019년에

강원 양양, 전남 신안과 고흥, 경남 고성 등은 연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인 15㎍/㎥ 수준이었던 반면, 경기 시흥과 부천, 충남 당진 등은 환경기준의 2배인 30㎍/㎥를 초과하였다.

[그림 Ⅸ-2]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2015-2019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수준은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OECD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인구가중 평균치)는 27.9㎍/㎥인데, 이는 OECD 평균치인 13.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순위로는 OECD 꼴찌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 수준 역시 노약자나 질환 보유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나쁨'과 '매우나쁨'을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81-150㎍/㎥이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고,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지역과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3-30일 정도이고, 매우 나쁨 일수는 0-2일 수준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나쁨 일수는 미세먼지보다 두 배 이상 많아서 60일 내외 수준이고, 매우 나쁨 일수는 0-6일 수준이다(표 Ⅸ-1).

〈표 Ⅸ-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3-2019

(일)

연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나쁨		매우나쁨		나쁨		매우나쁨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13	30	26	0	2				
2014	28	32	1	3				
2015	25	21	1	4	62	44	0	0
2016	13	23	2	1	62	73	0	0
2017	14	20	2	2	58	61	2	3
2018	21	21	0	0	58	57	1	4
2019	16	25	1	3	41	55	6	9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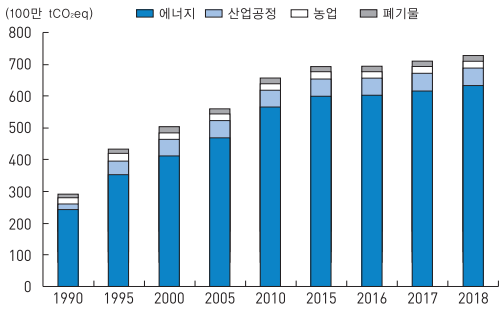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그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60%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며, 37개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를 기록

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2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1990–2011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134.4% 증가했으나, 2011–2018년 동안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0.9%로 그 배출량이 6.2%만 증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1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다(그림 Ⅸ–3).

[그림 Ⅸ–3]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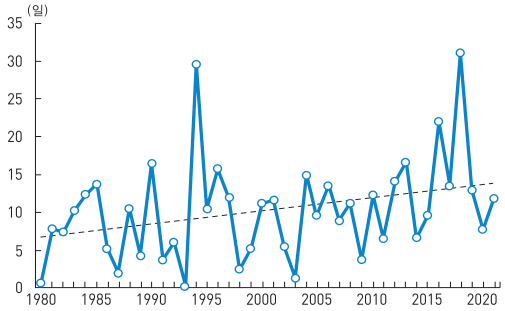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0.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외에도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의 예가 기온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이 2018년 발간한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18℃씩 상승하였고, 최근 30년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년)보다 1.4℃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듯 20세기 초에 비해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 기온의 상승은 폭염(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 기온이 25℃ 이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Ⅸ–4), 열대야 일수도 1980–1989년 평균 3.2일에서 2012–2021년에는 평균 9.0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Ⅸ–4] 폭염 일수, 1980–2021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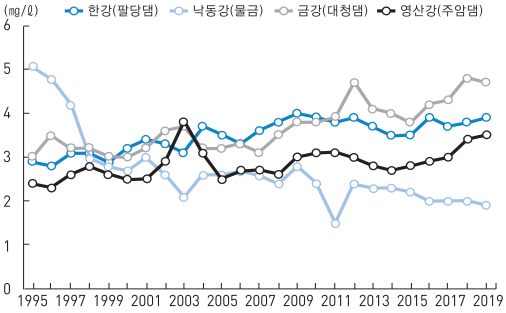
물환경

1990년대 초에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정부의 투자와 정책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인 수질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4대강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ℓ에서 2019년 1.9㎎/ℓ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강(팔당댐)과 금강(대청댐)의 COD는 2000년 각각 3.2㎎/ℓ, 3.0㎎/ℓ에서 2019년에 3.9㎎/ℓ, 4.7㎎/ℓ로 상당히 나빠졌다(그림 Ⅸ-5). 최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대체하는 수질지표로 부각된 총유기탄소량(TOC) 역시 공식 측정자료가 있는 2008년 이후에 4대강 모두에서 정체 또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의 수질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천수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먹는물'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66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EU 45개).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9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ℓ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ℓ 이하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먹는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공급시설의 유형에 따라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수도사업자 등)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검사 외에 지역주민의 신청에 따라 각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에

〈표 Ⅸ-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19

연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1995	1,105	3.3	2,513	1.8	590	28.8	3,183	9.0
2000	1,141	0.6	3,611	0.4	590	4.6	7,064	13.0
2005	937	0.5	3,806	0.3	483	5.4	10,120	21.9
2010	969	0.1	4,695	0.0	1,256	1.8	8,688	22.0
2017	5,455	0.2	72,014	0.1	74,097	3.1	4,985	36.1
2018	5,440	0.1	73,001	0.1	71,900	3.6	5,795	34.7
2019	5,429	0.1	75,360	0.0	71,022	3.8	5,420	25.7

주: 1)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2) 초과율은 해당 검사 대상 시설 중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수장이나 수도꼭지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편 약수터는 수질기준 초과율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 나빠지고 있다(표 Ⅸ-2).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kg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2013년 0.94kg에서 2019년 1.09kg으로 증가).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19년에 전년 대비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2014-2018년 동안 연평균 2.3% 증가).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Ⅸ-3).

〈표 Ⅸ-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9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487
2013	48,728	148,443	183,538	12,408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2
2015	51,247	155,305	198,260	13,402
2016	53,772	162,129	199,444	13,783
2017	53,490	164,874	196,262	14,905
2018	56,035	167,727	206,951	15,389
2019	57,961	202,619	221,102	15,556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생활폐기물은 물질성상에 따라 종이류, 유리류,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종이류와 폐합성수지류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2019년에는 각각 일일 8,534톤과 1만 1,013톤이 배출되었다. 특히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 양이 급증하였다. 또한 유리류나 금속류의 경우에는 분리배출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종이류나 폐합성수지류는 분리배출 되는 양보다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표 Ⅸ-4).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59.7%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5.7%) 되거나 매립(12.7%)되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재활용 비중이 80%를 넘고(82.6%), 건설

폐기물은 대부분이 재활용된다(98.9%). 지정폐기물도 재활용(62.5%)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4.5%) 또는 매립(18.2%)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Ⅸ-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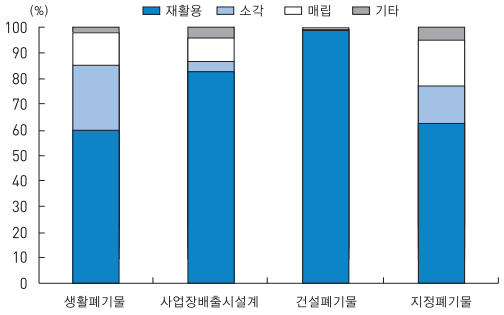
〈표 Ⅸ-4〉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9

(톤/일)

연도	종이류		유리류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류)		금속류	
	종량제	분리배출	종량제	분리배출	종량제	분리배출	종량제	분리배출
2007	5,586	5,476	405	2,280	2,859	2,378	570	2,455
2008	5,136	5,250	390	2,340	2,703	2,395	439	2,679
2009	4,915	5,164	425	2,264	2,817	2,336	376	2,998
2010	4,783	4,810	411	2,035	2,641	2,234	337	2,793
2011	4,940	4,301	430	1,908	2,644	2,338	330	2,706
2012	5,247	4,486	444	1,866	3,010	2,664	335	2,973
2013	5,383	4,128	499	1,797	3,127	2,574	346	2,890
2014	5,410	4,485	536	1,792	3,370	2,667	392	2,681
2015	5,445	4,514	623	1,693	3,739	2,654	448	2,440
2016	5,632	4,603	561	1,663	4,312	2,960	434	2,487
2017	5,194	4,151	608	1,572	4,601	3,563	399	2,161
2018	5,185	4,282	739	1,308	4,884	3,964	497	2,065
2019	4,993	3,541	644	831	7,430	3,583	450	1,501

주: 1) 종량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해 배출된 것을 의하며,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것을 의미함.
2) 2019년부터 '플라스틱류'가 '폐합성수지류'로 범위 및 명칭이 변경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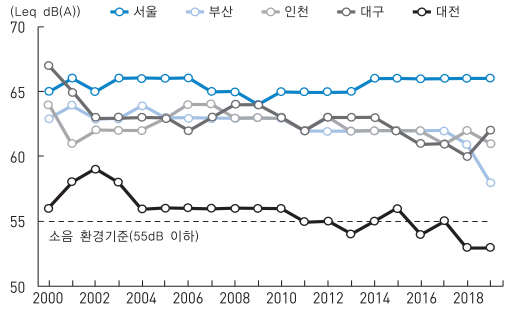


주: 1)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 2020.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았다(그림 Ⅸ-7).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9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일상생활에서 소음 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 관련 민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약 87%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다(표 Ⅸ-5). 층간소음은 2002년부터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

작했는데, 층간소음보다는 공사장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소음·진동 분쟁의 80% 이상을 공사장 소음·진동이 차지하고 있다.

〈표 Ⅸ-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 건수, 2000-2019

(건)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	기타
2000	79	12	4	0	0
2001	140	17	10	0	1
2002	256	32	5	0	4
2003	316	19	10	0	4
2004	365	17	11	5	4
2005	338	19	8	6	13
2006	352	25	9	1	9
2007	335	21	8	15	8
2008	329	21	5	22	6
2009	385	18	4	21	12
2010	274	9	9	12	17
2011	280	19	4	6	12
2012	344	27	7	17	14
2013	287	26	8	19	17
2014	487	28	5	18	22
2015	406	15	5	13	24
2016	310	16	2	25	13
2017	334	3	1	18	13
2018	462	6	6	16	30
2019	432	13	0	40	27

주: 1) 중앙환경분쟁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건수를 합산한 값임.
2)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82%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 동 비율은 2010년 이후 2%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2018년에 1.80%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에 다시 1.99%로 올라갔다(표 Ⅸ-6).

〈표 Ⅸ-6〉 환경분야 예산, 1995-2019

연도	예산액(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1995	17,801	2.39
1997	27,747	2.82
2000	30,581	2.44
2005	35,578	2.12
2007	32,837	1.86
2010	46,740	2.07
2011	49,741	2.11
2012	51,496	2.07
2013	54,458	2.07
2014	56,119	2.04
2015	59,389	2.07
2016	59,695	2.02
2017	60,232	1.99
2018	59,572	1.80
2019	71,852	1.99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환경분야 예산을 환경영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물환경 영역이 전체 환경분야 예산의 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다음으로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영역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순환 영역과 자연환경 영역은 각각 9.3%와 8.9%를 차지하고 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7).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의 지출은 기업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표 Ⅸ-7〉 환경보호지출, 2004-2018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46	15.5	38.6	26.4	19.5
2005	24,017	2.5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63	17.4	38.4	24.7	19.6
2007	28,675	2.63	18.9	37.7	23.9	19.5
2008	30,188	2.62	19.0	37.4	24.3	19.3
2009	32,629	2.71	17.2	37.9	24.6	20.3
2010	32,880	2.49	17.4	36.8	25.8	20.0
2011	33,784	2.43	17.3	36.5	26.4	19.8
2012	34,547	2.40	18.0	38.8	23.0	20.2
2013	35,169	2.34	16.6	39.2	23.3	20.8
2014	35,586	2.28	17.2	39.9	22.6	20.3
2015	37,025	2.23	17.3	40.8	22.4	19.5
2016	39,012	2.24	17.6	41.1	22.4	19.0
2017	38,674	2.11	18.3	40.2	22.9	18.6
2018	40,429	2.13	17.9	40.0	23.9	18.2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명목).
3) GDP(명목)는 2015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함.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Ⅸ-7).

환경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앞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성과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환경규제 기준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단속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의 위반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표 Ⅸ-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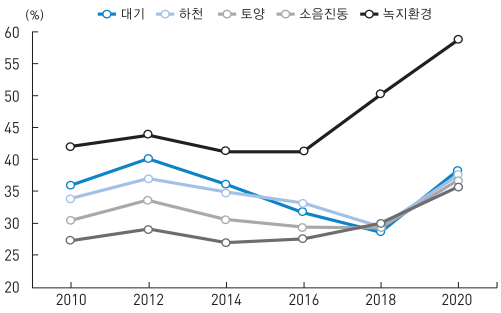
〈표 Ⅸ-8〉 환경오염시설 단속 및 위반 현황, 2010-2019

연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2010	37,188	4.8	40,785	5.0	16,926	3.3	6,924	2.6
2011	34,493	6.1	37,456	5.3	15,767	3.1	6,833	2.4
2012	34,507	7.0	39,662	5.7	16,268	2.7	7,546	2.6
2013	29,860	8.7	35,546	7.9	13,319	1.7	9,312	4.0
2014	29,742	9.0	34,343	7.9	11,802	2.2	9,605	3.3
2015	31,165	9.0	35,261	7.4	10,575	3.3	1,957	12.2
2016	36,325	8.8	36,806	7.3	12,711	2.5	2,146	15.5
2017	36,923	10.5	38,312	6.9	11,014	3.6	2,253	17.5
2018	31,063	14.8	33,436	10.4	8,511	4.8	2,673	15.2
2019	32,388	15.1	33,265	10.2	9,908	3.7	4,305	14.2

주: 1) 위반율은 단속시설 중 위반시설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이 35-39% 수준으로 비슷한 반면, 녹지환경은 58.7%로 월등히 높았다(그림 Ⅸ-8).

[그림 Ⅸ-8]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20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환경만족도

환경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환경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객관적인 측정 수치 못지않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대기, 하천(수질), 토양, 소음, 녹지환경의 5개 체감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영역별로 만족도(거주지역의 환경 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녹지환경과 소음 진동 영역은 2014년부터 만족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기, 하천(수질), 토양 영역은 2018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에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영역 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해보면, 2020년에 대기,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영역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에 만족('매우 좋음'+'약간 좋음') 비율이 45.7%로 불만족('매우 나쁨'+'약간 나쁨') 비율 9.1%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읍면부) 지역이 도시(동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인데, 2020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긍정적 평가('매우 좋음'+'약간 좋음') 비율은 각각 41.0%와 39.9%로 청소년층(53.0%)이나 고령층(50.7%)에 비해 10%p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한편 남성과 여성 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표 Ⅸ-9).

〈표 Ⅸ-9〉 지역 및 연령별 환경상태 만족도, 2020

(%)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전체	11.8	33.9	45.2	8.1	1.0
지역					
동부	9.4	33.3	47.7	8.6	1.0
읍면부	22.7	36.8	33.9	5.7	0.9
연령					
13-19세	17.2	35.8	41.0	5.0	0.9
20-29세	8.7	32.3	49.1	8.5	1.3
30-39세	7.9	32.0	49.1	10.0	1.1
40-49세	10.2	35.9	44.9	7.9	1.2
50-59세	10.6	33.4	47.0	8.1	0.9
60세 이상	16.2	34.5	40.9	7.7	0.7
성					
남성	11.7	34.3	45.0	8.0	1.0
여성	11.8	33.6	45.4	8.2	1.0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0.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 규정과 분쟁 양상

박영민 (한국환경연구원)

- 층간소음은 크게 생활 행위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바닥 충격음 및 바닥(천장) 두께로 규정되는 구조적 층간소음이 있다. 여기에 관리주체, 주택규모 그리고 신규/공동주택 여부가 더해져서 층간소음 규정이 적용된다.
- 층간소음은 점차적으로 주요 피해시간대가 저녁시간에서 야간시간(밤 10시 이후)대로 이동하고 있다. 층간소음 불편감(스트레스)은 계속 증가추세이다.
-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참거나 직접 항의하는 방법에서 2020년대에는 경비실/관리실 신고나 쪽지전달 등으로 이웃 간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층간소음 민원 발생은 2019년까지는 증가추세가 꺾이는 양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 등으로 4만 2,250건이 발생하여 2019년 대비 1.6배가 증가하였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것은 이웃 간의 폭행 및 살인미수 나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층간소음 민원의 처리는 79.4%가 현장 진단 및 측정을 요청했다. 2020년 현장 측정 결과 90% 이상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내 한정된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여(월평균 2,000건 이상의 민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 발생이 필연적이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경우 2013년부터 매년 1만여 건 이상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방화뿐만 아니라 매년 1건 이상의 이웃 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정부는 주요 정책 현안 과제를 제시하는 100대 국정과제에 "층간소음 불편 요소 해소"를 반영하였고, 환경부는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생활 밀착형 소음·진동 관리 강화(층간소음 관리강화)"를 제시하였다.

층간소음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분쟁의 정도와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층간소음 관리가 일상생활과 구조적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각종 조사를 종합하여 층간소음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발생 현황과 분쟁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층간소음 문제와 분쟁에 비해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분석에 활용된 주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 자료이다.

층간소음 관리 규정과 실태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세대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뛰는 소음 등)과 공기전달 소음(스피커 소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층간소음'을 대개 공동주택 내에서 위·아래층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타 세대로 전달되는 모든 소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피해대상은 위·아래층 세대뿐만 아니라 옆 세대나 불특정 세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층간소음은 구조적 차원에서 위·아래층 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 층간 바닥충격음은 대통령령 제31389호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으로 58데시벨 이하)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으로 50데시벨 이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및 평가 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출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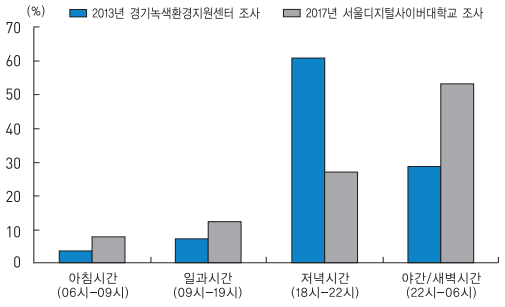
신규 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충격음을 규제하고 있는데 세부 기준으로는 적용 대상 건축물의 규모(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의 주요 차이점은 3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의 경우, 최소 바닥 두께를 만족해야 성능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30세대 미만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법」에서는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 구조 이외에 표준바닥구조를 정해 성능 인정 없이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의 관리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층간소음은 크게 생활 행위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및 바닥(천장) 두께 규제를 받는 구조적 층간소음이 있다. 한편, 층간소음은 여러 실

태조사에서 특정 피해 시간대, 불편감(스트레스) 정도, 피해 대처방법 등을 통해 파악되기도 한다.

2010년대 이후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림 Ⅸ-9]에서와 같이 층간소음의 피해 시간대는 2013년에는 저녁 시간대에서 2017년부터 야간 시간(22시 이후)대로 주요 피해 시간대가 변경되었다. 이는 경제활동시간 변경 등으로 22시 이후에 집안에서의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Ⅸ-9] 층간소음 주요 피해 시간대, 201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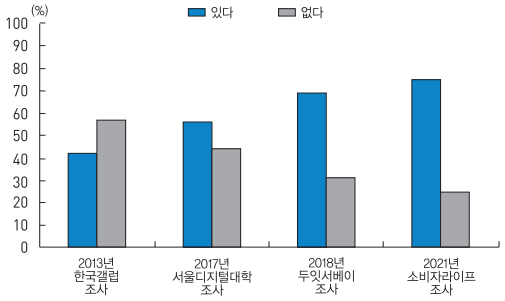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추진」, 보도자료, 2013. 7. 8.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설문, 응답자 55.5% 층간 소음으로 불편 겪고 있다", 〈CCTV뉴스〉, 2017.7.27.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스트레스)은 [그림 Ⅸ-10]과 같이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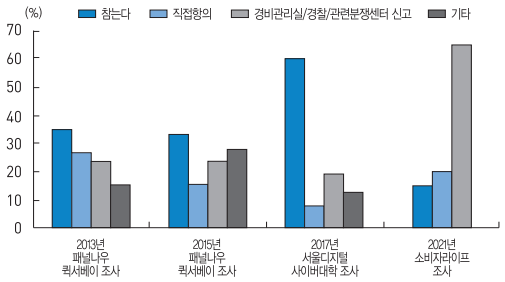
[그림 Ⅸ-11]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2010년대에는 참거나 직접 항의하는 방법이 50-70%였으나, 2021년에는 간접적으로 경비실/관리실 신고나 쪽지전달 등으로 이웃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Ⅸ-10]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스트레스), 2013-2021



출처: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02/28」, 2013.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설문, 응답자 55.5% 층간 소음으로 불편 겪고 있다", 〈CCTV뉴스〉, 2017. 7.27.
두잇서베이 블로그(https://doooit.tistory.com/534).
"[기획] 코로나19 집콕시대... '층간소음' 주의보소", 〈소비라이프〉, 2021.1.22.

[그림 Ⅸ-11]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 방법,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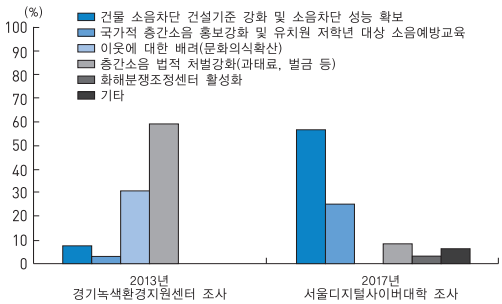


출처: 패널나우, "퀵서베이: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2013.2;
"퀵서베이: 아파트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2015.11.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설문, 응답자 55.5% 층간 소음으로 불편 겪고 있다", 〈CCTV뉴스〉, 2017.7.27.
"[기획] 코로나19 집콕시대... '층간소음' 주의보소", 〈소비라이프〉, 2021.1.22.

[그림 Ⅸ-12]에서와 같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발생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에서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강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 등을 통한 사후 처리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그림 Ⅸ-12]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 201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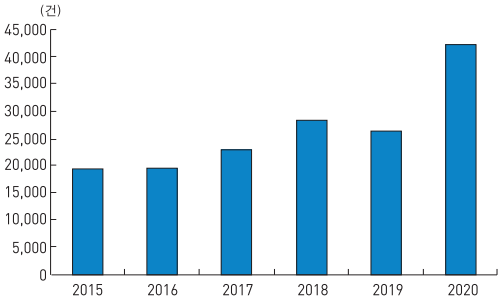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추진」, 보도자료, 2013. 7. 8.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설문, 응답자 55.5% 층간 소음으로 불편 겪고 있다", 〈CCTV뉴스〉, 2017.7.27.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 현황

층간소음 분쟁은 공동주거시설 내에서 실내생활 중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등)에서 층간소음 민원 상담과 현장 진단 등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은 [그림 Ⅸ-13]과 같이 매년 2만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층간소음으로 매년 1건 이상의 살인 사건과 살인미수, 방화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림 Ⅸ-13]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 2015-2020



주: 1)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및 온라인 민원 접수 건수임.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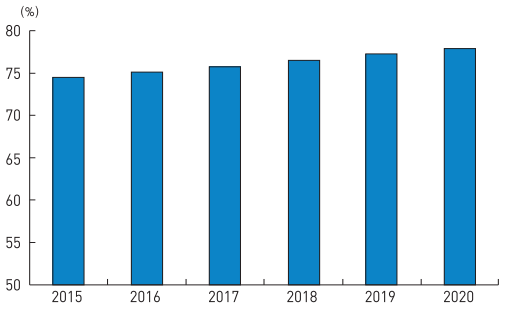
층간소음 민원은 [그림 Ⅸ-13]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는 증가추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초·중·고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또한 층간소음 민원은 [그림 Ⅸ-14]의 공동주택의 주거율 증가추세와 같이 증가함을 할 수 있다.

층간소음 민원의 원인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6만 61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4만 598건으로 67.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표 Ⅸ-10).

주거형태에 따른 민원은 〈표 Ⅸ-11〉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민원 중 아파트가 4만 7,107건(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은 7,640건(12.7%), 연립주택은 3,771건(6.3%), 주상복합은 752건(1.3%), 기타는 791건(1.3%) 이었다.

[그림 Ⅸ-14] 공동주택 주거율, 2015-2020



주: 1) 공동주택 주거율은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중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Ⅸ-10〉 소음 원인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누적), 2012-2020

소음 원인	2012-2020년 누적 접수 건수(건)	비율(%)
뛰거나 걷는 소리	40,598	67.6
망치질	2,588	4.3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2,224	3.7
문 개폐	1,184	2.0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1,699	2.8
악기(피아노 등)	927	1.5
기타	10,841	18.1
계	60,061	100.0

주: 1)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및 온라인 민원 접수 건수임.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마지막으로, 거주 위치별 층간소음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표 Ⅸ-12)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한 6만 61건 중 아래층의 접수가 4만 8,157건(8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항의 및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위층의 접수는 9,431건(15.6%)으로 보복 소음 및 항의에 의한 2차 피해 및 가해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Ⅸ-11〉 주거형태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누적), 2012-2020

주거형태	2012-2020년 누적 접수 건수(건)	비율(%)
아파트	47,107	78.4
다세대주택	7,640	12.7
연립주택	3,771	6.3
주상복합	752	1.3
기타	791	1.3
계	60,061	100.0

주: 1)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및 온라인 민원 접수 건수임.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표 Ⅸ-12〉 거주위치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누적),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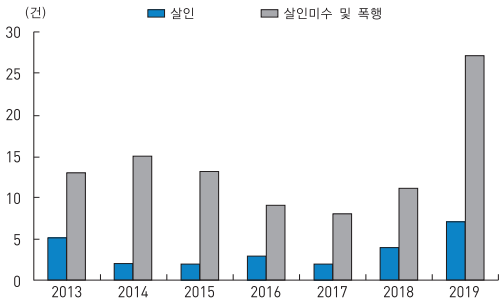
거주위치		2012-2020년 누적 접수 건수(건)	비율(%)
위층	아래층 항의에 의한 피해	6,697	11.1
	아래층 소음에 의한 피해	2,734	4.5
	소계	9,431	15.6
아래층		48,157	80.2
옆집		1,735	2.9
기타	기타	287	0.5
	전 층 공통	46	0.1
	3개 층 복합(위, 중간, 아래)	66	0.1
	3개 세대 복합(위, 아래, 옆)	62	0.1
	제3자(위층, 보복성)	29	0.1
	원인 미상 소음	208	0.4
	원인 미상 진동	38	0.0
	주상복합, 무용학원 등	2	0.0
	소계	738	1.3
계		60,061	100.0

주: 1)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및 온라인 민원 접수 건수임.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림 Ⅸ-15]와 같이 이웃 간의 살인이 2019년 7건, 살인 미수 및 폭행이 2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현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Ⅸ-15]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및 폭력 범죄 발생 건수, 2013-2019



출처: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블로그(https://blog.naver.com/humic3/221697412914).

층간소음 처리 현황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내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및 상담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콜센터를 통한 접수 및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층간소음 관련 불만은 휴식을 취하는 주말이나 수면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나 콜센터는 평일 주간 시간대(09:00-18:00)에만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적시에 풀 수 없어 결국 악성 민원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

주요 업무수행 절차는 1단계 전화 상담과 2단계 현장 방문 상담과 필요시 소음 측정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현황은 〈표 Ⅸ-13〉과 같다. 2014년부터 매년 약 2만 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형태는 주로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콜센터 운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센터 내 한정된 인력에 비해 월평균 2,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표 Ⅸ-1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 2012-2020

(건)

연도	전화상담			현장 진단·측정	
	전체 접수	콜센터 접수	온라인 접수	접수	처리
2012	8,795	7,021	1,774	1,829	728
2013	18,524	15,455	3,069	3,271	2,620
2014	20,641	16,370	4,271	4,465	4,617
2015	19,278	15,619	3,659	4,712	5,000
2016	19,495	14,204	5,291	6,306	5,741
2017	22,849	14,828	8,021	9,226	8,576
2018	28,231	20,750	7,481	10,142	10,294
2019	26,257	16,647	9,610	7,971	9,654
2020	42,250	28,132	14,118	12,139	11,608
총계	206,320	149,026	57,294	60,061	58,838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표 Ⅸ-14〉와 같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분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완료한 비율이 1.5%에 불과하며, 전체의 79.4%가 현장 진단 및 측정을 요청하였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갈등이 좀 더 심각하여 현장 진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Ⅸ-14〉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내역, 2012-2020

연도	총 접수 건수 (건)	처리내역					
		완료		제외		현장진단 측정 접수	
		건	%	건	%	건	%
2012	1,774	136	7.7	142	8.0	1,496	84.3
2013	3,069	149	4.9	569	18.5	2,351	76.6
2014	4,271	338	7.9	803	18.8	3,130	73.3
2015	3,659	309	8.4	491	13.4	2,859	78.1
2016	5,291	584	11.0	714	13.5	3,993	75.5
2017	8,021	737	9.2	1,137	14.2	6,147	76.6
2018	7,481	194	2.6	1,165	15.6	6,122	81.8
2019	9,610	57	0.6	2,223	23.1	7,330	76.3
2020	14,118	208	1.5	2,706	19.2	11,204	79.4
총계	57,294	2,712	4.7	9,950	17.4	44,632	77.9

주: 1) '제외'는 중복접수 및 층간소음 · 공동주택 범위 미해당.
2) '현장진단'은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요청.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민원인 요청 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측정 현황은 〈표 Ⅸ-15〉와 같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현장 측정결과만 보면 90% 이상이 법적 기준(공동주택에서의 생활 행위로 인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기준 초과는 7.6%에 불과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적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민원인과 잠재적 가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분쟁 해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기준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모든 조정 절차를 완료하고 있어 분쟁 해결 및 조정에 한계가 있다.

〈표 Ⅸ-15〉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 층간소음 측정 결과, 2014-2020

연도	계	기준 초과		기준 이내	
		건	%	건	%
2014	81	17	21.0	64	79.0
2015	159	15	9.4	144	90.6
2016	203	5	2.5	198	97.5
2017	409	24	5.9	385	94.1
2018	419	32	7.6	387	92.4
2019	462	35	7.6	427	92.4
2020	183	18	9.8	165	90.2
총계	1,916	146	7.6	1,770	92.4

주: 1) 2014년 하반기(6-12월)부터 현장측정 시작함.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

공동주택의 준공연도별(연도 추정) 현장 진단 및 측정 접수 현황은 〈표 Ⅸ-16〉과 같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중 바닥 두께의 확인이 불가한 '기타' 유형이 층간소음 접수 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

율(약 39.8%)을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해당 기타 유형의 공동주택 바닥(천장) 두께를 120mm 미만으로 추정하며,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하여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이전' 주택의 층간소음 비율은 21.0%로 '기타' 유형 다음으로 높으며, 최근에 지어진 2008년 준공 주택으로 올수록 1.9%로 그 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양상은 바닥 두께 기준이 1999년 120mm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210mm까지 두꺼워지면서 이러한 구조적 기준 변화가 층간소음의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준공연도 '2009년 이후' 주택의 층간소음 접수율이 20.6%로 높은 것은 강화된 기준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며, 오히려 건설 설계나 관리 감독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축아파트(주택) 주민들의 민감성이 층간소음 접수 증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Ⅸ-16〉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접수 건수(2020.6.30. 기준)

구분	접수 건수 (건)	비율 (%)	비고
계	54,099	100.0	
1999년 이전	10,746	19.9	120mm
2000-2007	8,546	15.8	150mm
2008년	996	1.8	180mm
2009년 이후	10,549	19.5	210mm
기타	22,262	43.0	확인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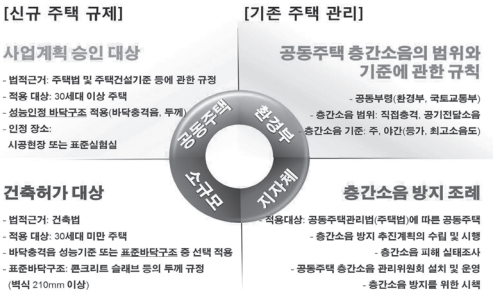
주: 1)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측정 시 설문결과.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20년 2분기 운영결과」, 2020.7.

층간소음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층간소음보다 더 포괄적인 수준의 '이웃 간 소음(neighbour noise)' 개념을 사용하여 동일 주택 세대뿐만 아니라 인접 주택에서의 소음까지 관리하고 있다.

국내 층간소음 규제 및 관리 현황은 [그림 Ⅸ-16]과 같이 신규 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및 바닥(천장) 두께 규제와 기존 주택의 생활 행위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Ⅸ-16] 국내 층간소음 규제 및 관리 현황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2018.

하지만 이와 같은 층간소음 규제와 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은 대부분 표준시험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공현장이나 시공 당시 품질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정된 성능보다 실제 시공했을

때 성능이 낮은 경우가 많다.

준공 후 실내생활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 시 층간소음의 책임은 기술적 요인인 바닥구조의 성능보다는 살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건설사는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건축물의 구조적인 소음인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실외 공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향후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따르며,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데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대에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측정시간을 현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현장 측정 시 약 90%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권고'의 성격이 강하고 별도의 처벌규정 또한 없으므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조례는 없으며, 2022년부터 공동주택 완공 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차단 성능이 권고 기준에 미달 시 개선 권고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가 개선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22년 시행 전 각 지자체별로 성능평가에 따른 보완 사항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맺음말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공간적,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새로운 이웃 간의 문제이며 이로 인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나 화상수업 등 실내 생활의 증가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기술적 해결방안과 법제적 해결방안은 행정조직과 사업자들이 강구 할 수 있으나, 심리적, 개인적 문제는 이웃 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영민, 강광규, 이병권, 김경민. 2018.「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6.「도시소음관리 매뉴얼(층간소음)」. 서울특별시.
차상곤. 2017.「층간소음 현황 및 대응기술 동향」. 환경부.
이기홍 외. 2020.「층간소음 경보기술 실용화 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감사원. 2019.「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감사보고서)」. 감사원.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Crime &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범죄·안전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10

코로나19 이후 범죄발생의 변화 박형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21

코로나19와 교통사고 한상진 | 서울대학교 331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근 10년간 교통범죄 등 특별법범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강력범죄가 늘어나 형법범죄는 증가하였다. 2018년과 2019년 재산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아동대상 범죄 중에서 아동살인을 제외한 아동실종·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모두 최근 5년간 발생률이 증가하여, 우리사회의 아동대상 범죄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모든 연령대의 외인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여성에 비하여 남성 외인사망률의 감소폭이 크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과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2006년 이후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다.
- 2010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건축물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향상되었다.

안전은 크게 사회적 안전과 자연재난, 인적 사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주로 범죄와 테러 등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범죄의 발생 현황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다루었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교통 사고를 주로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력과 소방력도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인해 보았다.

범죄(사회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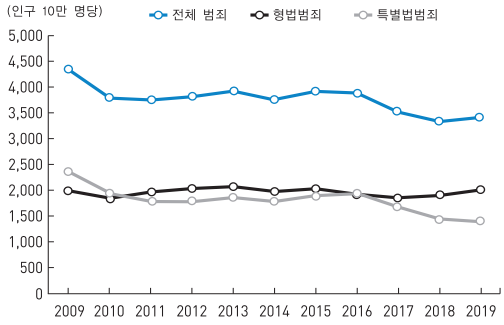
범죄발생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79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3,354건으로 최근 2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9년에는 3,40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로 구성된다. 전체 범죄의 감소현상은 특별법범죄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으나, 2011년부터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발생률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859건에서 2019년 2,009건으로 늘었다. 반면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17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936건에서 2019년 1,401건으로 줄었다(그림 X-1).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76만 7,684건으로 전체 범죄는 발생 건수 면에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18.5%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104만 1,395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5.4% 증가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72만 6,289건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다(그림 X-1).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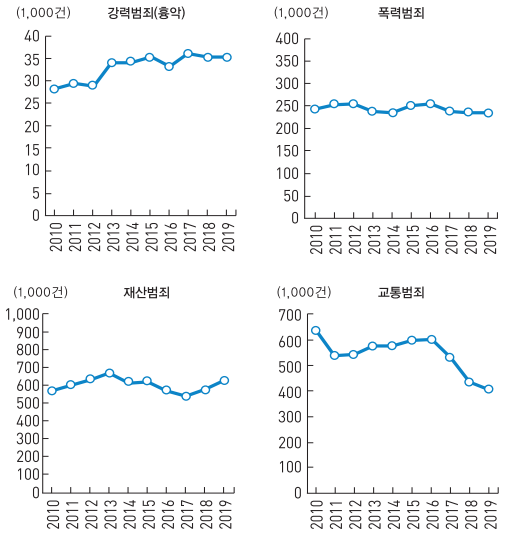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강력, 폭력, 재산, 교통범죄 등 범죄유형에 따라서도 범죄발생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와 교통범죄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강력범죄(흉악)는 2010년 2만 8,134건에서 2019년 3만 5,066건으로 최근 10년간 24.6% 증가한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63만 7,790건에서 40만 6,023건으로 36.3%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감현상이 나타났는데, 재산범죄는 2010년 56만 8,759건에서 2019년 62만 7,430건으로 10.3%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는 같은 기간에 24만 2,770건에서 23만 2,316건으로 4.3% 감소하였다(그림 X-2).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재산범죄만 8.8% 증가하였고, 교통범죄는 6.3% 감소하고, 폭력범죄와 강력(흉악)범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 이래 감소 추세이던 재산범죄가 2018년과 2019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형법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0-2019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에 속하는 주요 죄명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가 있다. 〈표 X-1〉에서처럼 죄명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나타난 전체 강력범죄 증가현상의 원인이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 범죄와 방화범죄 역시 완만한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강도를 제외한 4개 범죄유형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그간 증가추세였던 성폭력범죄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10-2019

(건)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10	1,262	4,402	20,584	1,886	224,300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76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7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2019	847	845	32,029	1,345	203,074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아동 대상 범죄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아동 대상 범죄 혹은 위험요인 유형으로는 아동실종·가출, 아동유괴,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등이 있다.

〈표 X-2〉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5년간(2015-2019년) 발생 건수 면에서 아동성폭력과 아동살인은 감소하였지만, 아동학대와 아동유괴, 아동실종·가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증가폭이 커서 지난 5년간 1만 1,715건에서 3만 45건으로 약 156.5% 늘었고,

〈표 X-2〉 아동 대상 범죄별 발생 건수와 발생률, 2015-2019

연도	아동 실종·가출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아동 유괴	아동 살인
발생 건수(건)					
2015	19,428	11,715	9,025	133	74
2016	19,870	18,700	8,573	140	66
2017	19,956	22,367	9,349	166	59
2018	21,980	24,604	8,591	149	52
2019	21,551	30,045	8,484	197	47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2015	216.8	130.7	81.8	1.2	0.7
2016	227.4	214.1	79.9	1.3	0.6
2017	235.3	263.7	89.8	1.6	0.6
2018	268.8	300.9	85.3	1.5	0.5
2019	271.8	378.9	87.1	2.0	0.5

주: 1)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아동살인 등은 20세 이하 피해자, 아동실종·가출,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2)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사례로 분류된 아동학대사례 건수를 의미함.
3) 아동유괴 발생 건수는 약취, 유인,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중 20세 이하 피해자 수임.
4)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는 범죄분석 개요부분의 수치 사용. 강간,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중 20세 이하 피해자 수임.
5) 아동살인 발생 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중 20세 이하 피해자 수임. 치사 제외.
6) 발생률=(해당 범죄 발생 건수÷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2-2018.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주요통계」, 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아동유괴 역시 133건에서 197건으로 48.1% 증가했으며, 아동실종·가출은 1만 9,428건에서 2만 1,551건으로 10.9% 늘었다. 반면 아동살인은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범죄로 2015년까지는 70-80건 발생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47건까지 줄었고(36.5% 감소), 아동성폭력은 9,025건에서 8,484건으로 6.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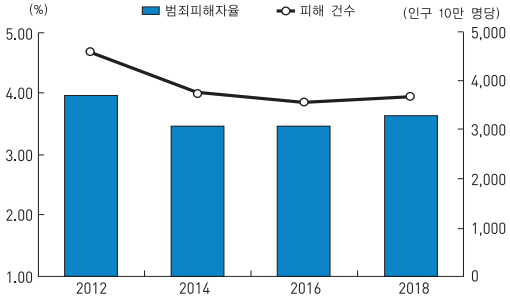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수준은 단순히 발생 건수보다는 아동인구에 대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아동인구를 고려한 발생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발생 건수가 소폭 감소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아동살인을 제외한 아동실종·가출,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아동유괴 모두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2015년에 비하여 2019년 증가한 셈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대상 범죄 위험수준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는 아동인구 10만 명당 378.9건, 아동실종·가출은 271.8건, 아동성폭력은 87.1건, 아동유괴는 2.0건, 아동살인은 0.5건 발생하였다.

범죄피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는 범죄발생통계를 공식범죄통계라 하며, 국가간 비교나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다만 공식범죄통계로는 신고되

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파악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 통계를 수집하고,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직전 연도의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이었다가,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3.68%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X-3).

[그림 X-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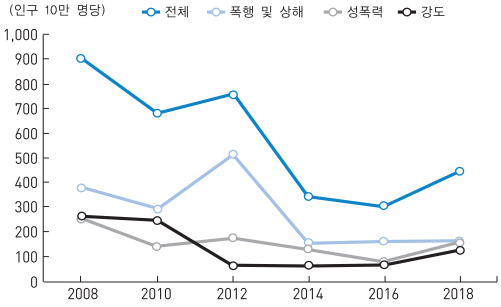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 건수 기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비율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2008년 조사 시 인구 10만 명당 899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2018년 조사에서는 447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건수는 2012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 피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건수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161건이며, 강도범죄 피해 건수는 125건이다(그림 X-4).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된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표 X-1), 범죄피해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그림 X-4), 최근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발생률의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로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X-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8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인적사고 및 자연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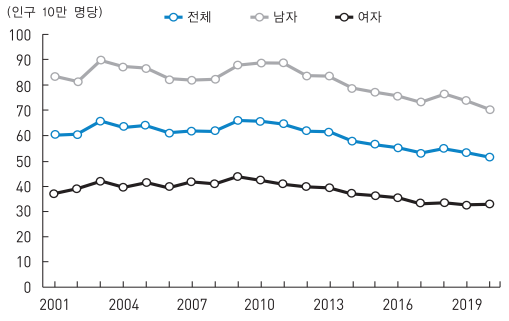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2001년 인구 10만 명당 60.3명에서 2020년 51.5명으로 14.6% 줄었다. 2003년 증가한 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 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 외인 사망률의 감소폭이 여성보다 커서, 남성 외인 사망률은 2001년 83.5명에서 2020년 70.4명으로 15.7%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37.0명에서 32.7명으로 11.6% 감소하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외인 사망률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성별로 보면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70.4명으로 전년도 73.8명보다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32.7명으로 전년도 32.6명과 유사한 수준이다(그림 X-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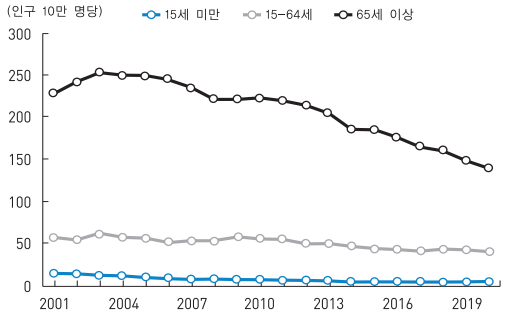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20년간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3.9명으로 최근 30여 년간 최저치를 나타냈다.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

[그림 X-5] 성별 외인 사망률, 2001-2020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X-6]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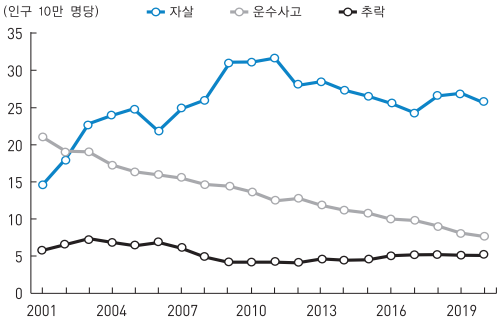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며, 2020년 기준 40.5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기는 하나, 2020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38.7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6).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감소폭이 가장 크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전년 26.9명에 비해 감소하였고, 운수사고도 8.2명에서 7.7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2017년 이후 발생비가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다(그림 X-7).

[그림 X-7]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1-2020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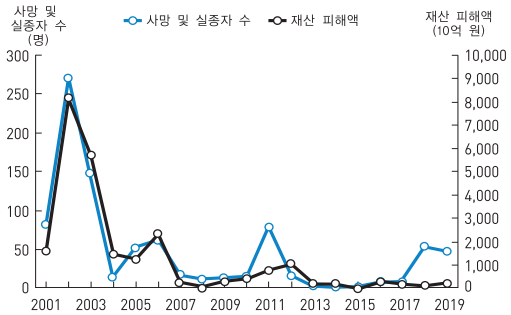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에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8년 53명에서 48명으로 감소한 반면, 재산 피해액은 2018년 1,410억 원에서 2,16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그림 X-8).

[그림 X-8]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1-2019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부터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긴 하나, 2020년 3만 건대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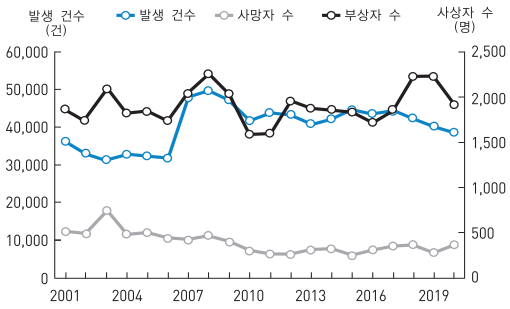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2,000명대로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화재 발생 건수(38,659건)가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1,917명)는 14.0%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365명)는 28.1%나 증가하였다(그림 X-9).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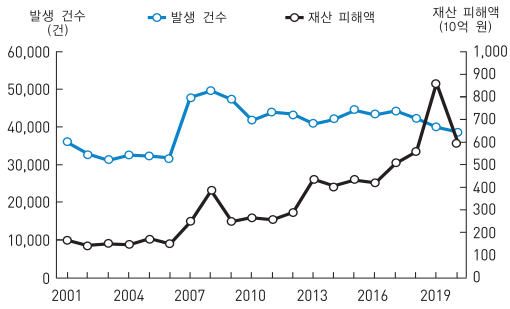
2020년도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3만 8,659건)는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재산 피해액(6,005억 원)은 전년 대비 30.1% 감소하였다. 특히 재산 피해액은 2019년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0년 크게 감소하여, 이 전년도의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X-10).

[그림 X-9]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01-2020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X-10]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2001-2020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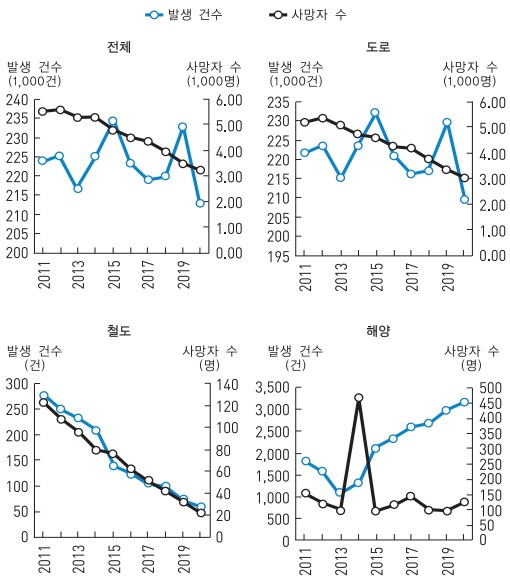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과 2019년 증가폭이 크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사고 발생 건수 역시 2015년과 2019년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도로사고 부상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 2,882건으로 전년 23만 2,654건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와 철도사고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사망자 수 역시 도로사고와 철도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로 3,491명에서 3,237명으로 줄었다. 해양사고는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X-11).

[그림 X-1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11-2020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21.

경찰력 및 소방력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5년 9만 5,336명에서 2019년 12만 2,913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5명에서 421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5년 2만 9,362명에서 2019년 5만 6,647명으로 증가하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641명에서 91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X-3).

안전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표 X-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안

〈표 X-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5-2019

(명)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5	95,336	505	29,362	1,641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8
2019	122,913	421	56,647	913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0

(%)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반적인 사회안전	11.3	13.7	9.5	13.2	20.5	31.8
자연재해	18.8	23.3	15.1	20.8	22.7	37.0
교통사고	8.0	9.4	7.3	10.2	13.1	21.7
화재	16.6	17.7	14.2	19.1	20.9	24.2
범죄위험(치안)	8.2	9.1	8.9	9.2	17.2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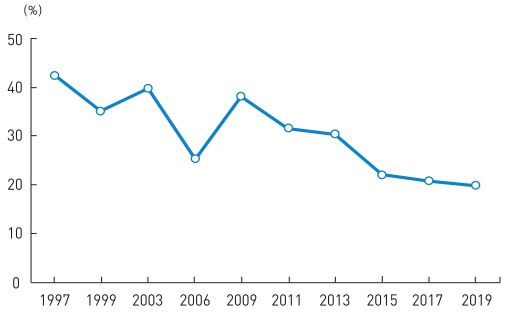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단, 2010년 자료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11.3%에 불과했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20년 3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치안)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8.2%p, 범죄안전은 18.6%p 증가하였고, 화재안전의 경우 증가폭이 7.6%p로 가장 낮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마다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전반적으로 2014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림 X-12]

[그림 X-1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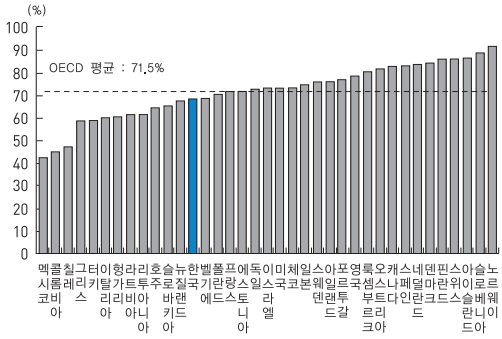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19.

에서 보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19.8%로 나타났다. 지난 20여 년간 소폭의 등락 현상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두려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야간보행안전도('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는 2018년에 68.4%로 OECD 평균인 71.5%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91.2%), 슬로베니아(88.3%), 아이슬란드(86.2%), 스위스(85.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2.5%), 칠레(47.0%), 이탈리아(59.9%), 헝가리(60.3%)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3).

[그림 X-13]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 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코로나19 이후 범죄발생의 변화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세계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이후 범죄는 재택 제한의 영향으로 살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살인범죄의 경우 일일 발생 건수 자체가 워낙 적어 코로나19의 발생 추이와 연관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 강도범죄는 코로나19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 폭행(상해)범죄의 경우 2020년 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범죄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봉쇄가 강화되었다가 다소 완화되는 기간에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성폭력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1차 급증기 직후인 4월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 가정폭력범죄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트폭력범죄는 2020년에도 지난 2년간 발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 절도범죄는 지난 3년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지난 2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멈추고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사기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을 지내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발생과 대유행은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몸으로 알게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여러 영역을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는 범죄와 치안에도 영향을 끼쳤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절도나 무단침입, 약물남용, 기물파손 등과 같은 경미한 범죄들의 감소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인폭력이나 살인 등과 같은 심각한 폭력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Nivette, et al., 2021). 상대적으로 사소한 절도 등과 같은 범죄의 감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범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감소하면서 범죄의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Boman et al., 2020; Estévez-Soto, 2020). 반면 감염병의 창궐과 이에 따른 격리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폭력과 같은 표출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 폭력이나 살인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Campedelli et al., 2020). 이처럼 범죄의 발생 역시 코로나19의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안활동과 형사정책적 대응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 추이와 그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1] 이에 앞서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양상을 분석한 국제비교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등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함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범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정책연구소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 중 2018년, 2019년 신고자료 및 2020년 10월까지의 신고자료를 분석하였다.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는 경찰청 승인통계인 「범죄통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는 잠정통계로서 전국 각 지역 경찰관서에서 접수된 112 신고내용 중 범죄 유형과 발생일시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데이터에는 중복 신고, 오인신고 등이 포함되어 과대 측정의 가능성이 있으며,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되지 않은 인지사건, 경찰서 신고사건 등은 누락되어 과소 측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는 그 크기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와 경향성을 읽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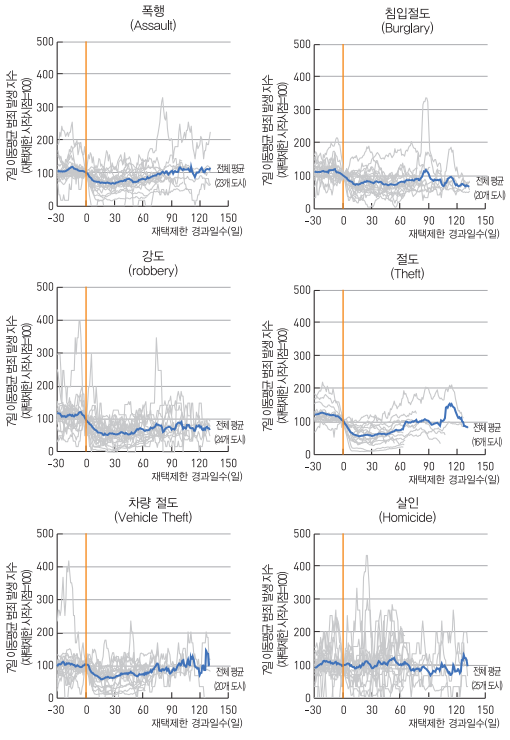
그러나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의 유용성 또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승인통계는 당해 연도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 말에 수치가 정리되어 발표된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의 총계로서만 발표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변화하는 범죄 발생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는 잠정통계이기는 하지만 신고와 동시에 집계되는 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일의 범죄 발생 변화 양상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표현한 '발생' 또는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발생 신고' 또는 '사건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자연스러운 서술과 가독성을 위해 '신고'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

1) 이 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수시보고서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2021)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양상

[그림 X-14]는 세계 23개국의 27개 주요 도시에서 나타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에 포함된 도시는 북미 5개 도시(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멕시코시티, 토론토, 밴쿠버), 남미 7개 도시(칼리, 과야킬, 리마, 멘도사, 몬테비데오,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유럽 11개 도시(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하노버, 헬싱키, 류블랴나, 런던, 말뫼, 스톡홀름, 탈린, 텔아비브, 취리히), 아시아 2개 도시(서울, 무자파라바드), 오세아니아 2개 도시(오클랜드, 브리즈번)이다.

[그림 X-14] 세계 주요 도시 '재택제한' 전후 일일 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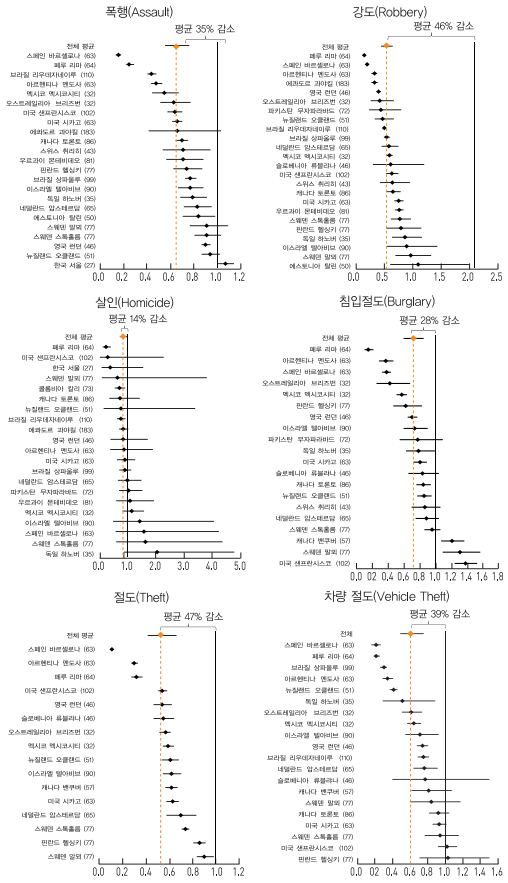


출처: Nivette, et al., 2021.

각 도시에서 '재택제한(stay-at-home restrictions)' 조치(또는 권고)가 최초로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재택제한 전후의 범죄 발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택제한이 살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한 시행에 따른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는 범죄유형과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경향은 재택제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보인다(Nivette, et al., 2021).

[그림 X-15]는 범죄유형별로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제한의 영향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폭력범죄를 살펴보면, 폭행의 경우 재택제한 시행 이후 평균 약 35%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강도는 평균 47%가 감소하였다. 살인은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도시는 3개 도시(리마, 칼리, 리우데자네이루)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재산범죄에 대한 재택제한의 영향을 살펴보면, 침입절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도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절도는 평균적으로 약 47% 감소하였지만 도시마다 큰 편차를 나타낸다. 차량절도는 평균적으로 약 39%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한 도시도 많이 발견된다(Nivette, et al., 2021).

[그림 X-15] 세계 주요 도시 일일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 제한'의 영향 비교



주: 1) 개별 도시의 통계치는 일일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제한의 효과를 '중단시계열분석방법(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로서, 그림에서 표식은 재택제한 전 범죄 발생률을 1이라고 할 때 재택제한 이후 범죄 발생률을 비(ratio)로 나타낸 것임. 각 표식의 가로 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개별 도시명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재택제한 일수임.
2) 각 범죄유형의 전체 평균은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출처: Nivette, et al., 2021.

코로나19와 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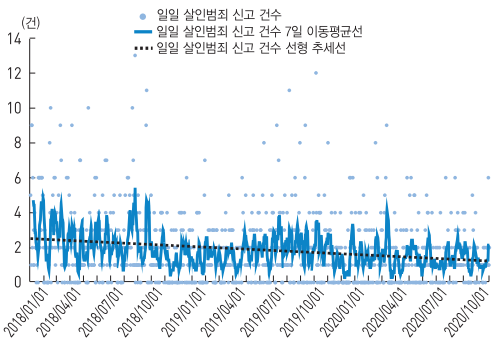
살인범죄

살인범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도 이러한 감소추세를 유지하였다(그림 X-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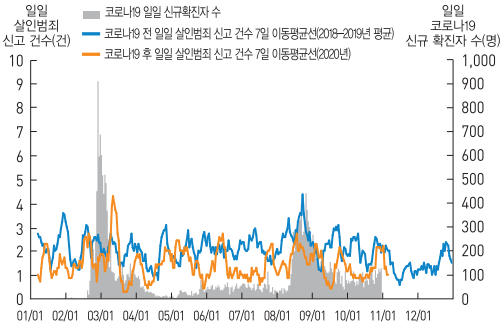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X-16-2]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급증기인 2020년 2월 중순의 경우 다른 해와 다르게 다소 증가하였고, 2차 급증기인 2020년 8월 중순에도 다소 증가하였다. 다만 8월 중순의 경우 예년에도 가장 많은 살인이 발생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해에 비하여 더 적게 증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월은

[그림 X-16] 코로나19 전후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2020년의 살인 발생이 2018–2019년 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일간 발생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의 발생 추이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강도범죄

강도범죄는 2020년의 경우 [그림 X–17–1]에서처럼 지난 2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으나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2020년의 감소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강도범죄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이 발견된다. [그림 X–1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월과 8월의 경우 2018–2019년 평균 발생 건수와 2020년 평균 발생 건수의 차이가 가장 컸다. 그러나 급증기가 지나면서 바로 발생 건수가 회복되어 급증기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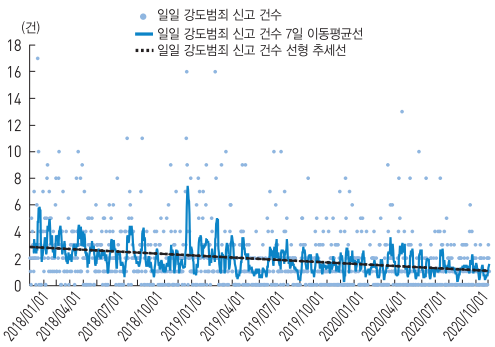
폭행(상해)범죄

폭행(상해)범죄는 8–9월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약한 주기성을 보이며,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X–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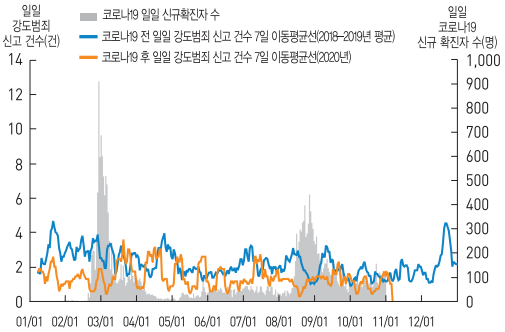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폭행(상해) 사건의 발생 건수는 [그림 X–1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하는 주기인 2월 이후 9월까지 지난 2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게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9월까지의 감소폭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9월에 폭행(상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차 급증기와 시기를 같이하는 2020년의 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폭행(상해)범죄의 발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17] 코로나19 전후 일일 강도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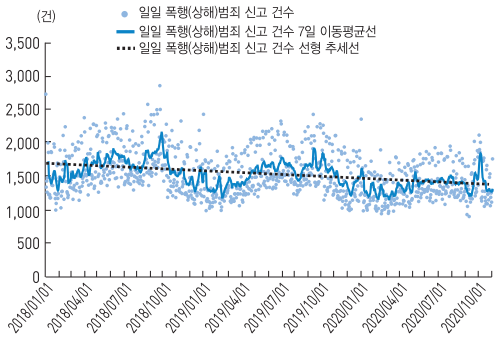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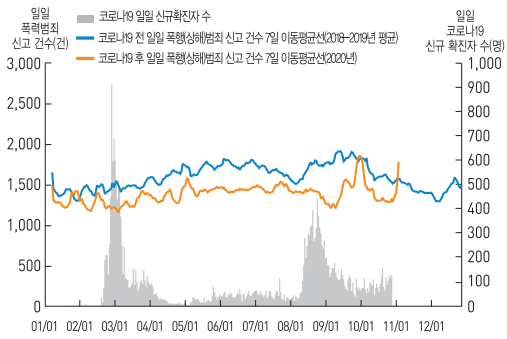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그림 X-18] 코로나19 전후 일일 폭행(상해)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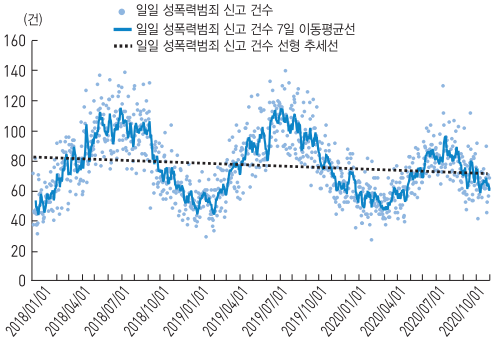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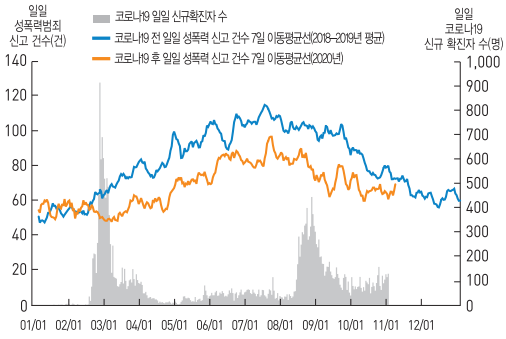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그림 X-19] 코로나19 전후 일일 성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코로나19와 젠더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성폭력은 지난 3년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기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그림 X-19-1).

[그림 X-19-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월 초까지는 직전 2년에 발생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인 2월 이후에는 직전 2년의 동일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급증기 직후인 4월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 발생 건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정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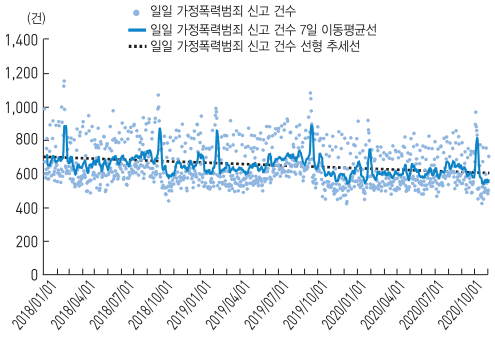
가정폭력범죄는 [그림 X-20-1]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의 가정폭력 사건은 지난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전반적인 감소추세인지 코로나의 영향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의 감소폭이 직전 2년의 감소폭보다 조금 더 크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급증기인 2월과 8월을 전후한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데이트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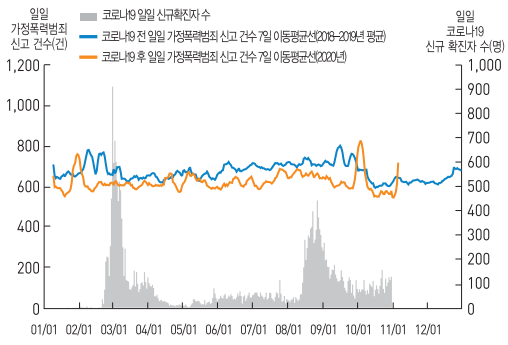
데이트폭력범죄는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고 있으며, 다

[그림 X-20] 코로나19 전후 일일 가정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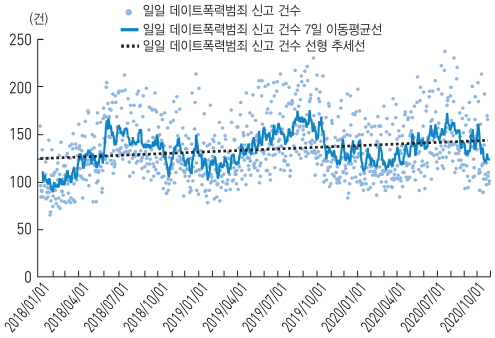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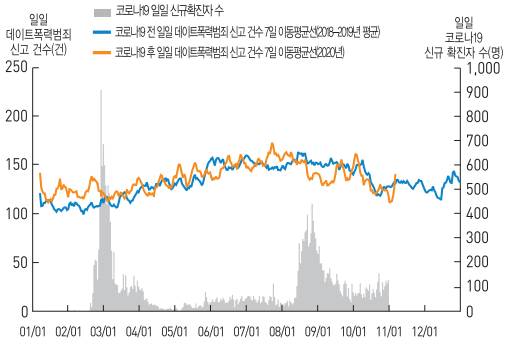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그림 X-21] 코로나19 전후 일일 데이트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다소 증가하는 주기성을 보인다(그림 X-21-1).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은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 발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X-21-2). 즉 코로나 발생 이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예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1차 급증기나 2차 급증기의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19와 재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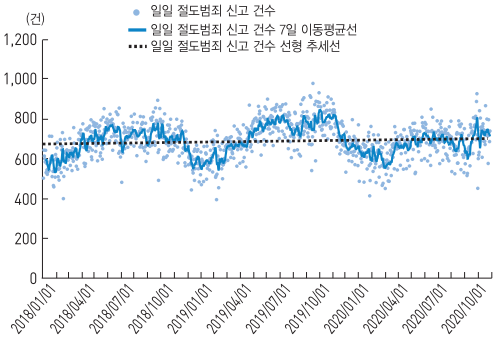
절도범죄

절도범죄는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면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증가추세가 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X-22-1).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한 [그림 X-22-2]를 보면,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지난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멈췄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절도범죄의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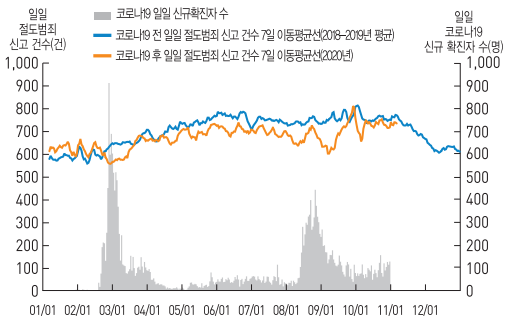
절도범죄의 경우 코로나 1차 급증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가 2차 급증기에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 평균 발생 건수와 2020년 평균 발생건수의 차이가 가장 큰 달은 8월이었으며, 1월과 2월에는 2020년의 발생이 더 많았다.

[그림 X-22] 코로나19 전후 일일 절도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사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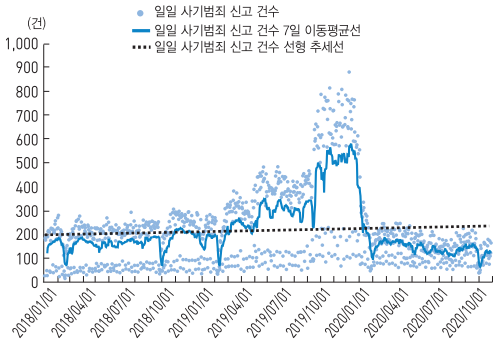
사기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증가추세를 멈추고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그림 X-23-1).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한 [그림 X-23-2]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2020년의 발생

건수가 지난 2년간 발생 건수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월 말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예년과 전혀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차 급증기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다가, 2차 급증기 이후 감소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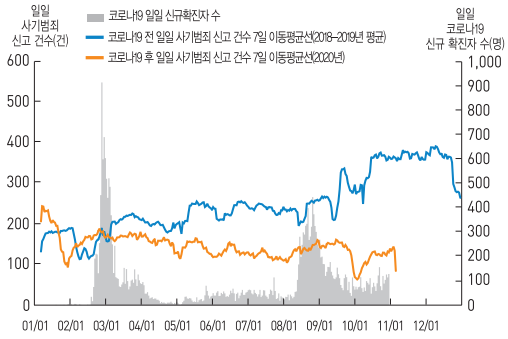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기범죄의 112 신고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여기에는 경찰인지사건, 경찰서에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 등 112 신고를 통하지 않은 사건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기범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건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X-23] 코로나19 전후 일일 사기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맺음말

지금까지 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후에 나타난 범죄 발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폭력범죄는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대면 접촉의 감소로 인한 범죄 기회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폭력 중 성폭력 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인 대면접촉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면접촉은 감소

하지만 친밀한 집단 내부에서의 접촉은 증가하여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범죄유형은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분석 데이터가 신고 데이터라는 것과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재산범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 양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면 접촉의 상황을 감소시켜 범죄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발생은 전반적인 범죄를 감소시켰으며,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양상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전후 범죄 발생 추이의 비교만으로는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간의 행위이므로 코로나19의 발생 및 급증만이 범죄 발생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19가 범죄 발생 양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매개요인과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만으로는 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감염병 대유행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논의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형민 · 장광호 · 임운식. 2021.「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oman, J.H., Gallupe, O. 2020. "Has COVID-19 Changed Crime? Crime Rate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andemic."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537 - 545. https://doi.org/10.1007/s12103-020-09551-3.

Campedelli, G.M., Favarin, S., Aziani, A. et al. 2020. "Disentangling community-level changes in crime tren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cago." *Crime Science* 9, 21. https://doi.org/10.1186/s40163-020-00131-8.

Estévez-Soto, P.R. 2020. "Crime and COVID-19: effect of changes in routine activities in Mexico City." *Crime Science* 10, 15. https://doi.org/10.1186/s40163-021-00151-y.

Nivette, et al. 2021. "A global analysis of the impact of COVID-19 stay-at-home restrictions on crime." *Nature Human Behaviour* 5, 868 - 877. https://doi.org/10.1038/s41562-021-01139-z.

코로나19와 교통사고

한상진 (서울대학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0년 20만 9,654건으로 8.7%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정체 혹은 소폭 증가 추세와 대비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49명에서 3,081명으로 8.0% 감소에 그쳐 전년도 감소폭인 11.4% 보다 낮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사고 사망·중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47.6%, 36.5% 감소하였으며, 71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중상자 수도 23.3% 감소하였다.
- 보행자 교통사고의 감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 수 감소로 보행 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환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외출 횟수를 줄였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온라인 수업으로 등하교하지 않으면서 보행할 기회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어들면서 음주 관련 사고 건수가 1만 5,708건에서 1만 7,247건으로 9.7% 증가하였다. 다만 음주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5명에서 28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배달용 이륜차 등록 건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2020년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만 8,467건에서 2020년 1만 8,280건으로 1.0%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이륜차 사망자 수만 같은 기간 422명에서 43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지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까지 감소한 나라도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교기간 동안 26% 감소하였다. 이는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감소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났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노인정 등이 폐쇄되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변화는 통행 횟수나 교통수단의 선택 등 교통 행태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 때문에 교통사고도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달라진 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본다. 주된 분석은 과거 추세와 비교하여 교통사고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수단 이용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징에 변화가 있는지, 특정 유형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변화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에는 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찰의 교통사고통계를 이용하였다. 국제비교는 OECD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과 교통사고 건수 변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교통사고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5〉에서 보는 것처럼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가 21만 7,148건에서 22만 9,600건으로 5.7% 늘어난 반면 감염병이 창궐한 2020년에는 사고 건수가 20만 9,654건으로 8.7%나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349명에서 3,081명으로 8.0%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2019년 감소율 -11.4%보다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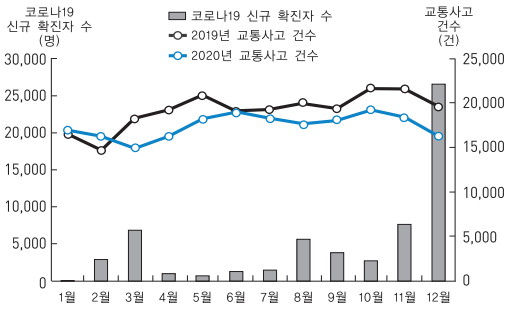
〈표 X-5〉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1-2020

연도	사고 건수 (건)	사망자 수 (명)	부상자 수 (명)
2011	221,711	5,229	341,391
2012	223,656	5,392	344,565
2013	215,354	5,092	328,711
2014	223,552	4,762	337,497
2015	232,035	4,621	350,400
2016	220,917	4,292	331,720
2017	216,335	4,185	322,829
2018	217,148	3,781	323,037
2019	229,600	3,349	341,712
2020	209,654	3,081	306,194

주: 1)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기준임.
2) 부상자에는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 등이 포함됨.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또한 교통사고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감소하고, 반대로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 증가하는 특징도 나타난다. [그림 X-24]의 월별 확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2020년 3월과 8월에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전년도 3월과 8월에 확인되는 교통사고 건수 증가 경향과 대비된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적었던 2020년 4-6월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X-24] 월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 2019.1-2020.12



주: 1)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기준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질병관리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http://ncov.mohw.go.kr/).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우선 사람들의 통행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상진·장수은(2020)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차량 교통량은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작년 5월에도 서울의 지하철과 전국의 시내버스의 이용객

수는 각각 26.4%와 26.7% 감소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 보행자 수도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차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와 보행자 사고 변화

실제로 2020년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X-6〉에서 알 수 있듯이, 보행자 사고 건수는 2018년 4만 5,921건에서 2019년 4만 6,682건으로 1.7%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4만 6,682건에서 3만 6,601건으로 21.6%나 감소하였다.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건수의 감소율은 전체 교통사고 감소율 -8.7%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행자 중상자 수도 2019년 1만 9,003명에서 2020년 1만 4,435명으로 24.0%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302명에서 1,093명으로 16.1% 감소하는 데 그쳤다.

보행자 사고의 감소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고령자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림 X-25]에 제시된 것처럼 12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9년 1,165명에서 2020년 611명으로 47.6% 감소하였고, 13-20세 청소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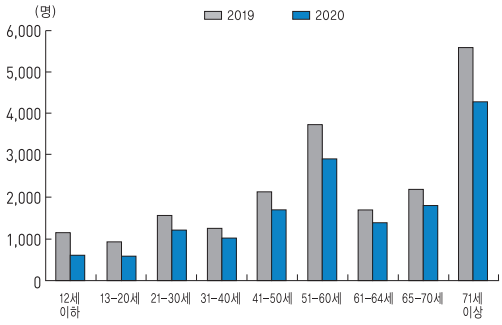
〈표 X-6〉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중상자 수, 2011-2020

연도	사고 건수 (건)	사망자 수 (명)	중상자 수 (명)
2011	50,710	2,044	25,254
2012	51,044	2,027	24,960
2013	50,022	1,982	24,420
2014	51,145	1,910	23,863
2015	51,757	1,795	23,435
2016	49,234	1,714	21,841
2017	47,377	1,675	20,829
2018	45,921	1,487	19,740
2019	46,682	1,302	19,003
2020	36,601	1,093	14,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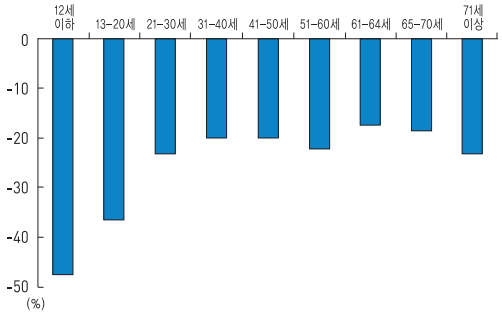
주: 1)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기준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그림 X-25] 연령집단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자 수, 2019-2020

1) 사망 및 중상자 수



2)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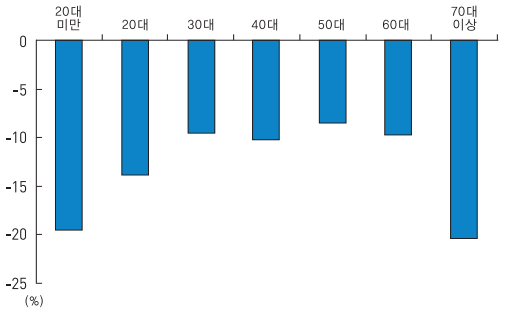
주: 1)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기준임.
2) 보행 중 사망·중상자 수는 차대 보행자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 후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보행자를 포함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경우는 934명에서 593명으로 36.5% 감소하였으며, 71세 이상 고령자는 5,595명에서 4,291명으로 23.3% 감소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어린이와 청소년, 고령자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등하교를 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는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면 중증 질환 이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통행 횟수를 평소보다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고령자의 통행량 감소는 이동 통신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정리한 모바일 인구이동 자료로도 확인된다. [그림 X-26]은 2020년 6월 1주부터 12월 4주까지 연령대별로 전년 대비 주간 인구이동량의 평균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증감률을 보면 70대 이상 고령자층이 전년 대비 20.5%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되는 20대 미만 연령층은 19.6% 감소하여 그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다른 연령층의 감소폭은 8-13% 수준에 그쳤다.

[그림 X-26] 연령대별 전년 동일 주간 대비 인구이동량의 평균 증감률, 2020.6-12



주: 1) 평균 증감률은 2020년 6월 첫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주 단위 인구이동량을 전년 동일 주간 인구이동량과 비교해 증감률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한 값임.
출처: 통계청, 모바일 인구이동(https://kosis.kr/covid/statistics_mobile.do).

코로나19 확산과 음주 교통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7〉에서 알 수 있듯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만 5,708건에서 2020년 1만 7,247건으로 9.7%나 늘어났다. 이는 2018에서 2019년 사이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1만 9,381건에서 1만 5,708건으로 19.0%나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증가로 볼 수 있다. 다행히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에서 2020년 287명으로 2.7%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 346명에

〈표 X-7〉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중상자 수, 2011-2020

연도	사고 건수 (건)	사망자 수 (명)	중상자 수 (명)
2011	28,461	733	13,900
2012	29,093	815	13,441
2013	26,589	727	12,008
2014	24,043	592	10,227
2015	24,399	583	9,716
2016	19,769	481	7,362
2017	19,517	439	7,136
2018	19,381	346	6,721
2019	15,708	295	5,043
2020	17,247	287	5,032

주: 1)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기준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비해 14.7%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0년의 음주사고 관련 사망자 수 감소 폭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것은 경찰이 음주단속에 사용해 온 기존의 음주측정기를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 2020년 5월부터는 비접촉식 음주단속을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횟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높였지만 전반적인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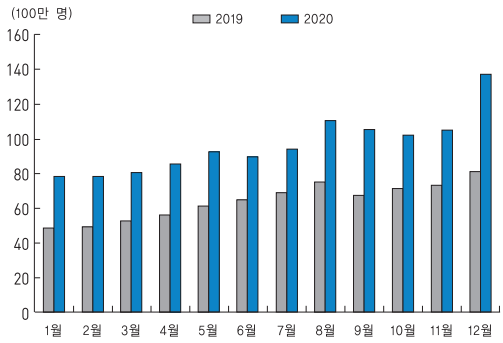
2018년 소위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고 이 때문에 관련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었으나 코로나 감염병 창궐로 이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였다.

코로나19와 이륜차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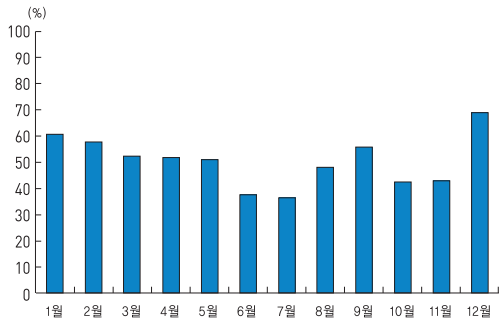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음식물이나 택배 등의 배달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삶」 데이터에 따르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앱 이용자수는 2020년 7월 이후 연평균 9%의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프오 등 배달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를 집계한 것이다. [그림 X-27]에서 2019년과 2020년의 월별 이용자 수를 비교해보면, 12월이 68.8%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고, 7월이 36.3%로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12월은 2020년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여러 번 1,000명을 넘어서서 월 단위로는 2020년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타난 시기이다. 전체적으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배달앱 사용자 수가 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X-27] 월별 배달앱 사용자 수, 2019-2020

1) 배달앱 사용자 수



2)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증감률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삶 (http://www.covid19board.kr/living).

배달 수요의 증가는 이륜차 등록대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X-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달 오토바이로 많이 활용되는 100-

250cc의 이륜차 등록 대수는 2018년 109만 7,381대에서 2019년 111만 7,862대로 1.9%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는 115만 3,804대로 늘어나 2019년에 비해 3.2%나 증가하였다.

〈표 X-8〉 이륜차 배기량별 등록 대수, 2015-2020

(대)

연도	전체	50cc 미만	50-100cc 이하	100-250cc 이하	260cc 초과
2015	2,161,774	184,822	867,174	1,043,814	65,964
2016	2,180,688	171,442	866,940	1,068,299	74,007
2017	2,196,475	157,657	868,990	1,084,148	85,680
2018	2,208,424	145,872	866,702	1,097,381	98,469
2019	2,236,895	142,993	862,922	1,117,862	113,118
2020	2,289,009	140,280	862,641	1,153,804	132,284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하지만 이륜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2019년 1만 8,467건에서 2020년 1만 8,280건으로 1.0% 감소하였다. 다만 이륜차 사망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422명에서 439명으로 4.0% 증가하였다(표 X-9). 이렇게 오토바이 이용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륜차 사고에서 흔히 나타나는 미보고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미보고 사고란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고를 의미한다. 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고피해 처리비용 지급 수준이나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표 X-9〉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중상자 수, 2011-2020

연도	사고 건수 (건)	사망자 수 (명)	중상자 수 (명)
2011	10,170	429	4,687
2012	10,415	405	4,543
2013	10,433	413	4,474
2014	11,758	392	4,674
2015	12,654	401	4,641
2016	13,076	428	4,617
2017	13,730	406	4,832
2018	15,032	410	5,180
2019	18,467	422	5,917
2020	18,280	439	5,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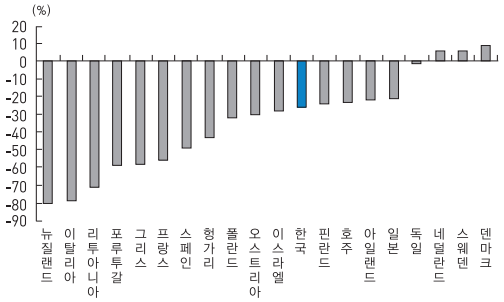
주: 1)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 기준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코로나19와 교통사고 국제비교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이동제한(lockdown) 명령이 내려진 국가에서는 통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 2019년 4월과 2020년 4월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그림 X-28), 뉴질랜드와 이탈리아가 각각 -80%, -79%의 사망자 수 감소를 보여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포르투갈 -59%, 그리스 -58%, 프랑스 -56%를 보였다. 이에 비해 동일하게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졌던 독일은 사망자 수 감소가 1%에 그쳤다. 한편,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6%의 사망자 수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동제한명령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

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86명에서 213명으로 26% 감소하였다. 이는 이동제한명령을 실시한 일본(−21%), 아일랜드(−22%), 이스라엘(−28%)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X−28] OECD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2020.4



주: 1) 증감률은 2019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2020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증감률임.
2)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이동제한(Lockdown) 명령이 없었던 국가임.

출처: OECD, *Road Safety Annual Report 2020*, 2020.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맺음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새로운 생활방식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수업도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업무와 관련된 회의도 대면 방식보다 화상회의로 대체되는 횟수가 늘어났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도 크게 늘어났으며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교통 행태에서 변화를 초래하였다. 통행 횟수가 감소하거나 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교통량은 예전과 비교하여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 수나 보행자 수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고령자와 관련된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이 2019년 38.9%에서 2020년 35.5%로 3.4%p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보행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코로나 감염병이 극복된 이후 보행량이 늘어나도 보행자와 관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상진·장수은, 2020, “코로나19의 교통영향”, 이재열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20」, pp 289–295. 대전: 통계개발원.

Korean Social Trends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 Social Integr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박원호 | 서울대학교 340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하상응 | 서강대학교 349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박선경 | 인천대학교 359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박원호 (서울대학교)

- 한국의 선거참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특히 지난 2020년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코로나19의 방역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여주었다.
- 코로나19 발발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투표율은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진행되는 투표율의 증가를 반영한다.
- 2017년 이래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비선거적 정치참여가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방역과 관련된 의료기관,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의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났다.
- 부패인식지수(CPI)는 외국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한국은 2016년을 최저점으로 몇 년간에 걸쳐 상승을 보인 후, 2020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 국내 일반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한 부패인식조사에서도 2016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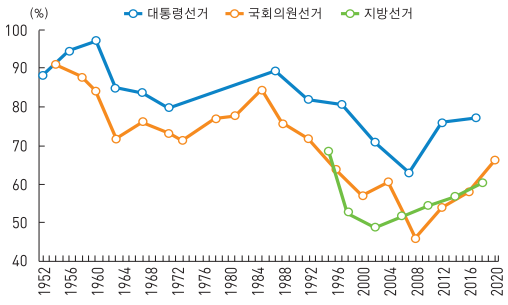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사회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상당한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얼마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통하여 이러한 최근의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거참여

선거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수단이다. 높은 선거 참여는 시민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정책적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며, 동시에 이들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관여도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그림 XI-1]은 한국 각급 역대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987년 이후 급속한 하락을 겪은 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타난 66.2%의 투표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었다.

[그림 XI-1] 역대 선거 투표율, 195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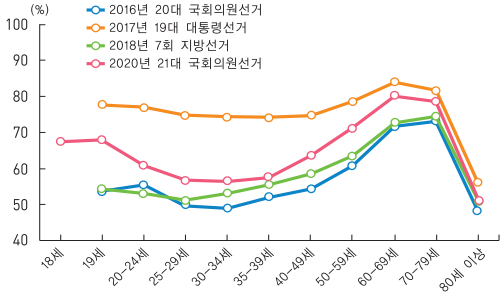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이러한 투표참여의 수준은 인구학적 및 정치·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그림 XI-2]는 특히 연령대별 투표율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몇 개 주요 선거에서 드러난 경향을 보여준다. 관찰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연령대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와 70대의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투표율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집단은 대체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 사이 투표율의 격차는 선거관심도와 직결된다. 예컨대 지난 2017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를 보면 80대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집단 간 투표율의 격차가 아주 두드러지는 않았다. 이 격차는 여타의 선거들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편,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초입에서 시행되었던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그림 XI-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16년에 치러졌던 20대 국회의원선거나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전 연령집단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폭이 가장 큰 집단은 50대의 중년층과 60대,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으로 거의 대통령선거 수준의 투표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2] 최근 선거의 연령집단별 투표율, 2016-2020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2) 사용된 자료는 투표소기준 10% 샘플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018,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 201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6.

비선거적 정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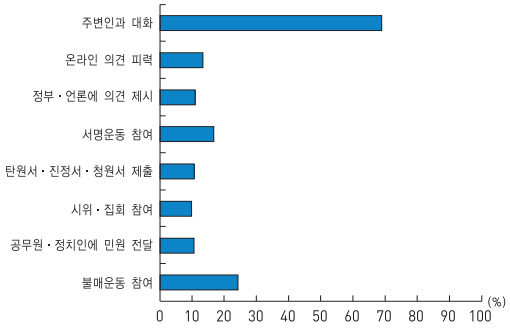
정치참여의 여러 패턴에 대한 서구의 정치학 문헌은 상당히 그 전통이 깊다(Verba and Nie, 1987). 예컨대 가장 '손쉬운' 형태의 참여를 투표(voting)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어렵고 다

양한 형태의 참여는 선거운동(campaining), 지역활동(community activity), 대표자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 등으로까지 정치참여의 영역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최근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참여활동들, 예컨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온라인 청원활동 등을 감안하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최근의 촛불집회라는 독특한 비관습적 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의 전통을 생각해 볼 때 비선거적 참여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그림 XI-3]은 최근 한국인들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패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69%로서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다른 형태의 참여 경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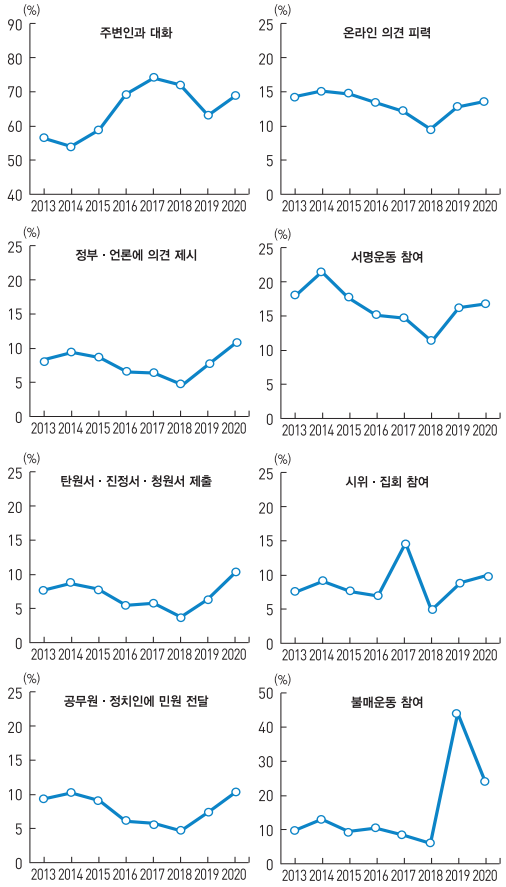
[그림 XI-3]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20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

그러나 특기할 사실은 한국에서 여타의 보다 '어려운' 형태의 참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참여활동의 특성에 따라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활동들도 있다. [그림 XI-4]는 위에서 보인 8가지 비선거적 정치참여활동들의 추세를 나타

[그림 XI-4]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20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추세를 드러내 보기 위해 세로축(y축) 배율을 조정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낸 것이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던 2017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와 동학이 관찰되고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 주변인과의 정치토론이 가장 활발하였고, 시위·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때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2017년이었다. 이는 2016년 말에서 2017년으로 이어진 촛불집회 등의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온라인과 관련된 정치활동의 최저점은 2018년이었고, 그 이후 예외 없이 모든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의견피력'이나 '서명운동 참여', 그리고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공무원·정치인에 민원전달' 등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활동과 직결된 모든 형태의 활동들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뢰와 부패

이 절에서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신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웃과 정치체제에 대해 지니는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며,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한지 2년째인 현재,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시민들이 의료진에 대해 느끼는 신뢰라든지, 방역당국(그것이 중앙정부이건 지방자치단체이건)에 대한 신뢰는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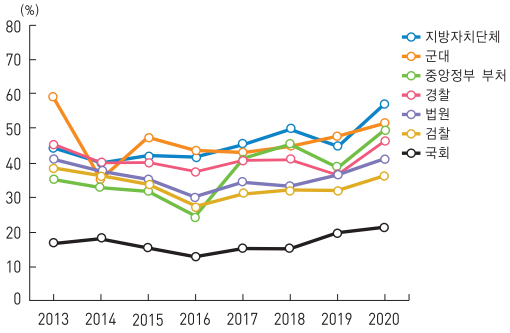
[그림 XI-5]는 한국시민들의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관찰되는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사회 내의 신뢰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기관(국회)이건 가장 높은 기관(의료기관)이건, 국가와 사회가 대대적 위기를 겪었던 2020년은 국민들의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일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신뢰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고,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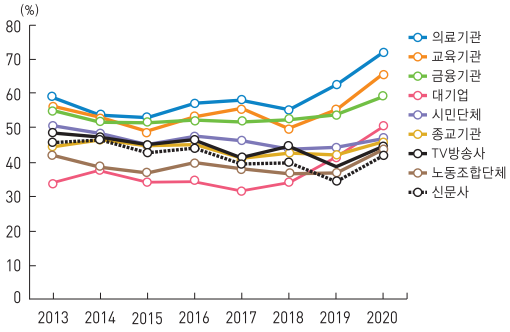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눈을 돌려보아도, 전반적인 신뢰의 증가가 눈에 띄지만, 동시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관들은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기관들이다. 이러한 신뢰의 증가가 해당 기관들의 코로나19

[그림 XI-5]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013-2020

1) 공공기관이나 제도



2) 민간기관이나 제도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국면에서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언급할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공공기관들은 모두 방역대응과 관련한 대민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들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조건임에 반해, 정치와 사회 시스템의 기저에 존재하는 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부패는 그 자체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신뢰수준을 하락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Warren, 2014).

한 나라의 전반적인 부패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일은 물론 간단하지 않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고 직접적인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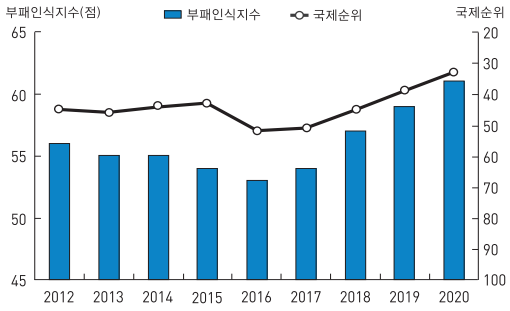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이다. 해당 지수는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인식한 각 나라의 부패수준을 척도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6]은 부패인식지수와 한국의 순위를 보여준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56점, 세계 45위를 기록하였다. 다만 그 이후 부패인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세계 52위를 기록하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부패인식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와 순위를 달성하였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부패가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부패인식지수와 달리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는 일반 기업체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 공무원의 부패 상황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XI-6] 부패인식지수(CPI)와 한국 순위,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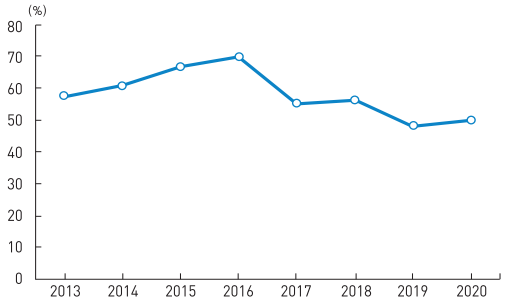
주: 1)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기업경영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한 전 세계 180여 개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0-10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클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함.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www.transparency.org).

[그림 XI-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업체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부패정도는 2016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국제적으로 평가된 부패인식지수(CPI)로도 확인된 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6년을 기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나아진 것이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가설적 설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2016년을 기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7]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공직사회 부패 심각성 인식, 2007-2016



주: 1)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공공부문(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또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 또는 '심각' 또는 '약간 심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각 연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계층상승의 기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학술적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증폭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고 그것이 포괄하는 영역 또한 매우 광범하다. 공정성이 함의하는 의미의 영역이 매우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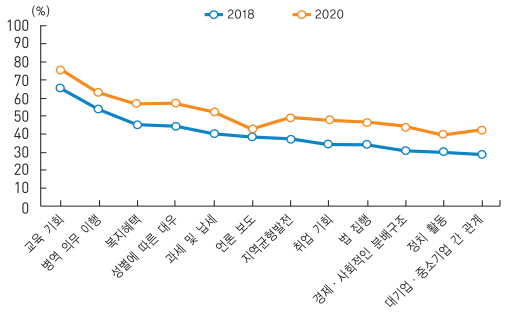
우선 공정성의 개념이 경제적 분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화적 대우에 관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인지 결과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핵심적인 논점은 '공정성'이 기존의 기계적 '평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능력과 노력을 고려한 개념이라는 사실이다(한준, 2018). 가장 최근의 논의는 '능력주의(meritocracy)'와 연관지어 공정성 개념의 이중적 함의를 지적하기도 한다(Sandel, 2020).

이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성이라는 말의 내용과 원인이 무엇이었건 그것이 사회통합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신뢰의 하락과 정치에 대한 냉소, 나아가 체제에 대한 불신과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의 실패가 일어나는 시작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정성에 대한 질문은 사회 제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림 XI-8]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이는 두 개의 선은 2018년과 2020년을 대조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2020년은 2018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공정성과 병역의무의 공정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 과반이 공정하다고 인정한 영역이 없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영역은 경제(중소기업과 분배), 정치, 법 영역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기회는 2018년도에는 65% 정도가, 2020년에는 70% 이상이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가장 공정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XI-8] 사회 영역별 공정성 인식, 2018, 2020



주: 1) 2018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공정'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항목들은 2018년 수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 2020.

공정성의 의미는 물론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 각 집단에 따라서 이를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공정성의 기준이 같을 수 없으며, 남녀가 인식하는 차별의 대상이나 기준 또한 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에 대한 인식은 인구집단별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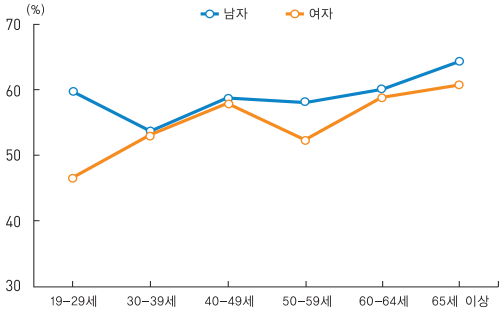
소개된 여러 가지 공정성의 영역 중에서 비교적 최근 한국의 여론지형을 달구었던 논쟁은 젠더갈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림 XI-9]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공정성 평가 영역 중에서 성별에 따른 대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2020년 조사를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말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별 공정성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예외 없이 남성

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여성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성별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 간 격차는 특히 20대와 50대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고연령일수록 성별에 따른 대우가 보다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대 남성들과 50대 여성들의 경우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에 따른 대우가 보다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XI-9] 성 및 연령집단별 성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 인식, 2020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성별에 따른 대우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공정'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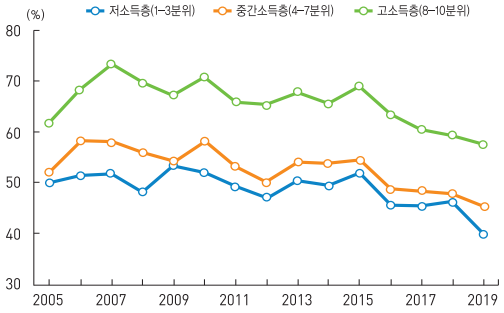
셋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대에서 보이는 극심한 격차이다. 20대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성별에 따른 대우가 매우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20대 남성들은 동년배 여성들에 비해 성별에 따른 대우가 훨씬 더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20대에서 보이는 남녀 간 인식의 차이는 한국 사회의 오늘을 정의하는 매우 핵심적인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매우 추상적이고 이중적이다. 응답자에 따라 공정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결과의 평등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능력에 따른 차별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평가가 다를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이것이 여성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성에 대한 보다 섬세한 문항과 측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공정성을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경로는 그것을 결과나 전망으로 평가하는 방법일 것이다. 즉 과정과 결과, 경제적 분배와 사회문화적 대우가 섞여 있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측정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림 XI-10]은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사회적 배분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해당 측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결과를 200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XI-10] 소득분위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전망, 2005-2019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5-2019.

첫째, 측정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 기간을 걸쳐 상당한 상승과 하강 국면이 교차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이고 일관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하강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둘째, 소득분위별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가능성을 훨씬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격차는 약 12-22%p 정도이며, 예외 없이 전 기간에 걸쳐 격차를 보여준다.

셋째, 이상과 같은 격차는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서 보다 현저하며,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인식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 간 불균형을 반영하면서, 미래에 사회통합을 위한 의제들이 어떤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아. 2015.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HERI Report」 2. 중견기업연구원.
한준. 2018.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개발원.
Eric M. Uslaner. 2014.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In Heywood, Paul M. 2014. *Routledge Handbook of Political Corruption*. Routledge.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하상응 (서강대학교)

-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국 사회 내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빈곤층과 중상층 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노동자와 고용주 간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 갈등이 최근 특히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다소 완화되었다. 통념과 달리 세대 갈등 및 남녀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추세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수용 대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은 커지고 있다.
-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에 개방적인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민족국가로서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이 가장 인종 다양성이 낮은 나라라는 특수성에 더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문화가 개인 간 차이 및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는 관행 형성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꾸준히 받아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저항이 생겼다. 여행, 공부, 사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의 비율 또한 과거에 비해 매우 높다. 다양성에 노출되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해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환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편견과 차별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내 갈등의 정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층과 중상층 간, 보수와 진보 간, 근로자와 고용주 간, 수도권과 지방 간, 개발과 환경보존 간, 고령층

과 젊은층 간, 남성과 여성 간, 종교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 등 9개 영역에서의 갈등 인식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국인의 배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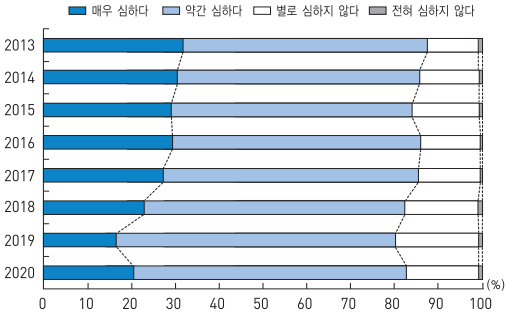
사회 갈등 인식

먼저 한국인의 갈등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XI-11]에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층과 중상층(중산층과 상류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비율이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김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 혹은 '약간 심하다'라고 답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줄곧 80%를 넘었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31.7%였으나, 그 비율이 2019년에는 16.6%, 2020년에는 20.4%로 눈에 띄게 줄었다. 동시에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에 11.7%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19.0%, 2020년 16.4%로 늘어났다. 소득 및 자산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 차이가 연도별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통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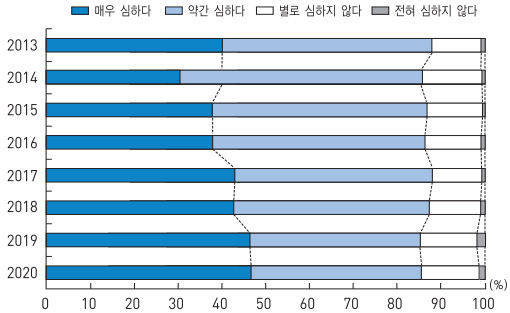
[그림 XI-12]는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 갈등 인식 추이를 보여준다. 연도와 상관없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최근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만 해도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그림 XI-11]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2]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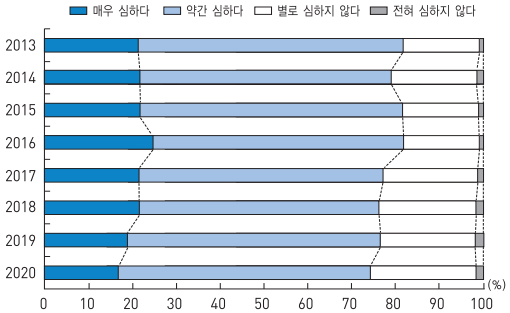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0%였고,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7.8%까지 내려갔으나, 2020년에는 46.6%로 급상승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갈등이 '약간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3년 47.9%에서 2020년 38.8%로 줄어들었다. 즉,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인식의 추이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이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늘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정치권에서 심화되고 있는 여야 간 양극화가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그림 XI-13]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인식에 대한 응답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이후 줄곧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3년에는 21.2%였는데 2016년 24.7%로 조금 올라간 이후, 2020년에는 16.8%까지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갈등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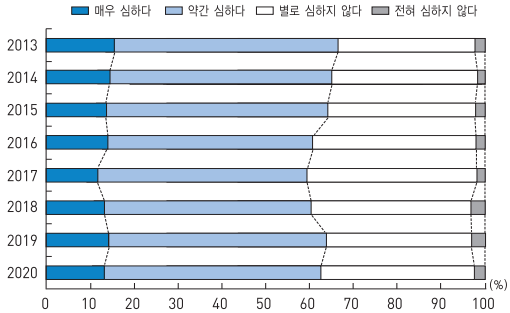
다른 집단 간 갈등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XI-14]를 보면 30%에서 4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15.4%로 가장 높았고, 이후 그 비율이 줄어 2017년에는 11.6%, 2020년에는 13.1%로 변화하였다. 노동시장의 질과 다양성, 주거환경 및

[그림 XI-13]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4]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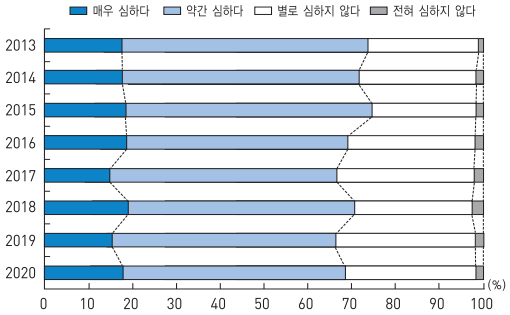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문화 환경의 질, 고등교육기관의 건전성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결과이다.

[그림 XI-15]는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2013년부터 줄곧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른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3년에는 17.8%, 2017년에는 15.0%, 2018년에는 다시 19.1%, 2020년에는 17.9%로 불규칙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등과 같이 굵직한 환경 현안이 관심의 대상이 될 때마다 국민들과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반응이 반드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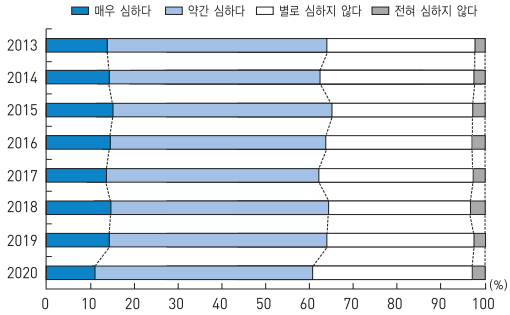
[그림 XI-16]은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갈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설문 응답자들이 제공해 주는 정보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지 않음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놀랍게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다루는 집단 간 갈등 인식 관련 응답들 중에서 가장 연도별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굳이 변화를 파악하자면, 미미한 차이이긴 하지만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13.9%에서 2020년 11.1%로 줄어든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15]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6]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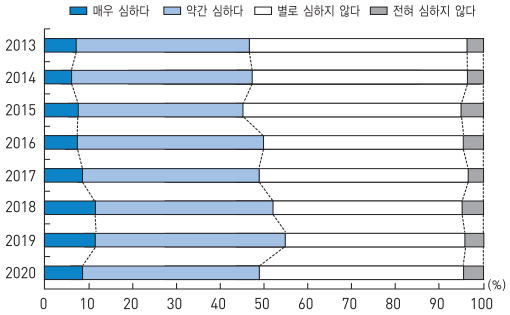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7]은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최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현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결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을 조금 넘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80% 가량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빈곤층과 중상층 간 혹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최근 남성과 여성 갈등의 심각성 인식은 높아졌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7.2%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1.5%, 2019년에는 11.7%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20년 들어와서 그 비율이 8.7%로 다시 낮아지는 현상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 결과에 따르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젠더 갈등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보다는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XI-18]은 종교 간 갈등 인식 정보를 담고 있다. 인종 다양성은 매우 낮지만 종교 다양성이 높은 편인 한국은 다양한 종교 집단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종교 간 갈등을 제외하고는 제도 차원에서의 종교 갈등은 매우 드문 편이었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종교 간 차이를 유권자 동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 갈등 인식에 뚜렷한 시계열적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종교 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3년에는 14.2%였다가 2016년에는 10.4%로 줄고, 2018년에 다시 13.0%로 늘었다가 2020년 10.5%로 주는 현상을 보면 의미 있는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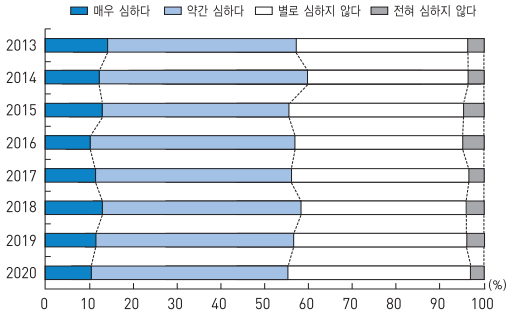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인식에 대한 정보가 [그림 XI-19]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 XI-17] 남성과 여성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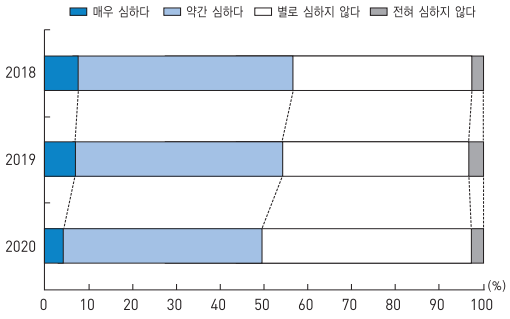
[그림 XI-18] 종교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문항은 2018년부터 설문에 포함되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8년 7.6%에서 2020년 4.1%로 줄어들었다. 또한 '약간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2018년 48.9%에서 2020년 45.3%로 감소하였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혹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와 유사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XI-19]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심각성 인식, 2018-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한국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정치 이념을 둘러싼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중요시하는 것에 비해, 세대 간 갈등 혹은 젠더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종교 간 갈등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변화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상대적으로 완화된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 인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화된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인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처방을 내리는 정책을 다른 집단 갈등을 다루는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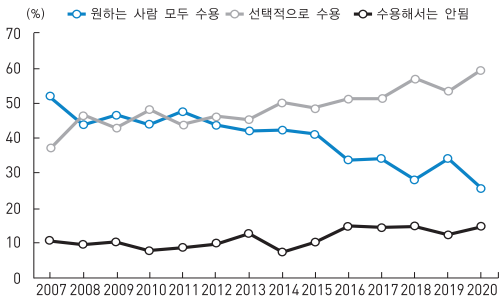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포퓰리즘 문제는 대부분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자유무역의 연장선상에서 확산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교, 문화, 관습이 다른 이민자의 유입을 야기시켜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주게 되었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한때 주류의 지위에 있었던 집단이 소외되는 상황이 우파 포퓰리즘 운동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줄 정도로 이민자 집단의 존재감이 있진 않지만,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 신화를 오랫동안 유지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주민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들의

배타성이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XI-20]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XI-20]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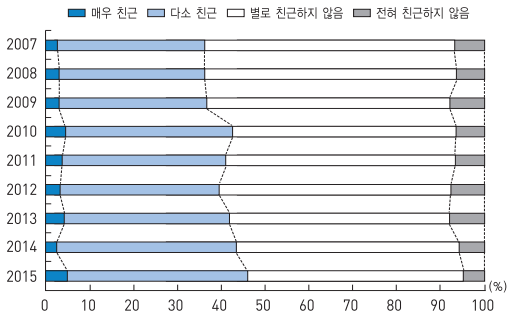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07-2009년은 만 19-64세 인구, 2010-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 이후는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07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으로 이주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6년부터는 그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비율이 2014년에는 50.3%였고, 2015년에는 48.5%로 약간 하락했으나, 2016년부터는 다시 51.3%까지 올라갔고 2020년에는 59.4%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는 응답자의 비율도 2014년에 7.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이래 점점 늘어 2020년에는 14.8%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무조건적 수용 대신, 조건부, 선택적 수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림 XI-21]을 보면 한국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친근함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에는 33.5%의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소 친근'하다고 응답하였는데, 2015년

[그림 XI-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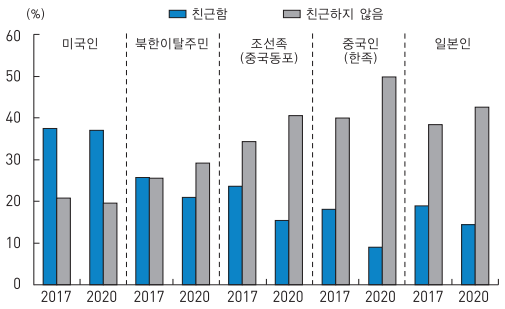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07-2009년은 만 19-64세 인구, 2010-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은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는 그 비율이 41.1%까지 올라갔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별로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2007년에는 56.9%였으나 2015년에는 49.0%로 줄었다. 이는 2010년대 냉랭했던 남북관계의 여파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의 척도를 4점에서 5점으로 바꾸고,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그림 XI-22]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다른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근함을 느끼는 집단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북한이탈주민, 조선족(중국 동포)의 순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중국인(한족) 및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높아진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이 일본인 및 중국인에 대한 감정에 비해 눈에 띄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동북아 외교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만한 정보이다.

[그림 XI-22] 이주민 출신국적별 친근감, 2017, 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각각의 이주민에 대해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친근', '다소 친근', '그저 그렇다', '다소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친근함'은 '매우 친근'과 '다소 친근'을 합한 비율이고, '친근하지 않음'은 '다소 친근하지 않음'과 '전혀 친근하지 않음'을 합한 비율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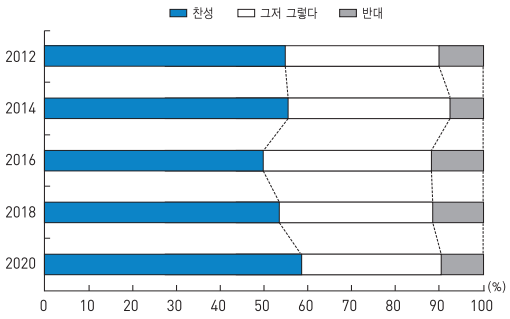
다문화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다문화 포용성),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면 국가의 결속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다문화 수용성) 여부를 「통일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그림 XI-23]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찬성하는 정도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종, 종교, 문화 다양성을 지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진술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2년에 54.7%였고, 2016년 49.8%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높아져 2020년에는 58.4%가 되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 10.1%에서 2014년에 7.6%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대체로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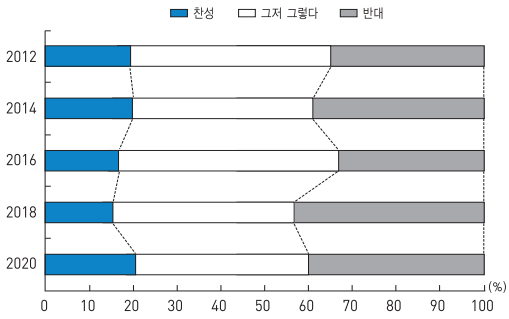
[그림 XI-23] 다문화 공존에 대한 태도, 2012-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2-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 이후는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한 응답률이고,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4]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진술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그림 XI-23]에서 제시된 것과는 반대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다문화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19.4%였는데, 이후 다소 낮아지다가 2020년에는 20.7%로 약간 높아졌다. 다문화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35.0%에서 2014년 38.9%로 높아졌다가 2016년 33.0%까지 낮아졌고, 이후 다시 높아져 2020년에는 40.0%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는 답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결과이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의견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XI-24]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 2012-2020



주: 1)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2012-2014년은 만 19-65세 인구, 2015년 이후는 만 19-74세 인구).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그림에서는 진술문이 다문화 수용에 대해 부정문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응답범주 '매우 반대'와 '다소 반대'의 응답률을 합쳐 '찬성' 응답률로,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의 응답률을 합쳐 '반대' 응답률로 제시하였음.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설문 문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문화 포용성은 원칙적으로 인종, 종교, 문화 차원의 공존을 의미하는 반면,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민족을 우리나라 국

민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을 다민족국가로 변화시키는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도 있다. 즉,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거주는 용납하지만, 영주권 및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행위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집단 간 갈등 인식은 심각한 편이지만, 특히 빈곤층과 중상층 간, 보수와 진보 간, 노동자와 고용주 간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최근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통념과 달리 세대 갈등 및 남녀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추세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유되는 갈등 담론과 여론 간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 조건 없이 수용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 대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반면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은 커지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거리감은 낮은 반면,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이 커지는 현상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에 개방적인 다문화 포용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일민족국가로서의 결속력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친근함은 늘어났으나, 한국을 다민족국가로 만들 수 있는 법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덜 되어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박선경 (인천대학교)

-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감과 대체로 비례하여,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후기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절대 수치만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인다.
-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크며, 행정능력 강화와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지지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경제상황에 대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21년 8월 현재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경제성장이나 법질서, 개인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소 줄어들었다.
- 전 세계 27개국의 여론과 비교하면, 코로나19와 실업에 대한 우려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따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빠른 시간에 대처해야 했었던 위기 정치의 시간 속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에 요구받았던 국가의 역할 이상의 것을 요구받았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갖추고 있었던 민주적 거버넌스, 행정역량이나 보건의료체제가 위기의 시대에서 예상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위기의 시대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지금도 국가의 대응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이 국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정치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시민인식을 묻는 국가 승인 통계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외의 설문조사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조사자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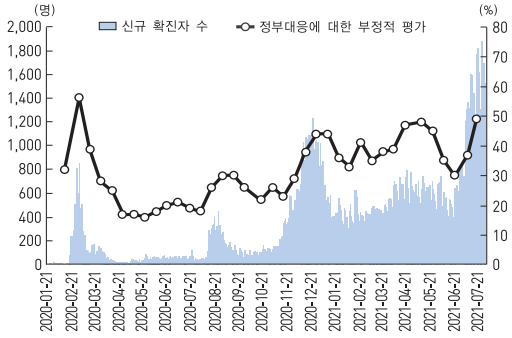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인식을

동일한 문항으로 장기간 조사한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의 「코로나19 정기인식조사」[1]가 대표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시민들의 국가 대응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그림 XI-25]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확진자 수의 변화에 따라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변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시민들이 정부 대응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추측은 가능하다. 재난과 선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재난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현직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Achen and Bartels, 2004; Rubin, 2020). 재난에 의한 맹목적 회고평가(blind retrospection)라고 불리는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그림 XI-25]를 보면, 확진자 수와 부정적 평가가 유사하게 증감하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대한 회고평가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 XI-25]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0.1 – 2021.7



주: 1) 정부 대응 부정 평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1–2021.7.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그러나 특기할 만한 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가장 최근 간의 대비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는 확진자 수에 비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21년 7월에는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확진자의 절대 수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다른 요인으로는 확진자 수와 관련된 국내적 상황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맹목적 회고평가와 달리, 일부

1) 이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총 37차에 걸쳐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웹조사이다.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로 표집하였고, 응답은 웹조사방식(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으로 수집되었다. 각 회차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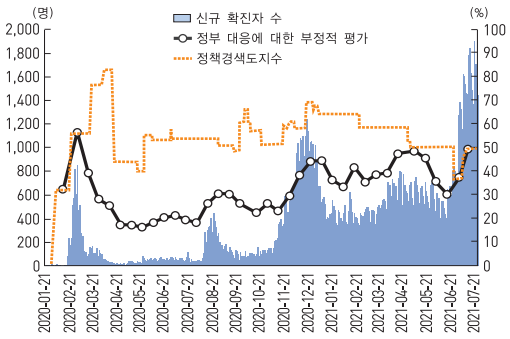
연구는 재난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대응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조정된 회고효과(mediated retrospection)라고 불리는 연구들은 재난 발생 자체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대응에 따라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가장 최근 간의 대비는 이러한 조정된 회고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시점은 2020년 2월 마지막 주(조사시점 2월 28일 – 3월 2일)로, 56%의 응답자가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라 한국과 중국의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때였고, 중국인 입국제한조치에 대한 찬반의견 등 정부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 있었던 때여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여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2021년 7월 초(조사시점 7월 2일 – 7월 7일)에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7%인데, 그 직전 조사인 6월(조사시점 6월 17일 – 6월 21일)에 비해 7%p 상승했지만, 2021년 들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5월(조사시점 5월 7일 – 5월 10일, 부정적 평가 48%)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이 당시는 백신 도입 및 물량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 부정적 평가는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백신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확진자 수 자체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일 확진자 수와 정부의 방역 관련 정책 변화를 함께 비교해보았다. [그림 XI-26]은 [그림 XI-25]에 옥스퍼드대학교 코로나19 정부대응추적자료(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의 '정책경색도지수(government stringency index)'를 포함한 그림이다. '정책경색도지수'는 학교 폐쇄, 직장 폐쇄, 여행 중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억제정책의 정도를 측정한 지수로, 수치가 커질수록 강한 억제정책을 시행함을 뜻한다.

[그림 XI-26]에서도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후기 대응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2]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확진자 수의 증가와 정책경색도 간에 일정 정도의 시차가 있는 반면, 2020년 후반으로 가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에서 큰 시차 없이 바로 정책경색도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차 대유행 시기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3월 3일로 8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정책경색도지수는

2)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방역정책변화 내용을 정책경색도지수와 대조해보았는데, 2020년 8월 2차 대유행 시기의 정부 정책변화는 정책경색도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월 15일에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 되자, 바로 다음 날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8월 23일에는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는데, 정책경색도지수는 6월 8일부터 9월 1일까지 53.24로 전혀 변화가 없다. 이 시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는 정책경색도지수가 정부의 방역지침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XI-26]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정책 변화 및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0.1-2021.7



주: 1) 정부 대응 부정 평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정책경색도지수는 9가지 지표(직장 폐쇄, 공개 행사 취소, 공개 모임에 대한 제한, 대중 교통 폐쇄, 재택 요건, 공공 정보 캠페인, 내부 이동 제한, 및 국제 여행 통제)의 평균 점수로 0-100 사이의 값이며, 100이 가장 경색된 값임.

출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1-2021.7.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55.56이었고, 3월 21일과 22일에 각각 69.44와 75.93으로 상승한 뒤,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진 4월 6일에 82.41로 가장 높은 정책경색도지수를 기록하였으며, 이 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즉, 1차 유행의 최정점인 날로부터 18일이 지나서 첫 정책 변화가 생기고, 34일 후에 가장 강력한 방역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반면,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11월 중순경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가자, 3차 대유행의 정점이 오기 전인 11월 23일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었고, 12월 8일에는 2.5단계로 상향했으며, 12월 8일은 비수도권까지 2단계로 상향되었다. 3차 대유행 중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12월 24일(1,237명)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전국으로 시행하여 정책경색도 역시 상승했고 이후 확진자 수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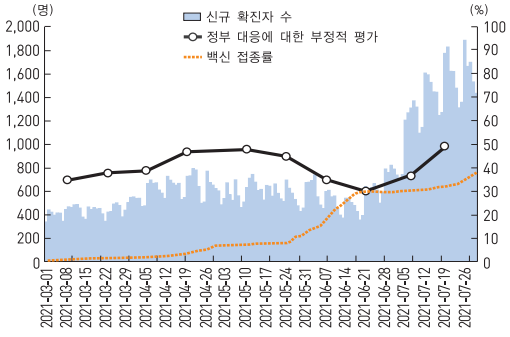
이런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확진자 수 자체가 아니라, 증가하는 감염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속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확진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역대책의 반응이 늦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2020년 연말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정책 대응의 시차가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의 절대 수치는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2020년 3월에 비해 더 나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신과 접종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2021년 2월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수 자체보다는 백신 수급과 접종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림 XI-27]은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그림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5월 이전까지는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도 소폭 증가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정기인식조사」 중 일부 조사에서 정부의 전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별도로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진행을 잘하는지를 물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 1월 첫 주(조사시점 1월 8일–1월 11일) 조사에서는 백신 확보 관련 부정적 평가가 45%이었는데, 접종률 증가가 저조하던 5월 첫 주(조사시점 5월 7일–5월 10일) 조사에서는 백신 관련 부정적 평가가 52%로 상승했다. 이후 접종률이 올라간 6월 첫 주(조사시점 6월 4일–6월 7일) 조사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34%로 하락했다.

[그림 XI–27]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백신 접종률 및 정부 대응 부정 평가, 2021.3 – 2021.7



주: 1)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정부 대응 부정평가는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3–2021.7.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확진자 수의 증감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2021년 2월 이후는 백신 수급 및 접종률에 영향을 받았다.

방역과 경제 간 우선순위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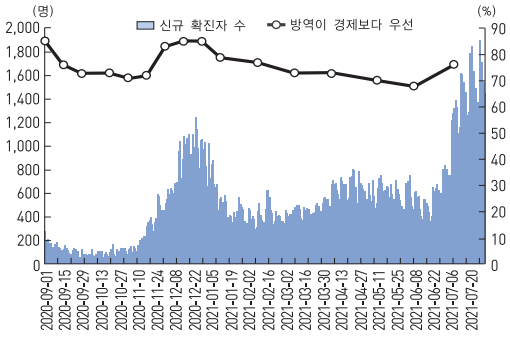
코로나19 전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역할은 방역 강화만이 아니다. 침체된 경제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이 절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인 방역정책은 불가피하게 경제 희생을 동반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활동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감염전파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두 목표는 필연적으로 상충적이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과연 방역과 경제 활성화 중 어느 목표를 우선할까? 시기에 따라 상충적인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까?

[그림 XI–28]은 방역과 경제활성화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의 시기별 답변을 표기한 그림이다. 해당 문항이 포함된 8월 말 조사 이후 모든 시점에서 방역이 경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또한,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호는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2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던 2020년 가을에는 경제보다 방

[그림 XI-28]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방역-경제활성화 간 우선순위, 2020.9 - 2021.7



주: 1) 경제회복 ·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중 '방역을 훨씬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과 '방역을 좀 더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 2020.9-2021.7.

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3차 대유행시기의 정점인 12월 말 조사(조사시점 12월 24일-12월 28일)에서는 방역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치인 85%에 이른다. 3차 대유행이 끝난 이후 점점 방역 우선에 대한 의견이 줄어서 6월 초 조사(조사시점 6월 4일 - 6월 7일)에서는 방역 우선 선호 의견이 68%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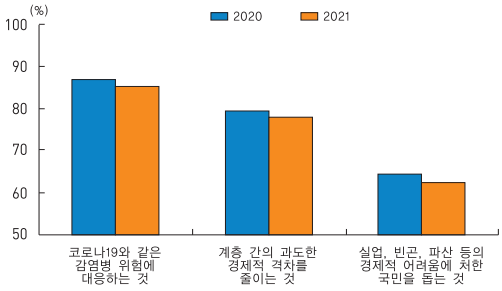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능력 확대에 대한 지지

방역과 경제라는 추상적 목표를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일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의 여론조사 중 국가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의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3]가 유일하다. 2020년 8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에게 1년 후인 2021년 8월에 동일한 문항을 다시 물어본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변화된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그림 XI-29]는 빈곤, 경제적 격차, 감염병 위험이 국가의 책임인지 혹은 개인의 책임인지를 물은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이다. 1차와 2차 조사 모두에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86%로 많았으며,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약 79% 정도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는 인식은 63% 정도가 동의했다. 또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2%p 정도만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에 따라 의견의 변화가 없는 편이다. 해당 문항들이 단기간의 상황변화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이나 이념에 기반한 정책 선호를 다룬 질문이므로 1년 안에 의견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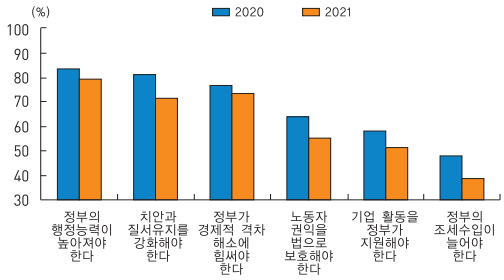
3) 이 조사는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이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로 표집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웹조사이다. 응답은 웹조사방식(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으로 수집되었고 1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2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1차 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2021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XI-29] 국가의 책임 정도, 2020.8, 2021.8



주: 1) 해당 문항이 국가의 책임인지 혹은 개인의 책임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 '주로 국가의 책임', '주로 개인의 책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등 4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국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0]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한 견해, 2020.8,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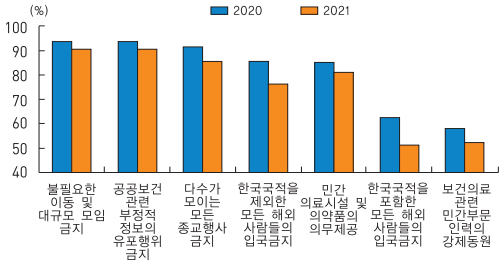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0]은 코로나19 시대에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이다. 1차와 2차 조사 모두에서 정부의 행정능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았고, 1차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찬성의견이 하락한 비율도 4%p 정도여서 행정능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꾸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수입 확대에 대한 지지가 가장 적으며 1차에 비해 2차에서 하락한 폭은 10%p이다. 1차와 2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의견은 치안과 질서유지 강화로, 2020년 8월(81%)에 비해 2021년 8월 10%p 하락한 71%가 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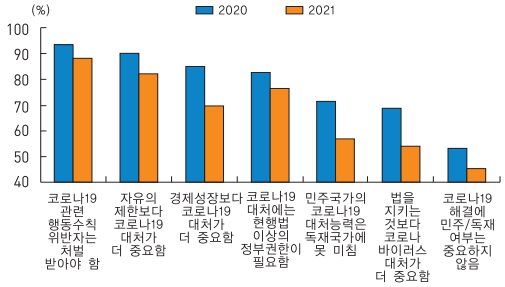
[그림 XI-31]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심각해질 때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이다.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규모 모임 및 다수가 모이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공공보건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정보 유포에 대한 금지 역시 찬성 비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일곱 개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지지가 낮은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입국 금지와 민간 인력 강제 동원으로 이 역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강력한 조치에 동의하고 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은 입국 금지 조치로, 2020년 8월에는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입국을 금지하는데 63%가 찬성한 반면, 2021년 8월에는 그 비율이 51%로 줄었다. 2020년 여름까지도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 입국에 대한 반감이 2021년 8월보다는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XI-31] 코로나19 위험이 심각해질 때의 정부 대응에 대한 선호, 2020.8, 2021.8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2] 코로나19 대응과 민주주의 원칙 간 딜레마, 2020.8,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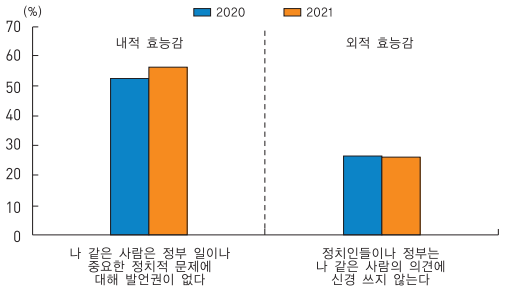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그림 XI-32]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경제성장, 법집행 혹은 민주주의 등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경제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를 위해 일정 정도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의 원칙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비록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독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점이다.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의견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법과 바이러스 대처 간 딜레마, 독재국가와 민주국가 간 대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제성장과 바이러스 대처 간 딜레마이다. 2020년 8월에는 민주국가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72%였는데 2021년 8월에 57%로 15%p만큼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어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이 다양해지고 백신개발을 주도함에 따라 이런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코로나19 대처 간 딜레마와 경제성장과 코로나19 대처 간 딜레마도 의견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2020년 8월에는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코로나19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각각 85%와 69%인데 반해 2021년 8월에는 전자가 70%, 후자가 54%로 각각 15%p씩 하락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법질서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에 대한 양보 의견이 조금씩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와 정치효능감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효능감 향상과도 연결된다.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을 확인해보기 위해 앞서 사용한 패널조사 문항 중 정치효능감에 대한 문항을 확인했다. [그림 XI-33]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내적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느끼며,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본인의 의견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효능감이 26% 수준으로 매우 낮다. 낮은 효능감은 시간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림 XI-33] 정치효능감, 2020.8,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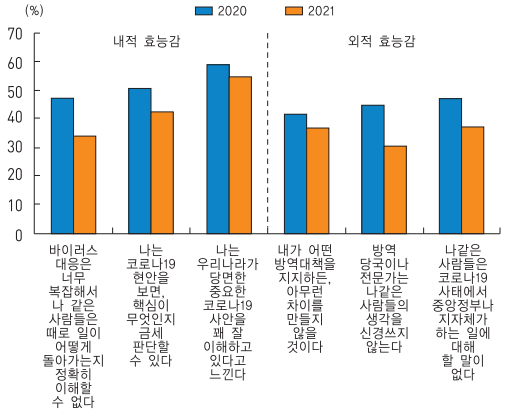
주: 1) 해당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를 조사하였으며, 통계치는 '다소 반대' 또는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의식에 관한 패널여론조사: 1-2차」, 원자료, 2020.8, 2021.8.

코로나19와 관련되어 효능감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의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XI-3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내적 효능감이 외적 효능감보다 높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정부가 시민들의 필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2020년 8월에 비해 2021년 2월에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이 모두 하락했다. 총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질문은, 방역당국이나 전문가가 자신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응답으로, 2020년 8월의 45%에서 2021년 2월에 30%로 15%p만큼 하락하였다. 다음으로는 내적 효능감에 대한 질문 중 하나인 바이러스 대응이 복잡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해

[그림 XI-34] 코로나19 관련 효능감, 2020.8, 2021.2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부정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긍정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2차」, 원자료, 2020.8, 2021.2.

할 수 없다는 응답으로, 2020년 8월에 47%에서 2021년 2월에 34%로 13%p만큼 하락했다.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 모두 하락했다는 면에서 2021년 2월 현재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과 시민들의 답답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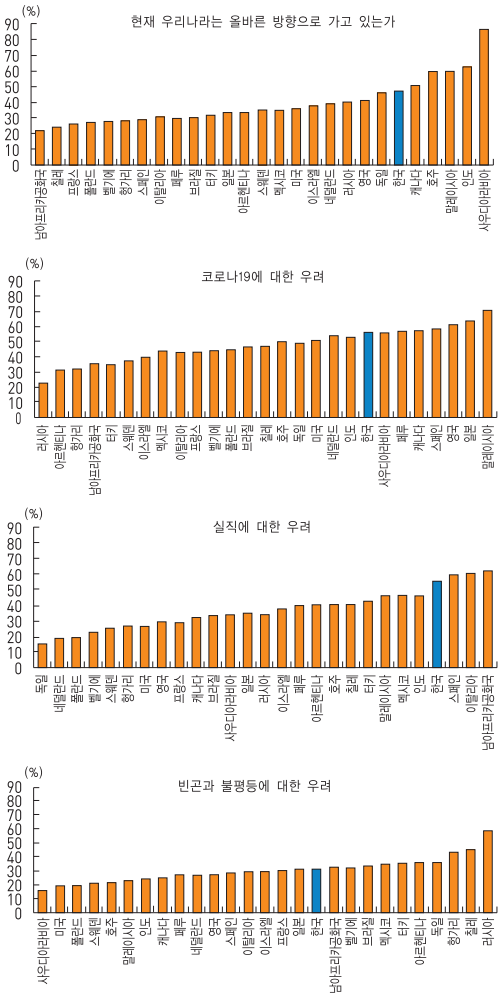
국제비교: 코로나19 시대의 위협인식

한국인들이 이처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복수의 국제여론조사를 통해 힌트를 얻고자 한다.

[그림 XI-35]는 국제여론조사 회사인 입소스에서 시행한 「세계인의 우려(What Worries the World?)」[4]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입소스는 매달 총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업, 빈곤과 불평등, 부패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묻는 여론조사를 매달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포함하였다.

총 27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현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값은 한국이 6위로 여타 국가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7위, 실직에 대한

[그림 XI-35] 주요 국가별 국가 방향성 평가와 우려하는 사회문제, 2020.4 – 2021.6



주: 1) 국가 방향성 평가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달 총 14차례 시행된 조사에서 '현재 우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임(2020년 12월 제외).
2) 우려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달 총 14차례 시행된 조사에서 '코로나19, 실업, 빈곤과 불평등, 부패, 범죄와 폭력 중 가장 우려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해당 문제에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임(2020년 12월 제외).
출처: Ipsos, *What Worries the World*, 2020-2021.

4) 이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매달 자체적으로 꾸준히 시행해왔던 조사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문항은 2020년 2월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설문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사 횟수가 적거나 조사 시기가 주로 2020년 초중반에 한정된 한계가 있는 반면, 입소스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매달 동일한 질문을 조사하고 있어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6월 마지막 조사를 기준으로 총 28개국 만 16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총 1만 9,01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이다. 응답은 웹조사방식으로 수집되었고 각 회차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다.

우려는 4위,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11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우려가 많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더 많은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는 점은 다소 놀랍다. 2020년 4월과 5월은 코로나19 우려 정도가 하위권이지만, 2차 대유행 직후인 9월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우려가 전체 1위였고, 10월 역시 4위이었다. 3차 대유행이던 2021년 1월 역시 3위로,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순위 역시 증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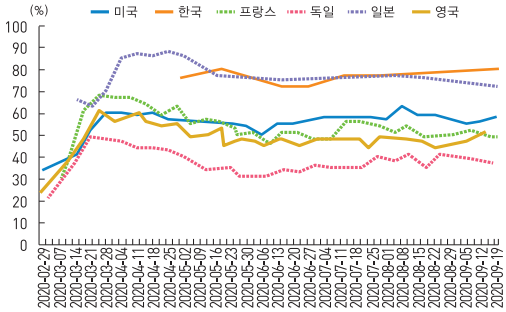
국제비교: 감염 우려와 보건 당국신뢰

국가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또 다른 코로나19 관련 국제설문조사는 유가브(YouGov)의 「코로나19 국제조사」이다.[5]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중에서 한국과 주요 5개국을 비교했다. [그림 XI-36]은 유가브 조사 중 코로나19에 접촉(contact)될 우려가 얼마나 큰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은 가장 낮다. 2020년대 초중반까지 유럽에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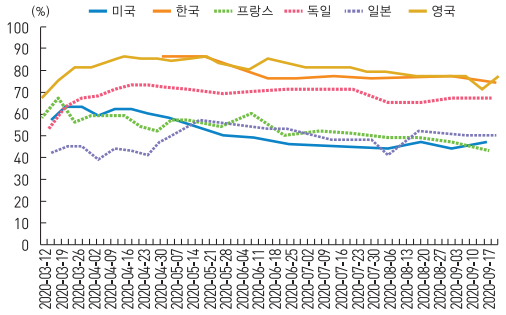
[그림 XI-37]은 유가브 조사 중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를 물은 문항에 대한

[그림 XI-36]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접촉 우려, 2020.2- 2020.9



주: 1) 코로나19에 접촉될까봐 '매우 우려된다'와 '다소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2020년 9월 이후 한국이 조사되지 않아 한국이 포함된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응답을 비교하였음.
출처: YouGov, YouGov COVID-19 tracker: COVID-19 fears, 2020.

[그림 XI-37]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2020.3 – 2020.9



주: 1)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당국에 대해 '아주 많이' 또는 '상당 정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2020년 9월 이후 한국이 조사되지 않아 한국이 포함된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응답을 비교하였음.
출처: YouGov, *YouGov COVID-19 tracker: confidence in health authorities*, 2020.

5) 이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유가브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총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국제조사(YouGov International Covid-19 tracker)이다. 단, 2020년 9월 이후 한국이 조사되지 않아서 [그림 XI-36]과 [그림 XI-37]에서는 2020년 9월까지만을 다뤘다.

응답을 시기별로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며, 한국은 영국과 함께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 2차 유행에 접어드는 시기에 다소 신뢰가 하락하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및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전염병 발발 이후 한국인들은 코로나19를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와 방식을 기준으로 정부를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인의 자유나 희생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코로나19 대응과 정치문화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 수용 및 참여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방역정책에 더 협조적인지를 논하고 있다(Harring et al., 2021; Muller and Rau, 2021). 한국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 수용과 참여는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강한 우려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les. 2004. “Blind Retrospection Electoral Responses to Drought, Flu and Shark Attacks.” Estudio/Working Paper 2004/199 June 2004.

Rubin, Oliver. 2020. “The Political Dynamics of Voter Retrospection and Disaster Responses.” Disasters 44(2):239–261.

Harring, Niklas, Sverker C. Jagers and Asa Lofgren. 2021. “COVID–19: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Trust.” World Development 138:1–4.

Muller, Stephan and Holger A. Rau. 2021. “Economic Preferences and Compliance in the Social Stree Test of the COVID019 Crisis” Journal for Public Economics 194.

2021 Subjective Well-being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I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72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김주연 | 서울시립대학교 387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종합하는 주관적 측정치이며, 삶의 만족도, 유데모이나, 긍정-부정 정서경험으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집단의 비율과 만족도의 평균 모두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정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 한국에서 유데모니아는 최근 낮아지는 경향이지만, 정서경험은 코로나19 이전까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연령별로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와 정서경험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고 있다.
- 최근 아시아에서 주관적 웰빙이 개선된 국가는 대만과 중국인데, 대만은 사회적 기반의 확충의 결과로, 중국은 물질적 수준의 향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종합하는 주관적 개념이다. 사회지표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주관적 웰빙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사회지표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사회지표의 기본틀이 갖추어진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풍요 속의 빈곤, 성장의 한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적 부 중심의 GDP에 대한 일방적 강조로부터 벗어나자는 맥락에서였다. 그런데 201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삶의 질은 다시금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이때 강조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삶의 필요성이었고, 그와 함께 주관적 웰빙이 강조되었다. 1960년대나 반세기 후인 2010년대 모두 GDP로 측정된 사회의 전반적 물질적 삶의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국제적으로 주관적 웰빙이 사회지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의뢰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2009년 사회경제 발전 측정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2011년 발간된 OECD의 *How's Life?* 보고서에서 주관적 웰빙을 독립적 영역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되기 시작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또한 주관적 웰빙을 행복의 측정치로 사용해왔다.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이 사회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목받게 된 것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통계청에서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삶의 질 지표에서 주관적 웰빙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9년 사회지표 5차 개편에서 주관적 웰빙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

하였다. 그 이전에 주관적 웰빙은 사회통합 영역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주관적 웰빙이 사회지표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하면서 사회동향에서도 주관적 웰빙을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 역시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90년대 중반 1만 달러, 2000년대 중반 2만 달러, 2010년대 중반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첫째는 삶의 만족도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회고적 만족이다. 둘째는 정서 경험으로 현재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한다. 셋째는 유데모니아로 일과 삶의 의미 충만함과 보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정부 승인통계에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과 200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이다. 하지만 이들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만을 측정하였고 측정 방식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1점 척도가 아닌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와 함께 정서 경험 및 유데모니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된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처음이었다. OECD의 *How's Life?* 보고서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는 2005–2006년부터 실시된 「갤럽 월드폴(Gallup World Poll)」 자료를 주로 이용한다. 이 자료 역시 11점 척도로 세 차원에 걸쳐 주관적 웰빙을 측정한다.

주관적 웰빙의 변화 추세

삶의 만족도

[그림 XII–1]과 [그림 XII–2]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사회조사」, 「갤럽 월드폴」, 「사회통합실태조사」 등에서 측정된 삶의 만족도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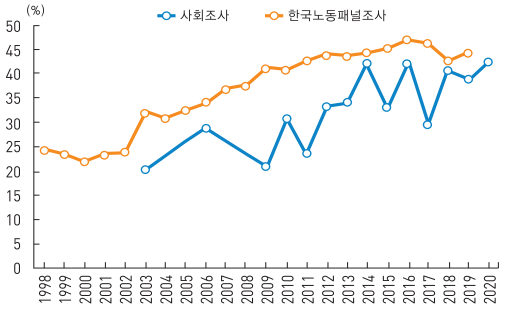
[그림 XII–1]은 5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한다('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의 추세이다. 「사회조사」은 2003년, 2006년, 2009–2020년 조사자료의 결과이고, 「한국노동패널조사」은 1998년 1차 조사부터 2019년 22차 조사까지 자료의 결과이다. 패널조사로 동일 표본을 추적해서 반복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결과가 「사회조사」에 비해 보다 일관된 추세를 보인다.

두 조사 결과 모두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만족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정체 혹은 증감을 반복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IMF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22.2%로 가장 낮게 출발해서 2011년 43.1%까지 10여 년 만에 20%p 이상 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후 2016년 47.4%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뒤 감소해서 2019년에는 44.7%의 만족 비율을 보여주었다. 「사회조사」에서 만족 비율은 2003년 20.4%였다가 증감을 거듭하며 2014년 42.2%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42.7%가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는 2000년 이전까지 불만족 비율이 만족 비율보다 높다가 이후 만족 비율이 앞서는 반면,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2012년 이전까지 불만족 비율이 더 우세하다가 이후 만족 비율이 우세하게 바뀐다.

[그림 XII-1]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 비율,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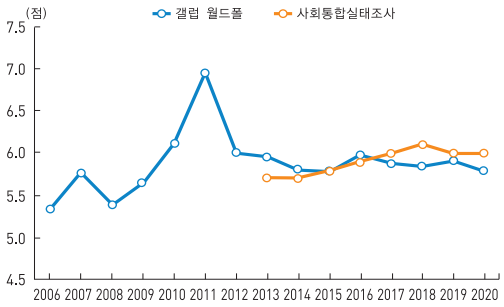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는 「갤럽 월드폴」과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매우 불만족'을 0점, '매우 만족'을 10점으로 한 11점 척도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평균의 추세이다. 「갤럽 월드폴」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자료의 결과이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자료의 결과이다.

보다 시계열이 긴 「갤럽 월드폴」 자료의 결과를 보면 앞서 「한국노동패널조사」이나 「사회조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 평균은 2006년 5.3점에서 2011년 6.9점까지 증가하다가, 직후 크게 떨어져 6점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2020년 5.8점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1년의 6.9점은 전체 추세에서 보면 다소 예외적으로 높은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과는 2013년 5.7점에서 2018년 6.1점까지 완만하게 높아진 뒤 정체해서 2020년 6.0점의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두 조사 모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6.0점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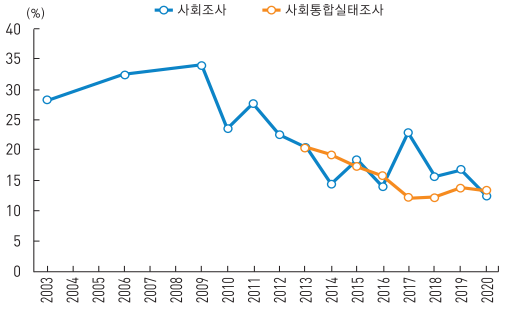
[그림 XII-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0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위에 살펴본 삶의 만족도 평균의 추세는 2010년대 초반 이후 평균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삶에 불만족인 사람들의 비율은 어떤 추세를 보일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편에서는 만족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감소에 의해 일어난다. 만족도의 평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불만족한 사람의 비율은 어떨까? [그림 XII-3]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비율의 추세이다. 5점 척도로 측정하는 「사회조사」의 경우 만족이나 보통이 아닌 불만족('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11점 척도로 측정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중간인 5점 아래(0-4점)에 응답한 비율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사회조사」에서는 2003년 28.3%에서 2009년 33.9%로 증가했다가 이후 경향적으로 줄어들면서 2020년에는 12.5%까지 불만족 응답 비율이 줄어든다. 이러한 추세는 앞서 [그림 XII-1]에서 「사회조사」의 만족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사회조사」 결과와 마찬가지인 20.3%에서 2020년 13.2%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큰 변화가 없지만 불만족 응답자의 비율은 35%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림 XII-3]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비율, 200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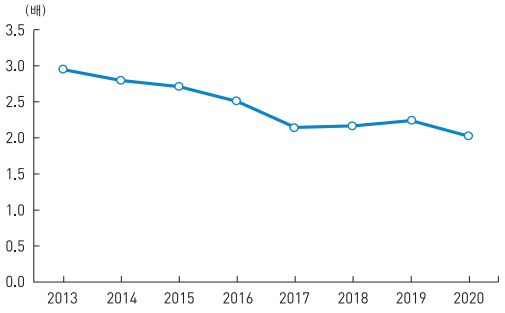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 통계치는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불평등하며 그 불평등은 늘어나는가 아니면 줄어드는가? 삶의 만족도 평균이 한 사회의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만족도의 불평등은 주관적 웰빙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낸다.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과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 역시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값을 하위 20% 구간의 척도값 합계 대비 상위 20% 구간의 척도값 합계의 비로 나타내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는지 아니면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1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삶의 만족도 점수를 활용해 불평등 수준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산한 결과가 [그림 XII-4]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은 2013년 3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0년에는 2배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불만족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XII-5]는 성별, 연령대와 같은 인구집단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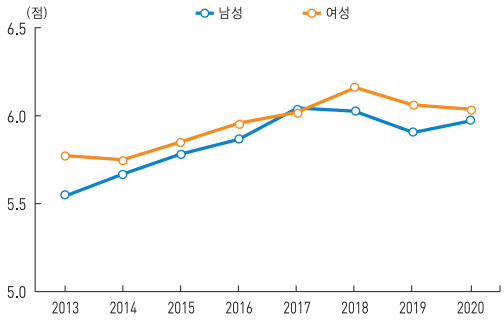
[그림 XII-4]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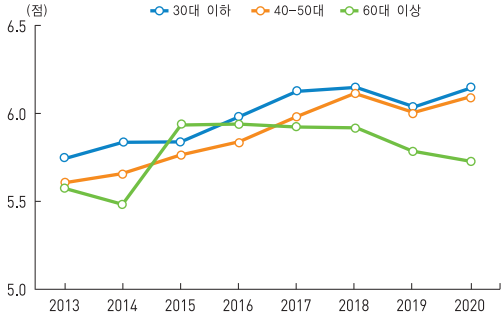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은 만족도(0-10점) 점수 하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도 점수 합계 대비 상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도 점수 합계의 비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5] 성 및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0

1) 성별



2)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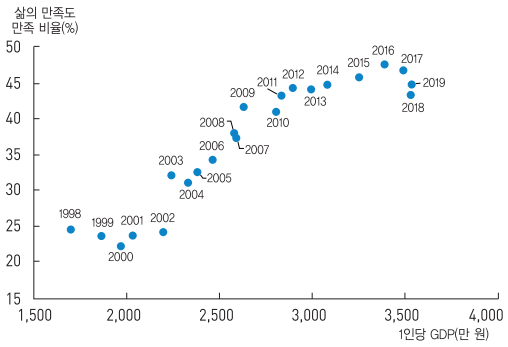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60대 이상'은 2019년까지는 60대이고, 2020년은 60대 이상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삶의 만족도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면, 성별, 연령별 격차도 줄어들었을까? 성별 격차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남성에 비해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2013년과 2018, 2019년 다른 해에 비해 증가하지만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연령대별 만족도 격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5년과 2016년이 예외임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60대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0대 이하와 40-50대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 2018년 이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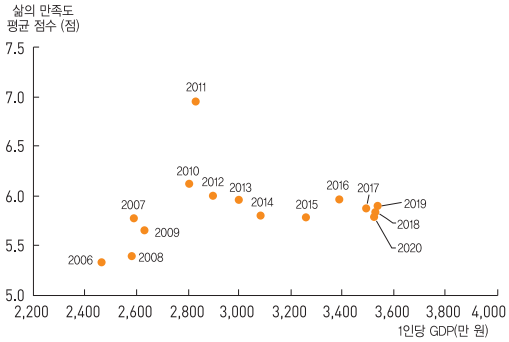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 추세는 물질적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의 추세와는 어떤 관계를 보일까? [그림 XII-6]은 만족의 비율과 만족도 평균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과 1인당 GDP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두 그래프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750만원 부근까지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삶의 만족이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1인당 GDP가 높아져도 삶의 만족이 정체하거나 완만하게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림 XII-6]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1998-2020

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에서 만족 비율(한국노동패널조사)



2)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갤럽 월드폴)



주: 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제시된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2) 갤럽 월드폴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원화 만 원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갤럽 월드폴」의 산점도에서 이상치는 2011년도에 삶의 만족도 평균이 6.9점으로 예외적으로 높았던 경우이다. 1인당 GDP가 2,750만 원보다 높은 시기는 2010년 이후이다. 결국 이 결과는 201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경험과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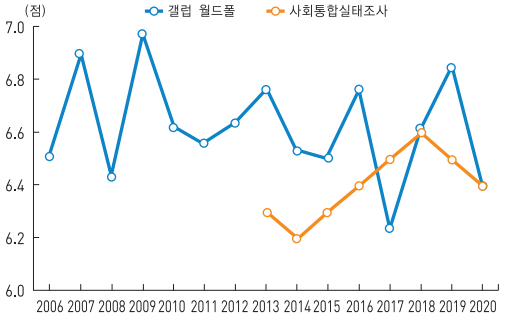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 함께 주관적 웰빙의 중요한 차원인 긍정, 부정 정서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XII-7]과 같다. 「갤럽 월드폴」과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긍정, 부정 정서를 서로 달리 측정한다. 「갤럽 월드폴」은 긍정 정서를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정서를 각각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의 세 정서를 각각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경험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반면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긍정 정서의 경우 행복감 하나에 대한 경험의 정도로, 부정 정서의 경우 근심과 우울 두 정서에 대한 경험의 정도를 응답한 것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갤럽 월드폴」과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측정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조사된 긍정, 부정 정서의 추세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XII-7]을 보면 긍정 정서의 경우 두 조사 모두 6점에서 7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부정 정서의 경우 시계열이 더 긴 「갤럽 월드폴」은 2006년 3.4점에서 2010년 1.3점까지 부정 정서가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서 2014년 2.8점까지 상승한 뒤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부정 정서의 수준은 차이를 보이지만 2014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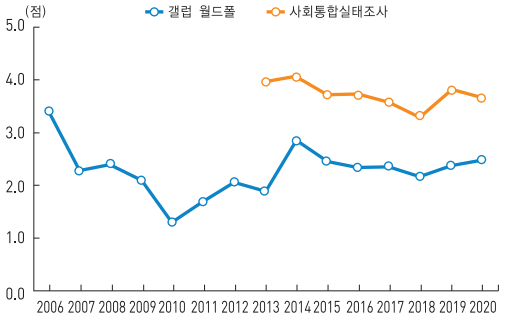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두 조사 모두 2018년이 가장 낮은 부정 정서 수준을 보인다. 위에 살펴본 삶의 만족도 추세와 비교한다면, 긍정 정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부정 정서는 2010년까지 개선되다가 이후 정체 혹은 완만하게 악화된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 추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I-7]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경험, 2006-2020

1) 긍정적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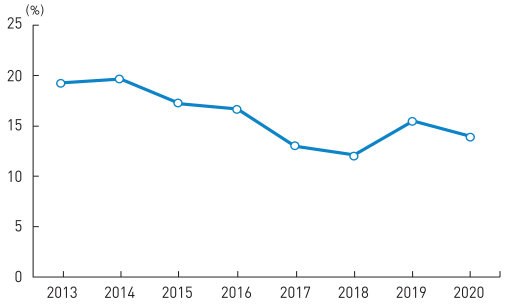
2) 부정적 정서경험



주: 1) 긍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갤럽 월드폴은 행복감, 웃음, 즐거움 등 세 가지 정서 경험(0-10점 척도) 평균값이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행복감(0-10점 척도) 평균값임.
2) 부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갤럽 월드폴은 근심, 우울, 분노 등 세 가지 정서 경험(0-10점 척도) 평균값이고,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근심, 우울 등 두 가지 정서 경험(0-10점 척도)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그림 XII-8]은 근심과 우울의 평균으로 측정한 부정 정서 경험이 행복감으로 측정한 긍정 정서보다 강한 사람들 비율의 추세를 보여준다. 부정 정서 경험이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사람들은 정서경험이 부정적으로 치우쳐 주관적 웰빙이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2013년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세한 집단의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12%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는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I-8]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집단 비율, 2013-2020



주: 1) 긍정 정서는 행복감, 부정 정서는 근심과 우울 두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2) 통계치는 부정 정서 경험 평균값이 긍정 정서 경험 평균값보다 큰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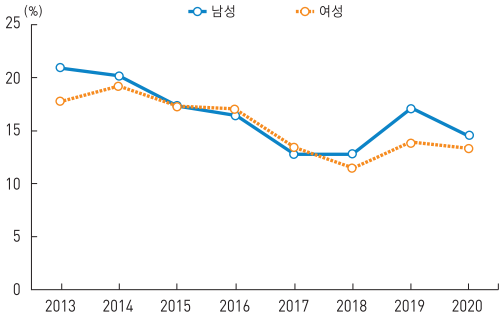
부정적 정서경험이 긍정적 정서경험보다 강한 사람들의 비율은 성별, 연령대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추세는 어떠한가? [그림 XII-9]를 보면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세한 비율은 전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2015-2017년

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보면 남녀 간 차이는 2013년과 2019년에 증가하는 반면, 다른 해에는 거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부정적 정서경험이 우세한 비율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60대 이상과 다른 연령대 간의 격차는 2013년에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더 크게 나타나며, 2020년은 30대 이하와 40–50대, 60대 이상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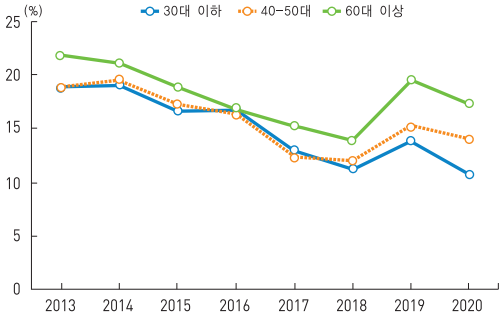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의 마지막 차원인 유데모니아의 경우 「갤럽 월드폴」 조사 결과가 세계행복보고서에 보고된 경우가 많지 않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2점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20년 6.0점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XII–9] 성 및 연령별 부정 정서가 긍정 정서보다 우세한 집단 비율, 2013–2020

1) 성별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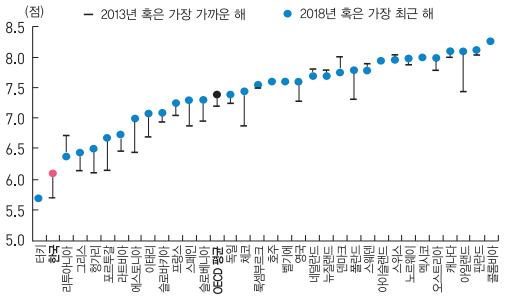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긍정 정서는 행복감, 부정 정서는 근심과 우울 두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3) 통계치는 부정 정서 경험 평균값이 긍정 정서 경험 평균값보다 큰 사람들의 비율임.
4) 범례에서 '60대 이상'은 2019년까지는 60대이고, 2020년은 60대 이상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그림 XII–10]은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How's Life?* 보고서에 제시된 삶의 만족도의 국제비교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사용된 자료는 각 나라에서 조사된 자료들이며, 한국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조사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대체로 북구 나라들과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8점 이상 혹은 그에 가까운 반면, 대부분의 다른 서부 유럽 나라들은 7점에서 8점 사이에 있다. 동부 유럽 국가들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 유럽 나라들은 6점에서 7점 사이에 있고 한국은 5점에서 6점 사이에 있다. 한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XII-10]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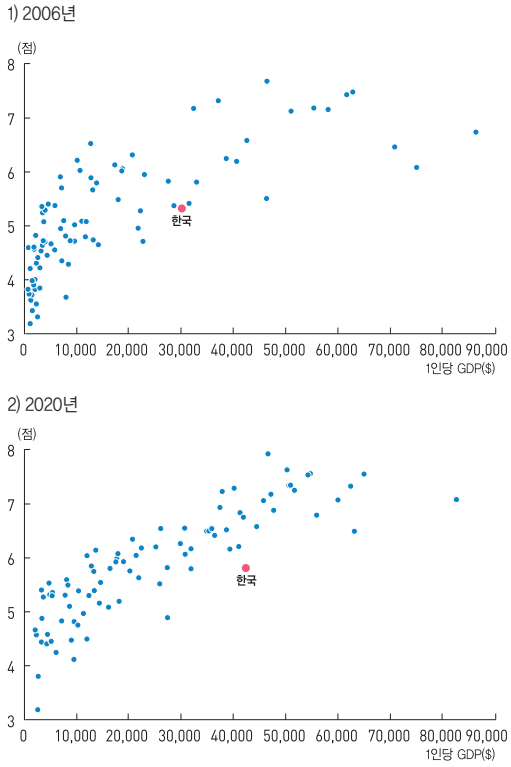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우리는 앞에서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하위권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어떠하며, 경제적 발전 수준과 비교해서는 어떠한가? 아래 [그림 XII-11]은 「갤럽 월드 폴」이 조사한 세계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구매력 수준에 따른 1인당 GDP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각 점은 나라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삶의 만족도 평균, 가로축은 구매력으로 나타낸 1인당 GDP 수준을 표시한다.

이 그림에서 한국은 2006년과 2020년 모두 전체 조사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보면 4만 달러 정도까지는 1인당 GDP 증가와 함께 삶의 만족도가 선형에

[그림 XII-11] 세계 국가별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2006, 2020



주: 1) 전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단위는 미국 달러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가깝게 증가하지만, 4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은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이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1970년대 경제학자 이스털린의 이름을 딴 '이스

털린의 역설'을 보여준다. 한국은 대체로 이러한 변곡점 주변에 존재할 뿐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나라와 낮아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그림 XII-12]는 「갤럽 월드폴」을 실시하기 시작한 2005-2006년 이후 최근까지 삶의 만족도 평균의 국가별 비교를 한국과 아시아권, 한국과 유럽, 미국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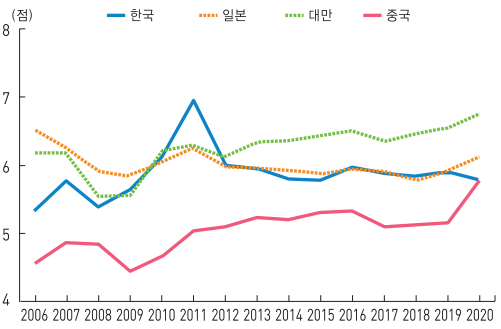
한국은 2010년 이전까지 대만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일본과 유사하게 6점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다. 반면 대만은 2010년 이후 경향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초에는 한국과 1.5점 이상 격차를 보일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상승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핀란드와 같은 북구 나라들과는 2점 이상, 서유럽이나 미국과도 1점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핀란드는 완만한 상승, 프랑스와 미국은 완만한 하강, 영국은 정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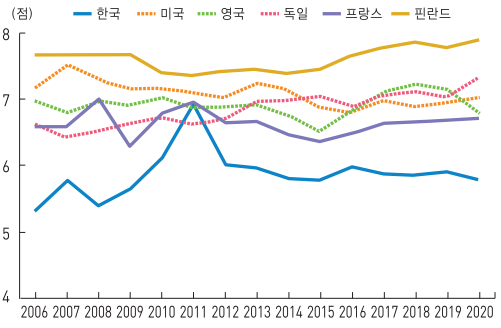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아시아 나라들과의 삶의 만족도 비교에서 일본과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정체와 대만과 중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상승은 대비가 된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만족도 상승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현상인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찾기 쉽지 않다. 세계행복보고서에 제공된 관련 변수들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대만과 중국의 삶의 만족도 상승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림 XII-12]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0

1) 한국과 아시아 국가



2) 한국과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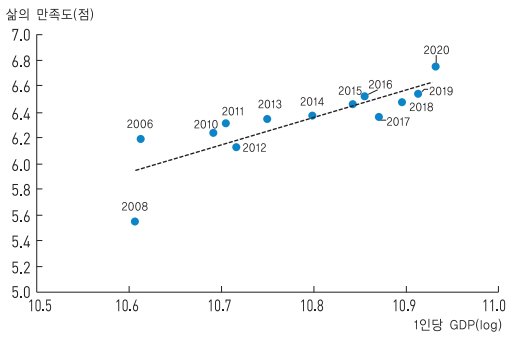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그림 XII-13]은 대만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산점도이다. 그래프를 보면 대만의 연도별 1인당 GDP 로그값과 연도별 삶의 만족도는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 결국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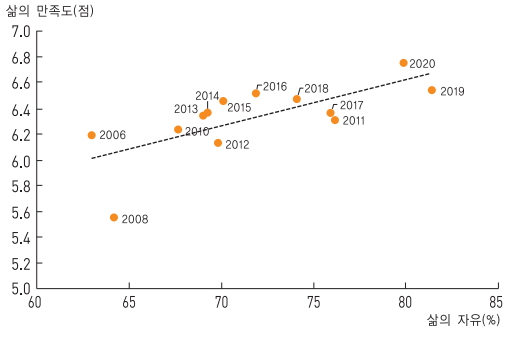
[그림 XII-13] 대만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2)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3) 삶의 자유와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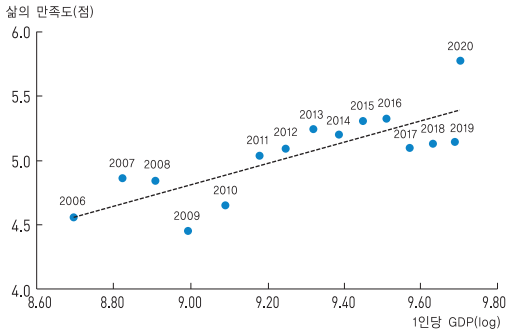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3) 삶의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하지만 아래 두 그래프를 보면 대만의 사회적 지지 수준 즉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비율과 삶의 자유 즉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 역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대만의 경제가 중국의 비약으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고 꾸준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사회적 개혁의 성과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대만은 2010년대 들어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불만과 목소리에 경청하며 교육, 주거, 일자리 등에서 세대간 정의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젠더와 소수자 등 정체성 정치 측면에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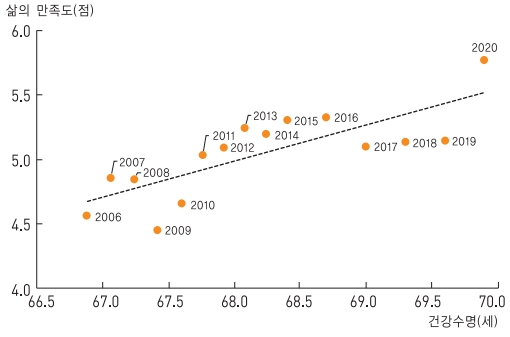
반면 중국의 경우는 대만과 다르다. [그림 XII-14]는 중국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의 산점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변화와 유의한 통계적 관련성을 갖는 변수는 1인당 GDP의 로그값과 같은 물질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건강수명과 같은 의료와 보건환경의 개선이다. 최근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그간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여건이 빠르게 개선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사회적 제약이 높은 까닭에 삶의 자유는 확대되지 못하고, 사회적 유대도 약화되어 사회적 지지 역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사회 관련 변수들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림 XII-14] 중국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수들 간 관계, 2006-2020

1)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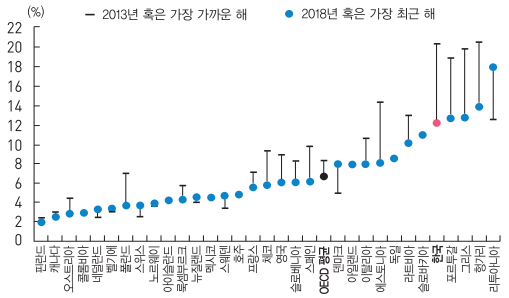
2) 건강수명과 삶의 만족도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1인당 GDP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기준 실질 GDP이며,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3)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찍 죽거나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이 손상된 기간을 빼고 계산한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함.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앞에서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불만족 집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해외와 비교하면 불만족 집단의 비율은 어떠한가? [그림 XII-15]는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국가별 삶의 만족도 불만족 집단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은 삶의 만족도 평균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처럼 불만족 집단의 비율 또한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평균인 7%에 비해 5%p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 불만족 비율은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2010년대 초반 20% 정도 수준에서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만족 집단 비율이 높다.

[그림 XII-15]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비율,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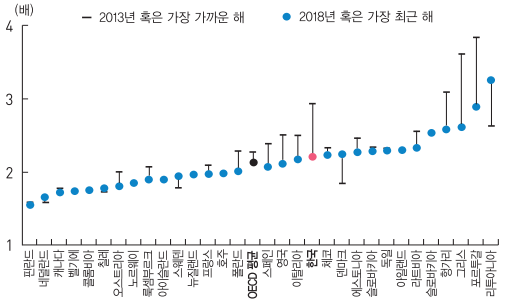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측정됨.
2) 통계치는 삶의 만족도를 4점 이하로 평가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앞에서 우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측정한 삶의 만족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해서 삶의 만족도 불평등의 정도는 어떨까? [그림 XII-16]은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을 삶의 만족도 점수 하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대비 상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비율로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2013년과 2018년 사이 포르투갈, 그리스와 함께 불평등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불평등이 낮고, 만족도 평균이 낮은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불평등이 높다. 반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낮은 편이지만 불평등 정도는 중간이다.

[그림 XII-16]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의 불평등 수준, 2013, 2018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으로 측정됨.
2) 삶의 만족도 불평등 수준은 삶의 만족도 점수 하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대비 상위 20%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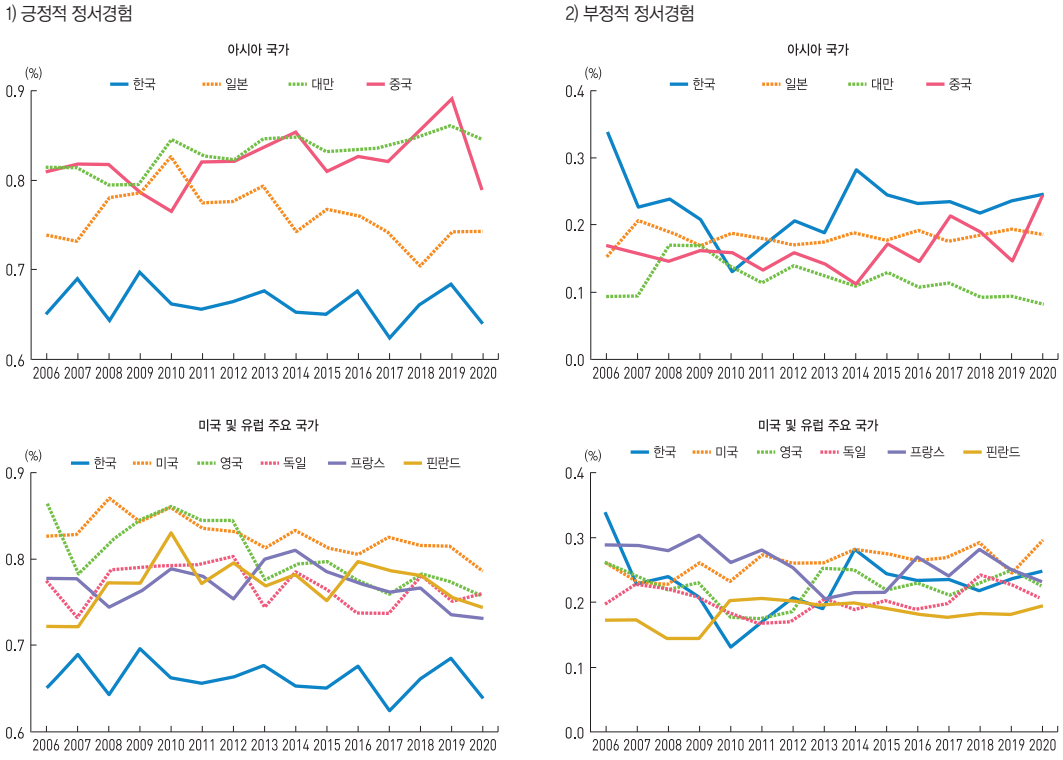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은 나라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까? [그림 XII-17]은 「갤럽 월드폴」에서 측정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의 추세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긍정적 정서경험의 추세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도 긍정 정서 경험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긍정 정서 경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일본은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긍정 정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증가 경향을 보인다. 유럽과 미국은 최근 들어 긍정 정서경험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그 중 미국과 영국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정 정서경험 추세를 보면 한국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2006-2010년 감소, 2010-2014년 증가, 이후 감소의 패턴을 보이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대만은 감소, 중국은 증가 경향을 보인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한국은 비슷한 수준에서 변동의 폭이 큰 편이다. 미국의 부정적 정서경험 증가가 두드러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은 201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림 XII-18]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긍정적 정서경험보다 우세한 사람들의 비율의 국제비교를 보여준다. 한국은 앞서 긍정 및 부정 정서경험의 추세 비교에서 긍정적 정서경험이 적고, 부정적 정서경험의 변동이 심하며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남유럽 및 동유럽 나라들과 함께 부정적 정서경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한국은 이 집단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북유럽 나라들과 일본, 멕시코 등이 이 집단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갤럽 월드폴」의 자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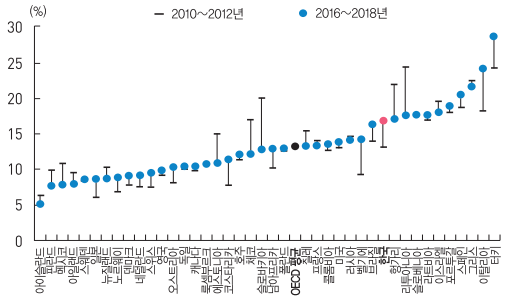
[그림 XII-17] 한국과 주요 국가의 긍정/부정적 정서경험, 2006-2020



주: 1) 긍정 정서는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이며,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2) 통계치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해당 정서를 경험했는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았다'(0점)-'매우 그러했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https://worldhappiness.report/).

이용한 이 결과는 앞서 우리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본 것과 수준은 비슷하지만 추세는 정반대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이 집단의 비율이 20%에서 1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조사의 측정 방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가 긍정 정서를 행복감 하나로, 부정 정서를 근심과 우울 둘로 측정한 반면, 「갤럽 월드폴」은 긍정 정서를 행복감, 웃음, 즐거움 경험의 평균으로, 부정 정서를 근심, 우울, 분노 경험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림 XII-18] OECD 국가별 부정 정서 우세집단 비율, 2013, 2018



주: 1) 긍정 정서는 행복감, 웃음, 즐거움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이며, 부정 정서는 근심, 우울, 분노의 세 가지 정서의 평균값으로 측정함.
2) 통계치는 부정 정서 경험이 긍정 정서 경험보다 강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2020.

맺음말

주관적 웰빙은 비교적 최근 국제적으로 또한 한국에서 사회지표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지만 삶의 질 측정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긍정, 부정 정서경험, 유데모니아의 세 측면으로 측정된다.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의 추세는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만족하는 집단의 비율과 만족도의 평균 모두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정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불만족 집단의 비율이나 만족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만족도 평균은 OECD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불만족 집단 비율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만족도 격차의 정도는 중간 수준이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1인당 GDP로 측정한 물질적 생활수준과 비교할 때 시계열적으로나 국제비교 상으로나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삶의 향상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자유의 확대와 유대의 강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인 대만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서경험을 보면 한국은 긍정적 정서경험이 유럽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인 반면, 부정적 정서경험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 결과 부정적 정서경험이 긍정적 정서경험보다 우세한 집단의 비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 사회적 교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고, 특히 남녀 모두 2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남성은 20대에서 여성은 40대에서 비활동률 증가폭이 가장 컸다. 비활동률은 20대와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감정 중에서 '외로움'은 증가하였으나 '자살 생각'과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5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외로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자살 생각' 비율도 가장 높다.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각각 모두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도움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극단적 주관적 고립상태에 인구도 증가하였다.
-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행복감, 걱정, 우울, 유데모니아)은 코로나 전후의 차이보다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주관적 웰빙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건강, 행복감, 삶의 질, 주관적 웰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인 단절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질적인 평가가 반영된 주관적 사회적 고립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고립 또는 사회적 단절(social disconnectedness)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 타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물리적인 분리의 정도로 정의된다. 주관적 사회적 고립 또는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은 물리적인 분리와 관계없이 외로움, 사회적 지지 결핍,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Cornwell & Waite, 2009). 개인이 타인과 교류가 많고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등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개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코로나19 전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본다.[1]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고립 요소들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1) 이 글에서 사용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만 19-6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 2020년 자료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70대 이상 연령집단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2020년 자료와 이전 연도 자료를 직접 시계열 비교하기 어려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사회적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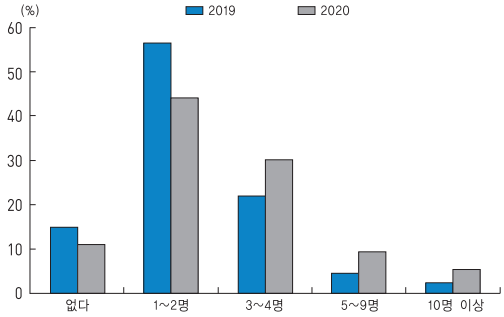
객관적 사회적 고립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사회적 교류 빈도, 사회단체 참여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교류 빈도와 사회단체 참여를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요소로 살펴본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그 밖의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했는가를 질문한다. [그림 XII-19]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가 없다는 응답과 1-2명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10.9%, 44.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각각 4.0%p,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4명, 5-9명,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대비 각각 8.2%p, 4.9%p, 3.2%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의 교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없다는 응답이 1.4%p 증가하고, 1-2명, 3-4명이라는 응답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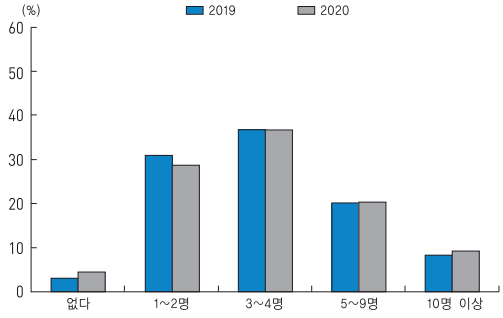
객관적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인 한 형태는 가족 또는 친척, 혹은 그 밖의 사람들 모두와 교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2019년에 1.7%에서 2020년 2.2%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XII-20]은 이를 성 및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2020년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2.6%, 여성이 1.9%로 2019년에 비해 각각 0.5%p, 0.7%p 증가했다. 자료 특성상 직접 비교가 어려운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20대에서 교류가 없다는 응답 비율의 증가폭이 컸다. 남성의 경우 40대와 6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

[그림 XII-19] 사회적 교류 빈도, 2019, 2020

1) 가족 또는 친척



2) 가족 또는 친척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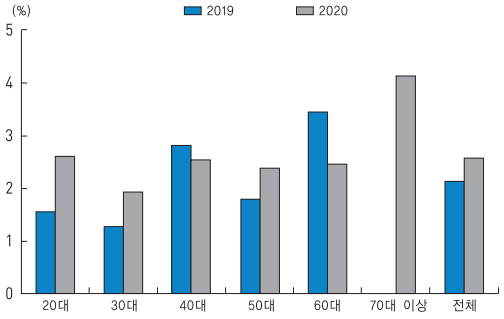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서 접촉이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함. '가족 또는 친척'의 경우 동거자는 제외되며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의 경우 업무상 접촉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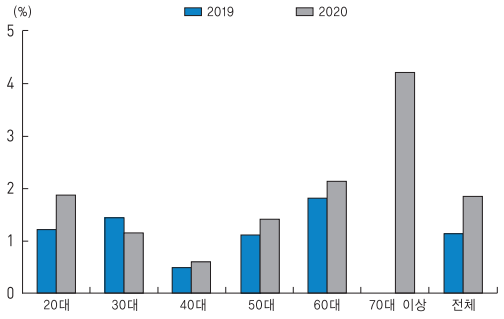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20]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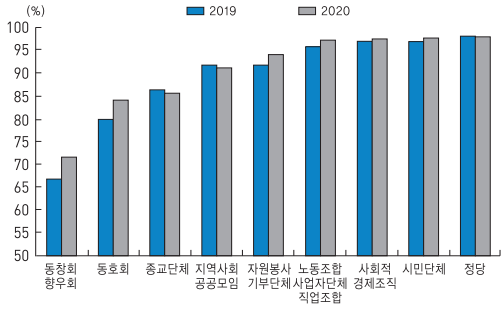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족 또는 친척,' '가족 또는 친척 외' 두 문항에서 모두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70대 이상에서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객관적 사회적 고립 정도는 사회단체 참여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XII-21]은 여러 사회단체에 회원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은 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종교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정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 유형에서 비활동률이 증가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 참여유형인 동창회/향우회의 경우 비활동률이 2019년 66.8%에서 2020년 71.6%로 4.8%p 증가해 사회단체 활동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여가, 문화 등 동호회의 비활동률도 79.8%에서 84.0%로 4.2%p 증가해 동창회/향우회 다음으로 활동이 크게 줄었다.

[그림 XII-21] 사회단체 유형별 비활동률,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비활동은 각 사회단체 유형별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비율의 합이며, 사회단체 활동은 '가끔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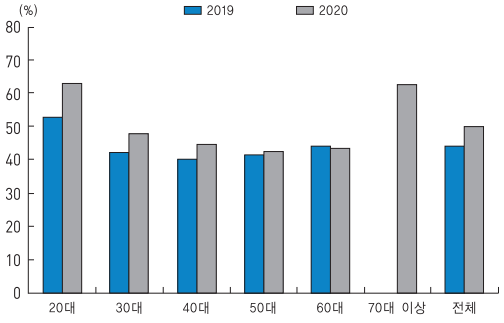
반면, 종교단체와 지역사회 공공모임의 경우 비활동률이 2019년 대비 각각 0.8%p, 0.6%p 감소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의 경우도 비활동률이 0.2%p 증가해 활동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I-22]는 코로나19 전후로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모든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44.0%, 2020년 49.8%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2019년 52.4%, 2020년 57.4%로 4.9%p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사회단체 비활동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남성의 사회단체 비활동률 증가폭이 더 컸다. 남녀 모두 20대와 70대 이상의 비활동률이 높았으며, 자료 특성상 직접 비교가 어려운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남성은 20대에서 증가폭이 컸으며(10.1%p 증가), 여성은 4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6.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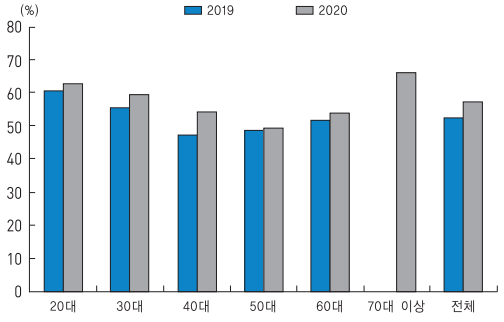
지금까지 객관적 사회적 고립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20대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2] 성 및 연령대별 사회단체 비활동률, 2019, 202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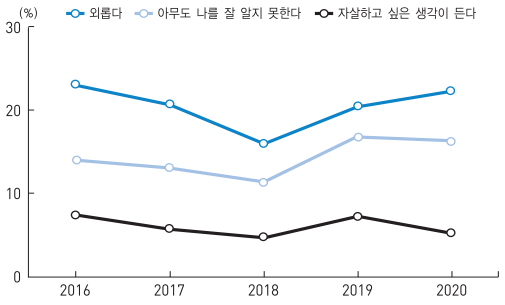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비활동률은 9가지의 모든 사회단체 유형에 현재 소속되지 않았거나, 소속되었더라도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관적 사회적 고립

주관적 사회적 고립 또는 인지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인지된 사회적 지지(support) 정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매년 '외로움', '자살 생각',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과 같은 부정적 감정 경험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다. [그림 XII-23]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추이를 보면, 세 가지 부정적 감정 경험 모두 2018년을 최저점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로 2019년에 비해 1.8%p 증가한 반면,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과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각각 16.3%, 5.2%로 2019년 대비 0.5%p,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XII-23] 부정적 감정 경험 추이,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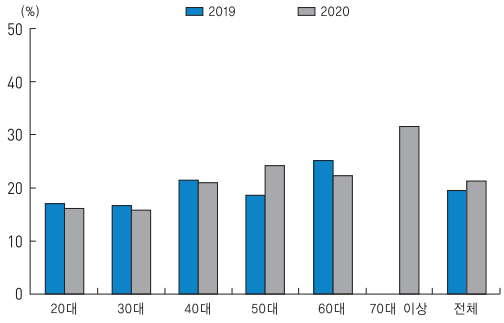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정적 감정 경험은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등 각각의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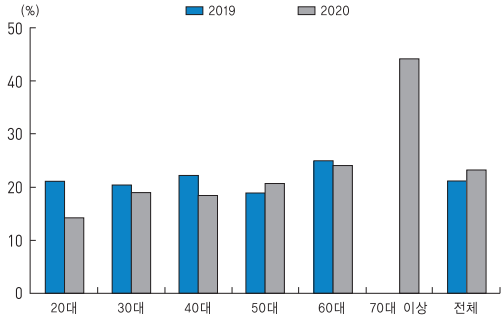
[그림 XII-24]는 성 및 연령대별로 외롭다고 느낀 응답자 비율을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019년 19.6%에서 2020년 21.2%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도 21.5%에서 23.4%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감소한 데 반해 50대에서는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자료상 70대 이상의 변화를 살펴볼 순 없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대의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외롭다고 느낀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4] 성 및 연령대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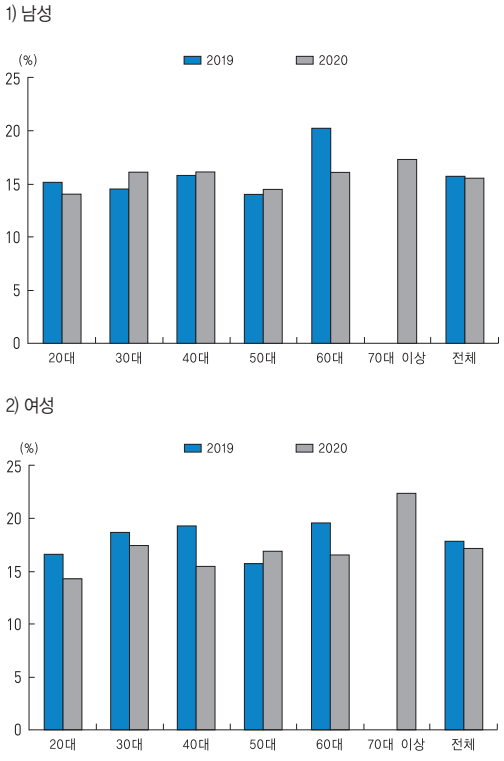
2)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나는 외롭다"라는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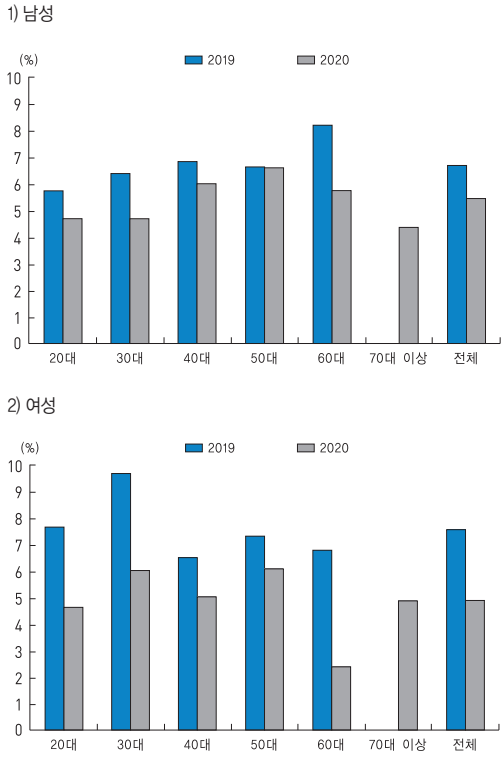
[그림 XII-25]는 성 및 연령대별로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응답자의 비율을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외로움과 다르게 남녀 모두 2019년에 비해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와 60대는 감소한 반면 30-50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그림 XII-25] 성 및 연령대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6] 성 및 연령대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느낌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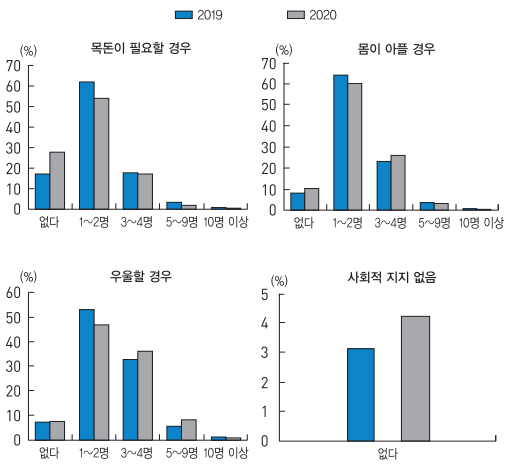
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나 50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고령층 또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XII-26]은 성 및 연령대별로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응답자 비율을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한 것이다. 자살 생각 비율도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2019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1.2%p 감소)에 비해 여성(2.6%p)의 감소폭이 더 컸다.

지금까지 부정적 감정 경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특히 50대가 외로움,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감정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7]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

[그림 XII-27] 사회적 지지 수준,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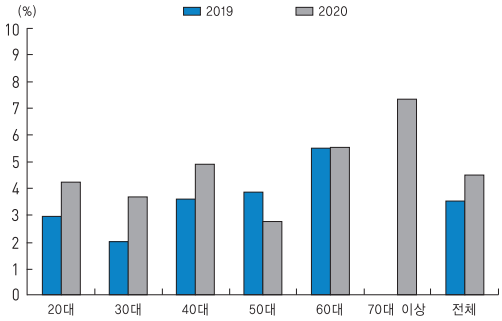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지지 없음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의 세 문항에서 모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한 사람들의 수를 묻는 질문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대해 2019년에는 응답자의 83.0%, 2020년에는 72.6%가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역으로 보면, 2019년에는 17.0%, 2020년에는 10.5%p 증가한 27.4%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8.2%에서 2020년 10.5%로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 항목에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2019년 7.2%에서 2020년 7.6%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이 모두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019년 3.1%에서 2020년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극단적인 주관적 고립상태에 놓인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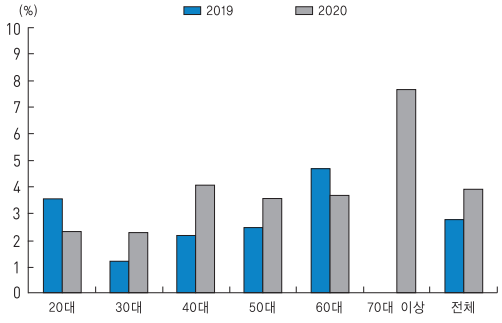
[그림 XII-28]은 [그림 XII-27]에서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세 영역에서 모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성 및 연령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없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료상 직접 비교가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층과 없다는 비율이 감소한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지지가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30대는 2019년 2.0%에서 2020년 3.7%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20대 1.3%p, 60대 1.0%p 감소한 반면, 30-50대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1.1-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4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층과 중년층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으로 추측된다.

[그림 XII-28] 성 및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9, 2020

1) 남성



2)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비율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의 세 문항에서 모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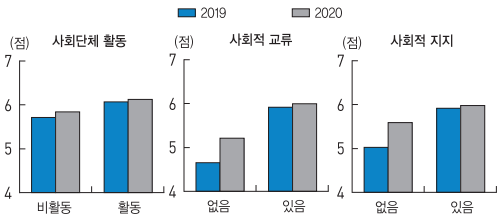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 삶의 의미와 가치(유데모니아), 긍정 및 부정적 정서 경험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된다. [그림 XII-29]부터 [그림 XII-32]는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각 요소들과 주관적 웰빙의 세 차원과의 관계를 코로나19 전후, 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주관적 사회적 고립의 요소 중 주관적 웰빙의 긍정 정서(행복감) 및 부정 정서(걱정, 우울)와 상관관계가 높은 외로움,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 자살 생각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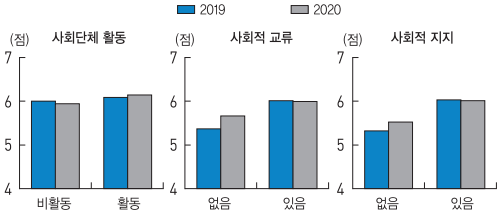
[그림 XII-29]에서 사회적 고립 여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보면, 2019년과 2020년을 통틀어 집단 간 0.22-0.97점의 차이가 난다.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5.7-6.0점 사이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고려할

[그림 XII-29]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19, 202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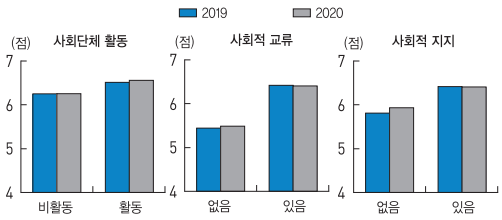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요즘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때,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라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고, 사회적 교류와 지지가 없는 집단 모두 삶의 만족도 상승폭(0.56점)이 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사회적 고립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성만큼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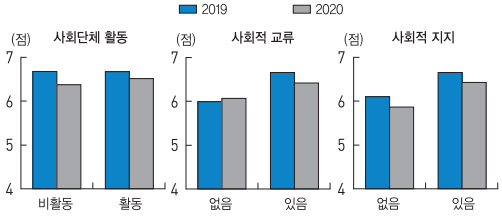
[그림 XII-30]에서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남성은 행복감이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감소

[그림 XII-30]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행복감, 2019, 2020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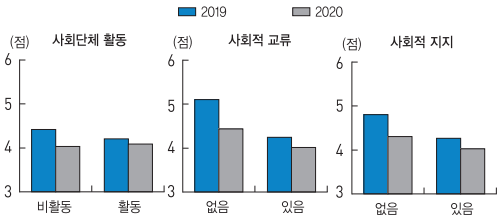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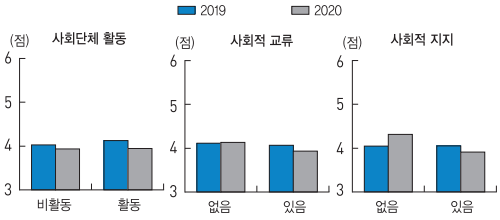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매우 행복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31]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부정 정서,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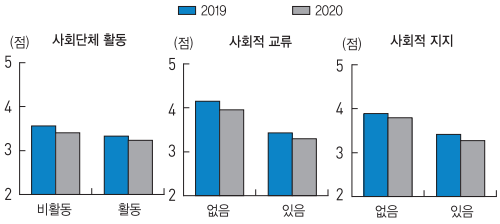
1) 걱정: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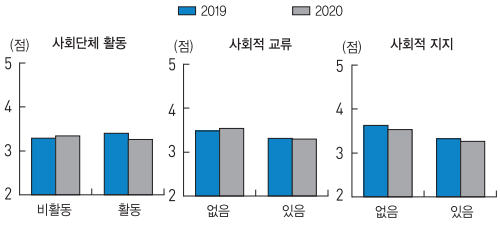
2) 걱정: 여성



3) 우울감: 남성



4) 우울감: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걱정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0점)-'매우 걱정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3) 우울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에 대해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점)-'매우 우울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컸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단체 활동이 있는 집단과 사회적 교류 및 사회적 지지가 없는 집단에서 행복감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지지 및 교류 여부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컸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행복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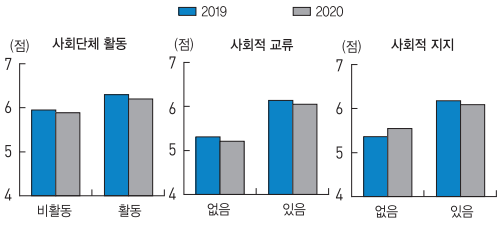
[그림 XII-31]에서는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걱정과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먼저 걱정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모든 집단에서 걱정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걱정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컸다. 반면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가 없는 집단과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에서 걱정 수준이 상승했으며, 사회적 지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걱정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감을 보면, 남성의 경우 걱정 수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모든 집단에서 우울감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지지 및 교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우울감 차이가 컸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과 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집단에서 우울감이 소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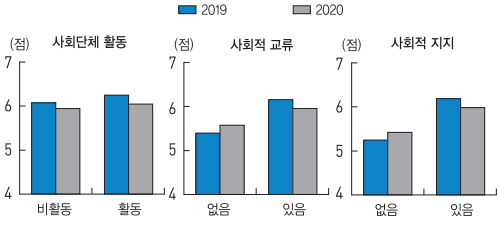
[그림 XII-32]는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유데모니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유데모니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남녀 모두 6.2점에서 ±0.1점 정도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 남성의 경우 0.31-0.86점, 여성은 0.10-0.96점까지 편차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유데모니아 점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적 지지가 없는 집단의 경우는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컸다. 반면 여성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유데모니아 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또한 사회적 지지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컸다.

[그림 XII-32] 성별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른 유데모니아, 2019, 2020

1) 남성



2) 여성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어 2019년은 만 19-69세 인구, 2020년은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유데모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매우 가치 있다'(10점)로 응답한 11점 척도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21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21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I 인구

고령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임.
고령화지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임.

$$\text{고령화지수}(\%)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유소년인구(0–14세)}} \times 100$$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임.

노년구성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임.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생산연령인구(15–64세)}} \times 100$$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아 수임.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 건수를 해당연도의 이혼 가능 연령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임.

$$\text{일반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 건수}}{\text{이혼가능연령인구(15세이상)}} \times 1{,}000$$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 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 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임.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 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 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 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임.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임.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초고령사회: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1% 이상인 사회임.

치명률(case fatal rate): 어떤 질환의 환자 수에 대한 그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함.

학령인구: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 인구를 의미함. 보통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21세 인구를 지칭하는데 각급 학령인구를 모두 합한 수를 전체 학령인구(6–21세)라 함.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ASFR)_i}{1{,}000}$$

Ⅱ 가구 · 가족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친척)임.

1인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임.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임.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임.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자(남자)가구주 비율} = \frac{\text{여자(남자)가구주 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비혈연가구: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임.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 건수를 해당연도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코호트(cohort): 특정 기간 내에 태어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함.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 가구원수}}{\text{총 일반가구수}}$$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임.

혈연가구: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임.

혼외출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끼리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함. 결혼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는 사생아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나 결혼 대신 동거가 많은 유럽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출산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옮겨감.

Ⅲ 건강

1차 보건의료: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기본적 의료를 말함. 최근에는 1차적인 접촉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함.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 문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

걷기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 수치.

국민의료비: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비용.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외상후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경험(negative life event)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성 장애로 이 생활 사건이나 경험 이후에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져옴. 그 생활 사건을 불공정하게 여기고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울분, 분노,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질환임. 즉 부정적 사건의 경험에 따라 기본적 믿음 및 가치관의 손상(violationof basic beliefs and values)을 느끼게 된 상태임.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

치명률(case fatal rate): 어떤 질환의 환자 수에 대한 그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함.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트라우마(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서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심각한 사건(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말함.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허혈성심장질환: 일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음.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병원체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임.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이며, 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이며, 국가별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함.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광범위적 발병 질환은 일단은 범유행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풍토병 또는 엔데믹(endemic)으로 일컬음. 역사적인 팬데믹에는 천연두와 결핵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2009년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음.

Ⅳ 교육 · 훈련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기초학력미달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미달로 평가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무형식학습: 강사의 지도 없이 학습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함.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교육과 교육프로그램 또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교육훈련 기관에서 강사로부터 배우는 비형식교육과는 달리, 무형식 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 혹은 우연한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알게 되는 경험을 포함함. 가족, 친구 또는 직장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한 학습, 인쇄매체(책이나 전문잡지 등)를 활용한 학습,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등을 의미함.

방과후학교: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함.

비형식교육: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 고등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직장에서 받은 직무연수나 특강, 학원 수강,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의 수강,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이 해당함.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서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대로 졸업시키는 제도임.

직업 관련 목적 비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프로그램(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영역 내의 모든 프로그램 대상) 중에 현재 혹은 차후 희망 직업과 관련된 목적(①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②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③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④ 고용안정)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 수}}{\text{졸업자 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수목적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농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국제 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평생학습참여율: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만 25–64세 또는 만 25–79세)의 비율임.

형식교육: Eurostat에서는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과 무형식 학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교수 과정에 의한 학습(taughtlearning)'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직화된 교수 활동 중에서도 국가학력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NFQ) 안에 포함된 과정, 즉 '국가인정체제'로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는 것을 형식교육이라고 정의함. 즉, 형식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을 포함함.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로서,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변인과 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임.

V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기저효과(Base Effect): 시점 간 지표를 비교하는 경우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의해 지표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불안(질병, 사고, 실직 등)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한 국가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실망 실업자: '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함. 구직단념자라고도 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플랫폼 노동자: SNS,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함.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시대의 용어들과 함께 소비자와 노동자를 매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현실을 일컬음.

Ⅵ 소득·소비·자산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이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뉨.

국민연금: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구입이 아닌 지출을 말함.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임.

소비지출: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 이자, 주식배당금,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출함.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소득으로 일정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음.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Ⅶ 여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조사대상 인구 중 한 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임.

스마트미디어: 미디어와 ICT 인프라가 결합해 시공간이나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 중인 매체를 뜻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 미디어, 소셜 미디어 등을 말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여가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그리고 노동 관련 이동시간) 그리고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섭식, 위생 및 치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함.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희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등을 의미함.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 문화여가생활 지출을 말함.

호모비아토르(Homo Viator):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Honoré Marcel)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나그네 인간', '떠도는 인간', '여행하는 인간'을 의미함.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smartphone)'과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신세대를 가리킴.

MZ세대: 1980–2004년 생을 지칭함. 1980–1994년 생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 생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임.

OTT(Over The Top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Ⅷ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공실률: 일정한 지역의 전체 건물이나 특정 건물 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 부문의 면적 비율을 의미함. 또한, 전체 건물에 포함된 방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방수의 비율로 표현하기도 함.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보증부월세: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월세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사글세: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에코세대(Echo-Boom Generation):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생 사이의 자녀 세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음.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평균통근(통학)시간 : 통근(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통근(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학교)에 근무(공부)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코호트(cohort): 특정 기간 내에 태어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함.

X세대(X Generation):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이비 붐이 끝난 뒤에 서구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정해진 시간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당시 10대였던 1974–1983년생을 일컫음.

Ⅸ 생활환경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 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이황산가스(SO_2):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함.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임.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됨.

질소산화물(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총유기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TOC): 물 속에서 산화될 수 있는 모든 유기 화합물의 양을 탄소의 양으로 나타낸 것임. 대표적인 수질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짐.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황산화물(SOx):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 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도료·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 속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 B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kcal임.

X 범죄·안전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살인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인적 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로 시설물이나 기계기구의 비정상적 작동, 인간에 의한 오작동, 화학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임.

특별법: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

폭력범죄: 협박·폭행·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됨.

XI 사회통합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함.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친밀감 혹은 장벽을 물리적 거리처럼 개념화한 것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선거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임.

* 선거인: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XII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함.

유데모니아(eudaimonia):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지칭한 말로서, 자신을 존재의 수준에서 차별화시키는 삶의 목적을 각성하고, 이 목적을 현재 자신의 삶과 일로 가져와서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2014	계봉오/김두섭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2014	이희연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2014	전광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2015	계봉오/김두섭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2015	김주현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2016	변미리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16	최율/김두섭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2017	김근태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2017	유정균/김두섭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2018	유정균/김두섭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2018	정경희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2019	유삼현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인 구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2019	유정균/김두섭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2020	정기선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20	김두섭, 허나영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진미정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색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2014	한경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2014	한경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14	홍승아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2015	한경혜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2015	정경희
	가족가치관의 변화	2016	한경혜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2016	성미애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2017	한경혜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2017	진미정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2018	차승은/한경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가족과 가구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8	손승영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2019	한경혜
	1인가구의 삶의 질	2019	변미리
	청년기 가족형성	2020	이상림
	황혼이혼 행태와 인식의 변화	2020	유재언
건 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흡연율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2014	조홍준
	의약품 사용양상	2014	변진옥
	사회자본과 건강	2014	조병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5	조병희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2015	조영태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2016	조병희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2016	조성현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2017	신동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건 강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2017	조병희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2018	조병희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2018	이윤경
	건강불평등	2019	강영호
	흡연과 음주 실태	2019	조병희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	2020	김동현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2020	유명순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분포	2020	조병희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헌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2014	김경근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교 육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2014	황여정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2015	김성식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2015	채창균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2015	황여정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6	김경근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2016	황여정
	대학교육의 성과	2017	김경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2017	황여정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2018	김경근
	중 · 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2018	황여정
	교육 경쟁과 행복	2019	김희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2019	김경근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	2020	김경근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2020	김성식
노 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권현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근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노 동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2014	김영옥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2014	권혜자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2015	권현지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2015	권혜자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2016	전병유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2016	권현지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2017	장지연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2017	권현지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2018	권현지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8	정흥준
	노동시간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	2019	권현지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	2019	이승렬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2020	오상봉
	디지털화와 노동	2020	권현지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소득과 소비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2014	홍기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2014	홍석철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15	유경원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2015	이정민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2016	유경원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6	문성만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2017	김기호/박정수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2017	유승동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8	박정수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8	송헌재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 · 복지재정지출의 수혜 분포 및 소득재분배	2019	성명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2019	전영준
	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2020	전현배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2020	유경원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샛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샛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문화와 여가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2014	이훈/박정숙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2014	심미선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2015	서우석
	여가활동의 동반자	2015	윤소영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2016	차승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2016	배 영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2017	전인식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2017	서우석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2018	서우석/이주현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2018	김 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2019	윤소영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2019	정용찬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 관람의 변화	2020	윤소영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	2020	김은희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장수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주거와 교통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전월세 시장의 변화	2014	정의철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2014	박천규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2014	김회경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2015	전상인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2015	장수은/정동재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2016	이영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2016	장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2017	이영성/유현지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2017	장수은/한상진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2018	김준형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2018	장수은/한상진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2019	박인권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2019	한상진/장수은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2020	정현주
	코로나19의 교통영향	2020	한상진/장수은
환 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김종호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미세먼지와 건강	2014	권호장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환 경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2014	박창석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2015	김종호/추장민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2015	신상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2016	이미숙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2016	공성용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2017	신용승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2017	조영탁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2018	이희선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2018	김성길/박준건/박미옥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2019	김정훈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2019	이원재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소비의 변화와 포장재 쓰레기 발생 현황	2020	이소라
	도시의 공원 · 녹지 현황	2020	최희선
안 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강은영/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강은영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강은영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안 전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2014	김지선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2014	정지범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2015	민수홍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	설재훈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2016	박두용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2016	민수홍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2017	이희일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2017	강은영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2018	탁양주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2018	강은영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2019	류현숙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9	민수홍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2020	노광표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2020	강은영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한 준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노년층의 사회통합	2014	김지범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2014	박형민
	세대 간 격차의 수준	2015	한 준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2015	가상준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2016	김희삼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2016	김석호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2017	박원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	박 준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2018	한 준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2018	장미혜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2019	한 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9	김석호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	2020	정지범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2020	한 준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둘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특임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문선** (통계개발원 사무관) **최성은** (통계개발원 주무관)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최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교육연구실장) **이상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박현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전임연구원)
편집담당 연구보조원	**고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반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한아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허혜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간사	**김혜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원	**이한별** (통계개발원) **윤동훈** (통계개발원)